



# 코로나19 이후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세재정정책 방향

2021. 12

김현아·전병목·윤성주·오종현·송경호



# 코로나19 이후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세재정정책 방향

2021. 12

김현아 · 전병목 · 윤성주 · 오종현 · 송경호



# 서 언

안타깝게도 코로나19가 미친 사회경제적 충격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우리 인류는 현재 변이바이러스의 진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과연 얼마나 더 큰 피해가 지속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역조치와 경제피해 대응을 위한 전면적인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위기 대응과 회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자세 및 재정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가능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코로나19와 함께 우리나라가 맞닥뜨리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국면 등 인구사회적, 경제적 환경 변화에도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역할 강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먼저 본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이를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방역조치 이후 경제피해 규모, 이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재정지출 규모와 정책내용들을 정리하였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수준·분야별 비대칭적 충격이 나타났고, 이로 인한 소득 및 자산양극화가 궁극적으로 불균등한 성장의 고착화로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역조치와 긴급한 금융 및 재정정책을 살펴 본 결과, 기존의 경제변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은 각국의 사회적 및 제도적 특징, 정치적 수용성 등에 따라 감염병 대응 양상과 재정투입 규모도 상이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본 보고서는 이러한 충격 대응을 위한 긴급조치가 재정투입으로 나타나며 각국의 재정건전성 정도와 인구구조 등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 비중, 경제위기 이후의 양극화 대응, 순차적 재정투자를 통한 불균등한 자원 재배분 조정, 사회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재정지출 수요 증가가 우리가 처한 현실임

을 감안할 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규율이 지켜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주요국과 미국 51개 주의 확진자 수 및 사망자 수의 증감 요인에 어떠한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설로 세워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직관적으로 예측한 바와 같이, 소득 재분배가 비교적 양호한 경우의 국가들과 기대수명이 높은 나라, 국가 재정 관리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나라들에서 코로나19의 사망자 비중이 낮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밖에도 미국의 51개 주의 사례에서는 정치적 성향과 같은 제도적 특징도 주별 감염병 대응과 일정한 추세를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 보고서는 우리 경제에서 가장 충격이 컸던 고용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여성’과 ‘20대’에서의 충격이 컸고, 상대적으로 60대와 고졸 이하에서의 고용지표는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고용시장 충격을 완화하고자 할 때 청년 및 여성의 고용보호 지원 부분이 우선되어야 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보고서는 정부의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세입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세정책과 소득 및 자산격차 확대에 대응한 정책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조세정책 운용의 중요한 목표로 보았기 때문이다. 재원확보 시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회복되어 가는 속도를 보고 판단해야 하며, 특히 고용수준 회복과 경제 규모가 위기 이전으로 회복되는 2022년부터는 점진적인 세입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세입 확보 규모가 큰 중위소득 이상자에 대한 실효세율 강화가 필요한데, 이는 재정정책 수혜대상이 중산층까지 넓어짐에 따라 재원에 대한 부담도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담 형평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구체적으로 시도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은 자본소득에 대한 증세에 대한 언급하였다. 소비세 관점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 등 탄소배출 관련 활동에 대한 과세 수준을 높여나 갈 필요가 있는데, 이는 장기적인 경제성장 방향과 일치성을 확보하고 민간의 탄소배출 저감 유인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또한 조세재정정책을 강화하여 빈곤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에 적절한 소득을 보장

하되, 그들의 상품 및 서비스 소비에 있어서는 가격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복지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한 부가세 인상에 대한 견해도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으로 첫째, 재정여력 잠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정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잠식 최소화 방향을 강조하였다. 둘째, 재정규율을 통한 지속가능성 및 재정 신뢰성 확보의 중요성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긴급 재정 및 금융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통한 정책리닝이 필요함도 강조하였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김현아 박사, 전병목 박사, 윤성주 박사, 오종현 박사, 송경호 박사가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저자들은 본 연구에 도움을 준 익명의 논평자 두 분과 자료 수집과 원고 마무리를 위해 수많은 표와 그림을 보기 좋게 정리해 준 신동준 선임연구원, 권선정 선임연구원, 김인유 선임연구원, 박진우 연구원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작성 과정 중 전문가 세미나에서 아낌없는 조언과 유익한 토론을 해 주신 서울대학교의 이철인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박사, 한국노동연구원의 홍민기 박사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원내 보고서 중간평가 및 최종보고 시 가감 없는 평가와 격려를 해 주신 원내 최준욱 박사와 박노욱 박사, 선후배 연구진들께도 무한한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저자들의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둔다.

2021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 재 진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022년은 경제회복 국면과 경기불안 요소가 상존하는 가운데 새 정부가 출범하는 해이다. 유례 없는 경제위기 이후 대규모 유동성이 시장에 존재하는 가운데 여전히 다양한 변이로 인한 추가적인 감염병발 경제불안은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경제지표로는 팬데믹 이전으로의 회복이 되었으나, 신흥국과 개도국들의 회복 속도가 불투명하고, 추가 변이 확산 여부에 따른 회복이 어느 정도 견고하게 유지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IMF(2021. 10.)는 중기재정계획의 설계는 첫째, 지속가능성 확보, 둘째, 경기순응적인 재정조치 이후의 경기안정화, 셋째, 단순하고 적용 가능한 재정준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2022년 이후 회복을 위한 중기재정계획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순차적인 분야별 재정투자, 성장모멘텀 확보를 위한 잠재성장률 확충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하였다.<sup>1)</sup>

본 연구는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기는 그간의 경제위기와는 성격이나 규모 면에서 다를 뿐더러, 재정 역할의 범위가 과거보다 훨씬 넓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감염병 확산이라는 외부충격 발생 이후 각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감염병 확산 양상과 국가대응 방식에 주목하였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선진국들과 미국의 51개 주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추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진국들과 미국의 주별 자료 기준으로 볼 때, 해당 국가의 기대수명이 비교적 긴 경우, 국가채무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소득계층 간 분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 코로나19 사망자 비율이 대체로 낮은 추세를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사례에서는 코로나19로 가장 충격이 컸던 민생분야인 고용분야

---

1) IMF, *Fiscal monitor*, 2021. 10., pp. 4-6; p. 27.

충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상대적으로 저학력자, 여성, 20대의 취업확률이 비교계층에 비하여 낮았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라는 외부충격이 비대칭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 20대의 취업확률, 경제활동 참가율 감소 충격이 비교군에 비하여 크게 나타난 반면, 60대-고졸 이하 그룹에서는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취업확률 증가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통한 고용지원이 노년층, 그리고 이들 중에서도 저숙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 타 계층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았는지 검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청년과 여성에 대한 지원으로 일부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경제위기 대응은 재정 및 금융지원 규모와 방법, 중기계획 수립, 국가경쟁력 강화 투자 등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대응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초기 대응에서는 방역과 의료 분야의 투자가 집중되었고, 이후에는 고용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대응이 주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노동유연성이 높은 미국의 경우 엄청난 규모의 실업급여와 현금급여로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는 점은 주요국들과 다른 모습이다. 그 외에도 양극화 완화를 위한 사회보장부담금의 납부 연기, 면제, 아동수당 등과 같은 자녀지원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취약가구 생계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다양한 조치들은 피해 규모가 큰 기업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정책대상이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국들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사회구조적 취약점을 파악하는 계기로 보았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을 중기계획에 담고자 하였다. 특히 미래세대를 위해 직업훈련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많은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도로·철도, 통신망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기후·환경 친화적인 경제구조로의 전환과 디지털 개혁·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투자계획들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경제위기와 성장모멘텀 확보를 위한 재정역할 강화가 불가피하고, 이를 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건전성

를 구축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단기적인 재정확장 기조에 대해서는 2022년 이후 경제회복 여부 이후 판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입과 세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인구구조 변화 속도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 속도, 국가채무 증가가 위협적인 수준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입 확대에 대한 시기와 방법, 세목별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증세 여부는 경제회복 정도에 따라 대상과 방법을 설정할 수 있으며, 경제회복 이후에도 고용시장의 회복 여부가 증세의 내용과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소득기반 축소와 재정지원으로 인한 소비계층 대상 확대에 따른 소비세 강화 방안도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기극복과 구조적 개편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을 개인별 지역별 양극화 개선, 순차적 재정투자를 통한 불균등한 자원 재배분 조정 역할 강화, 성장모멘텀과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으로 보았다. 개인 및 가구를 중심으로 한 소득양극화 개선을 위한 정책은 정부의 주요 소득재분배 아젠다이며, 주요국 등의 사례에서도 참고할 내용이 있는 반면, 선진국 중 드물게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양극화는 중장기적인 균형발전의 제로만 다루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지방(교육포함) 재정관계는 이른바 ‘연성예산’ 구조이며, 최종 재정책임은 중앙정부의 채무로 이전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지역소멸이 계속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는 지역별 격차 완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나라 전체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재정역할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세입 대안으로 단계별 세입 확보 방안을 제안하였다. 경기회복과 관련한 재원 확보 정책의 시기를 조율하고, 증세 수단의 선택 또한 초기에는 파급범위와 효과가 제한적인 세목들을 제안하였다. 경제회복 이후 고용상황의 개선과 담세여력 확보가 나타난 이후, 소득과세의 실효세율 제고, 소비세의 역할 강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국제적 여건 변화와 같이 고려해야 하는 탄소세, 법인세율에 대해서도 단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함도 강조하였다. 종합부동산세의

부유세로의 전환, 사회보장기여금 요율인상 등 소득재분배 개선 대안도 제안하고 있다.

재정지출과 관련해서는 첫째, 법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잠식 최소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이전지출 방식을 현재와 같은 법정지출이 아닌 재정여건 변화를 감안한 방식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초중등교육에만 집중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으로 재배분하여 재정수요를 반영하고 노령화와 산업구조 변화를 대응하는 재정효과성 확보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사회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사회보험 부담률을 증가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부는 증세 논의를 본격화하고 최종 부담자인 국민과 국회가 추가적인 부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장기 의제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사회보험 개혁은 국민부담 차원에서는 조세만큼이나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과제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국민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수급대상 연령 조정, 보험료율 조정, 의사결정 거버넌스 개편 등 중장기 재정부담 의제를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둘째로는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재정정상화를 위한 출구전략이 중요해진 지금, 중기계획의 의미가 과거와 달라졌음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재정준칙과 같은 재정규율이 뒷받침된 구체화된 중기계획이 국가의 신용도와 신뢰성 확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이후 급증한 채무부담에 대한 이행은 해당 국가의 신용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신용도는 그 국가의 재정계획에 담긴 출구전략 등의 경제전망치와 재정준칙 등이 얼마나 강건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본 연구는 재정준칙 법적 실효성, 강제성 여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지만,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증세의 중요성 등이 분석될 것이므로 재정준칙을 포함한 재정규율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긴급 재정지원 단계에서 이루어진, 이른바 비전통적 금융정책 및 재정정책의 유효성 검증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재정지출의 긴급성, 재정수요의 정치적 수요 등 외부 여건에 의하여 시장에서 수용해야 했던 비전

통적 정책의 경우에는 인식 부족, 자료 부족, 역량 부족 등으로 정책 분석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미래에도 사용될 정책 수단 인바,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전체적인 규모 파악과 효과성 검증작업의 중요성을 제안한다.

## 목 차

I. 코로나19 이후 사회 경제 및 재정환경 변화 .....	(김현아) 21
1. 서론 .....	21
2. 코로나19 이후 주요 사회경제변화 내용 .....	22
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변화 특징 .....	22
나. 주요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 현황 및 분석 .....	26
다. 국가별 제도가 위기관리 역량에 미친 영향 .....	30
3. 코로나19 이후 재정환경 변화 .....	31
가. 코로나19의 경제 수준별 분야별 비대칭적 충격 .....	31
나. 소득 및 자산양극화로 인한 불균등 성장 고착화 .....	36
II.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재정정책 .....	(윤성주) 40
1. 미국 .....	40
2. 독일 .....	49
3. 프랑스 .....	55
4. 일본 .....	63
5. 한국 .....	70
6. 소결 .....	77
III. 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성 변화 전망 .....	(오종현) 79
1. 경제 여건 .....	79
가. 경제성장률 .....	79
나. 물가상승률과 통화정책 방향 .....	87
다. 재정운용 기조에 대한 시사점 .....	92
2. 재정건전성의 중기 변화 전망 .....	96

가.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추이 .....	97
나. 중기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변화 전망 .....	102
3. 재정건전성의 장기적인 위험 요인 .....	106
가. 인구구조 변화 .....	106
나. 노년부양비와 국가부채 .....	110
다. 장기 국가채무비율 .....	114
4. 소결 .....	117
<b>IV. 국제비교를 통한 코로나19 대응 영향분석</b> .....	(김현아) 121
1. 주요국의 피해 규모와 국가지원 규모 .....	121
2. 분석의 개요 .....	123
가. 분석의 배경 .....	123
나. 팬데믹 양상에 영향을 미친 주요 정책변수 .....	125
다. 분석구조 및 주요 변수자료 .....	130
라. OECD 회원국의 코로나19 충격과 주요 변수와의 관계 .....	132
3. 실증분석 결과 .....	137
가. OECD 회원국들의 코로나19 감염 충격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	137
나. 미국 51개 주의 코로나19 진행과 주요 변수와의 관계 .....	142
다. 소결: 양극화 개선과 재정제도 개편의 필요성 .....	146
<b>V. 코로나19가 국내 고용에 미친 영향</b> .....	(송경호) 148
1.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현황 .....	148
2. 선행연구 검토 .....	159
가. 국내 연구 .....	159
나. 해외 연구 .....	163
3. 지역별 고용조사 미시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	165

---

가. 코로나19가 여성의 취업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친 영향 .....	165
나. 코로나19가 연령별 취업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친 영향 .....	172
다. 코로나19가 교육수준별-연령별 취업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친 영향 ...	176
라. 실증분석 결과 정리 .....	182
4. 코로나19 위기 이후 정부의 고용안정 정책 .....	183
가. 고용안정 정책 .....	183
나. 청년고용 지원정책 .....	186
다. 여성고용 지원정책 .....	188
5. 소결 .....	189
<b>VI. 위기대응 및 지속가능한 조세재정정책 방향 .....</b> (김현아)	<b>192</b>
1. 2021년 위기대응 진단과 2022년 이후 구조적 재정위험 평가 .....	192
가. 최근 재정국면 및 전망 .....	192
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위험 상존 .....	197
다. 분야별 비대칭적인 성장 고착화 .....	199
2. 단계별 세입 확보 방향 ..... (전병목)	<b>200</b>
가. 조세정책 과제별 추진 방안 .....	200
나. 장단기 세입 확보 방안 .....	217
3. 위기대응과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역량 강화 방안 .....	220
가. 법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잠식 최소화 방안 .....	221
나. 재정규율을 통한 지속가능성 및 재정신뢰성 확보 .....	225
다. 비전통적 재정 및 금융정책의 효과성 확보 .....	231
4. 결론 .....	233
<b>참고문헌 .....</b>	<b>238</b>
<b>부록 .....</b>	<b>261</b>

---

## 표목차

〈표 II-1〉 코로나19 대응 미국의 주요 재정정책 .....	43
〈표 II-2〉 미국 코로나19 대응 주요 재정정책 .....	47
〈표 II-3〉 코로나19 대응 독일의 주요 재정정책 .....	51
〈표 II-4〉 독일 코로나19 대응 주요 재정정책 .....	55
〈표 II-5〉 코로나19 대응 프랑스의 주요 재정정책 .....	58
〈표 II-6〉 프랑스 코로나19 대응 주요 재정정책 .....	62
〈표 II-7〉 코로나19 대응 일본의 주요 재정정책 .....	66
〈표 II-8〉 일본 코로나19 대응 주요 재정정책 .....	69
〈표 II-9〉 코로나19 대응 한국의 주요 재정정책 .....	72
〈표 II-10〉 한국 코로나19 대응 주요 재정정책 .....	76
〈표 III-1〉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추이 .....	98
〈표 III-2〉 노년부양비와 일반정부부채(D2) 비율 증가 속도 .....	113
〈표 IV-1〉 주요 위기별 우리나라 경제적 충격의 규모 비교 .....	122
〈표 IV-2〉 OECD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 .....	131
〈표 IV-3〉 OECD 회원국들의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수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	140
〈표 IV-4〉 OECD 회원국들의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수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1) .....	140
〈표 IV-5〉 OECD 회원국들의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수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2) .....	141
〈표 IV-6〉 미국 51개 주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 .....	142
〈표 IV-7〉 미국 51개 주 코로나19 사망자 수와 주요 변수와의 관계 .....	145

---

〈표 V-1〉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	150
〈표 V-2〉 사업체 규모별 취업자 수 추이 .....	154
〈표 V-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	156
〈표 V-4〉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감 .....	157
〈표 V-5〉 코로나19가 여성의 취업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친 영향 .....	166
〈표 V-6〉 코로나19가 여성의 취업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친 영향: 30대 ..	167
〈표 V-7〉 코로나19가 여성의 취업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친 영향: 40대 ..	168
〈표 V-8〉 코로나19가 여성의 취업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친 영향: 50대 ..	169
〈표 V-9〉 코로나19가 여성의 취업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친 영향: 20대 ..	171
〈표 V-10〉 취업확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정: 20대 .....	173
〈표 V-11〉 취업확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정: 30대 .....	173
〈표 V-12〉 취업확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정: 40대 .....	174
〈표 V-13〉 취업확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정: 50대 .....	175
〈표 V-14〉 취업확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정: 60대 .....	176
〈표 V-15〉 교육 수준별 취업 및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20대 .....	177
〈표 V-16〉 교육 수준별 취업 및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30대 .....	178
〈표 V-17〉 교육 수준별 취업 및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40대 .....	179
〈표 V-18〉 교육 수준별 취업 및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50대 .....	180
〈표 V-19〉 교육 수준별 취업 및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60대 .....	181
〈표 VI-1〉 OECD 회원국들의 법인세 최고세율 순위 .....	207
〈표 VI-2〉 OECD 회원국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	209

---

## 그림목차

[그림 1-1] 우리나라 대면 및 비대면 분기별 결제 증감률 .....	24
[그림 1-2] 글로벌 인터넷 사용자(1996~2020년) .....	24
[그림 1-3] 1980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재난위기 당시 비용 및 인명피해 추정 규모 .....	25
[그림 1-4] 구글 기반 누적 경제활동과 GDP 손실과의 관계 .....	27
[그림 1-5] COVID-19 사망자 수와 구글 기반 경제활동 축소 정도와의 관계 ..	27
[그림 1-6] 2020년 2월 이후 주요 도시들의 구글 기반 경제활동 충격 변화 ..	28
[그림 1-7] COVID-19 사망자 수와 경제적 손실과의 관계 .....	28
[그림 1-8] World Economic Outlook(January 2021 전망 기준) .....	33
[그림 1-9] 금융위기 대비 코로나19의 아시아 국가들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차이 ..	34
[그림 1-10] 자영업자 매출 증감액 및 증감률(서울시) .....	36
[그림 1-11] COVID-19 사망자 수와 국가별 소득수준 변화와의 관계 .....	39
[그림 11-1]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	41
[그림 11-2] 미국 주요 재정지표 전망치 변화 .....	42
[그림 11-3] 독일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	50
[그림 11-4] 독일 주요 재정지표 전망치 변화 .....	51
[그림 11-5] 프랑스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	56
[그림 11-6] 프랑스 주요 재정지표 전망치 변화 .....	57
[그림 11-7] 일본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	64
[그림 11-8] 일본 주요 재정지표 전망치 변화 .....	65
[그림 11-9] 한국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	71
[그림 11-10] 한국 주요 재정지표 전망치 변화 .....	72

---

[그림 III-1] 2020~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변화 .....	80
[그림 III-2] 2020년 GDP 구성 요소별 성장률 .....	81
[그림 III-3] 2020년 경제성장률 국제 비교 .....	82
[그림 III-4]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실질 GDP 성장 경로 전망 비교 .....	84
[그림 III-5] 2020~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 국제 비교 .....	85
[그림 III-6]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	88
[그림 III-7] 2020~2022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치 변화 .....	90
[그림 III-8] 2021~2022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망 국제 비교 .....	91
[그림 III-9] GDP 대비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추이 .....	99
[그림 III-10] 경기동행지수 및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100
[그림 III-11] 2020년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증가폭 전망 국제 비교 .....	101
[그림 III-12] GDP 대비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중기 전망 .....	102
[그림 III-13] 2021~2026년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증가폭 전망 국제 비교 .....	104
[그림 III-14] 2020년과 2026년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 전망 국제 비교 .....	105
[그림 III-15] 장래인구추계의 인구구조 전망 .....	107
[그림 III-16] 과거 합계출산율 추이 .....	107
[그림 III-17] 장래인구추계의 부양비 전망 .....	108
[그림 III-18] 한국과 주요국의 노년부양비 전망 비교 .....	109
[그림 III-19] 합계출산율에 대한 장래인구추계 전제와 실제 .....	110
[그림 III-20] 일반정부부채(D2) 비율과 노년부양비의 상관관계 .....	111
[그림 III-21]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장기 전망 .....	115
[그림 III-22]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장기 전망 변화 .....	116
[그림 IV-1] G7&한국 경제성장률 격차(2019년 성장률 - 2020년 성장률)와 코로나19 지원 비중(GDP 대비) .....	122
[그림 IV-2] G20 회원국의 2020년 추가적 재정 대응 비중(GDP 대비) .....	123

---

## CONTENTS

---

[그림 IV-3] Lorenz Curves of COVID-19 Test and Mean Income Across New York City .....	126
[그림 IV-4] OECD 회원국의 확진자 수 규모와 경제충격(0.34) .....	133
[그림 IV-5] OECD 회원국의 사망자 수 규모와 경제충격(0.46) .....	133
[그림 IV-6] 경제충격과 국가 지원 규모와의 관계 .....	134
[그림 IV-7] OECD 코로나19 지원 규모와 2019년 국가채무와의 관계(0.50) .....	135
[그림 IV-8] OECD 코로나19 지원 규모와 재정수지와의 관계(-0.10) .....	135
[그림 IV-9] 코로나19 사망자 수와 상대적 빈곤율(2018년)과의 관계 .....	136
[그림 IV-10] 정부지출 비중과 소득5분위 배율(2018)(-0.52) .....	137
[그림 IV-11] 2020년 트럼프 득표율과 백신 접종률 .....	144
[그림 V-1] 계절조정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추이 .....	148
[그림 V-2] 계절조정 실업자 수 및 실업률 추이 .....	150
[그림 V-3] 연령대별 취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변화 .....	152
[그림 V-4] 연령대별 취업자 수 변화 .....	153
[그림 V-5] 교육수준별 실업률 변화 .....	153
[그림 VI-1] IMF 선진국들의 GDP 대비 국가부채 및 수지 전망 .....	194
[그림 VI-2] G20 경제회복 결과 및 전망치 .....	194
[그림 VI-3] 선진국과 신흥국의 인플레이션 추이 변화 .....	196
[그림 VI-4] 우리나라 GDP 성장 추이 및 2021년 1사분기 경제회복 수준 .....	196
[그림 VI-5] 인구 자연증감 .....	197
[그림 VI-6] 주요국 노년부양비 비교 .....	197
[그림 VI-7] 인력에 대한 초과수요 전망 .....	198
[그림 VI-8] 잠재성장률 전망 .....	198
[그림 VI-9] 우리나라 내구재 및 대면서비스업 회복 속도와 부문별 취업자 수 추이 ..	199

---

---

[그림 VI-10] 2019년 4분기 GDP 대비 2021년 4분기 GDP 증가율 전망	203
[그림 VI-11] 2019년 4분기 대비 노동시장의 회복 전망	204
[그림 VI-12] 2019년 이후 자영업 종사자 규모 변화	205
[그림 VI-13] 주요 선진국의 소득세 최고세율과 소득세입(2019년)	210
[그림 VI-14] 주요 선진국의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과 소득세입(2019년)	211
[그림 VI-15]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214
[그림 VI-16] 산업별 월평균 임금 총액(2019년)	215
[그림 VI-17] 주요 국가별 실질주택가격 변화	216
[그림 VI-18] 경제성장과 조세수입 증가율 추이	218
[그림 VI-19] 재정규율 및 중기재정계획이 재정수지 공식전망치 신뢰도에 미치는 효과	227
[그림 VI-20] 코로나19 이후 일반정부 채무 변화	228
[그림 VI-21] 2020~2022년 재정기조	228
[그림 VI-22] 채무 증가 이후 재정건전성 추이 변화	229

---



---

# I. 코로나19 이후 사회 경제 및 재정환경 변화

---

## 1. 서론

본 연구는 2020년 팬데믹 이후 경제위기 내용을 파악하고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위험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0년 3월 11일 WHO의 팬데믹 공식 선언 이후 코로나19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2021년 기준 백신 보급이 본격화되는 2사분기 기준으로 각국의 지역사회 감염이 완화된 바 있으나, 델타 변이와 위드코로나 등으로 재확산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충격이 발생한 이후 해당 국가의 방역시스템, 산업 구조, 정치 및 사회전반적인 제도에 따라 감염병 확산 양상과 경제충격이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위기대응과 경제회복 과정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통하여 성장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더딘 회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단기적인 경제회복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재정위험, 양극화 확대, 분야별 비대칭적인 성장 고착화 등 구조적인 재정위험에 주목하였다. 2021년 하반기 이후 2022년은 구조개혁 모멘텀을 확보하는 조세 및 재정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 관련 연구에서 2020년 초반 키워드로서 ‘양극화’, ‘불확실성’이 주요 분석 대상이었다면, 2021년 백신 보급 이후에는 ‘회복력’, ‘지속가능성’, ‘신성장 모멘텀’으로 분석과 정책대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는 이러한 변화 흐름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한다. 제I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 변화와 재정환경 변화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제II장에서는 주요국의 코로나19 재정대응 내용과 위기 전후의 재정정책 변화를 살펴본다. 제III장에서는 팬데믹 가정하에 세계 경제 및 우리나라 경제 전망과 이에 따른 재정수지, 재정건전성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해 본다. 제IV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OECD 회원국과 미국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가 갖는 성격을 규명하는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제V장에서는 위기 이후 재정환경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변화를 살펴본다. 노동시장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충격양상을 살펴보고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대응 평가, 향후 장기적인 변화 대응을 위한 노동정책에 대하여 분석한다. 제VI장에서는 이상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팬데믹 충격 완화와 회복력 강화를 위한 다른 재정정책 역할 규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세입기반 확충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이상의 위기 대응과 경제회복력 강화를 위한 재정여력 확보와 지속가능성 확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코로나19 이후 주요 사회경제변화 내용

### 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변화 특징

#### 1) 전 세계 및 우리나라의 감염병 확산 추이 변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한 총체적 위기는 지금까지의 감염병 및 경제위기들과는 범위와 정도 면에서 확연히 다르다. 감염병 확산에 따른 병리적 충격 자체만으로 볼 때에도 이전의 SARS보다는 감염률은 낮고 사망률이 심각하며, SARS, MERS로 인한 일부 지역에 국한된 파급효과와 수요 감소현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sup>2)</sup> 2019년 12월 첫 감염 사례가 보고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2020년

2) McKibbin and Fernando, "Even though the SARS-CoV-2 has been less fatal than SARS-CoV, SARSCoV-2 has been much more infectious," 2020, p. 1.

3월 WHO는 팬데믹을 선포하였고, 그로부터 약 20개월이 지난 현재(2021년 10월)에도 여전히 진행 중(확진자 수 약 2.4억명, 사망자 수 약 489만명, 백신접종 횟수 약 65.4억명)이며, 백신접종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조와 각국 보건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은 종식되지 못하고 있다.<sup>3)</sup> 백신 보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난 이후 감염 속도와 인명피해는 감소하고 있으나, 경제 회복 가시화와 함께 변이 발생으로 인한 n차 팬데믹으로의 진행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백신공급으로 확진자와 사망자 추이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미국 대륙과 유럽의 확진자 비중이 높은 것을 볼 때 경제 회복과 함께 감염병 확산 규모는 확산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1년 10월 20일 기준 우리나라의 누적 확진자 수는 34만 7,523명이며, 11월 이후의 위드코로나를 앞두고 델타 바이러스를 비롯한 변이 등으로 인하여 확진자 규모의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sup>4)</sup>

## 2) 주요 사회·경제변화의 양상

코로나19는 전 세계인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중 가장 확실한 변화는 각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및 봉쇄조치로 인한 '비대면 활동의 전환과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를 들 수 있다.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경제확산에 따라 방대한 데이터, 콘텐츠를 보유한 온라인 플랫폼 기반 비대면 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sup>5)</sup> 코로나19 대응으로 전면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되었고, 2020년부터 시작된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비대면 진료 등은 일상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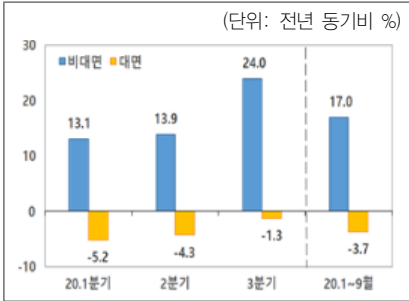
3) WHO, WHO Coronavirus (COVID-19) Dashboard, "https://covid19.who.int/table," https://covid19.who.int/table., 검색일자: 2021. 10. 19.

4) "방대본 정은경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으며, 유럽 그리고 미국 등에서는 8월 말경에는 한 90%의 정도의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델타 변이바이러스는 높은 전파력으로 보다 많은 환자를 발생시킬 수 있고 유행의 통제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법은 모두 한결같다"고 강조했다."(『의학신문』, 「델타형 변이바이러스 급속확산... 지난 주 153명」, 2021. 7. 6.,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4214, 검색일자: 2021. 10.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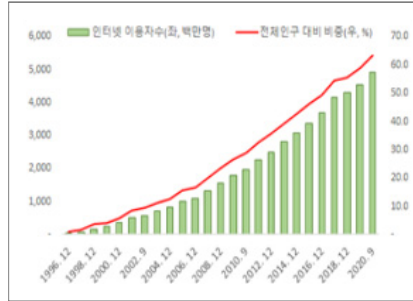
5) 관계부처 합동,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비대면 경제활성화 방안」, 2020. 11. 19., p. 1.

영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원격진료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의사-환자 간 전화상담 처방을 한시 허용하여 2020년 6월 말 45.4만건, 10월 말 94.7만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1-1] 우리나라 대면 및 비대면 분기별 결제 증감률



[그림 1-2] 글로벌 인터넷 사용자 (1996~2020년)



자료: 관계부처 합동,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비대면 경제활성화 방안, 2020. 11. 19. p. 1; p. 2.  
원자료: 한국은행, World Internet Sta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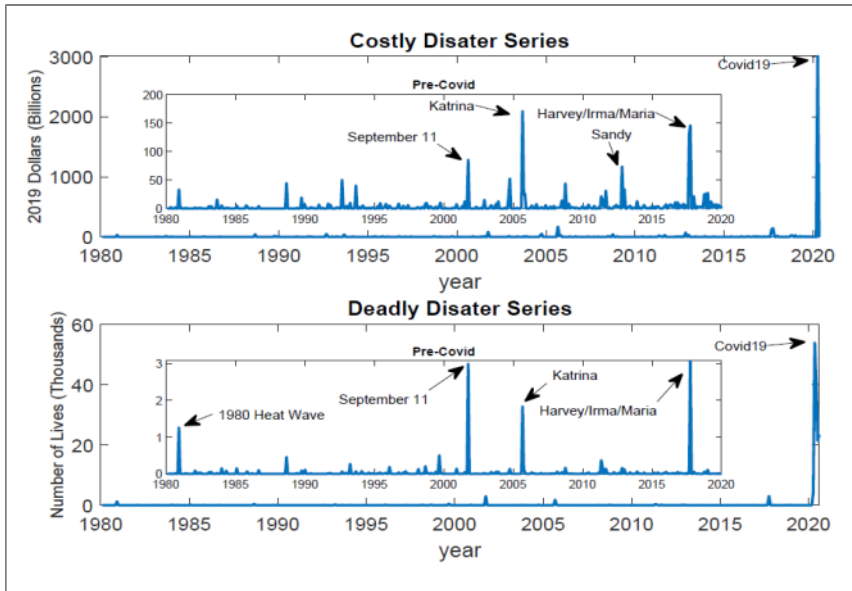
경제 충격면에서도 과거 1998년의 아시아 경제위기, 2008년의 경제위기는 특정 지역에서 경제적 원인으로 발생한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위기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중단되는 등 경제활동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진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 경제위기에 해당한다.<sup>6)</sup> 전 세계인의 일상의 변화는 취약계층에게는 불안정한 미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각국의 방역정책과 통화 및 재정정책은 불확실한 출구전략으로 전망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도 진행 중인 코로나19 팬데믹은 미국의 경제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7)</sup> Ludvigson et al.(2020)에서는 미국 내 재난 위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컸던 1980년 Heat wave, 2000년 9월 11일, 2005년 카트리나 당시의 재난과 비교해 볼 때도 코로나19 파급력은

6) McKibbin and Vines(2020), p. S298; Baqaee and Farhi(2020), p. 2 등

7) Baker et al.(2020) 등 다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규모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경우, 대규모 코로나19 경기부양 패키지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부터 12개월간, 산업 생산 규모는 20%, 서비스부문 39%, 고용은 55%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sup>8)</sup> Fernandez(2020)는 코로나19의 감염병발 위기는 단지 저소득층 국가만이 겪는 어려움이 아닌 전 세계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으며, 유례없는 낮은 이자율 여건하에서 발생하였고, 공급망 위축으로 인한 외부효과가 커서 수요 자체를 마비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림 1 - 3] 1980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재난위기 당시 비용 및 인명피해 추정 규모



자료: Ludvigson et al.(2020), p. 3, Figure 2. 인용

8) “But unlike a conventional natural disaster shock, the Coronavirus(COVID-19) shock is a multi-period event that simultaneously disrupts supply, demand, and productivity channels, that is almost perfectly synchronized within and across countries, and that has cataclysmic health, social, and economic implications not just for the foreseeable few weeks after the crisis, but for a long time period,” “A linear model may underestimate the effect of large shocks”(Ludvigson et al., NBER, 2020, 9., p.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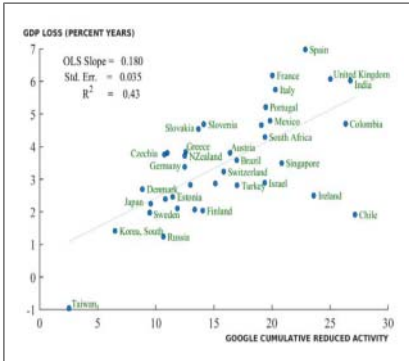
## 나. 주요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 현황 및 분석

### 1)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총수요 총공급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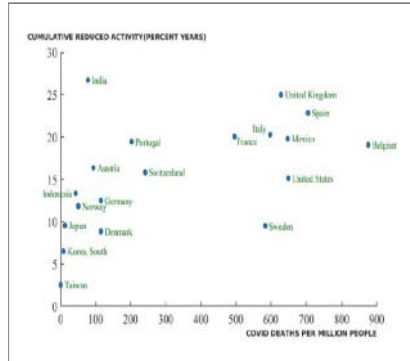
대부분의 국가들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봉쇄조치 등의 방역조치를 단행하였고, 강제적인 대면 경제활동 봉쇄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감소는 전 세계 거시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하였다. Bonadio et al.(2020)은 COVID-19 위기로 인한 총수요 감소는 글로벌 공급망(supply chain)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Céspedes et al.(2020)은 실업과 자산가격이 동시에 폭등함으로써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Gupta et al.(2020)은 DID 방법론을 이용하여 정부의 봉쇄조치 이전에도 경제위축 경향이 나타나긴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및 봉쇄조치(Any business close, ABC; Stay at home, SAH) 이후 실업률, 노동시간, 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었음을 보여주었다.<sup>9)</sup> 이 연구에서는 2020년 3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의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정부의 방역조치가 10일 지속될 경우 1.7%의 고용률이 하락함을 보여주었다. 실업보험 청구자료(Unemployment insurance claim)로 분석한 결과, 정부의 봉쇄조치 때문인지 자발적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알기 어렵지만,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고용률 추이에서는 12% 감소하였고, 그중 60%는 사회적 거리두기, 나머지 40%는 전국적인 하락 추세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이러한 총수요 총공급의 축소로 인한 경제피해 규모는 기존 경제활동 규모와 비례하여 나타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Fernandez-Villaverde and Jones(2020)는 [그림 I-4], [그림 I-5]에서 각각 구글 기반 기존 경제활동 규모에 비례하여 피해 규모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경제활동 규모가 큰 나라들의 경우에 감염병 확산과 사망자 규모도 비례하여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9) 이 분석에서는 노동에 미친 영향 정도는 노동력 감소(extensive margin)가 기존 노동시간 감축(intensive margin) 정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구글 기반 누적 경제활동과 GDP 손실과의 관계



[그림 1-5] COVID-19 사망자 수와 구글 기반 경제활동 축소 정도와의 관계



자료: Fernandez-Villaverde and Jones(2020), p. 23, Figure 13; p. 25, Figure 15.

## 2) 주요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경제활동 위축 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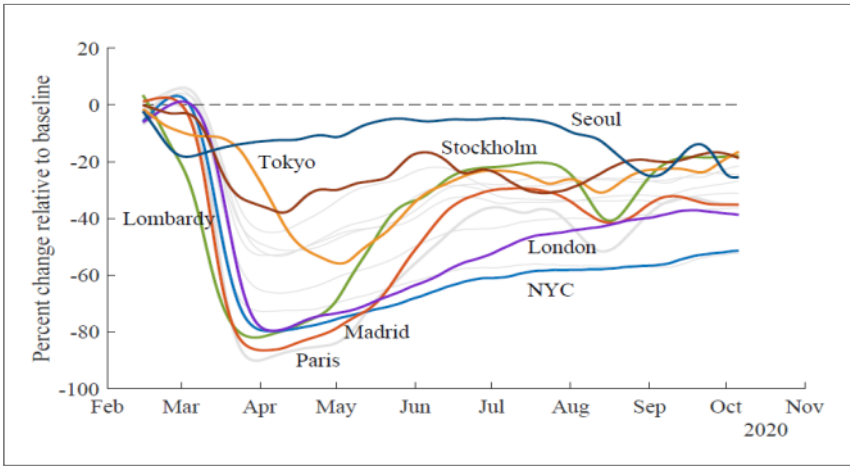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관련한 국제비교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비교적 우수한 방역 및 경제조치 대응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Loayza and Pennings(2020)는 우리나라를 코로나19 위기 대응 우수사례로 구분하여 당장 한국과 같은 조치는 불가능하더라도 관련 국가들에 기본원칙에 대한 적용은 가능할 수 있음을 권고한 바 있다.<sup>10)</sup> Fernandez-Villaverde and Jones(2020)<sup>11)</sup>는 우리나라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과 사망자 수준이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국가로 분류하였다. 우리나라의 특징으로 경제적 충격 정도나 확진자 수 규모가 모두 양호하며, 대만과 함께 이전의 SARS, MERS에 따른 대비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도움이 된 사례로 분류하였다. 구글 기반 모빌리티 감소는 해당 국가의 실업률 증가 규모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구글 기반 모빌리티 수치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코로나19 관련 경기위축 변수로 사용되고 있다.<sup>12)</sup>

10) Loayza and Pennings, WB Research & Policy Briefs, No. 28, 2020, p. 5.

11) Fernandez-Villaverde and Jones, CEPR, 2020, p. 33., 경제적 손실 규모는 구글 기반 모빌리티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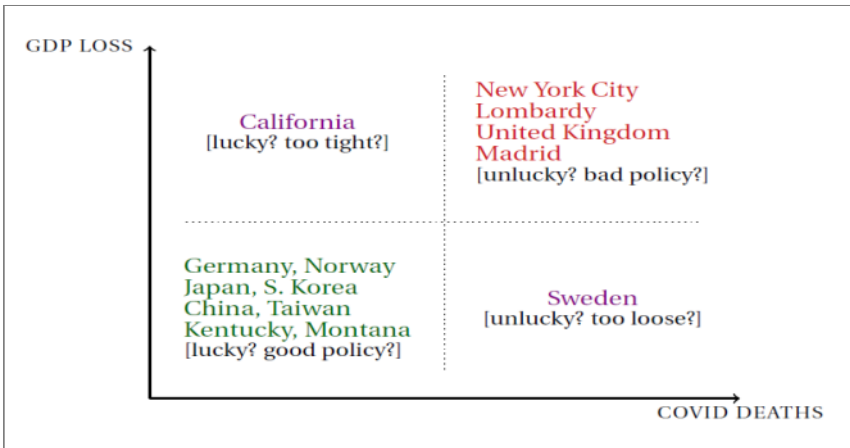
12) Chen et al.(2020)에서는 UI claim 건수, 구글 모빌리티를 경제적 충격지표로 사용하였다.

[그림 1-6] 2020년 2월 이후 주요 도시들의 구글 기반 경제활동 충격 변화



자료: Fernandez-Villaverde and Jones(2020), p. 21, Figure 10.

[그림 1-7] COVID-19 사망자 수와 경제적 손실과의 관계



자료: Fernandez-Villaverde and Jones(2020), p. 2, Figure 1.

Fernandez-Villaverde and Jones(2020)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감염병 확진자 규모와 경제적 충격 규모가 비례하여 나타나고 있으나,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스웨덴 사례가 예외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사망자

수에 비하여 경제하락 폭이 큰 경우에 해당(too tight)하며, 스웨덴은 사망자 수에 비하여 경제하락 폭이 작은 경우에 해당(too loose)한다고 밝혔다. 이 결과를 해석해 보면, 대개의 국가들은 확진자 수의 규모에 따라 경제적인 봉쇄를 단행한 반면, 캘리포니아는 감염 초기에 대규모 봉쇄를 단행하여 감염병 확산경로를 초기에 차단하여 사망자 수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반면 스웨덴은 다소 느슨한 방역조치로 인하여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경제피해 규모는 작았던 반면 다수의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Chen et al.(2020)은 코로나19 감염병 충격 이후 정부의 봉쇄조치(coercive policies, Non Pharmaceutical Indicators, NPIs)와 국민들의 자발적인 변화(voluntary behavior)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의 법적 강제조치 이전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동을 자제하기 시작(3~4월 기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사람들의 자발적인 이동과 경제위축<sup>13)</sup>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정부의 NPIs와 경제위축과의 관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강제 방역조치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연대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자발적인 방역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경우 백신효과와 재정노력을 통한 경제회복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유럽 국가들 현황에서 시사하는 바는 방역조치(NPIs)가 COVID-19의 완전한 방패막이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 스스로 비대면 활동 전환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하고, 정부의 개입에만 의존하는 방역만으로는 감염병 종식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에 해당한다. NPIs가 풀린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상당 기간 동안 움직이지 않을 것이므로 경제회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NPIs 조치 이후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인지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이후 자발적인 협조가 감염병 예방에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주요 분석 결과이다.<sup>14)</sup>

13) 해당 연구에서의 경제위축 지표는 'UI claims'와 'electric usage' 등을 사용하였다.

14) 한편 Mulligan(2020)은 경제봉쇄(shutdown) 조치에 따른 기회비용(the opportunity of 'shutdown')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감염병 축소와 경제적 피해 간의 추가 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다. 국가별 제도가 위기관리 역량에 미친 영향

Acemoglu et al.(2005)은 한 국가의 경제성장에 있어 제도(Institution)가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에 대해 ‘경제성장 핸드북’에서 언급하면서, 제도 및 거버넌스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더 이상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sup>15)</sup> 국가별 제도적 특징은 단지 경제 성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위기관리 역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봉쇄 조치 없이 선진국 중에서도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한 사례로, 2021년 5월 FDA(*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 보고서에서는 협조적인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중앙-병원-지방 체계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주요 성공 원인으로 꼽고 있다.<sup>16)</sup>

특히 이번 감염병 위기는 해당 국가의 정치적 갈등 양상이 표면화되는 계기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미국의 각 주는 정치적 포지션에 따라서 감염병 대응 민감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2020년 미국 대선 당시의 트럼프 지지율이 높은 주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저조하고 확진자 비율이 높았던 점을 들어 해당 주의 위기관리 거버넌스의 차이점과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 백신 접종률 상위 22개 주에서는 바이든이 승리하였다.<sup>17)</sup> 이에 대한 다수의 여론에서는 국가의 보건체계를 위협하는 정치적 편가르기(Red-Blue divide)가 미국의 높은 사망자 비율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도하였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백신 접종률에 따라 사망자 비율이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8)</sup> 미국의 낮은 백신 접종률은 여러

---

15) Acemoglu et al, “Institutions as a fundamental cause of long-run growth,” *Chapter 6 in Handbook of Economic Growth*, 2005, Elsevier, B. V.

16) “Specifically, the central government collaborated closely with state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to establish testing locations and to implement standardized testing procedures”(“South Korea’s responses to Covid-19,” FDA CDRH, 2021. 5., p. 17.)

17) Domenico Montanaro, “There is a stark Red-Blue divide when it comes to States’ vaccine rates,” NPR(June 9, 2021)), <https://www.npr.org/2021/06/09/1004430257/theres-a-stark-red-blue-divide-when-it-comes-to-states-vaccination-rates>, 검색일자: 2021. 10. 1.

18) 『연합뉴스』, 「美 백신 접종률 따라 코로나 확산 달라져... ‘2개의 미국’ 표면화」, 2021. 7. 6.,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6008800091>, 검색일자: 2021. 10. 1.

원인에 따른 결과이나, 해당 주의 정치적 성향과 백신 접종률 간의 일정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경험은 정치적 성향 정도가 감염병 위기관리 거버넌스에 영향과 무관하지 않음을 추정하도록 한다.

또한 방역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집행 주체인 지방정부의 역량과 거버넌스 수준에 대한 점도 주요 변수로 설명되고 있다. OECD(2020. 6.)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처 과정에서 스위스 사례가 흥미롭다고 보았다. 정치적 및 행정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인 스위스는 의료에 대해서는 중앙집권적 행정이며, 테스트 및 백신 보급의 경우 중앙정부 구입-지방정부(Canton) 배분 원칙의 방역행정 분권 사례를 보여주었다. 이탈리아 사례는 ‘조달행정의 중앙지방 협조(combination of centralized and decentralized procurement approach)’로 꼽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물품 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공급은 광역 단위(regional)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지는 사례로 소개되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사례 역시 중앙·지방 간 분권 사례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았다. 세 나라는 국경이 접해 있고 문화적 연계성이 높고, 인구 규모도 비슷하고, 의무적인 건강보험·의료체계 시스템이 우수한 것으로 유사하지만, 중앙-지방 분권 체계만큼은 다른 방식이고, 출구 전략도 달랐음을 주목한 바 있다.

### 3. 코로나19 이후 재정환경 변화

#### 가. 코로나19의 경제 수준별 분야별 비대칭적 충격

##### 1) 국가 간 국가 내 비대칭적 충격

IMF(2021. 4.)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은 성별, 교육수준별, 지역별, 산업별로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의 급여성 지출 확대를 통한 ‘소득불평등’ 완화 위주의 재분배 방식보다 적극적이고 정교한 정책이 요구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OECD 분석에서는 팬데믹 충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구조적 및 제도적 취약 정도에 따라 피해 규모의 양상과 이를 대처하는 국가적 대응력도 매우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다.<sup>19)</sup> 평균적

으로 볼 때 선진국의 휴교일 수가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휴교일 수보다 짧았고, 부모가 저소득자 및 저학력자일수록 휴교일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0)</sup>

박창현 외(2020)는 국가 간 및 국가 내 부문 간 차별화된 충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는데, “선진국과 신흥국 간 방역관리, 재정여력 등의 차이로 충격의 영향이 차별화되고 IT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등 국가 간의 성장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았다. Adams-Prassl et al.(2020)은 대부분의 국가에서의 경제 충격 규모뿐만 아니라 국가 간 충격 규모의 차이도 크다고 설명하였다.<sup>21)</sup> 2020년 2사분기 이전까지의 초기 감염병 진행 과정에서는 전반적으로는 선진국, 신흥국, 개발도상국 정도에 따라 피해 규모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WB의 GE 모형 분석 결과,<sup>22)</sup> COVID-19 전후로 전 세계 GDP 평균은 2%, 개발도상국 2.5%, 선진국 1.8% 각각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WB 분석에서는 선진국들보다 개발도상국들에 이러한 감염병 충격이 보다 더 치명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① 낮은 보건의로 행정 역량 ② 높은 비정규직 비중 ③ 취약한 금융시장 기반 ④ 미미한 재정여력 규모 ⑤ 낮은 거버넌스 수준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따라서 나라마다 재정대응 규모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과세기반이 취약한 국가들의 경우 재정부양 패키지 방식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하였다.<sup>23)</sup>

---

19) “The regional and local impact of the crisis has been highly asymmetric within countries,”(OECD, “the territorial impact of COVID-19,” 2020. 6., p.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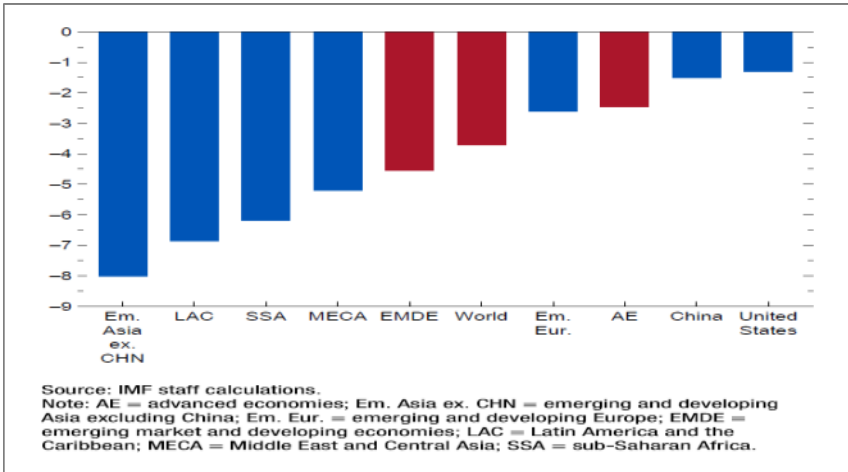
20) 윤성주 외(2021. 4.), p. 24.

21) “The impacts of the COVID-19 crisis are large and unequal within and across countries” (Adams-Prassl et al.,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020., p. 1.)

22) Maliszewska et al., WB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9211, 2020,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선진국은 4%까지 하락 가능하고, 개발도상국은 6.5%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보았다.

23) Loayza and Pennings, WB Research &Policy Briefs 2020, No. 28, “the efficacy of fiscal stimulus also depends on fiscal space and institution quality”(2020, p.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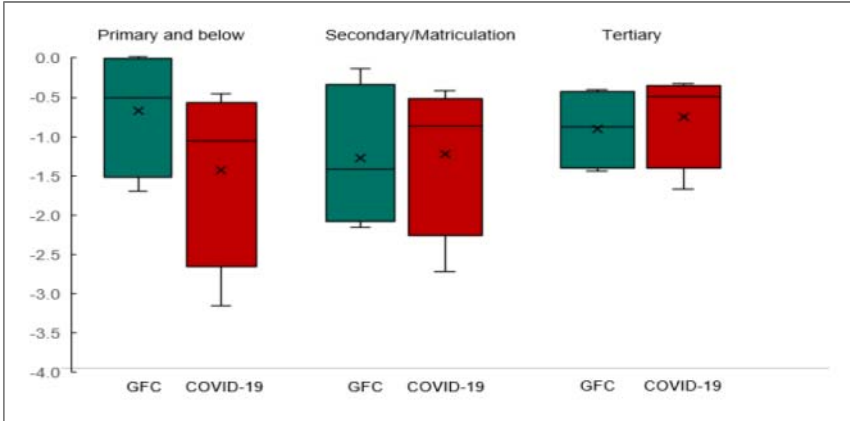
[그림 1-8] World Economic Outlook(January 2021 전망 기준)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Policy Support and Vaccines Expected to Life Activity," 2021, 1., p. 5, Figure 4.

IMF(WEO, 2021. 1.) 분석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에서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차이를 금융위기 당시와 이번 코로나19 위기와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저학력인 경우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 모두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금융위기에 비하여 코로나19 위기에서는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고용률 하락폭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 저학력자들의 경기변동에 따른 실업위험이 더욱 증가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Tsvetkova et al.(OECD, 2020. 6.)은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도시들(MSAs)의 분석 결과, 비정규직 분포가 높은 대도시에서 고용 충격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

[그림 1-9] 금융위기 대비 코로나19의 아시아 국가들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차이 (단위: %p)



자료: Jurzyk et al., "COVID-19 and inequality in Asia: breaking the vicious cycle," IMF Working Paper, No. 2020/217, 2020, p. 15.

## 2) 개인별 산업별 비대칭적인 충격

다수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이 개인별로 산업별로도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PANDA(Paypal, Amazon, Nvidia, Disney, Alphabet, Google)로 대변되는 ICT 산업 상승세와 국내 대기업 영업이익 증가 등으로 볼 때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비대칭적인 성장세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bay et al.(2020)은 실시간 구글서치 자료를 근거로 각국의 방역조치 이후 대면 영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은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으나, ICT 기반 산업과 배달 관련 분야 수요는 급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sup>24)</sup> 팬데믹 충격으로 인한 산업으로의 영향 경로는 우선 정부의 다양한 방역조치(사회적 거리두기, 봉쇄조치 등)로 인하여 현장 공급 감소가 발생하였고, 소비자들의 실업과 임금 감소로 인한 소비 감소, 감염 예방을 위한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 위축(fear induced withdrawal of demand) 등 다

24) "COVID-19 is expected to have a broader negative impact on economies while also inducing reallocation of activities across sectors, where some sectors gain, and others lose"(Abay et al., "Winners and losers from COVID-19: Global Evidence from Google Search," WB Group, 2020, 6., p. 3.).

양한 경로를 통하여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의 감염을 막기 위한 정부조치와 자발적 경제행위 축소는 단기간에 수요와 공급을 급격히 위축시켰으나, 이 과정에서 비대면 관련 산업의 수요는 팽창하였음을 보여주었다.

Hacioglu-Hoke et al.(2020)은 영국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서 상위 25% 소득인 경우, 소득 감소폭에 비하여 큰 소비 감소(45%)가 이루어졌고, 하위 25% 소득분포인 경우에는 소비 감소폭은 가장 적었고, 임금(earnings) 감소 폭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이전지출 증가로 인하여 전체 소득폭 감소는 임금 감소폭보다는 작았던 것으로 설명하였다.<sup>25)</sup>

Chiou and Tucker(2020)는 근로자가 고소득일 경우, 고성능 인터넷의 작업 인프라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책 효과도 높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노동환경은 그렇지 못하고 저소득일 경우 대면 작업 종사 가능성이 높아 방역조치 수용성도 높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Adams-Prassl et al.(2020)은 재택근무 환경이 열악한 경우,<sup>26)</sup> 대학 학위가 없는 경우 실직 위험이 높았다고 분석하였다. 다수의 국가 사례에서 언택트 근무 환경 비율이 낮을수록 경제적 타격이 크게 나타나며, 기존 대면업무 비중이 높은 취약계층(여성, 경력이 짧은 근로자, 이민자 등)의 타격이 크게 나타났다. Yasenov(2020)는 저학력, 청년, 이민자일수록 재택근무 환경이 열악함을 보여 직업 안정군과 취약군 간에 취업 환경 자체가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Dingel and Neiman(2020)은 재택근무 타당성 검토 결과, 전체 근로자 중 평균 약 37% 정도만 재택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Béliand et al.(2020)은 다수의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단기 혹은 중기적으로 실직위기(job status risk)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sup>27)</sup> Barrero et al.(2020)은 팬데믹으로 인하여 노동시장 재편(reallocation of labor: 프리랜서 작가 → 배달 가능 식당 업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으나,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저임금 노동시장이

25) Fintech App users를 상대로 한 자료 결과이다.

26) Chen et al.(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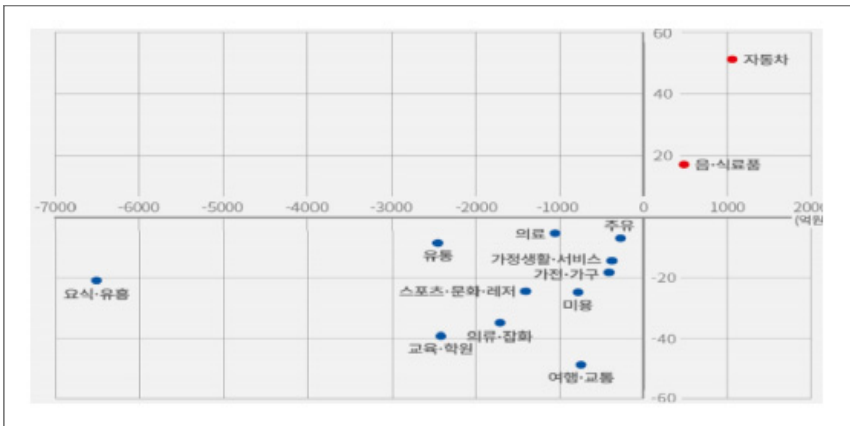
27) 역설적이게도 Brynjolfsson et al.(2020)에서는 재택근무자들이 전통적으로 출퇴근하는 근무자들에 비하여 실업급여 청구(UI claim)를 더욱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취약해짐을 보여주는 것이 정확한 해석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황수빈·박상순(2021)의 연구에는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로 인한 구인-구직 격차가 확대되고 이로 인한 취약계층 장기 실업화, 산업 간 노동배분 비효율성 등이 전체적인 노동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노동시장에서 만연한 격차 문제가 경제위기 충격 이후 더욱 악화될 여지가 있으며 실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 분석에 해당한다. 이재운(2020)은 신용카드 자료 분석을 통한 분야별 매출 증감 추이에서 자동차·음식료품 부문은 증가하였고, 음식점·유흥업·여행업 등의 감소폭이 큰 것을 보여주었다.

[그림 1-10] 자영업자 매출 증감액 및 증감률(서울시)

(단위: %, 억원)



주: 2020. 2. 17.~3. 29.의 동기 대비 서울시 신용카드 사용액 기준

자료: 이재운,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봉쇄조치 실시현황 및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1702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 4. 24., p. 3, [표 3].

### 나. 소득 및 자산양극화로 인한 불균등 성장 고착화

코로나19로 직면한 가장 우려스러운 재정환경 변화는 양극화 고착화이다.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저성장 지속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양극화 심화는 예견되어 있었다. 대다수 연구 결과에서는 코로나19가 양극화 추세의 속도와 범위를 가중시키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축소는 빈곤계층, 고용 및 주거 불안의 취약계층에게 직접적 충격을 주었던 반면, ICT에 기반한 고소득 일자리는 간접적인 충격을 미치며 계층 간 확대와 이동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구조가 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dams-Prassl et al.(2020)은 서베이 결과에서 미국, 영국, 독일의 노동시장 충격의 양상, 특히 여성과 저학력자(without college degree), 청년, 취약계층과 노동계층의 충격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보여주었다. 사회안 전망 구축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 독일의 경우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양극화 면에서도 미국과 영국보다 우수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미국, 영국(anglophone countries) 등의 경우, 고용축소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 팬데믹으로 엄청난 규모의 고용이동(a large reallocation)이 이루어지고 있음도 보여주었다. 팬데믹 이후, 노동에서의 이러한 외부충격에서의 움직임, 제도적 요인 간의 영향이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sup>28)</sup> Angelov and Waldenström(2021)은 스웨덴의 조세분석 자료(Swedish tax agency)를 바탕으로 팬데믹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종사자에 비하여 민간부문 종사자의 월별 임금소득 하락폭이 컸고,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폭이 컸음을 보여주었다. IMF(2021, 1.)는 이와 관련하여 양극화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 전환기 근로자와 이전지출 급여수급자들의 수급조건 완화 필요성을 제안하였다.<sup>29)</sup>

Jurzyk et al.(2020)은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비숙련 노동자들의 경우, 숙련 노동자들보다 심각한 감염병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시간 축소폭도 크게 나타났음을 보여주었다.<sup>30)</sup> 반면 소비 규모의 경우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숙련노동자 계층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문직 혹은 숙련노동자들(skilled workers)과 비숙련노동자들(unskilled workers)과는 차별화된 정책(targeted policy)으로

---

28) Adams-Prassl et al., 2020, p. 9.

29)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Policy Support and Vaccines Expected to Life Activity," 2021, 1., p. 10.

30) Jurzyk et al., "COVID-19 and inequality in Asia: breaking the vicious cycle," IMF Working Paper, No. 2020/217, 2020, p. 19.

양극화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2사분기의 미국 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은 전기 대비 6.8% 증가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이들 순자산의 약 71%는 상위 20% 고소득자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sup>31)</sup>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저금리가 유지되는 가운데 주택가격 및 주가 등의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계층 간 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sup>32)</sup> Deaton(2020)은 의회진술서에서 팬데믹은 미국 내 인종 간 및 교육 격차 간의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교육수준에 따른 보건 및 소득의 계층 간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Deaton(2021)은 COVID-19로 인하여 국가 간 소득격차는 다소 완화될 여지가 있음도 제시한 바 있다.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의 경우에 소득 감소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제 비교상에서의 국가 간 소득격차(international income inequality)는 감소하여 부의 재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정부의 이전지출은 국가 간 지니계수 격차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 왔으며,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에는 그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Deaton(2021)은 미국이 대표적인 경우이며 기존의 선진국들의 경우 경제적 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음에 주목하였고, Aspachs et al.(2020)은 코로나19 위기 전후로 부의 재분배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sup>33)</sup>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 충격 이후 대응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Deaton(2021)이 제기한 국가 간 부의 재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글로벌 공급망이 취약한 국가들의 경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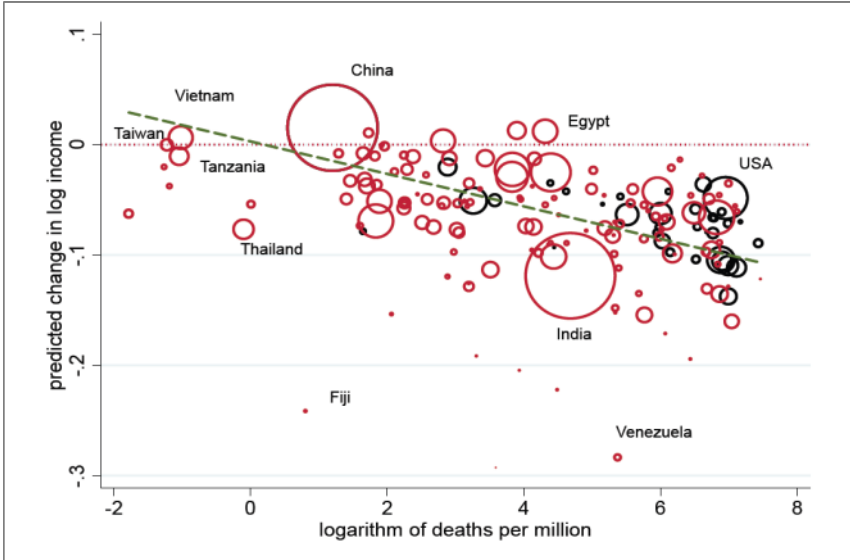
31) 한국금융연구원, 「코로나19 사태와 K자형 양극화 회복경로」, 『금융브리프』, 제29권 제20호, 2020, p. 18.

32) 박성욱, 「경제 양극화 심화에 따른 취약계층 대응」, 『2021년 주요 금융이슈』, 금융연구원, 2021. 1., p. 29.

33) Deaton(2021, p. 16.), “The pandemic has made most countries worse off, and there has almost certainly been an increase in global poverty. But that implies nothing about global inequality”; Aspachs et al.(2020), Figure 3. “Evolution of the Gini index for pre-transfer and post-transfer incomes(February-May 2019~2020),” <https://voxeu.org/article/income-inequality-and-welfare-state-during-covid-19>, 검색일자: 2021. 3. 7.

오히려 회복이 느려지면서 그간의 국가 간, 국가 내 양극화가 확대될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1-11] COVID-19 사망자 수와 국가별 소득수준 변화와의 관계



자료: Deaton(2021), p. 11.

---

## II.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재정정책

---

2020년 초반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 국자들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정책을 수립하여 운용하였다. 본 장에서는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산 및 영향, 그리고 코로나19 보건위기에 대응한 주요국의 정책대응에 대해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1. 미국<sup>34)</sup>

미국에서의 코로나19 첫 확진자는 2020년 1월에 보고되었으며, 2021년 9월 말 기준 인구 100만명당 13만 2,568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sup>35)</sup> 그리고 백신 접종은 2020년 12월 14일부터 이루어지고 있다.<sup>36)</sup>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발생초기인 2020년 2월부터 해안에 위치한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확대되었으나,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탁상우, 2020). 그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1년 9월 말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sup>37)</sup>

---

34)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정책 관련 내용은 윤성주·구윤모(2021. 7.); 윤성주(2021. 8.); 윤성주(2021. 10.) 등을 참조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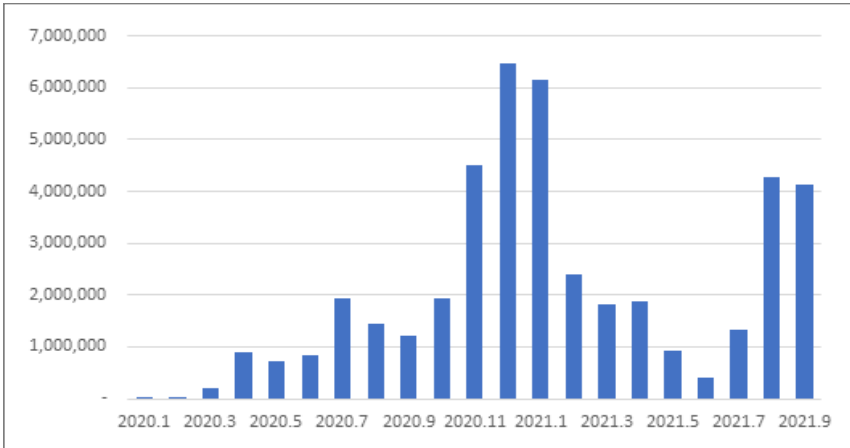
35) 첫 확진사례: Johns hopkins 대학 발표자료, “COVID-19 Data Repository by the Center for Systems Science and Engineering (CSSE) at Johns Hopkins University,” <https://github.com/CSSEGISandData/COVID-19> → Code → Download ZIP → COVID-19-master 폴더 → csse\_covid\_19\_data 폴더 → csse\_covid\_19\_time\_series폴더 → time\_series\_covid19\_confirmed\_global.csv, 검색일자: 2021. 10. 12.; Corona Live 홈페이지, 「인구 100만명당 감염자 수」, <https://corona-live.com/world/>, 검색일자: 2021. 9. 30.

36) 『BBC News 코리아』, 「코로나 백신: 한눈에 보는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2021. 2. 15.,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6066227>, 검색일자: 2021. 9. 9.

37) Corona Live, <https://corona-live.com/world/>, 검색일자: 2021. 9. 30.

[그림 II-1]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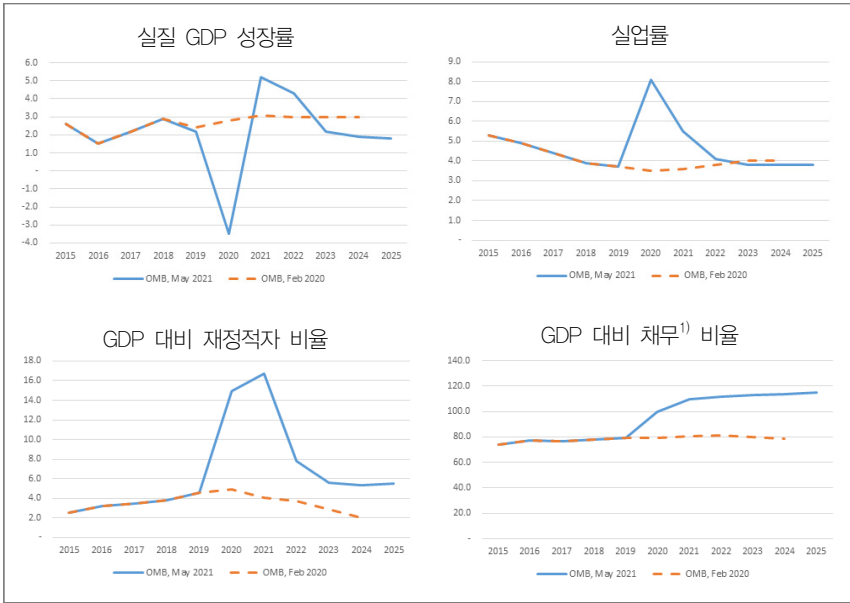
자료: CSSEGIS and Data/COVID-19, "COVID-19 Data Repository by the Center for Systems Science and Engineering (CSSE) at Johns Hopkins University," <https://github.com/CSSEGISandData/COVID-19>, 검색일자: 2021. 10. 12.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2020년 2월에 발표된 미국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자료에서는 2020년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1년 5월에 발표된 자료에서는 2020년 성장률이 -3.5%로 하향 조정되었다. 기존 전망에서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2020년 4.9% 이후 감소하여 2023년부터는 3% 이내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최근 전망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과 2021년 재정적자 비율이 각각 GDP 대비 14.9%, 16.7%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25년에도 5.5%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GDP 대비 채무비율의 경우, 기존 전망에서는 2020년 80.5%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에는 78.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최근 전망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00.1%로 증가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GDP 대비 115.2%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업률의 경우에는 기존 전망에서는 2020~2022년 각각 3.5%, 3.6%, 3.8%로 추정되었으나, 최근 전망에서는 동 기간 각각 8.1%, 5.5%, 4.1%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11-2] 미국 주요 재정지표 전망치 변화

(단위: %)



주: 1) 채무는 'Debt held by the public' 의미

자료: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0. 2.; 2021. 5.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미국은 2020년 트럼프 행정부의 5개 법안과, 2021년 바이든 행정부의 1개 법안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였다. 2020년 5개의 법안 중에서 CARES 법안으로 알려져 있는 세 번째 법안이 2.2조달러 규모로 가장 큰 규모이며,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개인과 가계, 그리고 기업 등에 대한 주요 지원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2021년 3월에 바이든 행정부가 입법·발표한 「미국 구조계획법(ARP Act)」 또한 1.8조달러 규모의 대규모 지원정책으로 2020년 CARES 법안의 주요 내용을 연장·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경제발전을 위한 '더 나은 재건 (Build Back Better) 정책'과 관련하여 '미국 인프라투자계획(American Jobs Plan)'과 '미국 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을 각각 3월과 4월에 발표하였다.

〈표 II-1〉 코로나19 대응 미국의 주요 재정정책

구분	규모	주요 내용
「코로나 준비·대응 추경」 (2020. 3. 6.)	83억달러	• 백신, 시험, 기타치료제 개발연구 등 보건지출
「코로나 대응 가족우선법」 (2020. 3. 18.)	1,920억달러	• 유급병가 등에 대한 지원, 메디케이드 예산 확대, 코로나19 무료검사
「코로나 지원·구호 경제보장법」 (2020. 3. 27.)	2,2조달러	• 제1차 경제부양지원금, 실업수당 확대, 급여프로그램(PPP)
「급여·의료 지원법」 (2020. 4. 24.)	4,830억달러	• 급여프로그램(PPP) 예산 확대, 보건업계 종사자 지원
「코로나 대응·구호 추경」 (2020. 12. 27.)	9,200억달러	• 제2차 경제부양지원금, 급여프로그램(PPP) 예산 확대, 실업수당 연장
「미국 구조계획법」 (2021. 3. 11.)	1.8조달러	• 제3차 경제부양지원금, 실업수당 확대·연장, 급여프로그램(PPP)

자료: 윤성주·구윤모(2021, 7.), pp. 9~27; 윤성주(2021, 10.), pp. 35~37, pp. 39~41; 윤성주(2021, 8.) 참조 작성

미국 정부는 2020년 3월 6일,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첫 번째 법안인 「코로나 준비·대응 추경(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2020)」을 입법·발효하였다. 이 법안은 83억달러 규모로 다른 법안들과 비교할 때, 소규모로 편성되었으며 백신·치료제와 관련된 개발연구 지원, 질병예방통제센터 및 지역보건센터 지원 등 보건분야에 대한 지출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2020년 3월 6일에 코로나19 대응 첫 번째 법안이 입법·발효된 데 이어, 3월 18일에는 두 번째 법안인 「코로나 대응 가족우선법(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이 입법·발효되었다. 여기에서는 법안 명칭에 나타난 바와 같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긴급유급병가와 긴급가족돌봄병가 등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먼저 ‘긴급유급병가(Emergency Paid Sick Leave)’의 경우, 근로자 500인 미만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자 본인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코

로나19와 관련하여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경우에 유급병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상시 근로자의 경우 총 80시간을 유급병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하루 최대 511달러, 1인당 최대 5,110달러까지 지급하도록 조치하였다. ‘긴급가족돌봄병가(Emergency Family Medical Leave)’와 관련해서는 근로자 500인 미만 기업에서 한 달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가족을 돌보기 위한 병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급여의 경우 처음 10일 동안은 무급이지만, 그 이후에는 하루 최대 200달러 한도로 1인당 최대 1만달러까지 기본급의 2/3 수준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고용인에 대해서는 휴가·병가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한 세금공제를 허용하여 고용자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조치하였다(신정환, 2020. 4. 2.).

다음으로 2020년 3월 27일 입법·발효된 「코로나19 지원·구호 경제보장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은 2,2조 달러 규모로 코로나19 이후 첫 종합경기부양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는 개인과 가계 지원을 위한 제1차 경제부양지원금과 실업급여 확대, 그리고 기업 지원을 위한 급여보호 프로그램 등이 주요 정책으로 포함되어 있다. 먼저 제1차 경제부양지원금(Economic Impact Payment, EIP)은 1인당 최대 1,200달러, 부부공동신고의 경우 최대 2,400달러를 지원하였다. 단 세금 신고 정보에 근거하고 있는 경제부양지원금의 경우, 연간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1인당 7만 5천달러 또는 부부공동 15만달러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달러 초과할 때마다 5달러를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지원금 제도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17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자녀 1인당 5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부양지원금은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세금신고를 한 경험이 있는 미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은퇴자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측면 등에서 경제부양지원금 정책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간주되고 있다(김태근, 2020).

다음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한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발생한 실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확대·강화하였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 CARES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먼저 금액 측면에서는 ‘연방 팬데믹 실업수당(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 FPUC)’을 통해 연방 정부가 매주 기존 실업수당(UI)에 추가로 600달러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인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업급여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팬데믹 실업수당(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PUA)’ 제도를 도입·운영하였다. 또한 정규 실업급여의 경우 26주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코로나19 위기의 장기화에 따라 특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실업급여 기간을 추가로 13주 연장·지급하는 ‘팬데믹 긴급 실업수당(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PEUC)’을 운영하였다.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을 운영하였다. 급여보호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이지만, 대출을 받은 기업이 8주 동안 대출받은 금액을 고용과 관련된 임금, 유급병가, 가족돌봄휴가 등에 지출한 경우에 한해서는 전액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여, 대출금 상황이 면제되도록 하였다. 이 외에 CARES 법안에서는 사업 이자비용 공제제한 완화, 기부금 공제제한 인상, 급여세 인하 및 납부연기 허용, 개인사업자 초과 영업손실 공제한도 한시적 폐지 등과 같은 조세지원 정책 또한 포함되어 있다.

2020년 3월 말의 CARES 법안에 이어 4월 24일 입법·발효된 「급여·의료 지원법(Paycheck Protection Program and Health Care Enhancement Act)」은 CARES 법안에서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의 자금소진에 따라 이에 대한 추가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더불어 보건업계 종사자 및 예방·대응 체제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 입법·발효된 「코로나 대응·구호 추경(Coronavirus Response and Relief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에서는 CARES 법안에 이어 제2차 경제부양지원금과 실업급여를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2차 경제부양지원금의 경우에는

1인당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600달러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액이 감소하였으나, 아동과 성인을 구분하지 않고 1인당 600달러를 지원하도록 조치하였다. 실업수당의 경우에도 지원기간이 연장되었는데, 연방정부가 추가로 지급·지원하는 수준은 주당 600달러에서 300달러로 하향 조정되었다.

2021년 1월에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3월에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및 경제회복을 목표로 하는 1.8조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을 입법·발효하였다. 여기서도 역시 기존에 지원하였던 실업수당과 중소기업 급여보호프로그램을 다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3차 경제부양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3차 경제부양지원금의 경우에는 성인 1인 기준으로 1차 1,200달러, 2차 600달러 지원 수준보다 높은 1인당 최대 1,400달러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지원금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조정총소득 상한을 기존의 9만 9천달러에서 8만달러로 하향 조정하여 수급요건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미국 구조계획법(ARP)」에는 2021년 과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가구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아동세액공제의 경우, 적용대상이 17세 이하에서 17세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공제액 또한 약 1.5배 인상되었다. 부양가족 세액공제와 보육비용 소득공제 또한 공제액이 각각 약 4배, 약 2배 증가되었고, 공적부조공제의 경우에는 소득상한액 요건이 한시적으로 폐지되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대상자를 자녀가 없는 근로자까지 확대하였고 지원액 또한 3배가량 확대하였다. 그리고 사업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고용유지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일부 정부지원 보조금에 대해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3월과 4월에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일자리 창출하고 및 사회포용성 강화, 그리고 이를 통한 경기회복·경제발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3월에는 물질·인적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2.2조달러 규모의 「미국 인프라계획(American Jobs Plan, AJP)」을 발표하였으며, 이어 4월에는 중산층 강화와 포용성 확대를 위한 1.8조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 AFP)」을 발표하였다. 즉 ‘미국 인

프라계획'에서는 운송 인프라, 청정에너지 인프라, 제조업·R&D·주택 인프라 등과 같은 전통적인 인프라 분야와 교육·돌봄·보육 등과 같은 인적 인프라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가족계획'에서는 「미국 구제계획법(ARP)」에서 한시적으로 확대된 조세지원정책을 영구화하고, 교육·보육 등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저소득·중산층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sup>38)</sup>

〈표 II-2〉 미국 코로나19 대응 주요 재정정책

<b>규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3조달러 GDP 대비 25.4% (의료: 6,870억달러, GDP 대비 3.3%; 비의료: 4,6조유로, GDP 대비 22.2%)</li> </ul>
<b>의료</b>	<p><b>[지출: 6,223억달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 준비·대응 추경(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에서는 치료, 약, 공중보건 조치 등을 위해 68억달러 규모를 배정하였으며, 「코로나 대응 가족우선법(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에서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기타 연방 매칭 프로그램 등과 같은 보건조항에 1,789억달러 규모를 배정</li> <li>「코로나 지원·구호 경제보장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에서는 추가 보건지출을 위해 1,288억달러 규모를 배정하였는데, 여기에는 병원 지원,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원, 백신개발과 메디케어 지원 확대, 그리고 특정 의료비용에 대한 세금우대 지원 등을 포함</li> <li>「급여·의료지원법(Paycheck Protection Program and Health Care Enhancement Act)」에서는 병원 지원 및 코로나검사 등을 위해 996억달러 규모를 배정하였으며, 「경기부양법(Consolidated Appropriation Act)」에서는 백신 처방, 백신 보급, 검사/추적/코로나경감프로그램 등에 654억달러 규모 배정</li> <li>‘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에서는 백신 보급, 검사·치료 등과 같은 코로나19 관련 보건활동 958억달러, 팬데믹 기간 동안 근로자 민간의료보장범위 보호 143억달러, 건강보험 보조금 지급 244억달러, 메디케어, CHIPs 및 메디케이드 확대·지원 231억달러 등 1,515억달러 규모를 배정</li> </ul> <p><b>[수입손실: 650억달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ARES 법안에서는 적격의료비지출 확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90억달러 규모의 수입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추정</li> <li>미국구제계획에서는 공·사적 의료보험 지원 등과 관련하여 562달러의 수입 감소가 초래될 것으로 추정</li> </ul>

38) 이와 같은 미국의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정책은 범위와 규모 측면에서 수정·보완되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2021년 9월 말 기준).

〈표 11-2〉의 계속

비의료	<p><b>[지출: 4,3조달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 준비· 대응 추경에서 보건 이외 지출에 대해 12억달러 규모가 책정되었으며, 「코로나 대응 가족우선법」에서는 유급병가 지원, 식료품 지원, 무료 코로나검사, 연방정부의 메디케어 지원 확대, 실업수당 지원 등을 위해 388억달러 규모 배정</li> <li>• CARES 법안에서는 실업수당, 급여보호프로그램 등에 1.5조달러 규모를 배정하였으며, 「급여· 의료 지원법」에서는 급여보호프로그램 확대, 긴급경제자금용자· 보조금 등을 위한 재정지출을 계획</li> <li>• 2020년 8월, 연방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만료된 연방팬데믹실업수당을 매주 300달러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안보부 재난구호기금으로부터 440억달러 규모를 재할당</li> <li>• 「경기부양법(Consolidated Appropriation Act)」에서는 가구지원 3,290억달러, 기업지원 3,470억달러, 교육· 보육 및 기타분야지원 920억달러 등에 7,969억달러 규모 배정</li> <li>• 「미국구조계획」에서는 가구· 기업 지원, 주· 지방정부 지원, 교육· 보육 지원 등에 1.6조 달러 배정</li> </ul>
	<p><b>[수입손실: 3,780억달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ARES 법안에서는 세금환급(tax rebate) 형태를 통한 경제부양지원금, 코로나19 피해 기업 고용유지공제지원 등으로 인해 2,880억달러 규모의 수입손실비용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되며, 「코로나 대응 가족우선법」의 경우에도 940억달러 규모의 수입손실을 전망</li> <li>• 「구제법안(Consolidated Appropriation Act)」에서는 근로자보유세액공제(employee retention tax credit) 연장, 근로소득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및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확대 등으로 인해 50억달러 규모의 비용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li> <li>• 미국구조계획에서는 경제부양지원금,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 지원, 유급병가· 가족돌봄휴가 세액공제, 고용유지세액공제, 연금제도 지원 등을 통해 100억달러 규모의 수입변동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li> </ul>
	<p><b>[이연수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ARES 법안에서 국세청 소득세 신고 기한을 90일 연장하였으며, 고용주 부담 급여세를 2021년과 2022년으로 이연</li> <li>• 2020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따라 연방정부는 사회보장 급여세 이연을 허용하고, 연방학자금대출 연장 확대 방안 도입</li> </ul>

주: 코로나19 대응 2021년 6월 5일까지의 의료· 비의료 재정정책 기준(Above-the line measures: Additional spending and forgone revenue in the health sector/in areas other than health, Accelerated spending/deferred revenue)

자료: IMF Fiscal Monitor, "Database of Fiscal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2021. 6. 5. 발췌· 정리

## 2. 독일<sup>39)</sup>

독일에서는 코로나19 첫 확진자 사례가 2020년 1월에 보고되었으며, 2021년 9월 말 기준 인구 100만명당 5만 295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sup>40)</sup> 그리고 백신 접종은 2020년 12월 26일부터 시작되었다.<sup>41)</sup>

2020년 3월 들어 독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됨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 회의를 통해 대대적인 사회적 접촉제한 조치인 봉쇄조치를 2020년 3월 16일에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이후 확산세가 감소함에 따라 주별로 상이하게 5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였지만,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이 다시 10월 중순부터 급증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독일 정부는 11월 들어 부분적 봉쇄정책인 락다운 라이트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자 12월 16일부터는 부분적 봉쇄조치를 전면적 봉쇄조치로 전환하여 2021년 1월 10일까지 연장·시행하였다. 2월 들어서는 확진자 수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3월과 4월에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4월 24일부터 주별로 상이하게 대응·조치하는 3차 봉쇄조치를 시행하는 등 감염세 확산 정도에 따른 봉쇄정책을 시행하였다.<sup>42)</sup>

39) 독일의 코로나19 대응정책 관련 내용은 IMF Policy Tracker, <https://www.imf.org/en/Topics/imf-and-covid19/Policy-Responses-to-COVID-19#U>, 검색일자: 2021. 9. 13.; 한국 조세재정연구원(2020. 7.; 2020. 12.; 2021. 7.); Investopedia, <https://www.investopedia.com/government-stimulus-and-relief-efforts-to-fight-the-covid-19-crisis-5113980#germany>, 검색일자: 2021. 9. 10. 등을 참고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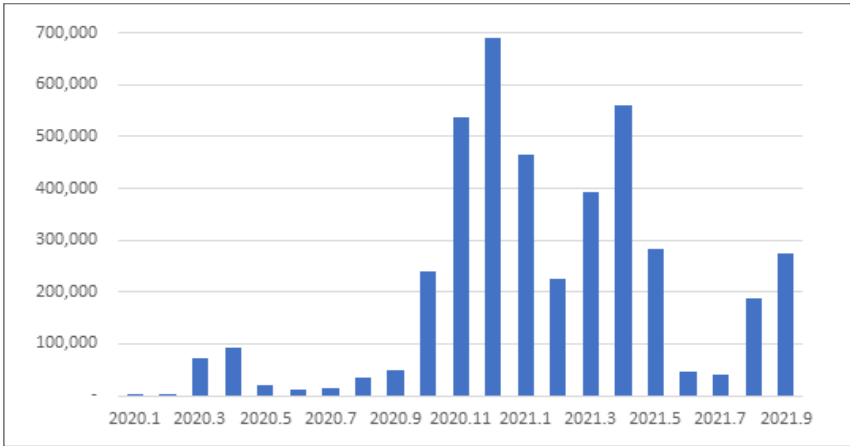
40) 첫 확진사례: Johns hopkins 대학 발표자료, "COVID-19 Data Repository by the Center for Systems Science and Engineering (CSSE) at Johns Hopkins University," <https://github.com/CSSEGISandData/COVID-19> → Code → Download ZIP → COVID-19-master 폴더 → csse\_covid\_19\_data 폴더 → csse\_covid\_19\_time\_series폴더 → time\_series\_covid19\_confirmed\_global.csv, 검색일자: 2021. 10. 12.; Corona Live 홈페이지, 「인구 100만명당 감염자 수」, <https://corona-live.com/world/>, 검색일자: 2021. 9. 30.

41) 『BBC News 코리아』, 「코로나 백신: 한눈에 보는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2021. 2. 15.,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6066227>, 검색일자: 2021. 9. 9.

42) Robert Koch Institut,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작성(독일연방정부 홈페이지,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themen/coronavirus/fallzahlen-coronavirus-173821>;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de-ko/index.do>)

[그림 II-3] 독일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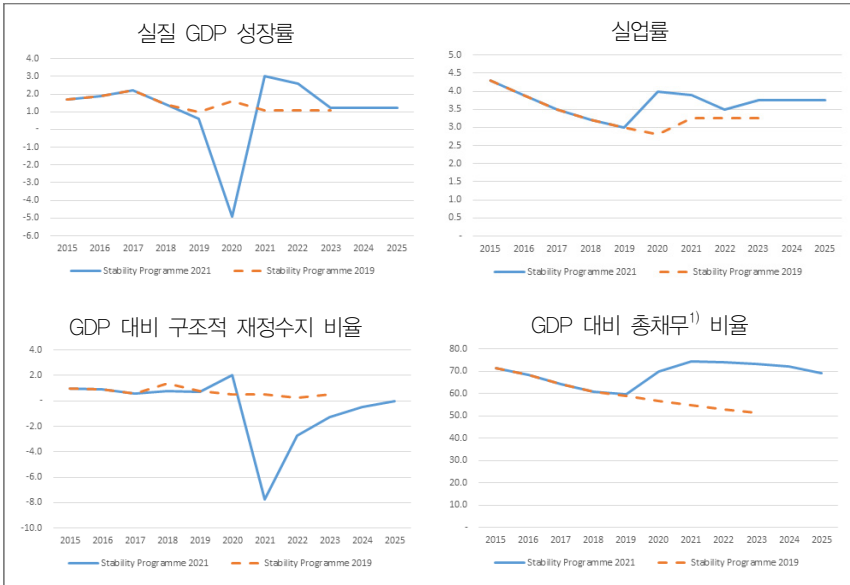
자료: CSSEGIS and Data/COVID-19, “COVID-19 Data Repository by the Center for Systems Science and Engineering(CSSE) at Johns Hopkins University,” <https://github.com/CSSEGISandData/COVID-19>, 검색일자: 2021. 10. 12.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독일 재무부가 코로나19 확산 전에 발표한 “Stability Programme 2019”에서는 2020년 GDP 성장률을 1.6%로 발표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발표한 “Stability Programme 2021”에서는 2020년 성장률을 -4.9%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전에 발표한 자료에서는 2020~2021년의 구조적 재정수지가 GDP 대비 0.5%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최근 발표된 자료에서는 2021년의 구조적 재정수지가 GDP 대비 -7.75%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수치적자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전 발표에서는 2020년 GDP 대비 총채무비율이 56.5%이고, 2023년에는 51.3%로 감소하는 추세로 전망되었으나, 최근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0년 총채무비율이 69.8%로 급증하고, 2021년 74.5%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 추세로 들어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업률의 경우 “Stability Programme 2019”에서는 2020년과 2021~2023년 동안의 실업률을 각각 2.8%와 3.3% 수준으로 전망하였으나, “Stability Programme 2021”에서는 2020년 실업률이 4.0% 수준으로 증가한 이후 2023~2025년 동안 3.7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림 II-4] 독일 주요 재정지표 전망치 변화

(단위: %)



주: 1) 총채무는 'Gross Debt' 의미

자료: Federal Ministry of Finance, "German Stability Programme 2019," 2019. 4.; "German Stability Programme 2021," 2021. 4.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독일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 차례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다. 2020년 3월에는 1,560억유로, 2020년 6월에는 1,300억유로, 그리고 2021년 3월에는 600억유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였다.

<표 II-3> 코로나19 대응 독일의 주요 재정정책

구분	규모	주요 내용
2020년 제1차 추경(2020. 3.)	1,560억유로	• 중소기업·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유동성 프로그램 • 조업단축지원금 강화·확대 등을 통한 근로자 지원
2020년 제2차 추경(2020. 6.)	1,300억유로	• 수요·고용 회복 및 기업투자 지원 • 경제재건 및 미래투자
2021년 제1차 추경(2021. 3.)	600억유로	•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속적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자료: IMF Policy Tracker, <https://www.imf.org/en/Topics/imf-and-covid19/Policy-Responses-to-COVID-19#U>, 검색일자: 2021. 9. 13의 주요 내용을 발췌 정리

독일 연방내각은 코로나19 위기를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채무규정에 따른 차입금 상한선 이상인 1,560억유로 규모의 신규차입을 통해 2020년 3월에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supplementary budget)을 채택하였다. 여기서는 먼저 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장비와 병원역량 강화에 재원을 배정하였으며, 백신·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R&D 분야에도 재원을 배정하였다. 또한 감염증 확산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성격의 재원을 550억유로 규모로 배정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민 등을 대상으로 500억유로 규모의 '긴급 유동성 프로그램(emergency liquidity program)'을 마련하였으며, 부도·도산의 위험에 처한 10인 이상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만 5천유로까지 지원하도록 하였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육수당을 확대·강화하였으며, 연말까지 무이자 세금이연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고, 20억유로 수준의 벤처캐피탈 자금지원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가계소득 지원과 관련해서는 주거비용 지원, 실업기금 지원 등에 77억유로 규모를 배정하였으며, 보증 및 유가증권 손해보상지원에도 59억유로를 배정하였다. 코로나19 발생 후인 2020년 3월 16일, 독일 연방정부는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근로자의 소득손실에 대응·지원하기 위해 '조업단축지원금(Kurzarbeitsgeld)' 지급을 결정하였다. 조업단축지원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장 근로자 가운데 1/3 이상의 근로시간이 감축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였으나,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서는 이를 10% 이상으로 조정하여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 외에 임시직 근로자에게도 지원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지원금을 수령하기 4개월 전부터 전체 근무시간 중에서 50% 이하로 근무하면서 자녀가 없는 경우 기존에는 손실된 급여의 6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7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수령 후 7개월부터는 다시 80%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조업단축지원금 수령 후 4개월부터 손실된 급여의 77%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수령 후 7개월부터는 87%를 지급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보장기금을 연방고용청이 부담하도록 하여 고용

주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2020년 3월에 이어 6월에 발표된 제2차 추경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수요와 고용 회복을 위한 지원정책과 기업투자 촉진 지원, 그리고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9%에서 16%로 3%p 하향 조정하였고, 식료품과 같은 필수품에 적용되는 경감세율을 7%에서 5%로 2%p 인하하였다. 구직자에 대한 소득 지원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연말까지 지원하도록 하였고,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 지원에 250억 유로 규모의 단기지원프로그램을 배정하였다. 중소기업 단기지원프로그램에서는 여행사, 박람회장, 레저산업 등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체, 즉 4~5월 동안 전년 동 기간 대비 평균적으로 60% 이상의 매출손실을 경험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6월부터 8월까지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고정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특히 피해를 크게 받았을 것으로 우려되는 문화 분야와 관련해서는 문화 프로젝트 및 관련 인프라 확충에 10억유로 규모를 배정하여 지원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300유로 규모의 1회성 현금 지원과 한부모 가정에 대해 600유로 수준을 일시불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때 지원금은 실업 상태에 있는 구직자에 대한 소득 지원과는 상쇄되지 않으나, 소득이 높은 가구에 대해서는 자녀세제수당에서 상쇄되도록 조치하였다.

기업투자자와 관련해서는 2020~2021년 과세연도 동안 기계와 같은 동산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 개선 및 가속상각 옵션을 제공하여 기업들에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손실이월액(Steuerliche Verlustrücktrag) 규모를 2020년과 2021년 과세연도에 최대 500만유로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지역의 대중교통 분야에 약 25억유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지방정부가 가구에 지원하는 주거비용 부담을 보조·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에 40억유로를 배정하였다.

2021년 3월, 독일 연방내각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

는 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이후 세 번째 추경안을 600억 유로 규모로 채택하였다. 여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255억유로 규모를 지원하는 내용과 백신 조달 62억유로, 코로나19 예방 80억 유로 등 보건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독일 경제에너지부에서는 2021년 3월에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기업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즉 기존에는 연간 매출이 7.5억 유로 이하로 제한하였던 지원 관련 기준을 삭제하여, 봉쇄조치로 인해서 손해를 본 모든 기업이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겪은 소매업, 요식업 등과 같은 소규모 기업체뿐 아니라 호텔 부문 대기업까지도 월 최대 150만유로, 계열사(affiliated companies)의 경우 300만유로 수준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같은 달인 2021년 3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원제도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난지원금제도(Härtefallhilfen)’를 도입하였다. 즉 2020년 3~6월 동안, 기존 지원제도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했던 기업들에 대해 고정비용에 근거해서 최대 10만유로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한 재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하였다.

독일은 202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2020년 9월에 발표한 2021년 예산안, 그리고 2020~2024년 중기재정계획에서 코로나19 이후의 미래에 대한 투자와 사회통합강화를 위한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서는 기후·환경 친화적인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기후 특별기금에 262억유로 규모를 배정하여 수소전략, 모빌리티, 친환경 건물 리노베이션 등과 같은 친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였고, 직업훈련 강화와 연구단체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였다. 또한 철도산업과 5세대 이동통신 구축을 위한 재원을 배정하였으며,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재원과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과 기업에 대해 2022년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을 40% 이하로 유지하는 방안과 노동시장 여건 개선 및 적절한 임금 인상, 연금제도의 지속성 보장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

고 있다. 사회보장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보건기금에 교부금을 지원 하는 방안 또한 포함되어 있다.

〈표 II-4〉 독일 코로나19 대응 주요 재정정책

<b>규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550억유로(5,190억달러) GDP 대비 13.6%</li> <li>(의료: 610억유로, GDP 대비 1.8%; 비의료: 3,940억유로, GDP 대비 11.8%)</li> </ul>
<b>의료</b>	<p><b>[지출: 610억유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가적인 지출(610억유로): 백신, 장비, 연구, 정보 캠페인 및 병원의 역량을 현대화 하고 개선할 수 있는 광범위한 조치들</li> </ul>
<b>비의료</b>	<p><b>[지출: 2,850억유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피해 입은 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보조금(grants), 임차인에 대한 부담 완화 조치</li> <li>아동수당 및 기본적인 사회보장혜택에 대한 접근성 증진, 가구소득 지원, 환경·디지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li> <li>근로시간단축(Kurzarbeit) 지원금을 통한 가구·기업 지원</li> </ul> <p><b>[수입손실: 1,090억유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인하(일반적인 인하 조치는 2020년 말 만료, 레스토랑 및 식품 서비스에 대한 특별 VAT 인하 유지)</li> <li>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부담 완화, 사회보장기여금 인하</li> </ul> <p><b>[이연수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말까지 불이익 없이 세금납부 연기를 허용하고 중도납부(prepayments)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li> </ul>

주: 코로나19 대응 2021년 6월 5일까지의 의료·비의료 재정정책 기준(Above-the line measures: Additional spending and forgone revenue in the health sector/in areas other than health, Accelerated spending/deferred revenue)

자료: IMF Fiscal Monitor, "Database of Fiscal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2021. 6. 5. 발췌·정리

### 3. 프랑스<sup>43)</sup>

프랑스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사례는 2020년 1월에 보고되었으며, 2021년 9월 말 기준 인구 100만명당 10만 7,072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sup>44)</sup> 그리고 백신 접종은 2020년 12월 27일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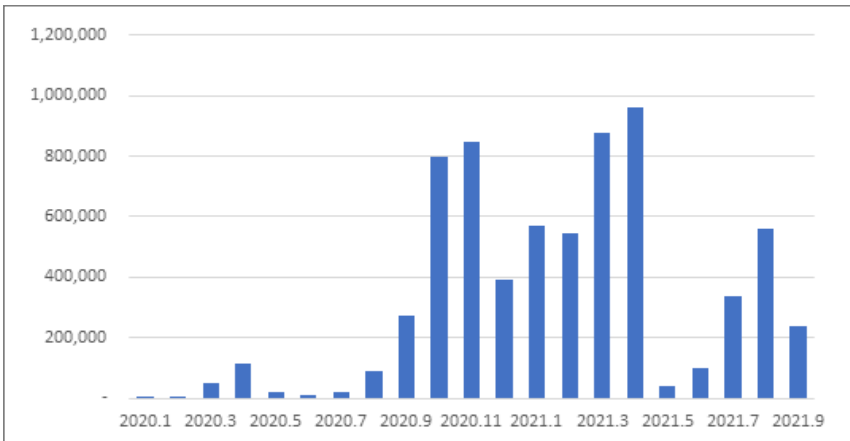
43) 프랑스의 코로나19 대응정책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3.; 2020. 7.; 2020. 12.; 2021. 7.); 김정연(2020. 4.; 2020. 8.; 2020. 12.); 김혜진 외(2020),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2021. 6. 8.) 등을 참조하여 작성

시작되었다.<sup>45)</sup>

프랑스에서는 2020년 3월 초부터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3월 중순 이후 수천명 대의 일일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코로나19 제1차 대유행이 시작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제1차 봉쇄조치가 시행되었으며, 두 차례 기간이 연장되며 5월 11일까지 지속되었다. 그리고 8월부터 확진자 수가 증가하자 10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2차 봉쇄조치를 취하였으며, 2021년 3월 중순부터 확진자 수가 또 다시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나자 3월 20일 제3차 봉쇄조치를 단행하였다(프랑스 정부, 2020. 3. 14.; 2020. 10. 29.; 2021. 3. 19.).

[그림 II-5] 프랑스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단위: 명)



자료: CSSEGIS and Date/COVID-19, “COVID-19 Data Repository by the Center for Systems Science and Engineering(CSSE) at Johns Hopkins University,” <https://github.com/CSSEGISandData/COVID-19>, 검색일자: 2021. 10. 12.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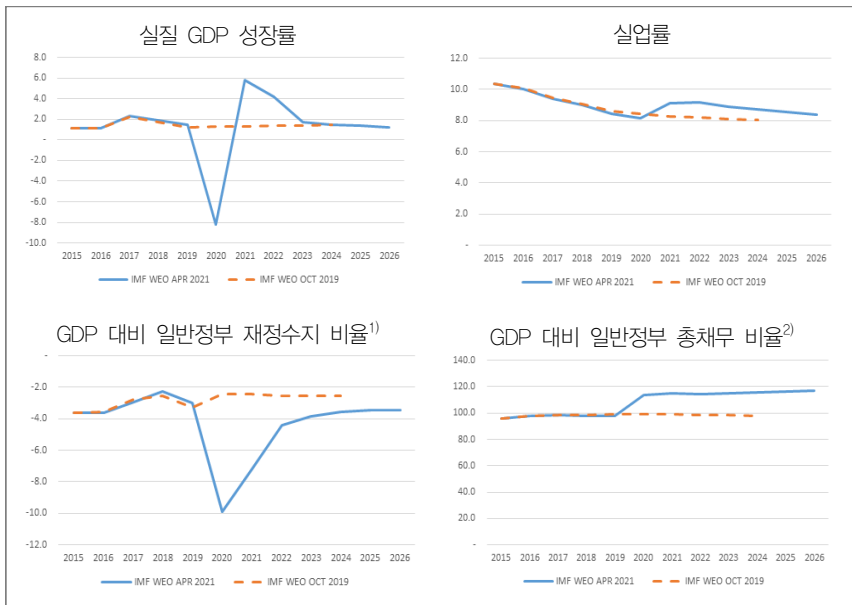
44) 첫 확진사례: Johns hopkins 대학 발표자료, “COVID-19 Data Repository by the Center for Systems Science and Engineering (CSSE) at Johns Hopkins University,” <https://github.com/CSSEGISandData/COVID-19> → Code → Download ZIP → COVID-19-master 폴더 → csse\_covid\_19\_data 폴더 → csse\_covid\_19\_time\_series폴더 → time\_series\_covid19\_confirmed\_global.csv, 검색일자: 2021. 10. 12.; Corona Live 홈페이지, 「인구 100만명당 감염자 수」, <https://corona-live.com/world/>, 검색일자: 2021. 9. 30.

45) 『BBC News 코리아』, 「코로나 백신: 한눈에 보는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2021. 2. 15.,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6066227>, 검색일자: 2021. 9. 9.

2019년 10월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에 따르면, 프랑스의 2020년 GDP 성장률을 1.3% 수준으로 전망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4월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에 따르면 성장률을 -8.3%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기존 전망에서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020~2024년 동안 2.4~2.6% 수준으로 전망하였으나, 최근 전망에서는 2020년에 재정적자 비율이 9.9% 수준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후, 2021년 7.2%, 2022년 4.4%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2025~2026년에도 3.5% 수준의 재정적자 비율이 유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림 II-6] 프랑스 주요 재정지표 전망치 변화

(단위: %)



주: 1) 일반정부 재정수지 비율은 'General government net lending/borrowing'을 의미

2) 일반정부 총채무 비율은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을 의미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19. 10.; 2021. 4.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GDP 대비 총채무비율의 경우, 기존 전망에서는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에는 GDP 대비 97.8%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최근 전망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 GDP 대비 113.5% 수준으로 증가

하고, 이후에도 2026년까지 116.9%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업률의 경우 기존 전망에서는 2021~2024년 동안 8.0~8.4% 수준으로 전망하였으나, 최근 전망에서는 동 기간 8.7~9.1%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프랑스는 2020년 4차례, 그리고 2020년 1차례의 수정예산법안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2020년 9월에 프랑스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표 II-5〉 코로나19 대응 프랑스의 주요 재정정책

구분	규모	주요 내용
2020년 제1차 수정예산 (2020. 3.)	450억유로	• 코로나19 방역 및 보건 지원 • 기업지원, 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지원
2020년 제2차 수정예산 (2020. 4.)	665억유로	• 제1차 수정예산 확대·강화
2020년 제3차 수정예산 (2020. 7.)	222억유로	•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강화
2020년 제4차 수정예산 (2020. 11.)	200억유로	•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규모기업 지원
2021년 제1차 수정예산 (2021. 6.)	200억유로	• 경제활동에 대한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는 업종에 대한 지원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2020. 7.); 김정연(2020. 4.; 2020. 8.; 2020. 12.);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2021. 6. 8.)을 참고하여 작성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경제 및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 450억유로 규모의 「FY2020 수정예산법안(Projet de Loi de Finance Rectificative pour 2020, PLFR)」을 제정·공표하였다.<sup>46)</sup> 여기에서는 먼저 방역을 위해 마스크 등의 필요 장비 구매와 병원 직원 수당 등에 대한 의료비 지출을 배정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한 지원과 고용 유지,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손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규모 사업체,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500유로를 지원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46) 2020년 3월 17일 발표된 3,450억유로 규모의 재정패키지에는 450억유로 규모의 추경예산과 3천억유로 규모의 은행의 기업대출에 대한 국가보증에 포함되어 있다(김혜진 외, 2020, p. 17.).

등 2개월에 걸쳐 20억유로 규모를 배정하였으며, 취약한 상태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스·소도·전기 등과 같은 공과금과 임대료의 납부기한 연장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부담금 납부기한 연기를 허용하였으며, 법인세 또한 납부연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제도 적용을 단순화하고 강화하여 고용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일시적 부분실업에 대한 임금 지급을 지원하였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감소했거나 중단된 경우에 세전 임금소득의 70%, 세후 임금소득의 84% 수준으로 보상하도록 하였으며, 최저임금 또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2020년 3월에 이어 4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제1차 수정예산법안을 확대·보완하는 제2차 수정예산법안이 공표되었으며, 제1차 수정예산법안에서의 경제지원 투입액 450억유로를 1,115억유로로 상향하였다. 먼저 의료분야 특별지원에 80억유로를 배정하여, 마스크와 의료장비 등에 대한 구매, 의료보험 효력 정지, 의료분야 인력대책 등에 지원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지역의 병원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를 수용한 병원들에 대해 최대 1,500유로를 지원하였고,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비상사태 동안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종사자들에게 추가근무수당을 50% 가산하는 등 의료종사자에 대한 특별 상여금을 배정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부분실업 상황에 있거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분실업에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부분실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258억유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규모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연대기금<sup>47)</sup> 수혜의 조건을 완화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70억유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즉 연대기금의 수급 조건을 직원 수 10인 이하에서 20인 이하로, 연간 매출액 조건은 100만유로 이하에서 200만유로 이하로 완화하여 수혜대상자를

47)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중단, 매출액의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부도 위험에 직면하지 않고 경영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펀드를 조성해 지원”하는 제도(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2020. 3. 25.)

확대하였다. 취약가구 지원을 위해서는 활동연대수당(RSA) 또는 특별연대수당(ASS)을 받는 가구에 대해 가구당 150유로의 특별지원금과 부양자녀당 추가로 100유로를 지급하고, 활동연대수당과 특별연대수당 비수혜자로서 개인 주거수당(APL) 혜택을 받는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자녀당 100유로를 지급하도록 조치하였다.<sup>48)</sup>

2020년 7월에 채택된 2020년 제3차 수정예산법안은 제2차 수정예산법안 대비 222억유로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여기에서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를 지원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즉 코로나19 위기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관광, 자동차, 항공, 스타트업, 기술, 기업, 문화 분야에 약 450억유로 규모의 지원을 계획하였으며, 특히 관광산업과 문화산업에 대해서는 폐쇄조치에 따라 영업이 중단되는 경우 부분활동수당을 100% 보장하도록 조치하였다.<sup>49)</sup> 또한 관광, 스포츠, 항공, 문화 분야 중소기업의 경우 사회보장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약 30억유로 규모를 배정하였다. 추가적으로 항공산업의 경우에는 기업 및 종사자 보호 외에 산업 지원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투자하고, R&D 및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를 계획하였다. 그리고 자동차산업의 경우에는 친환경으로의 전환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및 전기차로 교체하는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을 인상하고, 전기차 충전소 건설 확대, 친환경 차량 생산 확대, 자동차 기업의 현대화 투자 지원 등을 계획하였다.

2020년 11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규모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중심으로 200억유로 규모를 투입하는 제4차 수정예산이 공표되었다. 여기서는 기존에 직원 10명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하던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 연대기금 지원을 직원 50명 이하로 상한을 완화하였으며, 연대기금 상한선 또한 1,500억유로에서 1만유로로 인상하였다. 또한 폐

---

48) 활동연대수당(RSA): 근로빈곤층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 특별연대수당(ASS):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완료된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수당, 개인주거수당(APL): 국가협약 주택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당(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7., p. 308)

49) “부분활동수당(partial activity allowance)은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경우, 또는 기업활동이 중단되는 경우에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2020년 9월까지 100% 보장하도록 조치를 취함(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7., p. 313)

쇄된 기업뿐 아니라 매출 50% 이상의 손실을 입은 관광, 문화, 스포츠 업종에 대해서도 연대기금의 수혜대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 외에 폐쇄된 기업에 대한 부분실업 100% 지원, 사회보장부담금 감면, 디지털화 지원 등에 재원을 배정하였다.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5세 미만 청년들 가운데 활동연대수당(RSA), 특별연대수당(ASS), 개인주택수당(APL) 대상자들에게 1인당 150유로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개인주택수당(APL) 수혜자의 경우에는 자녀 1인당 50유로 지원하던 것을 100유로로 인상하여 지급하도록 조치하였다. 의료종사자들에 대해서도 보수, 초과근무수당,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해 24억유로 규모의 재원을 배정하였다.

2021년 6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200억유로 규모의 2021년 제1차 수정예산을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백신 보급 및 경제활동에 대한 제한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기존의 조치들을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부분실업과 사회보장기여금 고용주 부담을 면제해 주는 것과 관련하여 104억유로 규모의 재원을 배정하였으며, 연대기금 지원과 관련해서도 34억유로 수준으로 배정하였다. 연대기금의 경우에는 6월부터 지원 범위를 코로나19로부터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피해업종으로 제한하였으며, 지원금액 역시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주택 지원, 학생들에 대한 수당 지급 등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수정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프랑스 정부는 2020년 초부터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2020년 9월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계획된 1천억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인 ‘프랑스 활성화(France Relance)’ 정책을 발표하였다.<sup>50)</sup> 여기서는 재정지출을 통해 2022년까지 위기 이전인 2019년 GDP 수준으로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 지원 등을 통한 복구계획(recovery plan)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1천억유로 수준의

---

50) 프랑스 활성화(France Relance)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12.) 등을 참조 작성

프랑스 활성화 정책은 친환경사회로의 전환(300억유로), 국가·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제회복력 강화(340억유로), 사회통합 및 취약계층 지원(360억유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산업 탈탄소화 지원, 에너지순환 분야 투자, 수소산업 분야 지원, 생산세(impôts de production) 인하 및 각종 부담금·세금 감면,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 보건분야 투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관련 훈련과정의 확대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2020. 12., p. 254).

〈표 II-6〉 프랑스 코로나19 대응 주요 재정정책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10억유로(2,520억달러) GDP 대비 9.6%</li> <li>(의료: 310억유로, GDP 대비 1.4%; 비의료: 1,890억유로, GDP 대비 8.2%)</li> </ul>
의료	<p><b>[지출: 313억유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나 간병인을 위한 의료보험(병가지급) 합리화 및 촉진, 의료용품 지출 증대, 의료 종사자 보너스 지원</li> <li>• 2021년 이후 경제회복계획(recovery plan)에서의 보건의료분야 투자 및 설비구축</li> </ul>
비의료	<p><b>[지출: 1,568억유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축근로제도(short-time work scheme) 지원을 받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직접지원(direct financial support), 저소득가정에 대한 직접이전소득 지원</li> <li>• 만료된 실업수당 및 기타 지원기간 연장,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additional transfers), 사회부조 프로그램(social program) 추가 지출</li> <li>• 친환경차량 구매 지원, 자동차 및 항공 분야에 대한 녹색투자 보조금</li> <li>• 경제회복계획(recovery plan)과 관련하여 건물에 대한 에너지 복구 보조금, 교통부문 생태계 변화 및 청정에너지 개발투자,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등</li> </ul> <p><b>[수입손실: 326억유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면제</li> <li>• 법인세 소급공제(carry back) 및 2021년 이후 생산세(production taxes) 영구적 인하</li> </ul> <p><b>[지출축진: 175억유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환급 촉진(Accelerated refund of tax credits)</li> </ul> <p><b>[이연수익: 520억유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및 기업의 세금 납부 연기</li> </ul>

주: 코로나19 대응 2021년 6월 5일까지의 의료·비의료 재정정책 기준(Above-the line measures: Additional spending and forgone revenue in the health sector/in areas other than health, Accelerated spending/deferred revenue)

자료: IMF Fiscal Monitor, "Database of Fiscal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2021. 6. 5. 발췌·정리

#### 4. 일본<sup>51)</sup>

일본에서의 코로나19 첫 확진사례는 2020년 1월에 나타났으며, 2021년 9월 말 기준 인구 100만명당 1만 3,490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sup>52)</sup> 그리고 백신접종은 2021년 2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sup>53)</sup>

일본 정부는 2020년 4월 7일 처음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사태를 선언하였으며, 2021년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자 2021년 1월 8일 제2차 긴급사태를 선언하였다. 이후 확진자 수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4월 들어 다시 감염자 수 급증 추세가 나타나자 2021년 4월 25일 제3차 긴급사태를 선언하였다. 또한 4월부터 여러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을 중점조치지역으로 선언하였다.<sup>54)</sup> 이와 같이 일본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사태선언과 특정 지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중점조치지역선언 등을 통해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였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월의 일본 내각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일본의 GDP 성장률은 1.2%로 전망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1년 발표에서는 2020년 성장률이 -5.2%로 하향 조정되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 발표한 자료에서는 재정적자 수준이 2020년 GDP 대비 3.2%에서 2023~2035년에는 1%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최근 발표된 자료에

---

51)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정책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7.; 2020. 12.; 2021. 7.) 등을 참조 작성

52) 첫 확진사례: Johns hopkins 대학 발표자료, "COVID-19 Data Repository by the Center for Systems Science and Engineering (CSSE) at Johns Hopkins University," <https://github.com/CSSEGISandData/COVID-19> → Code → Download ZIP → COVID-19-master 폴더 → csse\_covid\_19\_data 폴더 → csse\_covid\_19\_time\_series폴더 → time\_series\_covid19\_confirmed\_global.csv, 검색일자: 2021. 10. 12.; Corona Live 홈페이지, 「인구 100만명당 감염자 수」, <https://corona-live.com/world/>, 검색일자: 2021. 9.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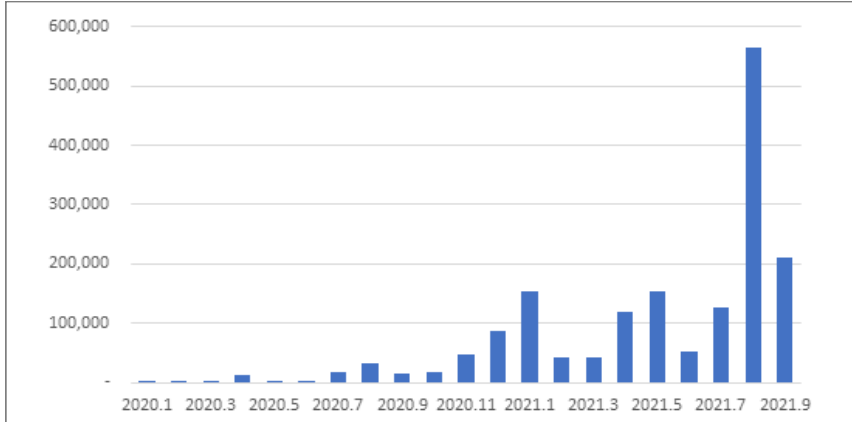
53) 『BBC News 코리아』, 「코로나 백신: 한눈에 보는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2021. 2. 15.,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6066227>, 검색일자: 2021. 9. 9.

54) 일본 내각부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본부, <https://corona.go.jp/emergency>, 검색일자: 2021. 6. 29.

서는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14.1%, 8.5% 수준의 재정적자가 나타나고, 2023년에도 3% 이상의 재정적자 수준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sup>55)</sup>

[그림 II-7] 일본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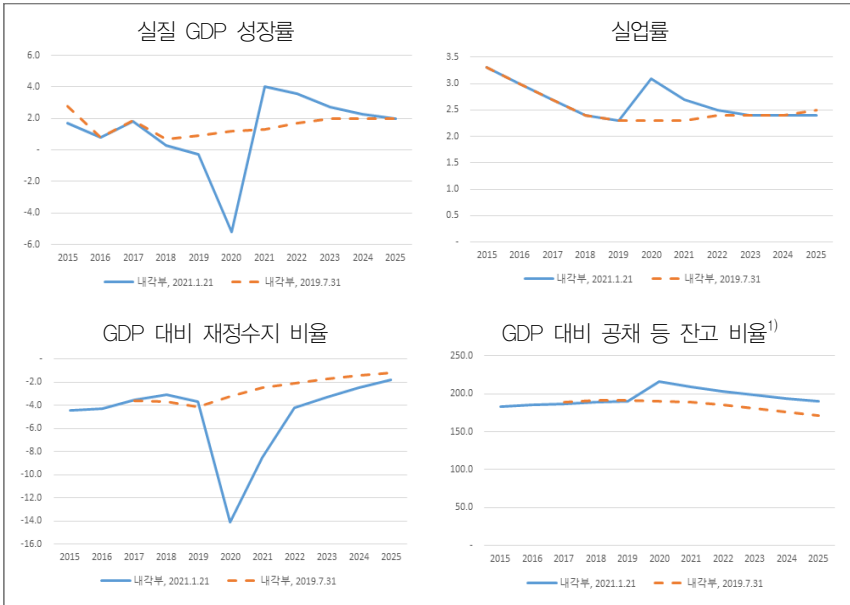
자료: CSSEGIS and Data/COVID-19, “COVID-19 Data Repository by the Center for Systems Science and Engineering(CSSE) at Johns Hopkins University,” <https://github.com/CSSEGISandData/COVID-19>, 검색일자: 2021. 10. 12.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또한 이전 발표에서는 GDP 대비 공채 등의 잔고비율이 2020년 190.6%에서 2025년에는 171.7%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최근 발표자료에서는 2020년에 216.3% 수준까지 증가한 후 2024년 194.2%, 2025년 189.6%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 내각부 자료에서는 2020년과 2021년 실업률을 2.3%로 전망하였으나, 2021년 자료에서는 2020년 3.1%, 2021년 2.7%로 상향 조정하여 추정하고 있다.

55)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2019. 7. 31.;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2021. 1. 21.

[그림 II-8] 일본 주요 재정지표 전망치 변화

(단위: %)



주: 1) '공채 등 잔고 비율'은 국가 및 지방의 장기채무 잔고에 대한 비율을 의미  
 자료: 일본 내각부(2019. 7. 31.; 2021. 1. 21.)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일본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2020년 2~3월에 두 차례에 걸쳐 긴급 대응책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2020년 4월, 6월 그리고 12월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하여 위기에 대응하였다. 제1차 및 제2차 추경을 통해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경제대책을 수립·수행하였으며, 제3차 추경 등을 통해서는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경제발전을 위한 종합경제대책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추경에 예비비 항목을 신설·반영하기도 하였다.

일본 정부가 2020년 2월 13일에 발표한 153억엔 규모의 제1차 긴급대책은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대비한 사전준비와 보건지출 등을 중심으로 수립되었다. 즉 국내감염대책과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 방지·관리 대책, 그리고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귀국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그리고 3월 10일에 발표한 4,308억엔 규모의 제2차 긴급

급대응책에는 감염확산 방지책·의료체제 정비와 함께 학교 임시휴업에 따른 보호자 휴가취득 지원, 학교 급식중단 대응 등에 상대적으로 큰 재원이 배정되었다. 또한 경제활동 및 일자리 축소에 대응·지원하는 정책도 포함되었으며, 이와 같은 긴급대책에 필요한 비용은 2019년 예산의 일부와 예비비를 통해 조달되었다.

〈표 II-7〉 코로나19 대응 일본의 주요 재정정책

구분	규모	주요 내용
제1차 긴급대응책 (2020. 2.)	153억엔	• 코로나19 감염확산 대비 사전준비 및 보건지출
제2차 긴급대응책 (2020. 3.)	4,308억엔 <sup>1)</sup>	• 학교 임시휴업에 따른 보호자 휴가취득 지원 • 경제활동 및 일자리 축소 대응
2020년 제1차 추경 (2020. 4.)	25.7조엔	• 고용 및 사업 유지·계속 지원
2020년 제2차 추경 (2020. 6.)	31.9조엔	• 자금유통대응 강화, 임대료 지원 급부금 신설
2020년 제3차 추경 (2020. 12.)	19.2조엔	•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투자 • 의료체제 정비·강화 및 의료기관 지원

주: 1) 제2차 긴급대응책 규모는 재정조치만 고려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7.; 2020. 12.) 참조 작성

그리고 일본 정부는 2020년 4월에 발표한 25.7조엔 규모의 제1차 추경예산과 6월에 국회를 통과한 31.9조엔 규모의 제2차 추경예산을 바탕으로 총 재정지출 48.4조엔, 총 사업규모 117.1조엔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주요 정책 패키지인 ‘신형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긴급경제대책’을 수립·운영하였다. 여기에서는 감염확산에 대응한 예방조치 제고 및 치료수용력 강화, 고용 및 기업 보호, 봉쇄조치 이후 경제활동 회복, 회복력 있는 경제구조 재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대비 강화 등 다섯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정책수단으로는 모든 개인과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현금 지급,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의 납부 연기, 공공·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concessional loans)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IMF Policy Tracker).<sup>56)</sup>

56) IMF Policy Tracker, <https://www.imf.org/en/Topics/imf-and-covid19/Policy-Responses-to-COVID-19#U>, 검색일자: 2021. 9. 13.

먼저 감염 확대 방지 및 의료체제 정비 등과 관련해서는 마스크, 소독약 등 코로나19 관련 의료부품 제조 기업에 대한 생산설비 투자 지원, 의료기관, 노인 대상 개호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집, 학교 등에 대한 마스크와 같은 의료용품 배포, 검사기기 배치 등 검사제도 강화를 통한 감염자 조기발견, 코로나19 지정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병상공급 확대·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고용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조정지원금 특례조치를 확대하였다.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직을 하도록 하는 경우 기업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직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도록 조치하였다. 즉 일반적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휴직수당의 2/3를 지원하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휴직수당의 1/2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지원 수준을 각각 4/5와 2/3로 확대하였으며,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적용하도록 조치하였다(한국무역협회, 2020. 4. 6.). 그리고 소규모 사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의 감소를 경험한 사업자의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을 유예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프리랜서를 포함한 소규모 및 중소·중견 사업자·기업체에 새로이 '지속화 급부금'을 도입하여 지원하였다. 즉 수입이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할 때 1/2 이상 줄어든 사업체에 대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대 100만엔, 그리고 중소·중견 기업체의 경우 최대 200만엔 한도 내에서 감소한 수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조치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정책급부금'을 통해 1인당 10만엔을 지원받도록 조치하였으며,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었던 육아가구에 대해서는 임시특별지급금을 통해 아동 1명당 추가적으로 1만엔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특정 수준 이상 감소한 개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공적연금 등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하여 가구소득을 지원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사업자의 국세·지방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분에 대해서도 담보와 연체료 없이 1년 동안 납부를 유예하도록 허용하였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특히 큰 어려움에 처한 요식업과

관광·운수업 그리고 이벤트와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Go To 캠페인<sup>57)</sup> 등 단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역과 관련해서는 새로이 '지방재생 임시교부금'을 도입하였는데, 이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동안 감염확산 방지와 지역주민의 생활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는 지역이 필요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1차와 제2차 추경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에 적시에 충실히 대응하기 위해 과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큰 규모인 1.5조엔, 10조엔을 각각 예비비로 책정하였다.

2021년 들어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긴급사태선언이 발표되었으며, 이에 따른 봉쇄조치와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책이 발표되었다. 먼저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응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 지역,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협력금을 지원하였으며, 음식점 단축영업으로 인해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고용조정조성금 특례조치를 확대·적용하도록 조치하였는데, 단축시간 요청을 수용하고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휴직수당의 100%를 지원하도록 하였고, 지역과 업종에 무관하게 작년 또는 재작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 대해서도 대기업을 포함하여 휴직수당의 100%를 지원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전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금과 주거지원금을 제공하였으며, 소규모·중소기업의 이자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등을 시행하였다.

2020년 12월, 일본 정부는 19.2조엔 규모의 제3차 추경을 발표하였는데, 이 가운데 11.7조엔 규모가 디지털·녹색사회 실현, 생산성 향상, 민수주도 선순환 경제구축 등과 같은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투자에 배정되었다. 디지털 개혁 및 그린사회 실현과 관련해서는 탄소중립경제를 위한 R&D 지원 기금 창설, 지방의 디지털 기반으로의 개혁, 포스트 5G 및

57) 일본의 Go To 캠페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회복대책으로 FY2020 추경예산 1조 6,794억엔을 투자·편성하여, 관광수요 침체와 봉쇄·외출 자제·통제 등으로 인해 손해·피해를 입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음식점, 관광업 및 이벤트업 등을 대상으로 Go To 트레블, Go To 잇, Go To 이벤트 사업 등을 진행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12., p. 208).

Beyond5G(6G) R&D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재구조 지원에 위한 보조금과 대학을 위한 펀드 조성 그리고 국내외 공급체인 강화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사회·고용 부분에서의 민간수요 주도 선순환 촉진을 위해서는 중소 및 소규모사업 등에 대한 자금유통 지원, 고용조성보조금 특례조치, 관광산업 회복·발전을 위한 정부의 Go To Travel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 II-8〉 일본 코로나19 대응 주요 재정정책

<b>규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8.7조엔(8,310억달러) GDP 대비 16.5%</li> <li>(의료: 10.1조엔, GDP 대비 1.9%; 비의료: 78.6조엔, GDP 대비 14.6%)</li> </ul>
<b>의료</b>	<p><b>[지출: 10.1조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보건의료장비 생산, 조달(procurement), 유통(distribution)(0.8조엔)</li> <li>의료 및 장기요양 전문의 현금 지급(cash handouts) 포함 보건 및 장기요양 관련 지방정부의 예산 지원(3.7조엔)</li> <li>백신의 조달(procurement) 등 기타 보건 관련 조치(5.6조엔)</li> </ul>
<b>비의료</b>	<p><b>[지출: 78조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0년 4월에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긴급경제패키지(Emergency Economics Package)에는 개인 1인당 10만엔 현금 지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각각 200만엔, 100만엔의 일시금 지급, 금융기관 대출 지원, 고용조정지원금 지원, 경제회복 촉진을 위해 서비스분야 소비와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내용 포함</li> <li>2020년 5월에 발표한 추가지원책은 정부·민간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지원금 확대,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보조금, 고용조정지원금 확대, 지방정부 지원, 기업 현금지원 자원 보충 등을 포함</li> <li>2020년 12월의 추가조치는 고용조정지원금 및 확대, 중소기업 구조조정 촉진 보조금, 친환경기술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및 공공투자 등 경제회복 촉진을 위한 조치 등을 포함</li> <li>2020년 4월 이후, 정부는 총 9.8엔 규모의 보건·비보건 정책에 코로나19 예비금을 이용하여, 코로나19 피해 가구에 대한 긴급대출프로그램 지원 및 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고용조정지원금 보충 지원, 백신 조달, 지방정부 지원 등에 이용</li> </ul> <p><b>[수입손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손금소급공제(carry-back) 및 이월결손금(carry-forward) 제도 확대</li> <li>기업의 탄소감축 및 디지털화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 재산세 및 항공유류세 감감</li> </ul> <p><b>[이연수익: 3조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받는 기업과 가구에 부과되는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을 1년간 연기할 수 있도록 조치</li> </ul>

주: 코로나19 대응 2021년 6월 5일까지의 의료·비의료 재정정책 기준(Above-the line measures: Additional spending and forgone revenue in the health sector/in areas other than health, Accelerated spending/deferred revenue)

자료: IMF Fiscal Monitor, "Database of Fiscal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2021. 6. 5, 발췌·정리

## 5. 한국<sup>58)</sup>

한국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사례는 2020년 1월에 보고되었으며, 2021년 9월 말 기준 인구 100만명당 6,065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sup>59)</sup> 그리고 백신 접종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작되었다.<sup>60)</sup>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코로나19 감염·확산 사태를 겪은 한국은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감염·확진자가 나타남에 따라 정부는 감염병 재난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격상하였으며, 같은 달 27일 경계 수준으로 격상한 데 이어, 2월 23일에는 전국적 확산에 따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경보 수준을 다시 격상하였다(최바울 외, 2020). 2월 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으로 거리두기 정책을 실행하다가, 2020년 6월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체계를 수립하였으며, 2020년 11월에는 의료 역량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3단계에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신설하여 5단계로 방역수칙을 강화·설계하였다. 그리고 2021년 7월부터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강화하는 체계로 개편하였다(중앙사고수급본부, 2020. 6. 28.; 보건복지부, 2021. 6. 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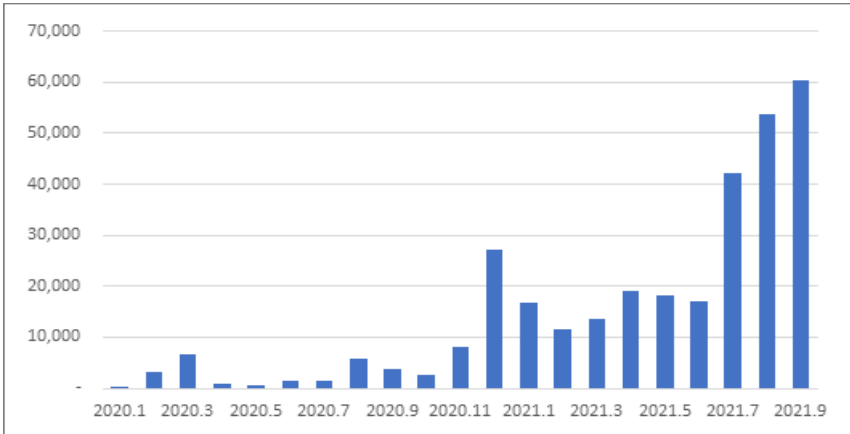
58)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정책 관련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코로나19 경제대책」, 2021. 7. 27.,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72965>, 검색일자: 2021. 9. 11.; 정부발표 추정예산안 관련 자료(기획재정부, 2020. 3. 4; 2020. 4. 16; 2020. 6. 3; 2020. 9. 10; 2021. 7. 1; 2020. 3. 17; 2020. 4. 30; 2020. 7. 3; 2020. 9. 22; 2021. 3. 25; 2021. 7. 24.);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https://www.knewdeal.go.kr/>) 등을 참조하여 작성

59) 첫 확진사례: Johns Hopkins 대학 발표자료, "COVID-19 Data Repository by the Center for Systems Science and Engineering (CSSE) at Johns Hopkins University," <https://github.com/CSSEGISandData/COVID-19> → Code → Download ZIP → COVID-19-master 폴더 → csse\_covid\_19\_data 폴더 → csse\_covid\_19\_time\_series폴더 → time\_series\_covid19\_confirmed\_global.csv, 검색일자: 2021. 10. 12.; Corona Live 홈페이지, 「인구 100만명당 감염자 수」, <https://corona-live.com/world/>, 검색일자: 2021. 9. 30.

60) 『BBC News 코리아』, 「코로나 백신: 한눈에 보는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2021. 2. 15.,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6066227>, 검색일자: 2021. 9. 9.

[그림 II-9] 한국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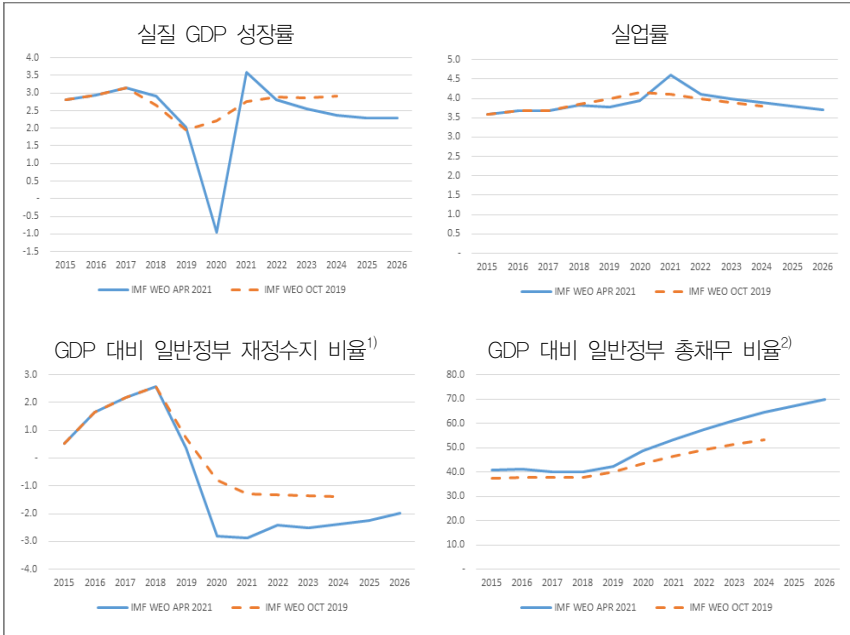
자료: CSSEGIS and Data/COVID-19, “COVID-19 Data Repository by the Center for Systems Science and Engineering(CSSE) at Johns Hopkins University,” <https://github.com/CSSEGISandData/COVID-19>, 검색일자: 2021. 10. 12.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19년 10월 전망(IMF WEO, Oct 2019)에서는 한국의 2020년 GDP 성장률을 2.2% 수준으로 전망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4월 전망(IMF WEO Apr, 2021)에서는 성장률을 -1.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기존 전망에서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020~2024년 동안 0.8~1.4% 수준으로 전망하였으나, 최근 전망에서는 2020년과 2021년 재정적자 비율이 2.8%, 2.9%로 나타난 이후 2022~2024년 동안 2.4~2.5%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DP 대비 일반정부 총채무 비율의 경우, 기존 전망에서는 2020년 43.4%에서 2024년 53.3%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전망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 GDP 대비 48.7% 수준으로 증가하고, 2024년 64.4%, 2025년에는 69.7%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업률의 경우, 기존 전망에서는 2021~2024년 동안 4.1%에서 3.8%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최근 전망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에 4.6%로 증가하지만, 2022년부터는 기존 전망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II-10] 한국 주요 재정지표 전망치 변화

(단위: %)



주: 1) 일반정부 재정수지 비율은 'General government net lending/borrowing'을 의미

2) 일반정부 총채무 비율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을 의미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19. 10.; 2021. 4.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한국은 2020년 네 차례, 그리고 2021년 두 차례 등 총 여섯 차례의 추정 예산 편성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였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국가발전전략으로 2020년 7월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21년 7월에는 이를 수정·보완하여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였다.

<표 II-9> 코로나19 대응 한국의 주요 재정정책

구분	규모	주요 내용
2020년 제1차 추경 (2020. 3.)	11.7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소득층 지원 및 고용 안정</li> <li>방역체계 보강·고도화 및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li> </ul>
2020년 제2차 추경 (2020. 4.)	12.2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일사업) 긴급재난지원금</li> </ul>

〈표 II-9〉의 계속

구분	규모	주요 내용
2020년 제3차 추경 (2020. 7.)	35.1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li> <li>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방역산업육성·재난대응시스템고도화, 한국판 뉴딜 등 경기보강</li> </ul>
2020년 제4차 추경 (2020. 9.)	7.8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피해지원</li> <li>아동 특별돌봄 지원,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li> </ul>
2021년 제1차 추경 (2021. 3.)	14.9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상공인 등에 대한 긴급피해지원</li> <li>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지원</li> </ul>
2021년 제2차 추경 (2021. 7.)	34.9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 및 손실보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li> </ul>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0. 3. 4.; 2020. 4. 16.; 2020. 6. 3.; 2020. 9. 10.; 2021. 7. 1.) 및 국회 국정 보도자료(2020. 3. 17.; 2020. 4. 30.; 2020. 7. 3.; 2020. 9. 22.; 2021. 3. 25.; 2021. 7. 24.) 자료 참조 작성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재정 3.1조원, 금융 15.2조원, 세제 1.7조원 등 약 20조원 규모의 신종코로나감염 대응·지원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한 보건의료 조치로 방역대응 체계 구축 및 검역·격리·진단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산업과 기업·업종과 관련하여 자동차부품, 관광·외식업, 항공·해운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분야별·업종별 대책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가구지원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소비쿠폰지급 등과 같은 재정지원정책을 운영하였으며,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 승용차 개인소득세 인하와 같은 조세지원정책을 수립·운용하였다.

그리고 3월에는 코로나19 관련 첫 추경이 편성되었다. 2020년 제1차 추경은 11.7조원 규모로 먼저 코로나19 관련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입원·격리 치료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에 따른 고용자 유급휴가비 지원 등과 같은 조치에 재원을 배당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긴급경영자금 융자, 초저금리대출 등과 같은 융자조치와 더불어 피해점포 지원, 온라인 점포로의 전환 지원, 전통시장 바우처 지원 등과 같은 재정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저소득·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특별

돌봄쿠폰을 제공하고 양육수당을 확대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소비쿠폰을 통해 지원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일자리쿠폰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3월에 이어 4월에 발표된 2020년 제2차 추경은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12.2조원 규모로 편성되었는데, 지방비 2.1조원 수준을 고려하면 전체 소요재원은 14.3조원 규모이다. 여기에서는 건강보험체계상에서의 가구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그리고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재난지원금은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설계하였는데, 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과정에서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7월에는 2020년 제3차 추경이 역대 최고 수준인 35.1조원 규모로 편성·확정되었으며,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고용안전망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10.0조원, 그리고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경기보강을 위한 투자에 10.4조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고용안전망과 관련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일자리 공급, 구직급여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 대상 긴급복지 확대,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 등과 같은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다. 경기보강 측면에서는 소비쿠폰 제공 및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유통기업 전용보조금 신설 등을 통한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방역산업 육성, 그리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9월에는 7.8조원 규모의 2020년 제4차 추경이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가구의 돌봄 지원 등을 위해 발표·확정되었다. 먼저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새희망자금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여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업종과 무관하게 100만원 수준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실내체육시설 등과 같은 집합금지 업종과 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과 같이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과 함께 추가로 각각 100만원, 5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학교 등의 휴원·휴교 등으로 인한 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 1명당 20만원을 지원하는 특별돌봄지원을 제공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자녀의 휴원 및 휴교로 인해 자녀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의 최대 사용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이에 따른 돌봄비용 지원 기간 및 금액을 확대하였다.

2021년에 들어서도 코로나19 감염세가 지속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3월에 2021년 제1차 추경이 편성·확정되었다. 여기서는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위기 및 정책대응으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피해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버팀목플러스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조치 등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백신 구매와 접종,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등 방역대책에 대한 재원이 배분되어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생활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7월에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34.9조원 규모의 2021년 제2차 추경이 확정되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의 피해에 대해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과 향후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의 80% 이상을 대상으로 1명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에 국비 8.6조원 포함 11.0조원 규모를 배정하였다. 여기에 추가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1명당 1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전 분기에 이용한 월평균 카드이용액보다 3%를 초과하여 사용한 달에는 초과분의 10%에 대해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캐시백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준비·대응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2020년 7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고, 일자리 창출 190만개를 목표로 하는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는 데이터, 네트워크, AI 생태계 강화와 비대면 산업 육성, 그리고 교육인프라·SOC 디지털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하는 것과, 공간·도시·생활 인프라를 녹색전환하고, 녹색산업과 관련하여 혁신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2021년 7월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2.0’에서는 기존의 2개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보완하면서, 휴먼 뉴딜을 새로운 축으로 추가·강화하여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일자리 창출 목표 수준이 250만 개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투자규모 또한 220조원 규모로 확대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21. 7. 14.).

〈표 II-10〉 한국 코로나19 대응 주요 재정정책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6.7조원(730억달러) GDP 대비 4.5% (의료: 10.0조원, GDP 대비 0.5%; 비의료: 76.7조원, GDP 대비 4.0%)</li> </ul>
의료	<p>[지출: 10.0조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급지출 및 2020년 제1차 추경 예산을 통해 전염병 예방·치료, 의료기관 및 격리 가정에 대한 지원 등에 2.1조원을 배정하였으며, 2020년 제3차 추경에서는 진단·치료시설 및 스마트의료센터 확대, 치료·백신개발 촉진, K COVID-19 대응키트 등에 2.4조원 배정</li> <li>2021년 추경에서 코로나19 백신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등에 4.2조원 배정</li> </ul>
비의료	<p>[지출: 73.3조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 초기, 빈곤층을 위한 소비쿠폰, 긴급가족돌봄 지원, 기업재개 지원 등에 5.6조원을 배정하였으며, 2020년 제1차 추경에는 중소기업 지원, 소비쿠폰 추가 지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에 8.8조원 배정</li> <li>제2차 추경에는 14.3조원 규모를 배정하여 전체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였으며, 제3차 추경에는 23.7조원 규모를 통해 기업·고용·사회안전망 지원, 소비·투자 및 지역 경제활성화, 디지털·친환경 투자를 통한 한국판 뉴딜계획 등을 지원</li> <li>제4차 추경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3.9조원, 고용안정 지원 1.5조원, 실업 및 저소득가구 지원 0.4조원, 주간보호·통신요금 지원 1.8조원, 긴급질병예방 0.2조원 등에 7.8조원 배정</li> <li>2020년 12월 맞춤형 패키지(Customized Relief Package):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보조금, 프리랜서, 플랫폼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 지원 등에 4.6조원 배정</li> <li>2021년 제1차 추경은 중소기업·취약근로자 지원 8.2조원, 취업지원 2.5조원 등을 포함</li> </ul>

〈표 II-10〉의 계속

<b>비의료</b>	<p><b>[수입손실: 3.4조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일시 감면, 공공임대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상업용 부동산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인하, 공항시설·항만·터미널 이용요금 인하</li> <li>•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0.7조원, 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0.3조원, 법인세 산정 시 접대비 공제한도 인상 0.2조원</li> <li>• 가구의 사회보장급여(건강보험)부담 인하 0.9조원, 신용·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인상 0.4조원, 자동차 소비세 감면 0.8조원</li> </ul>
	<p><b>[지출축진: 3.3조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지원을 위한 조기구매 및 선불금 지급 2.1조원, 건설투자 조기시행 1.2조원, 정부조달규정 일시적 완화</li> </ul>
	<p><b>[이연수익: 43.4조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유예, 조기환급 등 세금납부 유예 42.9조원, 가구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전기요금 납부연기 0.5조원</li> </ul>

주: 코로나19 대응 2021년 6월 5일까지의 의료·비의료 재정정책 기준(Above-the line measures: Additional spending and forgone revenue in the health sector/in areas other than health, Accelerated spending/deferred revenue)

자료: IMF Fiscal Monitor, "Database of Fiscal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2021. 6. 5, 발체·정리

## 6. 소결

코로나19 이후 각 국가들에서 나타난 대응방안은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측면도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 초기에는 방역과 의료부문에 대한 대책과 지원을 우선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봉쇄조치 등이 수립되었으며, 다수의 국가들에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 방안들이 수립되어 운용되었다. 단 노동시장이 유연한 미국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였지만, 기존보다 확대·강화된 실업급여와 현금급여 지원 등을 통해 대응하였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사회보장부담금의 납부 연기·면제, 공과금 납부 연기, 기업유지 및 고용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실업급여 연장 지원, 아동수당 등과 같은 자녀지원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중심

으로 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취약가구 생계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다양한 조치들은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책이 확대·연장되어 운영되었으며, 백신의 확대 및 감염세의 완화 추세가 나타남에 따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기업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정책대상이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각 국가들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사회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준비·대비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사회통합 강화를 위해 복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직업훈련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많은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도로·철도, 통신망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기후·환경 친화적인 경제구조로의 전환과 디지털 개혁·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투자 계획들이 제시되고 있다.

---

## Ⅲ. 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성 변화 전망

---

### 1. 경제 여건

#### 가.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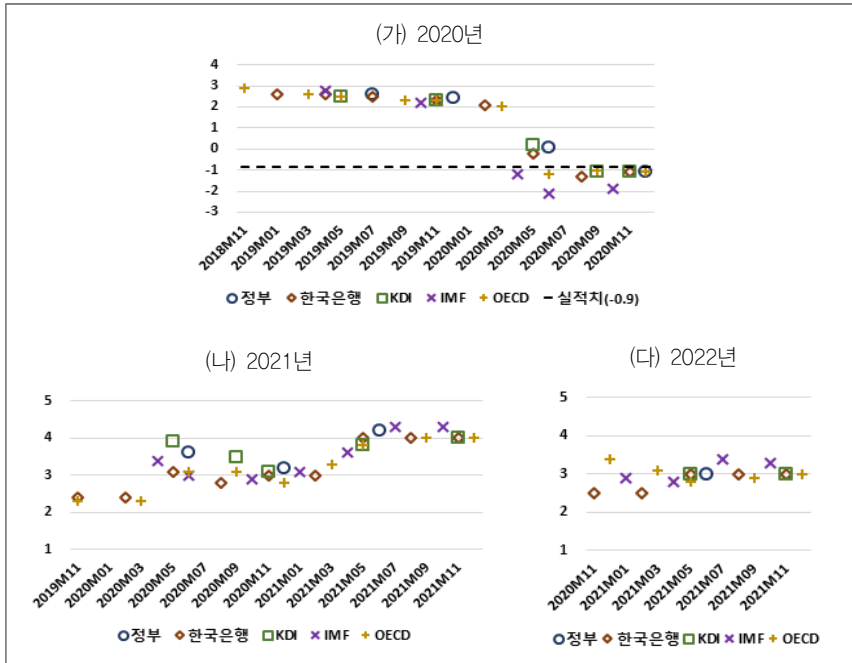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대유행기였던 2020년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았던 시기였다. 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등 주요 경제 전망 기관들의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변화를 통해 이 시기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림 Ⅲ-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9년 7월까지 2020년 경제성장률은 2.5% 이상으로 전망되었다. 이후 주요 전망 기관들은 2019년 9~12월에 202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2.4%로 하향 조정하고, 2020년 2~3월에 2.0~2.1%로 추가적으로 더 낮추었으나, 주요 기관 간의 전망치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2020년 4~6월에는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Delta 2.1\sim 0.2\%$ 로 급격한 조정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전망 기관 간 전망치에도 큰 격차가 발생하였다. 그만큼 2020년 4월 이후 경제적 불확실성이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2020년 8~12월의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Delta 1.9\sim \Delta 1.0\%$ 로 모든 전망 기관들은 한국의 경제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실제로 202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잠정치)은  $\Delta 0.9\%$ 로 실현되어, 외환위기로 인해 경제 규모가 5.1% 축소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하였다.

2020년 4월 이후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주요 원인은 코로나19의 대유행이라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기 이전인 2020년 2월까지의 경제 전망에 대한 급격한 조정

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불확실성에 대해서만 언급되던 상황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3월부터 경제 전망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이 언급되었고, 주요 기관들은 이를 2020년 4월부터 전망치에 반영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급격한 하향 조정이 발생하였다. 다만 한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관 간의 시각차가 존재하여 조정폭에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

[그림 III-1] 2020~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변화

(단위: 전년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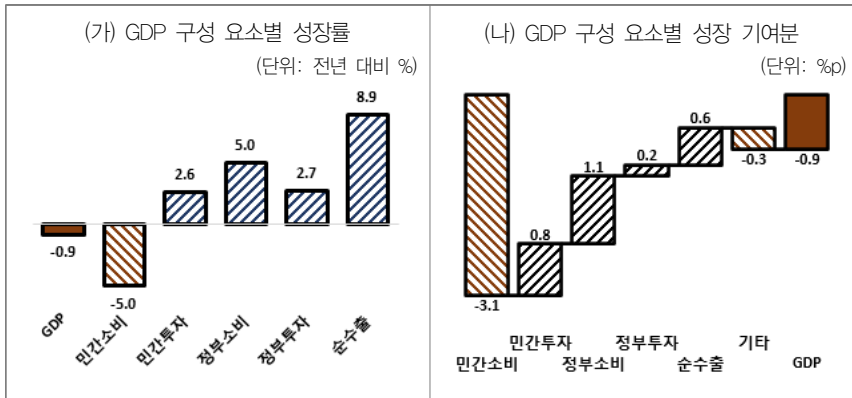
자료: 다음의 데이터를 저자가 취합 및 정리하여 작성

1.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0. 2. 2. 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원계열, 실질, 분기 및 연간)」, <http://ecos.bok.or.kr/>, 검색일자: 2021. 9. 16.
2. 관계부처 합동(2019. 7. 3.; 2020. 6. 1.; 2021. 6. 28.)
3. 기획재정부(2019. 12. 19.; 2020. 12. 17.)
4. 한국개발연구원(2019. 5.; 2019. 11.; 2020. 5.; 2020. 9.; 2020. 11.; 2021. 5.; 2021. 11.)
5. 한국은행(2019. 1.; 2019. 4.; 2019. 7.; 2019. 11.; 2020. 2.; 2020. 5a.; 2020. 8.; 2020. 11.; 2021. 2.; 2021. 5.; 2021. 8a.; 2021. 11a.)
6. IMF(2019. 4.; 2019. 10.; 2020. 4.; 2020. 6.; 2020. 10.; 2021. 1.; 2021. 4.; 2021. 7.; 2021. 10b.)
7. OECD(2018. 11.; 2019. 3.; 2019. 5.; 2019. 9.; 2019. 11.; 2020. 3.; 2020. 6.; 2020. 9.; 2020. 12.; 2021. 3.; 2021. 5.; 2021. 9.; 2021. 12.)

한편 2020년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없었다라든가 잠재성장률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던 상황이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영향이 경제전망에 반영되기 이전인 2020년 2~3월의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2.1%로 이미 2% 중후반대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경제성장률이 2019년 1분기와 비교해 2020년 1분기에 0.5~0.6%p 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경제성장률 전망이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것은 경기 하향 국면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GDP 구성 요소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는 민간소비를 크게 위축시켰다. 2020년 전체 경제 규모는 0.9% 축소되는 데 그쳤지만 민간소비는 5.0% 감소하였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정책과 함께 대면소비를 꺼리는 소비심리의 위축 등으로 인하여 2020년에는 민간소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민간소비의 위축은 경제성장률을 3.1%p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림 III-2] 2020년 GDP 구성 요소별 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0. 2. 2. 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원계열, 실질, 분기 및 연간)」, <http://ecos.bok.or.kr/>, 검색일자: 2021. 9. 16. 데이터를 저자가 정리(성장률) 및 가공(성장 기여분)하여 작성

반면 경제가 전반적으로 역성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와 순수출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였다. 2020년 민간투자는 2.6% 성장하여 경제성장률을 0.8%p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순수출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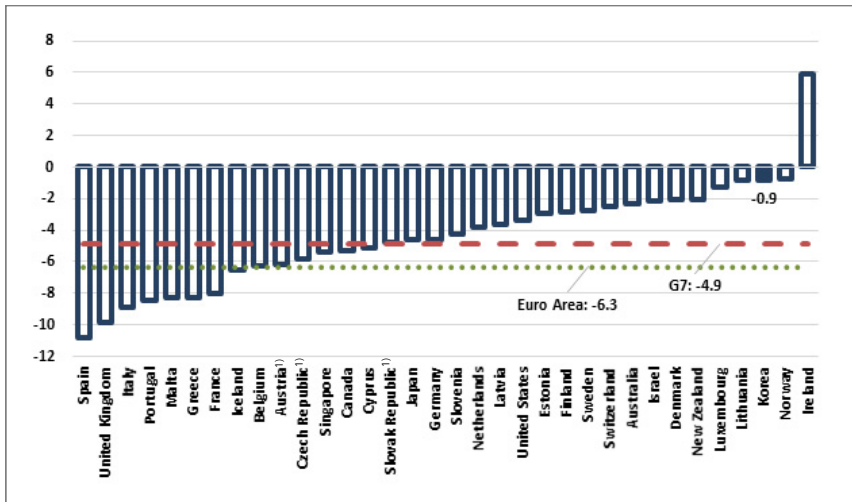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이 국제 교역을 제약시켜 수출과 수입을 모두 감소시켰지만 수입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이로 인하여 순수출이 8.9% 증가하였고, 이는 경제성장률을 0.6%p 증가시켰다.

한편 2020년에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두드러졌다.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해 정부소비와 정부투자가 전년 대비 각각 5.0%와 2.7% 증가하였다. 이는 경제성장률을 각각 1.1%p와 0.2%p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2020년 한국 경제는 역성장하였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 및 경제적 대응으로 그 충격의 크기는 다른 선진국들보다 작았다. 202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인  $\Delta 0.9\%$ 는 G7 회원국들과 유로권 국가들의 경제가 평균적으로 각각  $\Delta 4.9\%$ ,  $\Delta 6.3\%$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특히 스페인은  $\Delta 10.8\%$ 로 선진국들 중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영국( $\Delta 9.8\%$ ), 이탈리아( $\Delta 8.9\%$ ), 포르투갈( $\Delta 8.4\%$ )도 경제적 충격이 컸다.

[그림 III-3] 2020년 경제성장률 국제 비교

(단위: 전년 대비 %)



주: 1)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는 OECD, "World Economics Outlook" 전망치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 October 2021 Edition,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1/October>, 검색일자: 2021. 10. 17. 데이터를 저자가 정리하여 작성

다행스럽게도 최근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다. 변이바이러스의 확산 등 방역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20년과 달리 2021년에는 백신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백신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이 완화되고 있고, 경제주체들이 비대면 방식의 경제활동에 적응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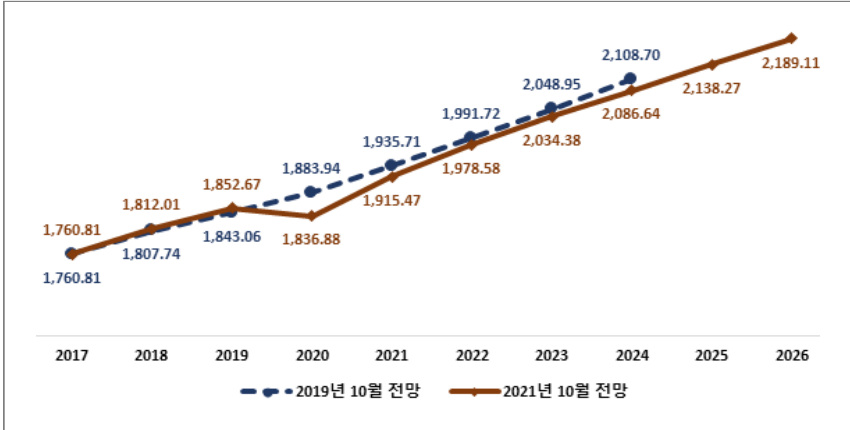
이러한 영향으로 최근 주요 국내외 전망 기관들은 한국의 2021년 경제성장률을 4.0% 이상, 그리고 2022년 경제성장률을 3.0% 내외로 전망하고 있다. 2021년의 경우 한국은행(2021. 11a.), 한국개발연구원(2021. 11.), OECD(2021. 12.)는 4.0%, 정부(관계부처 합동, 2021. 6.)는 4.2%, 그리고 IMF(2021. 10b.)는 4.3%로 전망하였다. 이는 주요 기관들이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보급되기 이전인 2020년 4분기에 한국의 2021년 경제성장률을 3.0% 내외로 전망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최근 거시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2022년 경제성장률의 경우 정부(관계부처 합동, 2021. 6.)와 한국은행(2021. 11a.), 한국개발연구원(2021. 11.), OECD(2021. 12.)는 모두 3.0%, 그리고 IMF(2021. 10b.)는 3.3%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경기의 회복세는 2021년 우리 경제가 실질 GDP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되고, 2022년에는 기존의 경제성장 경로에 근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Ⅲ-4]에 나타난 바와 같이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코로나19 확산 이전 가장 마지막에 전망된 IMF(2019. 10.)의 실질 GDP 경로와 가장 최근에 전망된 IMF(2021. 10b.)의 실질 GDP 경로를 비교해 보면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IMF(2021. 10b.)와 같이 한국 경제가 2021년 4.3%, 2022년 3.3% 성장한다면, 2019년 실질 GDP 대비 2021년까지 2년간 연평균 1.7%, 2022년까지 3년간 연평균 2.2%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경제 전망 기관 중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가장 보수적으로 전망한 한국은행(2021. 11a.), 한국개발연구원(2021. 11.), OECD(2021. 12.)의 전망치를 따르더라도 2019년 대비 2021년과

2022년까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각각 1.5%와 2.0%로 IMF(2021. 10b.)의 전망치보다 약 0.2%p 낮은 수준으로 유사한 흐름이다.

[그림 III-4]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실질 GDP 성장 경로 전망 비교

(단위: 조원)



- 주: 1. 2019년 10월 전망에서 2017년은 실적치, 2018년은 잠정치, 2019년 이후는 전망치  
 2. 2021년 10월 전망에서 2019년 이전은 실적치, 2020년은 잠정치, 2021년 이후는 전망치

자료: 다음의 데이터를 저자가 취합 및 정리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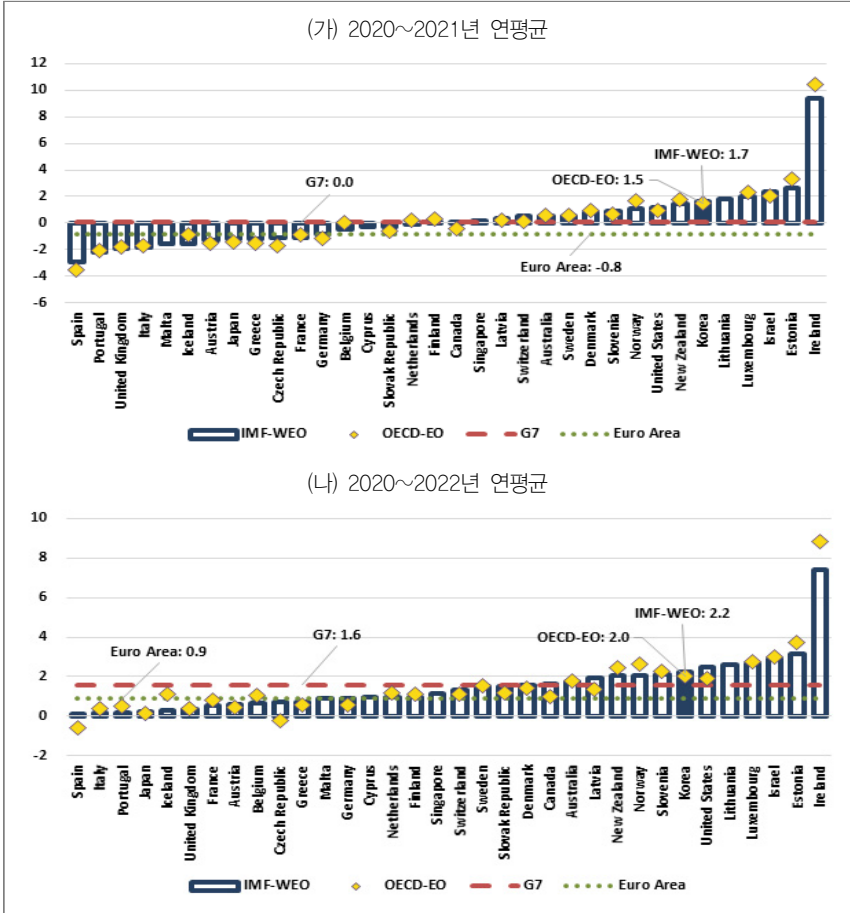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 October 2019 Edition,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19/October>, 검색일자: 2021. 10. 17.
2.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 October 2021 Edition,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1/October>, 검색일자: 2021. 10. 17.

선진국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경제가 회복세에 있지만, 회복 속도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IMF(2021. 10b.)는 G7 회원국들의 경제가 평균적으로 2021년에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G7 회원국에서 미국의 경제적 비중이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IMF(2021. 10b.)에 따르면 미국은 2020~2021년 연평균 1.2% 성장하여 2021년에 2019년 경제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의 경우 같은 기간 연평균 0.0% 성장률을 보여 미국보다는 경제 회복 속도가 느리지만 2021년에 2019년 수준의 경제에 도달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독일( $\Delta 0.8\%$ ), 프랑스( $\Delta 1.1\%$ ), 일본( $\Delta 1.2\%$ ), 이탈리아( $\Delta 1.8\%$ ), 영국( $\Delta 1.9\%$ )은 2021년에도 2019년의 경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권 국가들은 또한 2020~2021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Delta 0.8\%$ 로 2021년에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경제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III-5] 2020~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 국제 비교

(단위: %)



주: 1. 2019년 대비 연평균 경제성장률로 0보다 높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실질 GDP 수준을 회복함을 의미

2. G7과 Euro Area 국가 평균은 IMF(2021, 10b) 기준

자료: 다음의 데이터를 저자가 취합 및 가공하여 작성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 October 2021 Edition,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1/October>, 검색일자: 2021, 10, 17.
2. OECD, "OECD Economic Outlook," Preliminary Version, December 2021, <https://www.oecd.org/economic-outlook/>, 검색일자: 2021, 12, 5.

한편 2022년에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코로나19 이전의 경제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IMF(2021, 10b.)는 코로나19로 2020년 경제 규모가 가장 큰 폭으로 축소되었던 스페인의 2020~2022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0.1%로 전망하였다. 또한 G7 회원국들과 유로권 국가들은 같은 기간 각각 연평균 1.6%와 0.9% 성장해 코로나19 이전의 경제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경우 2020~2022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로 G7 및 유로권 국가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가 회복세에 있는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러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것도 사실이다. 특히 향후 한국 및 세계 경제의 회복을 지연시키거나 다시 침체기로 빠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다음의 세 가지가 주목된다.

첫째는 변이바이러스의 출현과 그 영향력이다. 이미 알파부터 시작하여 델타를 거쳐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등장한 바와 같이 향후에도 다양한 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할 것이라는 점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확산세가 빠르고 치명률이 높으며 이용 가능한 백신의 효과가 제한된 변이바이러스의 출현은 각국의 국경 폐쇄 및 국내 이동 제한 조치 강화 등으로 이어져 현재의 경제 회복세가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IMF의 Georgieva 총재가 앞에서 살펴본 IMF(2021, 10b.)의 경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수 있음을 언급한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sup>61)</sup>

둘째는 높은 물가상승률이다.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별도로 살펴보겠지만, 높은 물가상승률은 주요국의 통화정책을 긴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특히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을 뛰어 넘거나 높은 물가상승률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각국의 중앙은행은 현재 계획보다 더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것이고, 이는 경기의 회복 속도를 더디지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높은 물가상승률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가 글로벌 공급망 병목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인데, 오미크론

61) Shalal, Andrea, "Omicron variant likely to usher growth downgrades - IMF's Georgieva," *Reuters*, 2021. 12. 4., <https://www.reuters.com/business/omicron-variant-likely-usher-growth-downgrades-imfs-georgieva-2021-12-03/>, 검색일자: 2021. 12. 7.

등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의 등장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강화시켜 예상보다 물가를 빠르게 상승시키거나 고물가 기간을 오랫동안 지속시킬 위험이 있다.

셋째는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이다. 중국 2대 부동산 개발 그룹인 헝다 그룹의 파산은 중국을 경기 침체로 몰아넣고,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의 대응에 따라 그 파급효과는 달라질 수 있고,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세계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sup>62)</sup> 그 크기를 진단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만큼 불확실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한국의 경우 중국의 금융 시스템과는 별개로 중국의 경기둔화 자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의 지속적인 등장과 중국의 방역 정책은 중국의 경제성장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sup>63)</sup> 다른 국가들이 코로나19와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은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1건이라도 나타나면 해당 지역을 봉쇄하는 제로(Zero) 코로나 정책을 취하고 있다. 중국이 이와 같은 정책을 유지한다면 잦은 변이바이러스의 등장은 중국의 경제 성장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요소수 대란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여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나. 물가상승률과 통화정책 방향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최근 물가상승률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역성장한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가 0.54% 상승하는 등 2013년 이후 한국의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보다 낮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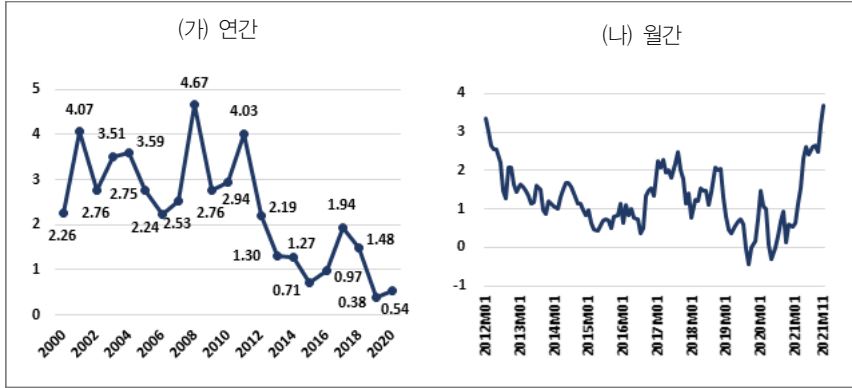
62) 심민관, 「레이비드 달려 “헝다 파산해도 中 리스크 세계 경제 위기 촉발 못한다”」, 『조선비즈』, 2021. 11. 24.,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1/11/24/J7EIW5QU7RERRKLFSCRZLWRI/](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1/11/24/J7EIW5QU7RERRKLFSCRZLWRI/), 검색일자: 2021. 12. 2.

63) *The Economist*, “China’s economy looks especially vulnerable to the spread of Omicron,” December 4th 2021 Edition, <https://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chinas-economy-looks-especially-vulnerable-to-the-spread-of-omicron/21806564>, 검색일자: 2021. 12. 5.

준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2021년 4월 이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를 지속적으로 넘어서고 있고, 2021년 11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3.7% 상승해 2012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그림 III-6]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단위: 전년 대비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7. 4. 1. 소비자물가지수(2015=100)(전국)」, <http://ecos.bok.or.kr/>, 검색일자: 2021. 12. 5. 데이터를 저자가 정리하여 작성

물가상승 압력은 국내외 주요 경제 전망 기관들의 전망치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2020년 4분기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2021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0.6~1.1%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2021년 들어서면서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2021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정부(관계부처 합동, 2021. 6.)는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1.8%로 2%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IMF(2021. 10b.)는 2.2%, 한국은행(2021. 11a.)과 한국개발연구원(2021. 11.)은 2.3%, OECD(2021. 12.)는 2.4%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인 2%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2년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또한 IMF(2021. 10b.)는 1.6%, 한국개발연구원(2021. 11.)은 1.7%, 한국은행(2021. 11a.)은 2.0%, OECD(2021. 12.)는 2.1%로 전망하여, 2022년에는 물가상승 압력이 2021년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볼 때 2022년의 물가상승률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크고 특히 상방 위험이 하방 위험보다 더 큰 것으로 평가된다.

물가상승 압력이 최근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은 주요 선진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치에서도 나타난다. 주요 선진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치가 IMF(2021. 10b.)와 비교해, 보다 최근의 정보를 이용해 전망한 OECD(2021. 12.)에서 상당폭 증가한 모습이다. 이는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물가상승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IMF(2021. 10b.)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021년에 4.3%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뒤 2022년에는 3.5%로 2021년보다 물가상승 압력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OECD(2021. 12.)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021년에 4.6%를 기록한 뒤 2022년에 4.8%로 2021년보다 오히려 더 높아져 미국의 물가상승 압력이 2022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최근 미국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각각 책임지는 Powell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Yellen 재무장관 또한 미국의 높은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어 물가안정이 향후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언급하고 있다.<sup>64)</sup>

IMF(2021. 10b.), OECD(2021. 12.) 등은 최근의 물가상승 압력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및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따른 것으로 평가한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확정적인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과 함께 높은 백신접종률 등으로 방역정책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점차 돌아섬에 따라 소비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글로벌 공급망에 발생한 병목현상은 쉽게 해소되지 못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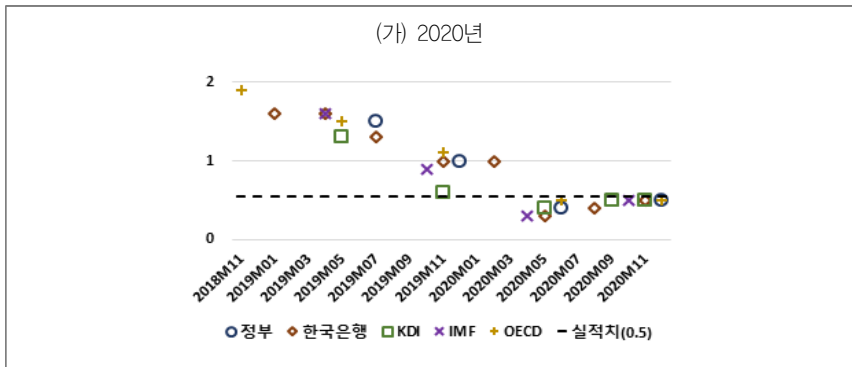
64)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Testimony by Chair Powell on coronavirus and CARES Act,"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testimony/powell20211130a.htm>, 공표일: 2021. 11. 30., 검색일자: 2021. 12. 5.; Rappeport, Alan, and Madeleine Ngo, "Janet Yellen says it's time to stop calling inflation 'transitory,'" *The New York Times*, 2021. 12. 2., <https://www.nytimes.com/2021/12/02/business/yellen-inflation-omicron.html>, 검색일자: 2021. 12. 7.; Timiraos, Nick, "High inflation, falling unemployment prompted Powell's Fed pivot," *Wall Street Journal*, 2021. 12. 6., [https://www.wsj.com/articles/high-inflation-falling-unemployment-prompted-powells-fed-pivot-11638786601?mod=hp\\_lead\\_pos3](https://www.wsj.com/articles/high-inflation-falling-unemployment-prompted-powells-fed-pivot-11638786601?mod=hp_lead_pos3), 검색일자: 2021. 12. 7.

또한 유가 등 원자재 가격과 농축산물 가격의 상승 또한 최근의 물가를 상승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2021. 11a.)과 한국개발연구원(2021. 11.)에 따르면 한국 또한 유가와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2021년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한국은행(2021. 11a.)과 한국개발연구원(2021. 11.)은 1.2%, OECD(2021. 12.)는 1.3%로 전망하였는데, 향후 한국의 물가안정은 에너지가격의 안정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해석된다. 추가적으로 뒤에서 논의하듯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산매입 축소(tapering) 등에 따른 원화의 평가절하 또한 수입물가를 인상시켜 국내물가를 상승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물가상승 압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아직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이 미국 등 선진국만큼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미크론바이러스 등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의 출현이 공급망 병목을 지속적으로 유발한다면 물가상승 압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국의 경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산매입 축소 및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원화의 평가절하로 이어질 수 있어 물가에 대한 상방 위험이 하방 위험보다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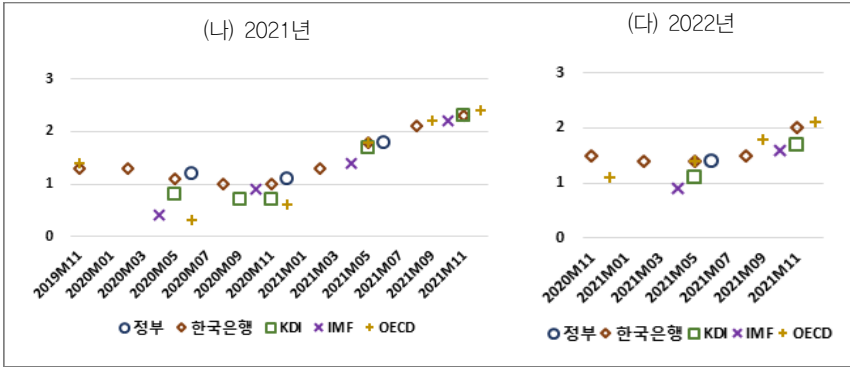
[그림 III-7] 2020~2022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치 변화

(단위: 전년 대비 %)



[그림 III-7]의 계속

(단위: 전년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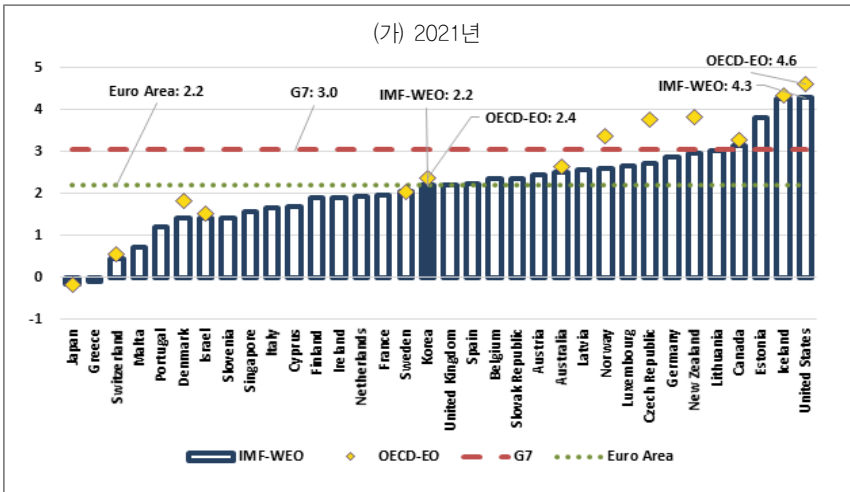


자료: 다음의 데이터를 저자가 취합 및 정리하여 작성

1.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7. 4. 1. 소비자물가지수(2015=100)(전국)」, <http://ecos.bok.or.kr/>, 검색일자: 2021. 12. 5.
2. 관계부처 합동(2019. 7. 3.; 2020. 6. 1.; 2021. 6. 28.)
3. 기획재정부(2019. 12. 19.; 2020. 12. 17.)
4. 한국개발연구원(2019. 5.; 2019. 11.; 2020. 5.; 2020. 9.; 2020. 11.; 2021. 5.; 2021. 11.)
5. 한국은행(2019. 1.; 2019. 4.; 2019. 7.; 2019. 11.; 2020. 2.; 2020. 5a.; 2020. 8.; 2020. 11.; 2021. 2.; 2021. 5.; 2021. 8a.; 2021. 11a.)
6. IMF(2019. 4.; 2019. 10.; 2020. 4.; 2020. 10.; 2021. 4.; 2021. 10b.)
7. OECD(2018. 11.; 2019. 5.; 2019. 11.; 2020. 6.; 2020. 12.; 2021. 5.; 2021. 9.; 202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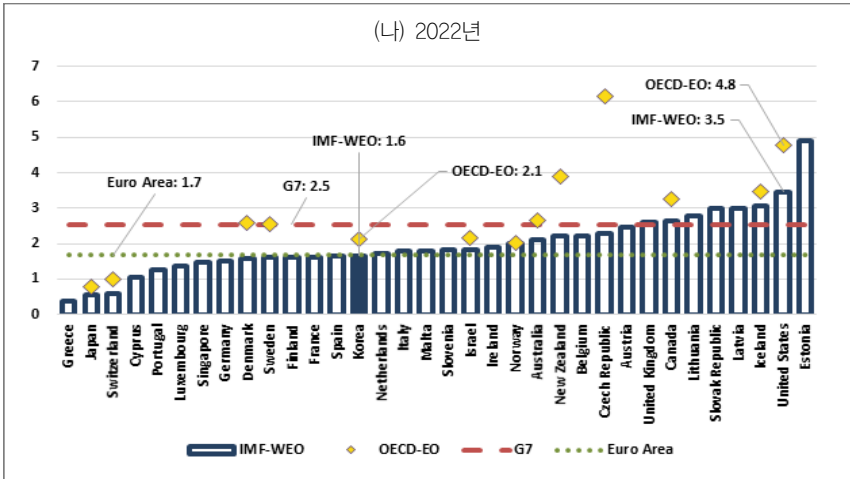
[그림 III-8] 2021~2022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망 국제 비교

(단위: 전년 대비 %)



[그림 III-8]의 계속

(단위: 전년 대비 %)



주: G7과 Euro Area 국가 평균은 IMF(2021. 10b.) 기준

자료: 다음의 데이터틀 저자가 취합 및 정리하여 작성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 October 2021 Edition,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1/October>, 검색일자: 2021. 10. 17.
2. OECD, "OECD Economic Outlook," Preliminary Version, December 2021, <https://www.oecd.org/economic-outlook/>, 검색일자: 2021. 12. 5.

#### 다. 재정운용 기조에 대한 시사점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20~2021년 한국 정부는 부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재원에 상당 부분 의존하면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였다. 뒤에서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변화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그 결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재정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대규모 부채발행을 통한 확장적 재정운용 자체는 경기 국면을 감안할 때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질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경제 환경이 변화하면 재정운용의 기조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가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뚜렷한 회복세에 들어선 반면 물가상승에 대한 압력이 높은 상황이라면, 한국 정부는 재정운용의 무게중심을 기존의 확장적 기조에서 건전성 관리로 옮길 필요가

있다. 경기가 뚜렷한 회복세에 있다는 것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경제 환경이 확장적 재정정책에 호의적인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은 경기 침체기와 비교해 회복기에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Auerbach and Gorodnichenko, 2012; 2013; Batini et al., 2012; Baum et al., 2012; Caggiano et al., 2015; Fazzari et al., 2015; 손민규·이정욱, 2014; 이태석, 2017).<sup>65)</sup>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는 최소한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의 당위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물가상승에 대한 압력과 이에 대한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 또한 재정당국이 확장적 재정운용에 신중해야 함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은 금리가 0% 하한에 도달해 통화정책에 제약이 발생하였을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커지지만, 금리가 하한보다 높아지고 통화정책이 물가와 경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에는 그 효과가 작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Christiano et al., 2011; Ramey and Zubairy, 2018; Cloyne et al., 2021). 한국은행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기준금리를 0%에 근접한 0.5%로 유지하였다. 하지만 물가상승 압력 등으로 물가안정이 최우선 목표인 한국은행은 2021년 8월과 11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p씩 인상한 바 있다.<sup>66)</sup> 또한 한국은행(2021. 11. 25.)은 통화정책 방향으로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sup>67)</sup>이라고 발표하여 기준금리가 점차 인상될 것임을 시사하였다. 한국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통화정책이 기존의 완화적인 기조에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65) 이 연구들과 달리 Owyang et al.(2013), Ramey and Zubairy(2018) 등은 재정승수가 경기 국면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이 경우 호황기뿐만 아니라 불황기에도 재정승수가 1보다 작게 추정되었다. 한편 Alloza(2017), 마은성·이우석(2020)과 같이 불황기보다 호황기에 재정승수가 더 크다는 연구도 있다.

66)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보도자료, 2020. 5. 28.; 2021. 8. 26.; 2021. 11. 25.

67)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보도자료, 2021. 11. 25., (붙임)의 마지막 문단 중 일부

2021년 11월부터 자산매입 규모를 매월 150억달러씩 축소하기로 결정하였다.<sup>68)</sup> 이러한 결정은 미국의 양적완화가 2022년 6월에 종료됨을 의미한다. 게다가 최근 미국의 경우 예상보다 높은 물가상승률로 연방준비제도가 2022년부터는 자산매입 축소(tapering) 규모를 확대해 양적완화 종료 시점을 2022년 3월경으로 앞당기고 상반기 중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sup>69)</sup>되는 등 통화정책 환경이 예상보다 빠르게 변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대외의 통화정책 환경 변화는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통화정책의 기초 변화는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고민을 더욱 깊어지게 만든다. 물가상승 압력 시기에 확장적 재정정책은 물가상승 압력을 더욱 강화시키는데, 이는 통화당국의 금리 인상을 가속화시키면서 재정정책의 효과를 상쇄시켜 한국 경제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정책의 기초를 결정할 때 통화정책 또한 확장적 재정정책에 비우호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2020~2021년 저금리로 인하여 부채에 의존한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부담이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다. 아직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여전히 금리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부채발행에 대한 부담이 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정부 부채는 증가시키기는 쉬워도 감소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반면 부채의 비용을 결정하는 금리는 단기간에도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어 현재의 저금리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다. 특히 현재 물가상승 압력이 높고 이러한 압력이 장기화된다면 저금리는 유지되기 어렵다. 또한 한국의 금리는 국내 요인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시장 환경에도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내에서 완전히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채의 증가는 미래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68)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OMC Statement, Press Release,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211103a.htm>, 공표일: 2021. 11. 3., 검색일자: 2021. 11. 13.

69) Timiraos, Nick, "High inflation, falling unemployment prompted Powell's Fed pivot," *Wall Street Journal*, 2021. 12. 6., [https://www.wsj.com/articles/high-inflation-falling-unemployment-prompted-powells-fed-pivot-11638786601?mod=hp\\_lead\\_pos3](https://www.wsj.com/articles/high-inflation-falling-unemployment-prompted-powells-fed-pivot-11638786601?mod=hp_lead_pos3), 검색일자: 2021. 12. 7.

Blanchard(2019)는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미국의 경우 미래에도 저금리가 일반적인 상황일 것임을 가정하여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Blanchard(2019)의 주장은 한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논거로도 활용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Lian et al.(2020)의 연구 결과와 같이 이자율은 국가채무 수준과 내생적인 관계에 있어 국가채무가 증가할 경우 Blanchard(2019)가 가정한 저금리 상황을 지속시킬 수 없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내외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재정 운용의 무게중심을 확장적 운용에서 건전성 관리로 옮겨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건전성 관리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포기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도 존재하고, 회복 속도 또한 사회 계층 및 집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정부의 재정을 통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 존재한다. 따라서 코로나19로부터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잘 선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재원은 부채발행보다는 세출구조조정과 세입확충을 통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변이바이러스의 출현 등 방역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대한 선부른 낙관은 위험할 수 있다. 방역 상황뿐만 아니라 최근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원자재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 부족으로 물가상승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발 경제 위기에 대한 위험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의 위험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재정이 이에 대응할 필요는 있다. 다만 이러한 위험 요인들이 실현되어 추가적인 재정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재정의 건전성을 관리해야 할 시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건전성의 변화와 함께 중장기 재정 전망을 통해 재정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 2. 재정건전성의 중기 변화 전망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꼽을 수 있다. 국가채무는 저장(stock)변수로 유량(flow)변수인 재정수지에 대한 과거의 결과들이 누적되어 결정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정건전성을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국가채무 또는 국가부채는 정부와 부채의 포괄 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국가채무(D1)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코로나19가 재정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2020년 국가부채에 대한 통계로 현재 국가채무(D1)가 유일하게 이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미래 한국의 재정의 모습을 가늠하기 위해 뒤에서 살펴볼 국가재정운용계획, 장기재정전망에 나타나는 국가부채가 국가채무(D1)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재정수지의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기여금수지를 차감하여 정의한다.

다만 본 연구는 국제비교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부채로 일반정부부채(D2)를 활용한다.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확정채무를 현금주의 기준으로 작성되는 통계이다. 하지만 국제비교를 위한 국가부채는 정부의 범위를 중앙 및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포괄하면서 IMF(2001; 2014)의 GFSM 2001(*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01*) 또는 GFSM 2014(*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14*)의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된 일반정부부채(D2)가 주로 활용된다.

국가부채에 대한 지표로 국가채무(D1)와 일반정부부채(D2) 중 어느 것을 활용하더라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정책적 함의는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2011년부터 GFSM 2001에 따라 일반정부부채(D2)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는데, 자료 이용이 가능한 2011~2019년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은 평균적으로 국가채무(D1) 비율보다 약 4.5%p 정도 높은 수준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으며, 그 추세 또한 유사하다. 한편 국가채무(D1)와 일반정부부채(D2)가 연금충당부채 등을 포함하지 않아 정부가 부담할 부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으나,

충분한 과거 시계열을 확보해 추이 변화를 파악하고 미래의 전망치를 살펴 보며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지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구 등과 관련된 부분은 고령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제3절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 가.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추이

과거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살펴보면, 그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외환위기를 거친 직후인 2000년대 초반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17% 내외를 유지하였으나, 2003년부터 4년간 국가채무비율은 11.1%p 증가하여 2006년 28.1%를 기록하였다. 이후 국가채무비율은 20% 중후반대를 유지하다가 2011년 처음 30%를 넘어섰으며, 이후 2019년 37.6%를 기록할 때까지 30%대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하여 국가채무비율은 전년 대비 6.2%p 증가한 43.8%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2020년의 전년 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컸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가 있었던 1998년과 2009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각각 전년 대비 3.8%p와 3.1%p 증가한 수준이었다. 2005년에도 국가채무비율이 전년 대비 3.5%p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그림 Ⅲ-10]에 나타나듯이 이 시기 또한 경기 침체기였다. 대체로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경기 대응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하여 국가채무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하지만 과거에는 2020년 6.2%p와 같이 국가채무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해는 관찰되지 않았다. 2020년을 제외하면 1997년 이후 전년 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 기준 3%p대 세 차례, 2%p대 세 차례, 1%p대 다섯 차례, 0%p대 여섯 차례, 감소한 해가 다섯 차례 존재하였다.

2020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역사적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지만 동 기간 다른 국가들의 국가부채비율 증가폭과 비교해 보면 그 증가폭이 낮은 편에 속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2020년 정부부채비율을 비교하기 위한 확정된 통계가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국제비교를 위해 IMF(2021, 10a.)가 Fiscal

Monitor를 통해 추정된 일반정부부채(D2)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0년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은 5.8%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같은 시기 G7 회원국들과 유로권 국가들의 정부부채비율 증가폭으로 추정되는 22.2%p와 13.8%p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2020년 한국의 정부부채비율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었던 원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을 위한 대응을 비교적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행해 경제적 충격이 커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 효과와 함께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III-1〉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

연도	명목 GDP	규모				GDP 대비 비중			
		국가 채무 (D1)	일반정부 부채 (D2)	통합 재정 수지	관리 재정 수지	국가 채무 (D1)	일반정부 부채 (D2)	통합 재정 수지	관리 재정 수지
1997	542.0	60.3				11.13			
1998	537.2	80.4				14.97			
1999	591.5	98.6		△13.1		16.67		△2.21	
2000	651.6	111.2		6.5		17.06		1.00	
2001	707.0	121.8		7.3		17.23		1.03	
2002	784.7	133.8		22.7		17.05		2.89	
2003	837.4	165.8		7.6		19.80		0.91	
2004	908.4	203.7		5.6		22.42		0.62	
2005	957.4	247.9		4.9		25.89		0.51	
2006	1,005.6	282.7		6.0		28.11		0.60	
2007	1,089.7	299.2		37.0		27.46		3.40	
2008	1,154.2	309.0		15.8		26.77		1.37	
2009	1,205.3	359.6		△17.6		29.83		△1.46	
2010	1,322.6	392.2		16.7		29.65		1.26	
2011	1,388.9	420.5	459.2	18.6	△13.5	30.27	33.06	1.34	△0.97
2012	1,440.1	443.1	504.6	18.5	△17.4	30.77	35.04	1.28	△1.21
2013	1,500.8	489.8	565.6	14.2	△21.1	32.64	37.69	0.95	△1.41
2014	1,562.9	533.2	620.6	8.5	△29.5	34.12	39.71	0.54	△1.89
2015	1,658.0	591.5	676.2	△0.2	△38.0	35.68	40.78	△0.01	△2.29

〈표 III-1〉의 계속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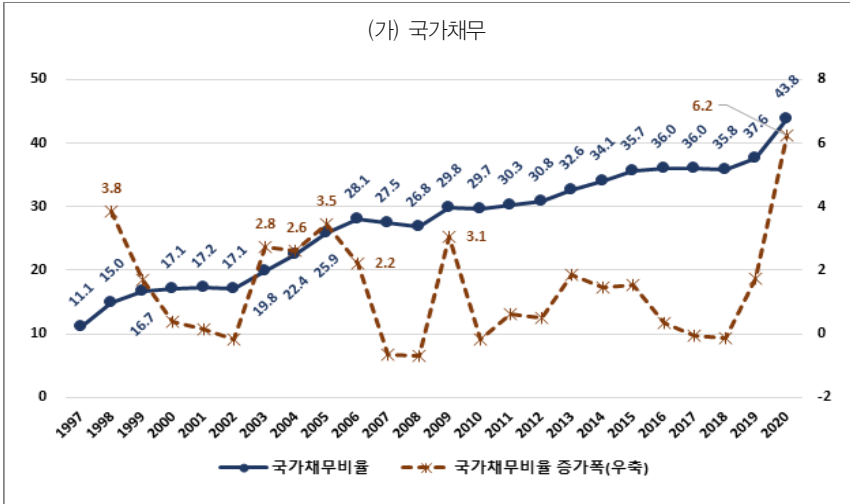
연도	명목 GDP	규모				GDP 대비 비중			
		국가 채무 (D1)	일반정부 부채 (D2)	통합 재정 수지	관리 재정 수지	국가 채무 (D1)	일반정부 부채 (D2)	통합 재정 수지	관리 재정 수지
2016	1,740.8	626.9	717.5	16.9	△22.7	36.01	41.22	0.97	△1.30
2017	1,835.7	660.2	735.2	24.0	△18.5	35.96	40.05	1.31	△1.01
2018	1,898.2	680.5	759.7	31.2	△10.6	35.85	40.02	1.64	△0.56
2019	1,924.5	723.2	810.7	△12.0	△54.4	37.69	42.13	△0.63	△2.83
2020	1,933.2	846.9		△71.2	△112.0	44.01		△3.70	△5.82

자료: 다음의 데이터를 저자가 취합 정리(명목 GDP, 규모) 및 가공(GDP 대비 비중)하여 작성

1. 열린재정, 상세재정통계DB, 「국가채무(D1)」, <https://www.openiscaldata.go.kr/ldata/3R4TT01711W0648KKV104928971>, 검색일자: 2021. 9. 16.
2. 열린재정, 상세재정통계DB,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https://www.openiscaldata.go.kr/ldata/OXY022UGD797MPMB69616048266>, 검색일자: 2021. 9. 16.
3. 열린재정, 상세재정통계DB, 「재정수지」, <https://www.openiscaldata.go.kr/ldata/9DQF7E72M4Z89V8S128M4986190>, 검색일자: 2021. 9. 16.
4.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6. 4. 1 통합재정수지」, <http://ecos.bok.or.kr/>, 검색일자: 2021. 3. 7.
5.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0. 2. 2.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http://ecos.bok.or.kr/>, 검색일자: 2021. 9.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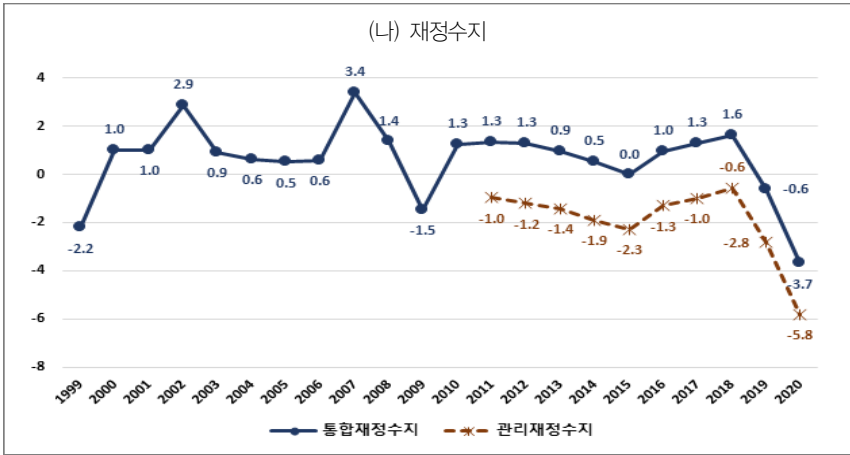
〔그림 III-9〕 GDP 대비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추이

(단위: GDP 대비 %, %p)



[그림 III-9]의 계속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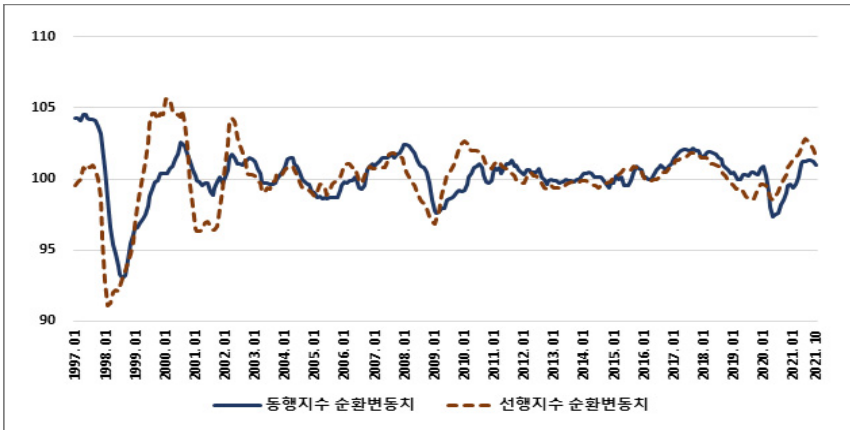


자료: 다음의 데이터를 저자가 취합 및 가공하여 작성

1. 열린재정, 상세재정통계DB, 「국가채무(D1)」, <https://www.openfiscaldata.go.kr/ldata/3R4TT0i711W0648KKV104928971>, 검색일자: 2021. 9. 16.
2. 열린재정, 상세재정통계DB, 「재정수지」, <https://www.openfiscaldata.go.kr/ldata/9DQF7E72M4Z89V8S128M4986190>, 검색일자: 2021. 9. 16.
3.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6. 4. 1 통합재정수지」, <http://ecos.bok.or.kr/>, 검색일자: 2021. 3. 7.
4.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0. 2. 2.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http://ecos.bok.or.kr/>, 검색일자: 2021. 9. 16.

[그림 III-10] 경기동행지수 및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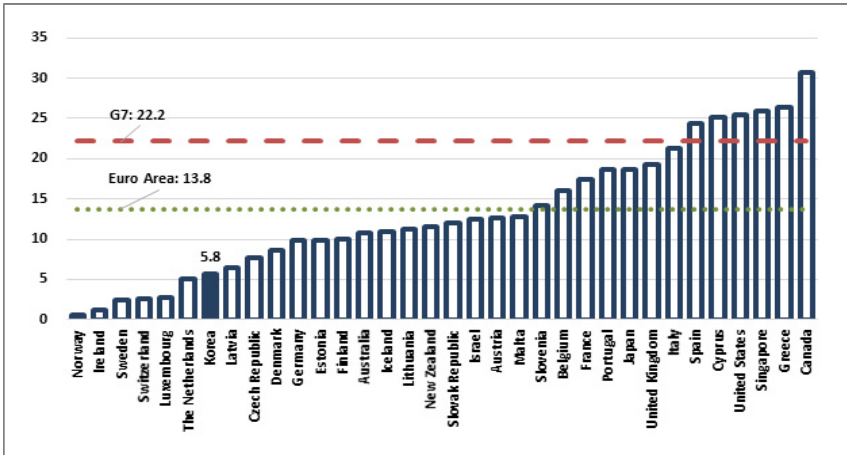
(단위: 2015=100)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기종합지수(10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C801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C8013&conn_path=I3), 검색일자: 2021. 12. 5. 데이터를 저자가 정리하여 작성

[그림 III-11] 2020년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증가폭 전망 국제 비교

(단위: %p)



자료: IMF, *Fiscal Monitor*, 2021. 10a., p. 65, Table A7. 데이터를 저자가 가공하여 작성

재정수지 또한 2020년에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시기인 1999년과 2009년을 제외하면 1999~2018년까지 매년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19~2020년에는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다. 특히 2020년에는 적자폭이 GDP의 약 3.7% 수준으로 외환위기 시기인 2.2%와 금융위기 시기인 1.5%보다도 높은 적자 비율을 기록하였다.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2011~2019년 매년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GDP 대비 3% 이내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었다. 특히 2015년과 2019년을 제외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매년 GDP 대비 2% 이내로 관리되었다. 하지만 2020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5.8%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처럼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측면에서 2020년은 매우 특수한 해로 꼽힌다. 과거 다른 경제위기보다도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한 2020년은 우리 사회의 다른 측면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특별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정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게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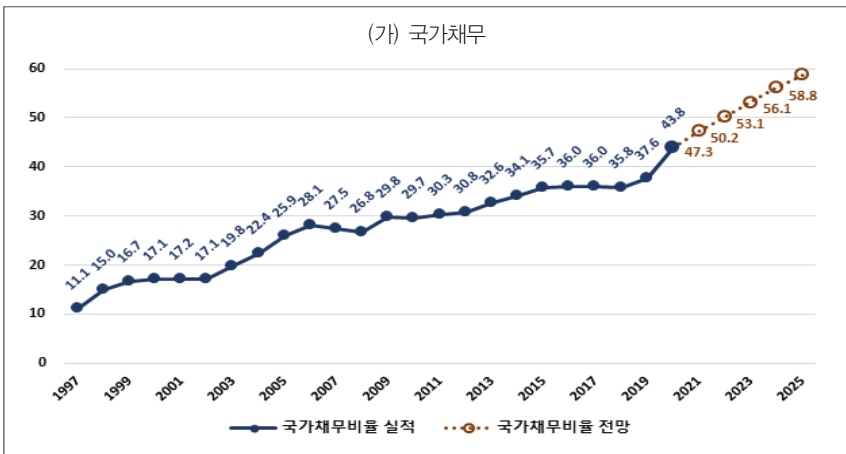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 다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는 재정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한 재정상황이 앞으로도 얼마나 더 지속될지 그리고 재정건전성은 향후 얼마나 더 악화될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 나. 중기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변화 전망

중기 시계에서 정부가 설정한 재정운용 방향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료는 정부가 매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다. 정부가 2021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15%p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43.8%였던 국가채무비율이 2021년에는 47.3%로 상승하고, 2025년에는 58.8%로 6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1년과 2022년의 경제성장률이 각각 4%대와 3%대로 2%대인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2022년에는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이전의 장기성장 경로에 근접한다는 전망을 고려할 때 동 기간 국가채무비율의 증가 속도는 지나치게 빠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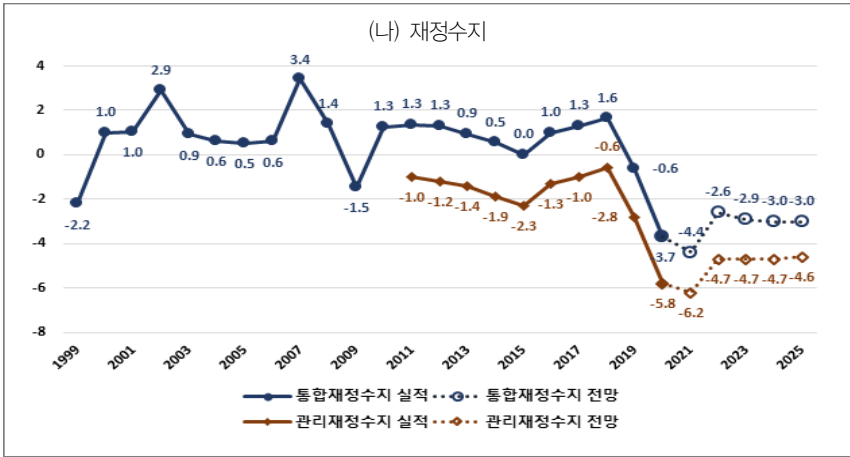
[그림 III-12] GDP 대비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중기 전망

(단위: GDP 대비 %)



[그림 III-12]의 계속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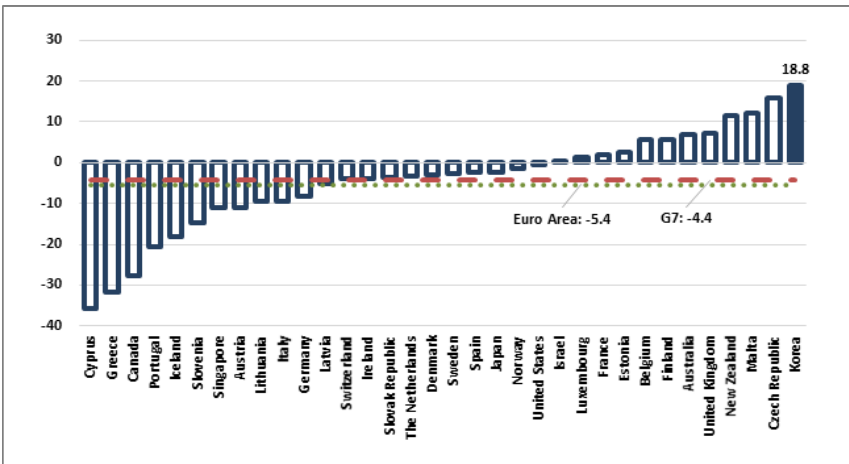
자료: 다음의 데이터를 저자가 취합 정리(전망) 및 가공(실적)하여 작성

1. 대한민국정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1. 9.
2. 열린재정. 상세재정통계DB, 「국가채무(D1)」, <https://www.openfiscaldata.go.kr/ldata/3R4TT0I711W0648KKV104928971>, 검색일자: 2021. 9. 16.
3. 열린재정. 상세재정통계DB, 「재정수지」, <https://www.openfiscaldata.go.kr/ldata/9DQF7E72M4Z89V8S128M4986190>, 검색일자: 2021. 9. 16.
4.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6. 4. 1. 통합재정수지」, <http://ecos.bok.or.kr/>, 검색일자: 2021. 3. 7.
5.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0. 2. 2.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http://ecos.bok.or.kr/>, 검색일자: 2021. 9. 16.

중기 시계에서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은 IMF(2021, 10a.)가 *Fiscal Monitor*에서 2026년까지 전망한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1년이 더 추가된 2026년까지 향후 6년간 한국의 정부부채비율은 18.8%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기간 한국의 정부부채비율 증가 폭이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많은 선진국들의 경우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였지만 중기적으로는 증가한 정부부채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IMF(2021, 10a.)는 2020년과 비교해 2026년 G7 회원국들과 유로권 국가들의 정부부채비율이 각각 4.4%p

와 5.4%p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불경기에는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더라도 호경기에는 향후 경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개선시키는 것이 재정운용의 기본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경제가 회복세에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 시계에서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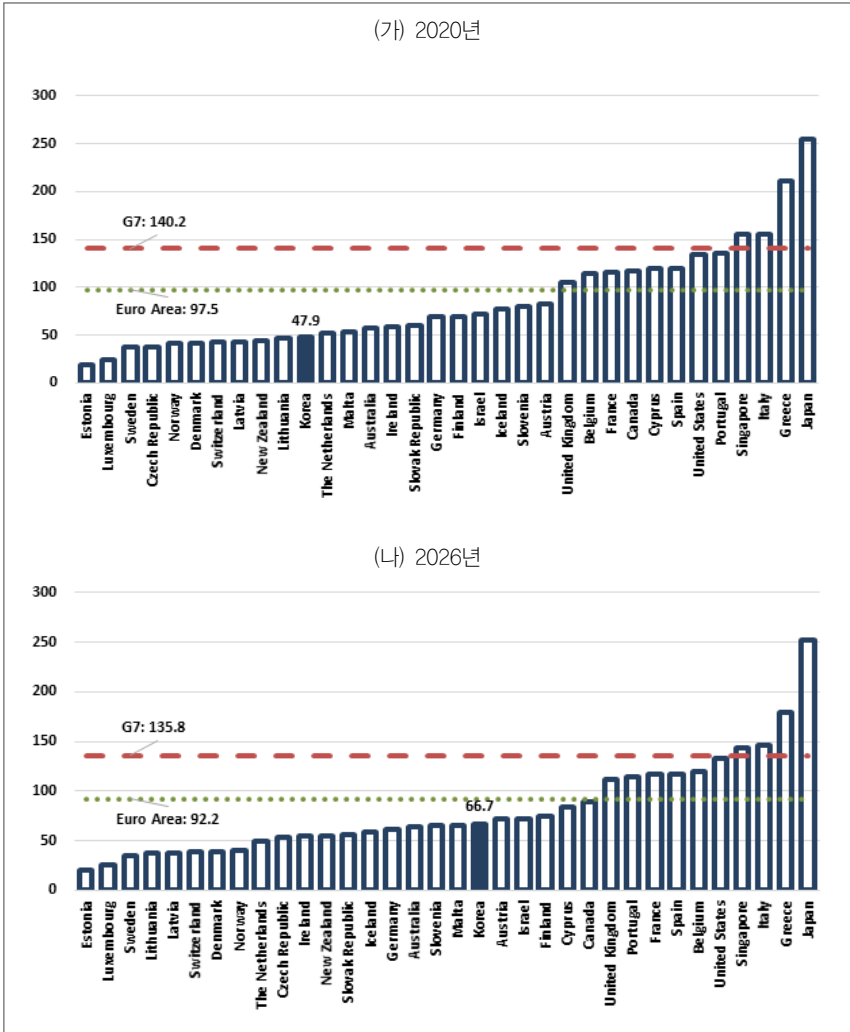
[그림 III-13] 2021~2026년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증가폭 전망 국제 비교 (단위: %p)



자료: IMF, *Fiscal Monitor*, 2021. 10a., p. 65, Table A7. 데이터를 저자가 가공하여 작성

한국 정부가 중기 시계에서 재정을 건전성보다는 확장성에 더 무게중심을 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정부부채비율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 한국의 정부부채비율은 47.9%로 추정되는데, 이는 G7 국가나 유로권 국가들의 정부부채비율인 140.2%와 97.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재정을 확장적 기조로만 운용한다면 5~6년 뒤 한국의 정부부채비율은 66.7%까지 증가해 더 이상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14] 2020년과 2026년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 전망 국제 비교  
(단위: GDP 대비 %)



자료: IMF, *Fiscal Monitor*, 2021. 10a., p. 65, Table A7. 데이터를 저자가 정리하여 작성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에 나타난 2025년의 국가채무비율 58.8%와 IMF (2021. 10a.)의 *Fiscal Monitor*에서 전망한 2026년의 정부부채비율 66.7%는 다른 선진국의 정부부채비율과 비교해 볼 때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다른 선진국들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더 빠르게 증가하기 쉬운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가채무비율이 낮은 수준이더라도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는 데에는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재정건전성의 구조적·장기적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본다.

### 3. 재정건전성의 장기적인 위험 요인

#### 가. 인구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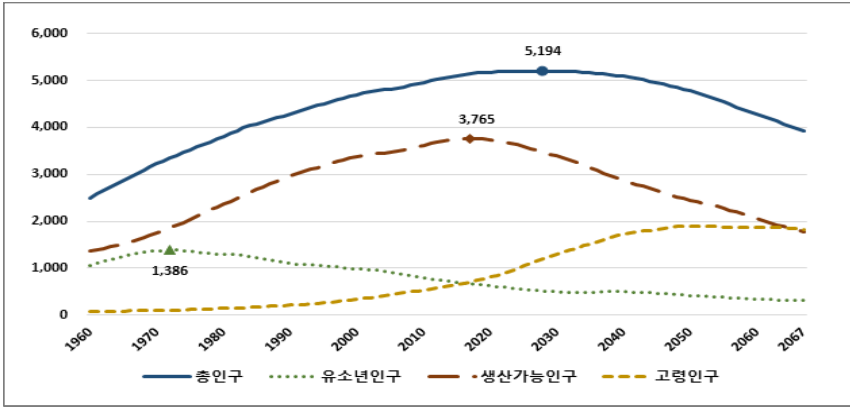
장기적으로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통계청(2019)의 『장래인구특별추계』 중 기준 시나리오(중위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총인구는 2028년 5,194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67년에는 3,939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의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른 평균수명의 증가로 고령인구(65세 이상)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유소년인구(14세 이하)는 1972년 1,386만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합계출산율<sup>70)</sup>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데,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을 기록해 출산율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저출산으로 인하여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8년에 이미 3,765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하여 현재는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2067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1,784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

70)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통계청, 2019, p. 75.)

[그림 III-15] 장래인구추계의 인구구조 전망

(단위: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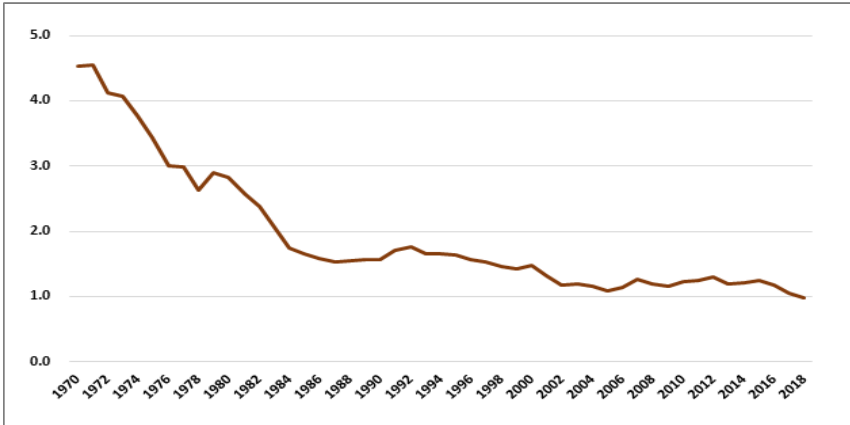


주: 중위추계 기준이며, 2019년부터 시나리오별 추계치에 차이 발생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 - 주요 인구지표(성비, 인구성장률, 인구구조, 부양비 등)/전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conn\\_path=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conn_path=3), 검색일자: 2021. 7. 12, 데이터를 저자가 정리하여 작성

[그림 III-16] 과거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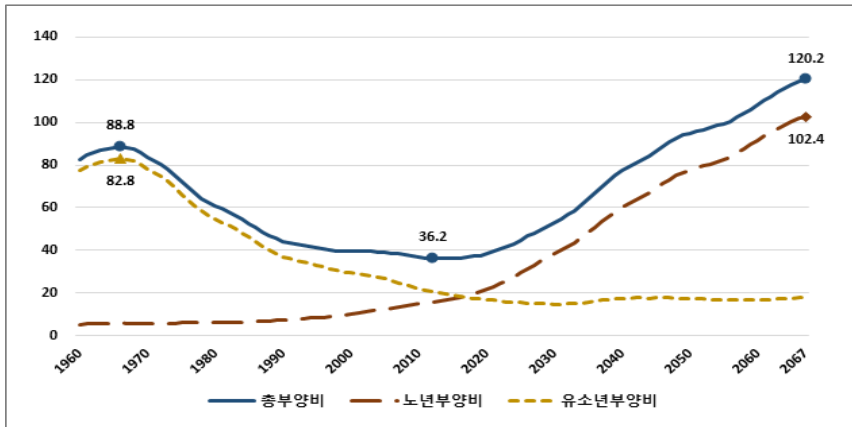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향조사 -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출생, 사망, 혼인, 이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F&conn\\_path=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F&conn_path=3), 검색일자: 2021. 7. 12, 데이터를 저자가 정리하여 작성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한국의 총부양비<sup>71)</sup>와 노년부양비<sup>72)</sup>는 향후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의 합인 총부양비의

경우 과거에는 주로 유소년부양비<sup>73)</sup>에 영향을 받았다. 과거 총부양비가 88.8명으로 가장 높았던 1966년의 경우 유소년부양비는 82.8명이었던 반면, 노년부양비는 5.9명이었다. 이후 유소년부양비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총부양비도 2012년 36.2명까지 하락하였다. 그리고 2018년 유소년부양비는 17.5명, 노년부양비는 19.6명으로 총부양비는 37.1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향후에는 총부양비가 노년부양비와 함께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2067년까지 유소년부양비는 17.8명으로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노년부양비는 102.4명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총부양비 또한 2067년 120.2명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III-17] 장래인구추계의 부양비 전망

(단위: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명)



주: 중위추계 기준이며, 2019년부터 시나리오별 추계치에 차이 발생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 - 주요 인구지표(성비, 인구성장률, 인구구조, 부양비 등)/전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conn\\_path=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conn_path=3), 검색일자: 2021. 7. 12, 데이터를 저자가 정리하여 작성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아직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지만 그 증가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25년

71) 총부양비=(유소년인구+고령인구)÷생산가능인구×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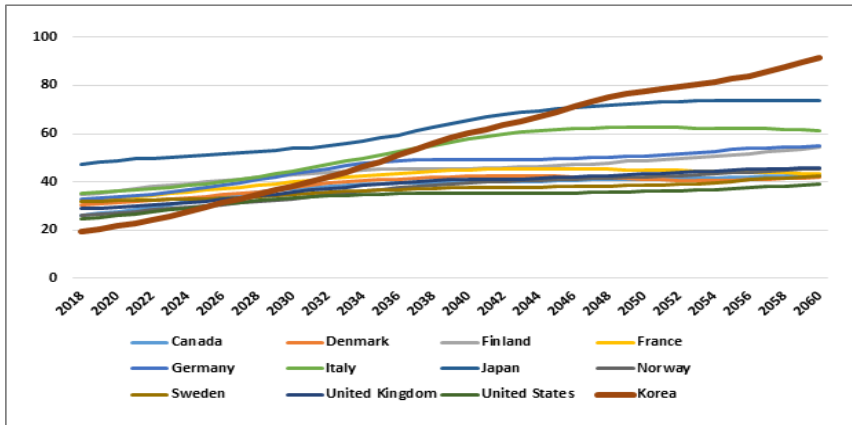
72) 노년부양비=고령인구÷생산가능인구×100

73) 유소년부양비=유소년인구÷생산가능인구×100

까지 대표적인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G7 회원국들이나 대표적인 복지국가라 할 수 있는 북유럽 4개국들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26년 북유럽 국가 중 하나인 노르웨이보다 높아지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여러 나라들을 빠르게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노년부양비가 2038년에는 이탈리아를 넘어 일본 다음으로 높아지며, 2046년에는 일본마저 추월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국과 다른 국가들과의 노년부양비의 격차가 점차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I-18] 한국과 주요국의 노년부양비 전망 비교

(단위: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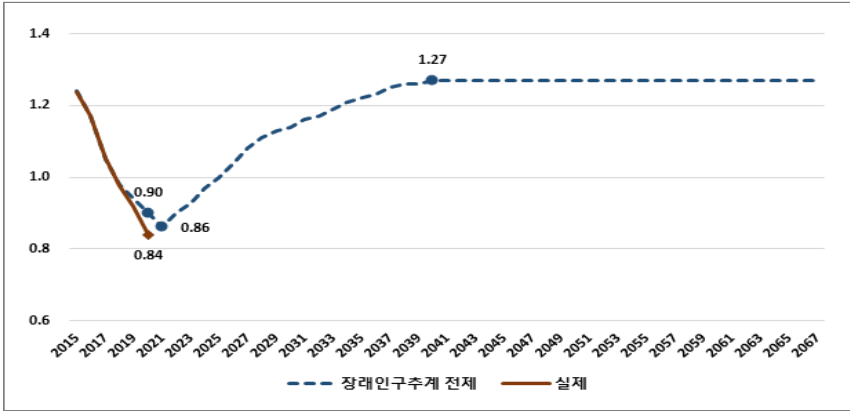
자료: OECD.Stat, "Population projections," <https://stats.oecd.org/>, 검색일자: 2021. 6. 7. 데이터를 저자가 정리하여 작성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그 속도가 통계청(2019)의 기준 시나리오(중위추계) 전망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앞의 노년부양비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20년 0.90명, 2021년 0.86명으로 저점에 도달한 이후 회복하기 시작하여 2040년 1.27명까지 증가한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추계되었다. 하지만 2020년에 실현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인구추계의 기준 시나리오에서 동일한 시점의 합계출산율 전제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저점으로 전제한 2021년

의 합계출산율인 0.86명보다도 낮다. 이처럼 현재 한국의 저출산 추세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통계청(2019)의 기준 시나리오보다 더 빨라질 것이다.

[그림 III-19] 합계출산율에 대한 장래인구추계 전제와 실제

(단위: 명)



- 주: 1. 장래인구추계 전제는 중위추계 기준  
2. 장래인구추계의 경우 2018년까지는 실제치, 2019년부터 전망치

자료: 다음의 데이터를 저자가 취합 및 정리하여 작성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향조사 -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출생, 사망, 혼인, 이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F&conn\\_path=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F&conn_path=3), 검색일자: 2021. 7. 12.
2.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 - 장래 합계출산율/전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101&conn\\_path=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101&conn_path=3), 검색일자: 2021. 7. 12.

## 나. 노년부양비와 국가부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년부양비의 증가는 한국의 미래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저성장을 야기하고 세입확충을 위한 구조적인 변화가 없다면 이는 국가재정에서 세입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세출구조조정이나 사회보험에 대한 개혁이 없다면 고령화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세출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것이다. 즉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없다면 향후 예상되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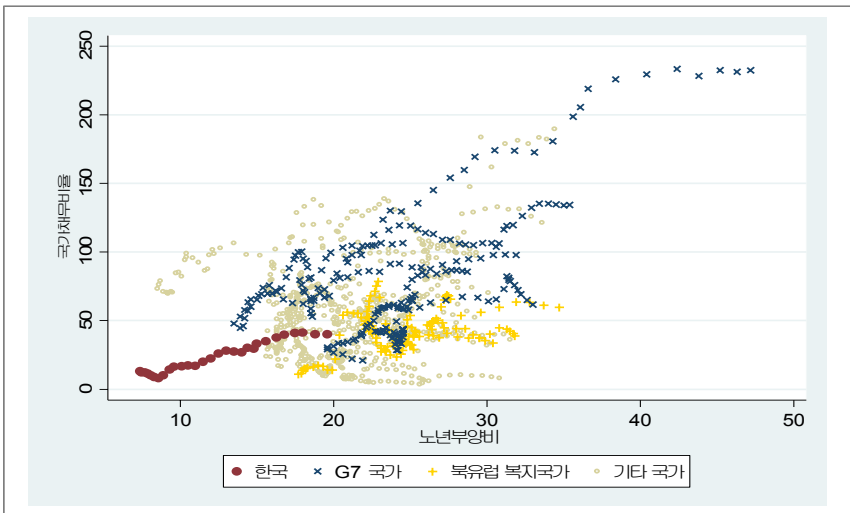
으로 예상된다.

노년부양비가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과거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에 보고되는 과거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과 OECD의 인구와 국민계정 자료에 보고되는 노년부양비와 실질 GDP를 연계하면 1980~2018년까지 51개국에 대한 불균형패널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자료를 이용하여 과거 노년부양비가 정부부채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부채비율과 노년부양비에 대한 산포도를 도출해 보면, 대체로 두 변수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러한 산포도가 노년부양비가 정부부채비율을 증가시킨다는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부부채비율에는 경제위기가 반복됨에 따라 경기대응적인 채무가 누적된 영향도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림 III-20] 일반정부부채(D2) 비율과 노년부양비의 상관관계

(단위: GDP 대비 %,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명)



자료: 다음의 데이터를 저자가 취합 및 정리하여 작성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 April 2021 Edition,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1/April>, 검색일자: 2021. 7. 12.
2. OECD.Stat, “Population projections,” <https://stats.oecd.org/>, 검색일자: 2021. 6. 7.

과거 노년부양비가 정부부채비율에 미친 영향을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겠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로 정부부채비율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대신 식 (Ⅲ-1)과 같이 특정 기간의 전년 대비 정부부채비율의 평균 증가분을 활용한다. 특정 시점의 국가채무는 과거 재정수지가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정부부채비율을 해당 시점과 가까운 경제적 행위 또는 상태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이에 특정 기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부부채비율의 평균 증가분을 종속변수로 설정한다. 설명변수로는 해당 기간의 평균 노년부양비이다. 통제변수로는 해당 기간 초기의 정부부채비율과 기간 평균 경제성장률을 고려한다. 기간 초기 정부부채비율은 정부부채비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정부의 부채관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기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경기 상황에 따라 경기 대응을 위해 정부부채비율 증가 속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한편 노년부양비가 정부부채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단기적인 요인보다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변화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정부부채비율 평균 증가분을 계산하기 위한 기간으로 5년 또는 10년을 고려한다. 즉 회귀방정식 (Ⅲ-1)에서  $n$ 으로, 5와 10을 고려한다.

$$d_{i,t-n+1}^i = \beta s_{i,t-n+1}^i + \gamma d_{i,t-n}^i + \delta g_{i,t-n+1}^i + \mu^i + \lambda_t + c + \epsilon_t^i \quad \text{식 (Ⅲ-1)}$$

여기서,

- $d_{i,t-n+1}^i$ 는 국가  $i$ 의  $(t-n+1)$ 년도부터  $t$ 년도까지의  $n$ 년간 평균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 증가분
- $s_{i,t-n+1}^i$ 는 국가  $i$ 의  $(t-n+1)$ 년도부터  $t$ 년도까지의  $n$ 년간 평균 노년부양비
- $d_{i,t-n}^i$ 은 국가  $i$ 의  $(t-n)$ 년도 말기의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
- $g_{i,t-n+1}^i$ 는 국가  $i$ 의  $(t-n+1)$ 년도부터  $t$ 년도까지의  $n$ 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 $\mu^i$ 는 국가  $i$ 의 고정효과
- $\lambda_t$ 는 연도고정효과
- $c$ 는 상수
- $\epsilon_t^i$ 는 오차항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가 10명 증가하면 정부부채비율은 매년 2.64~2.87%p씩 추가적으로 누적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경우 노년부양비가 2018년 19.6명에서 2025년에는 29.3명으로 10명가량 증가하고, 2031년에는 40.0명으로 20명가량 증가한다. 이러한 증가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며, 2046년부터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노년부양비가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패널회귀분석의 결과는 향후 노년부양비가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2〉 노년부양비와 일반정부부채(D2) 비율 증가 속도

구분	종속변수	
	5년 평균 정부부채비율 증가분	10년 평균 정부부채비율 증가분
	(1)	(2)
기간 평균 노년부양비	0.264* (0.153)	0.287* (0.151)
기간 초기 정부부채비율	-0.074*** (0.010)	-0.067*** (0.011)
기간 평균 경제성장률	-1.133*** (0.155)	-0.984*** (0.162)
상수	3.178 (2.527)	1.490 (2.411)
관측치	1,128	873
국가 수	51	51
결정계수(R-squared)	0.601	0.634

주: 1. ( ) 안은 강건성 표준오차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3. 연도더미도 분석에 포함되었으나 〈표 III-2〉의 결과에는 생략

자료: 다음의 데이터를 저자가 취합 및 분석하여 작성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 April 2021 Edition,"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1/April>, 검색일자: 2021. 7. 12.

2. OECD.Stat, "Population projections," <https://stats.oecd.org/>, 검색일자: 2021. 6. 7.

3. OECD.Stat, "National Accounts," Gross domestic product(GDP), <https://stats.oecd.org/>, 검색일자: 2021. 7. 12.

한편 기간 초기 정부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기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국가채무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정부부채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재정건전성을 더 강하게 관리하는 한편, 각국의 재정당국이 경기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점이 분석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 다. 장기 국가채무비율

마지막으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하여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어떻게 전망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미래의 노년부양비와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존재한다면 <표 Ⅲ-2>의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을 전망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노년부양비로 인해 외표본 예측(out-of-sample prediction)을 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5년부터는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과거 자료를 통해 관찰된 노년부양비는 대체로 30명 이하로 한국의 미래와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특히 노년부양비가 국가채무비율에 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선형으로 가정한 회귀분석 결과를 적용할 경우 상당한 전망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령화로 인해 미래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추정하기 위해서는 앞의 회귀분석을 통한 방법보다는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처럼 인구구조와 제도를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국가채무비율을 전망하는 방법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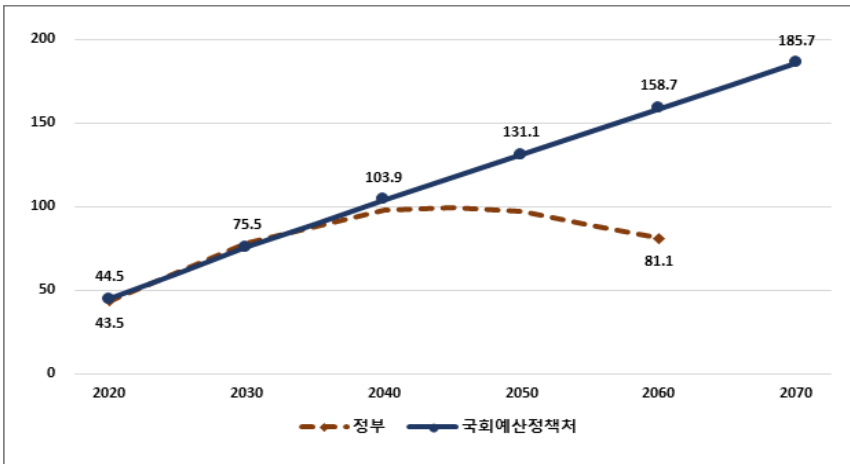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장기전망을 주기적으로 발표한다. 특히 두 기관은 모두 2020년 9월에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정부(기획재정부, 2020. 9.)의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20년 43.5%에서 2045년경 약 100%까지 증가한 이후 2060년 81.1%로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2020. 9.)의 전망 결과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2020년 44.5%에서 2070년 185.7%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두 기관의 전망 결과에는 2040년 이후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데, 이는 재

정지출 규모에 대한 가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 증가율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국가채무비율을 전망하였다. 반면 정부의 총지출은 크게 재량지출과 의무지출로 구분되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재량지출만 경상성장률과 연계시키고 인구구조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의무지출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따라서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저출산·고령화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 결과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특별한 세입확충이나 세출구조조정에 대한 노력 없이는 향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III-21]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장기 전망

(단위: GDP 대비 %)



자료: 다음의 데이터를 저자가 취합 및 정리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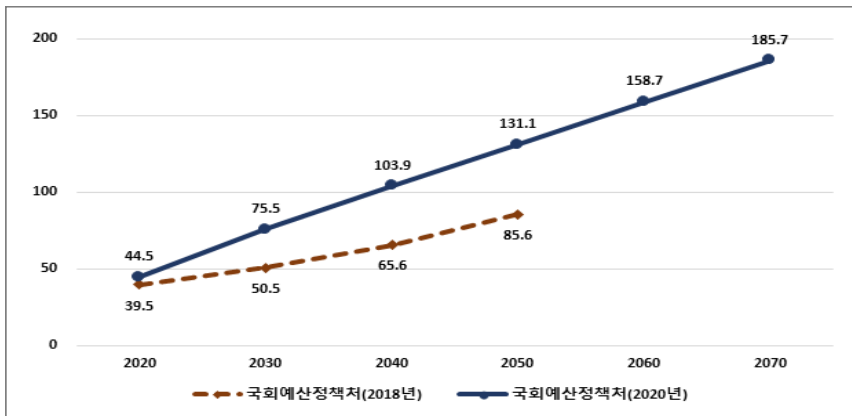
1. 기획재정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2020. 9., p. 6
2. 국회예산정책처,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 2020. 9., p. 25, [표 11]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관계없이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던 구조적인 요인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8년 12월에도 국회예산정책처(2018)는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장기전망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20년 39.5%

에서 2050년 85.6%로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다만 1년 9개월이 지난 2020년 9월의 장기전망에서 재정건전성은 더욱 빠르게 악화되는 것으로 전망된 것이다. 2년이 채 못 되는 사이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장기전망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이와 같은 변화는 해당 기간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가 더욱 확장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전망에 대한 변화에는 최근 출산율 저하로 인구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기초연금 확대와 같이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복지정책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확충이나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 III-22]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장기 전망 변화

(단위: GDP 대비 %)



자료: 다음의 데이터를 저자가 취합 및 정리하여 작성

1. 국회예산정책처, 『2019~205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2018. 12., p. 19., [표 9]
2. 국회예산정책처,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 2020. 9., p. 25., [표 11]

국회예산정책처(2020) 등의 국가채무비율 전망 결과는 미래의 재정적 부담을 과소추정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국회예산정책처(2020)의 국가채무비율 전망은 코로나19로 인해 확대된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다. 즉 앞에서 살펴본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한다면 한국의 장기 국가채무비율은 국회예산정책처(2020)의 전망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즉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한국의 재

정건전성 악화 속도가 최근 예상보다 빨라지고, 이에 따라 재정여력 또한 더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2020. 9.) 등의 장기재정전망이 미래의 재정적 부담을 과소평가하는 더욱 중요한 요인은 국가채무의 범위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서 발생할 부담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sup>74)</sup> 한국의 공적연금제도, 특히 국민연금제도는 아직 성숙 단계에 이르지 않아 연금 수령자보다 기여금 납부자가 더 많아 적립기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의 국민연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된 채 한국이 고령사회로 진입하면 적립기금이 감소하여 궁극적으로는 고갈되고 이후에는 국민연금기금수지의 적자분을 일반재정에서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2018)의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2042년부터 국민연금기금수지에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령화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부담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거나 확대될 경우 고령사회에서 건강보험기금의 적자를 피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부담률을 무한정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재정지출을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이는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노력이 없다면 미래의 국가채무비율은 국회예산정책처(2020)의 전망치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 4. 소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었던 경기는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변이바 이러스 등으로 인하여 아직 경제적 불확실성이 크지만, 백신 접종률 증가 및

---

74) 이는 미래의 국가채무를 계산할 때 사회보장성기금수지가 제외된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이다.

비대면 경제활동 확대 등으로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면서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2020년만큼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한국 경제가 2021년에는 4% 이상, 2022년에는 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2021년에는 코로나19 이전의 경제 수준을 넘어 회복하고, 2022년에는 코로나19 이전의 경제성장 경로에 근접한다는 전망이다.

경제가 회복되면서 물가상승 압력도 같이 커지고 있다.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021년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인 2%를 넘어서고, 2022년에는 2% 내외로 2021년보다 물가가 다소 안정될 전망이지만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향후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의 출현은 글로벌 공급 병목을 지속시켜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한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고, 유가 등 원자재 가격과 농축산물 가격 등의 안정화 여부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확대되고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물가상승 압력은 주요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조도 변화시키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국들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였다. 하지만 2021년 8월과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씩 총 0.5%p 인상하였고, 2021년 11월부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매월 150억달러씩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하는 등 통화정책 기조가 변하고 있다. 또한 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크고 오랫동안 지속됨에 따라 한국과 미국 등의 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도 점차 커진다. 아직 금리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의 증가 위험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였다. 이는 방역 강화, 경제 위축으로 인한 피해계층 지원, 경기 부양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 다만 이로 인하여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20년 6.2%p 상승하여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경제가 코로나19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경기가 회복되고 물가 및 금리가 상승한다면 앞으로는 재정운용의 방향을 확장적 기조에서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책 환경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에서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고 향후 5년간 확장적 재정운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IMF(2021, 10a.)의 *Fiscal Monitor*에서 한국은 2021~2026년 정부부채비율이 선진국들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로 전망되었다. 더 나아가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 국가채무비율이 낮더라도 미래의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증가 속도를 최대한 늦출 필요가 있다.

재정정책 기조를 건전성 관리로 전환하더라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가 전반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들더라도 코로나19 대유행과 경기침체로 인한 충격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계층이나 집단이 존재한다. 이러한 계층에는 여전히 재정을 통한 지원이 계속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선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다만 이에 대한 재원을 부채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보다는 앞으로는 세출구조조정과 세입확충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확장적 재정정책과 적극적 재정정책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경제가 코로나19의 영향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면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경기 회복기에는 증가한 세수를 통해 높아진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면서 향후 예상하지 못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여력을 확보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재정의 구조적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한 세출구조조정 및 세입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복지정책 확대와 같이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국민의 수용성이 높다. 반면 세출구조조정이나 세입확충을 위한 정책은 기존의 정책 수혜자와 세 부담이 증가하는 계층의 저항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낮다. 이로 인하여 최근 재정지출에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마련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운용은 지속될 수 없다. 따라서 세출구조조정 및 세입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책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시행을 실기하지 않도록 세출구조조정 및 세입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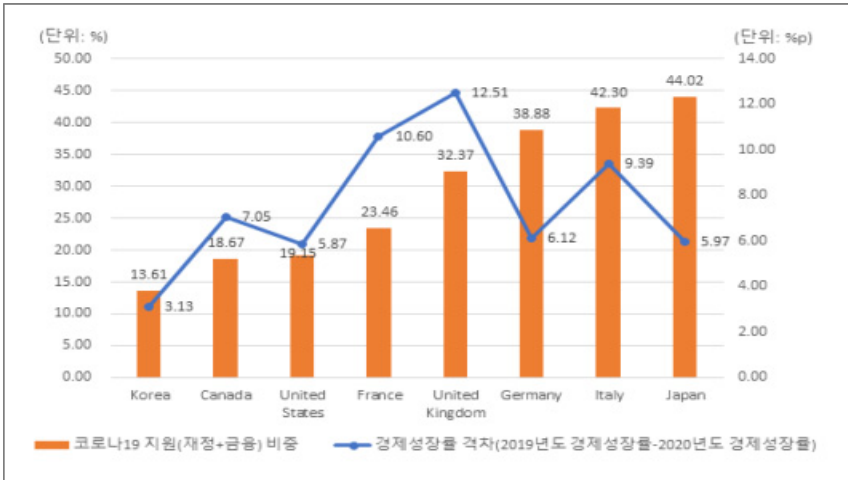
## IV. 국제비교를 통한 코로나19 대응 영향분석

---

### 1. 주요국의 피해 규모와 국가지원 규모

본 연구에서는 G7 회원국들의 2019년 대비 2020년 경제성장률 격차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코로나19 재정금융지원 규모와의 관계를 [그림 IV-1]에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년 대비 경제성장률(2020년 12월까지의 자료 기준)이 약 3%p 감소하여 감소폭이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편에 속하였고, 따라서 재정금융지원 규모 수준도 GDP 대비 약 13%로 그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았다. 프랑스의 경우, 경제성장률 격차는 약 10.6%p 하락하였고, 재정 및 금융지원 규모는 GDP 대비 24% 정도 투입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6.12%p 하락하였으나 재정 및 금융 투입은 GDP 대비 39% 정도 투입하였고, 일본은 약 9.4%p 하락한 경제 규모에 비하여 GDP 대비 44% 이상의 코로나19 재정과 금융지원을 하였다. 2021년 1월 기준, IMF가 집계한 G20 회원국의 재정대응 규모만 비교한 [그림 IV-3]에서는 국가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각국의 경제피해 정도와 국가지원 규모, 두 변수의 단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두용·민성환(2021)의 주요 위기별 경제 충격 간의 비교로 살펴보면, 경제성장률 하락폭은 금융위기 수준이며 민간 소비 감소는 2차 석유위기 정도이나, 고용폭 하락은 외환위기만큼은 아니지만 금융위기 당시보다는 컸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1] G7&한국 경제성장률 격차(2019년 성장률 - 2020년 성장률)와  
코로나19 지원 비중(GDP 대비)



자료: 다음의 데이터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1. OECD, "OECD Economic Outlook(No.108),"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EO108\\_INTERNET](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EO108_INTERNET), 검색일자: 2021. 7. 4.
2. IMF, IMF *Fiscal Monitor*, "Database of Country Fiscal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Table 1,"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FM-covid19.pdf>;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FM-covid19.pdf>, 검색일자: 2021. 3. 8.

<표 IV-1> 주요 위기별 우리나라 경제적 충격의 규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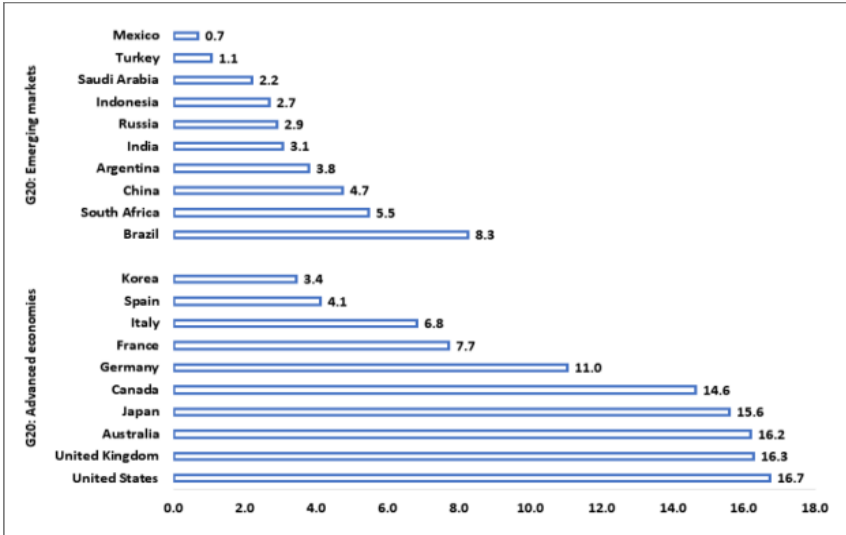
(단위:%p, 천명)

구분	1차 석유위기 (1975)	2차 석유위기 (1980)	외환위기 (1988)	세계금융위기 (2009)	코로나위기 (2020)
실질GDP 성장률 하락폭	-2.6	-12.3	-13.1	-3.9	-3.7
민간소비 성장률 하락폭	-2.7	-7.39	-19.7	-3.2	-7.41
고용 감소폭	-222	-316	-1,512	-311	-457

자료: 강두용 외, 「코로나 팬데믹 이후 1년의 한국경제: 경제적 영향의 중간평가」, 『i-KIET 산업경제이슈』, 제109호, 2020. 5., p. 3, <표 3>

[그림 IV-2] G20 회원국의 2020년 추가적 재정 대응 비중(GDP 대비)

(단위: %)



자료: IMF, IMF *Fiscal Monitor*, "Database of Country Fiscal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Table 1,"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FM-covid19.pdf>, 검색일자: 2021. 3. 8.

## 2. 분석의 개요

### 가. 분석의 배경

본 연구에서는 해당 국가의 어떠한 특징이 감염병 충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확진자 수)는 '1인당 GDP' 수준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여준 바 있다. 이번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기에서는 해당 국가의 '1인당 GDP'와 확진자 및 사망자 수 간의 단순 상관관계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직관적으로 볼 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양상과 해당 국가의 위기대응의 기초체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국가의 GDP 수준 이외에 해당 국가의 소득 수준을 포함하여 중앙정부 감염병 관리 경험, 해당 국가의 의료 및 보건행정 인프라 수준과 밀착행정의 담당

인 지방정부 역량, 질병관리 중앙부처와의 전달체계 거버넌스 체계, 백신 조달의 효율성, 감염병 교육 수준,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 및 금융지원 규모 등 국가의 총체적인 관리체계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sup>75)</sup>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는 외생적으로 주어진 충격이었으나, 이를 극복하는 과정은 각국의 내생적인 안전관리 역량으로 나타났는데, 이른바 ‘비경제적 요인’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의 감염병 위기는 기존 위기관리 안전망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강제 검증의 기회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전면적인 봉쇄조치와 다양한 사회적 거리두기(NPIs=ABC+SAH)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협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신뢰 기반 수준 및 시민의식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Brodeur et al.(2020)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기반이 구축되어 있고 시민의식이 높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정부조치에 대한 정치적 수용성도 포함된다. Baccini and Brodeur (2020)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효과성은 그 외에도 다수 정당의 리더십, 정치적 신뢰 수준, 정당 간의 인식의 차이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Allcott et al.(2020)은 미국 사례에서 트럼프 지지자와 민주당의 지지자들 간에 사회적 거리두기 수용태도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 점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Simonov et al.(2020)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Fox news viewership이 1% 증가할 때 집에서 머무를 확률이 8.9% 상승한다는 결과도 제시한 바 있다.

본 실증분석에서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별 대응 차이와 미국의 50개 주를 대상으로 각각 코로나19 감염 수준과 이에 미친 영향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분석은 여러 영향변수 중에서도 정책변수, 특히 선진국 정부들이 직면한 ‘양극화’ 수준 정도와 ‘국가채무’ 수준(재정수지, 정부지출 비중 등) 등 재정정책 관련 변수에 대하여 주목하였으며, 이들

---

75) Brodeur et al.(2020) 등

효과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하여 사회경제 변수들인 의료, 교육, 출산율, 자살률, 유럽 국가 여부 등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 나. 팬데믹 양상에 영향을 미친 주요 정책변수

### 1) 소득재분배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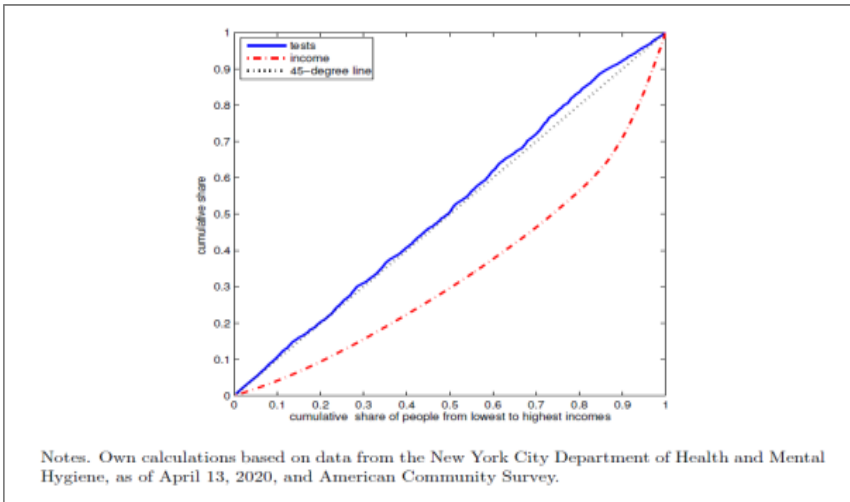
본 분석에서는 해당 국가의 소득재분배 수준과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규모와의 통계적 상관관계 여부를 살펴본다. Wildman(2021)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미국, 영국, 독일의 사례에서 동일한 감염원이 발생한 경우라 할 지라도 국가마다 어떠한 차이로 인하여 감염 양상이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소득재분배 정도와 감염병 대응이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 국가의 소득재분배 수준은 해당 국가의 사회경제적 문제점을 설명하는 대리변수 중 하나라고 보았으며 (Kawachi and Kennedy, 1999), 이 배분구조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sup>76)</sup>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지니계수 1% 상승 시 4%의 확진자 수, 5%의 사망자 수가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Fuceri et al.(2020)은 지난 20여 년간의 감염병 위기 분석 결과,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는 과거의 경우보다 더욱 심한 양극화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Schmitt-Grohé et al.(2020)는 흥미로운 연구를 보여주었는데, 소득 수준 불균형과 의료 대응 불균형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뉴욕시의 코로나 19 감염 테스트 결과를 이용하여 소득 수준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뉴욕시 카운티 단위의 서로 다른 ‘우편번호(zip code)’를 소득 수준의 대리변수로 보았으며, 우편번호별로 테스트 비율이 차이가 나는 점을 발견하였다. 즉 소득 수준에 따른 ‘테스트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상대적으로 소득불균형 격차보다는 작다는 것이 주요

76) “Income inequality is a proxy for many elements of socioeconomic disadvantage” (Kawachi and Kennedy, 1999.) that may contribute to the spread of and deaths from COVID-19(Wildman, 2021, p. 456).

연구 결과에 해당한다. 부자지역 상위 10%는 전체 테스트의 11%의 비중을 차지한 반면, 소득은 약 29%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10%는 전체 검사 비중에서는 약 9%를 차지하였고, 소득 수준에서는 약 4% 비중이었다. 상대적으로 소득불균형에 비해서는 테스트 불균형(test inequality)이 평등(egalitarian)하였음을 의미한다.<sup>77)</sup>

[그림 IV-3] Lorenz Curves of COVID-19 Test and Mean Income Across New York City



자료: Schmitt-Grohé et al., 2020, p. 9, Figure 4.

## 2) 재정지출 및 제도 변수

코로나19 이후 각국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하여 단기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이에 대한 채무위험을 최소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77) 테스트 결과 확진자 비율은 저소득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가 가능했던 것은 'zip code'별로 소득수준의 차이가 비교적 크고 소득 수준 추정이 가능하며, 확진자 수 'sample size'가 크고,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정책 내용이 같다는 전제하에 단기간 비교연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있다. Bianchi et al.(2020)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재정 및 금융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급격한 경제하락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으며, 긴급 재정 조치 당시 GDP 대비 일정 부분의 채무한도를 유지하고, 총지출 증가를 통한 일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질 이자율 하락 추세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Bigio et al.(2020)은 선진국들은 정부지출 확대와 신용보증(credit subsidy policies) 정책을 병행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가들은 이전 지출(transfer spending)을 증가시키고, 사회보험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지출을 확대하는 추세임을 밝혔다. 이들의 재정투입은 기존의 정책이 아닌 ‘unconventional policies’, 예를 들면 임금 보조금, 유동성 완화를 위한 긴급 재정투입(helicopter drops of liquid assets), 용자금 담보 보증(equity injections loan guarantee) 등의 새로운 방식으로 분류한 바 있다.

조세감면 및 유예 등의 세입 측면에서의 지원에 대한 내용도 경기대응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IMF는 소득재분배 완화를 위한 조치로 사용하고 있는 일시적인 조세감면조치와 같은 방식은 선진국과 같이 조세 기반이 광범위한 경우와 중간소득 및 상위소득 이상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주지한 바 있다.<sup>78)</sup> 조세부담률이 일정 수준에 달하여 조세 기반이 비교적 풍부할 경우에는 기존 조세제도를 활용한 재정 이전 등이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낮은 조세부담률, 일정세목 위주 세수 기반, 비협조적 세무행정 등과 같이 조세인프라가 취약할 경우에는 조세감면 및 이연과 같은 방식이 효과가 높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국가의 세입기반, 재정여력과 재정규율 등의 재정제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인프라에 해당한다. 본 분석에서는 이에 대한 변수로 코로나19 재정 및 금융지출 규모, 국가 채무 수준, 재정수지, 조세부담률,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 등의 변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

78) Wen, Jean-François, 2020.

### 3) 의료 및 보건행정과 교육

감염병 위기의 특성상 해당 국가의 전반적인 의료 및 보건행정 수준은 감염병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Brodeur et al.(2020)은 이에 대해 ‘노인인구 비중’ 및 ‘기대수명’ 등을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 수준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설명하고 있으며, 의료비 및 사회지출 비중이 감염병 대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OECD 분석에 따르면 선진국들의 의료분권 정책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으며, 보건행정 분권 수준이 높은 경우에 병상비용 지출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공공의료 비중이 높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 코로나19 위기 이후 지방정부의 의료비 지출 비중이 증가하였음도 보여주었다(OECD, 2020. 6., p. 19).<sup>79)</sup> 본 분석에서는 보건 의료수준에 대한 대리변수로 해당 국가의 노인인구 비중, 기대수명, 보건의료 지출 비중 등을 사용하고자 한다.

대다수의 연구에서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수업시간 축소, 돌봄 축소 등으로 교육기회 불균형 확대가 지속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Azevedo et al. (2020, p. 32)는 학교폐쇄 조치로 인한 0.3년 내지 0.6년 기간 동안의 학교수업 감소는 전 세계적으로 향후 (현재가치) 10조원 규모의 손실을 발생시킨다고 보았으며, 이는 해당 코호트의 기초학력 감소를 의미하며 정부투자의 16% 손실을 발생시킨다고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대상 국가의 2021년 이후의 PISA 성적 자료 확보가 불가능하여 이러한 교육기회 불평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 본 분석은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은 고등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정부 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가정하여 ‘대학교육 이상 비율’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

79) “Regional disparities in health outcomes have not increased after the decentralization of health care spending in Spain and Italy,” Vocal coordination among the national and subnational governments(OECD, 2020. 6a., p. 8).

#### 4) 노동시장 환경 및 지방분권 등

코로나19 위기라는 경제위기는 '남녀 및 인종 간 불균형적인 충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중요한 사회문제인 '남녀 및 인종 간의 격차'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더욱 확대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Alon et al.(2020)은 'regular' 경제위기인 경우에는 남성 근로자의 임금 하락이 컸으나, 코로나19 위기에서는 여성 근로자의 임금하락폭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특히 봉쇄조치로 인한 휴고 상황에서 우선 보육 책임이 있는 워킹맘의 근로시간 위축이 크게 나타났고, 이는 아이를 우선 돌보는 남성 근로자의 경우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므로 더 이상 보육이 한쪽 성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결과도 보여준다고 해석하였다. Forsythe(2020), Yassenov(2020), Adams-Prassl et al.(2020)은 의료, 교육 분야에서 여성 비중이 높았던 점과 가정보육 필요성 증가로 여성근로자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사회적 약자, African American, immigrant men, ethnic minority의 충격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코로나19 고용충격은 자녀 돌봄으로 인한 기혼여성에 집중되었다는 연구 결과(김지연, 2021)가 있다.

한편 Bartos et al.(2020)에서는 COVID-19 팬데믹은 외국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증폭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아시아인에 대한 적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OECD(2020. 6a.)는 캐나다의 가정폭력 사례가 급등하는 점을 들어 기존 사회문제의 증폭 문제도 제시한 바 있다. 본 분석에서는 이상에서의 다양한 사회문제와 격차문제를 모두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출산율', '자살률' 등이 이러한 사회문제와 격차의 심각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아 변수로 사용하였고, 해당 국가의 제도 변수와 기존 소득재분배 변수의 대리변수로 '남녀 임금격차'를 분석대상으로 살펴본다.

본 분석에서는 환경 변수와 각국의 제도적 특이점 등을 반영한 국가 체계와 거버넌스 체계 등은 자료 확보와 대표성 문제로 심도 있게 다루지는 못했다. 다만 감염병 확장세가 높았던 유럽 국가들은 OECD 회원국 내 '유럽 더미'를 활용하여 유럽 대 비유럽 국가 비교 정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다. 분석구조 및 주요 변수자료

OECD 회원국들의 감염병 규모와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사용한 종속변수는 '2020년도 기간 동안의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이다. 종속변수와 '코로나19 긴급 재정금융지원 규모', '2020년과 2019년간의 경제성장률 격차'를 제외한 변수들은 2019년도(혹은 2018년도) 변수이며, 따라서 종속변수와 내생성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실증분석 모형에서는 긴급 재정금융지원 규모를 변수로 활용하지는 않았으나, 긴급 재정금융지원 규모와 재정여력 등과의 관계는 살펴보았다.

본 분석의 주요 관심인 해당 국가들의 소득재분배와 감염병 피해 규모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소득5분위 배율'을 사용하였다. OECD Income database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 중위 50% 이하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해당한다. '소득5분위 배율'은 균등화 소득 크기 순서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5분위 소득이 1분위 소득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해당 국가의 정책적 노력과 제도적 인프라를 의미하는 재정지출 및 제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변수로는 '조세부담률', '국가채무', '정부지출 비중', '재정수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와 확진자 증가가 종속변수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려하기 위한 보건의료 수준 대리변수로 '기대수명', '노인인구 비중', '의료 및 보건지출 비중'을 살펴보았다.

기존 경제수준을 의미하는 거시변수로 '2019년도 경제성장률'을 사용하였고, '2020년과 2019년 간의 경제성장률 격차' 변수도 활용하였다. 그 밖에 해당 국가의 사회구조적인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출산율', '자살률', '남녀임금격차' 등의 변수들도 분석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ICT 산업 비중은 경제환경 변화와 방역 관리와 정부정책의 수용성 등에서 주요 요인변수로 작용하였다고 보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 (모형)  $Y_{2020} = \beta X_{2019, 2018} + \epsilon$ ,  $\beta \cong [E: F: I: H: \eta]$
- (경제변수: E)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 충격 등
- (재정변수: F) 조세부담률, 정부지출 비중, 국가채무, 재정수지, 코로나 재정금융지원 규모( $\alpha$ )
- (소득재분배 변수: I)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소득5분위 배율
- (보건 및 의료 변수: H) 노인인구 비중, 기대수명, 의료 및 보건지출 비중 등
- (기타 제도변수:  $\eta$ ) ICT 산업 비중, 농림어업·서비스업·제조업 비중, 출산율, 고등교육 이수율, 남녀임금격차, 살인범죄율, 자살률, 유럽 국가 여부 등

〈표 IV-2〉 OECD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	기준일(연도)	단위	관측 수	평균	최솟값	최댓값
인구10만명당 확진자 수(누적)	2021. 3. 17. 현재	명(per 100000 population)	37	5,064.32	43.05	13,194.18
인구10만명당 사망자 수(누적)	2021. 3. 17. 현재	명(per 100000 population)	37	101.49	0.54	220.91
2019년도 경제성장률	2019년	%(전년 대비)	37	2.14	-0.30	5.88
2019년도 경제성장률 ~2020년도 경제성장률	2020. 12. 현재	%p	37	7.85	2.03	13.58
1인당 GDP (2019년 기준)	2019년	per capita GDP(current prices, current PPPs)	35	48,965.84	16,077.32	120,670.50
1인당 GDP (2020년 기준)	2020년	per capita GDP(current prices, current PPPs)	34	47,400.89	15,005.52	117,613.94
Gini(처분가능소득기준)	2018년		36	0.32	0.24	0.46
소득5분위 배율 (처분가능소득기준)	2018년	배	36	5.38	3.50	10.30
상대적 빈곤율 (처분가능소득기준)	2018년	%	36	11.46	4.90	17.80
출산율	2018년	명(가임여성1명당)	37	1.63	1.00	3.10
기대수명	2018년	세	37	80.74	74.90	84.20
대학진학률	2018년	%(25세 미만, Excluding mobile students)	34	49.78	0.00	83.89
고등교육 이수율 (석박 제외)	2019년	%(Percentage of adults)	37	24.61	3.33	52.68

〈표 IV-2〉의 계속

변수	기준일(연도)	단위	관측 수	평균	최솟값	최댓값
국가채무	2019년	%(as a percentage of GDP)	37	77.65	13.39	230.11
재정수지	2019년	%(as a percentage of GDP)	37	-0.78	-6.62	6.20
조세부담률	2019년	%(as a percentage of GDP)	37	33.84	16.50	46.30
서비스업 생산 비중	2020년	%(as a percentage of Gross Value Added)	37	71.29	57.60	87.99
제조업 생산 비중	2020년	%(as a percentage of Gross Value Added)	37	26.11	11.78	41.40
ICT산업 비중	2015년	%(total value added at current prices)	31	4.76	2.69	10.35
GDP대비 정부지출 비중	2019년	%(as a percentage of GDP)	36	42.14	24.51	55.57
노인인구 비중	2019년	%(of population)	37	17.61	7.40	28.40
보건지출 비중	2018년	%(as a percentage of GDP)	33	6.37	2.08	9.29
코로나재정지원 비중	2020년 말 현재	%(as a percentage of GDP)	37	7.12	0.68	19.06
코로나금융지원 비중	2020년 말 현재	%(as a percentage of GDP)	37	8.10	1.28	35.48
남녀임금격차	2018년	%(남성중위소득 대비 남녀중위소득의 차)	37	12.61	4.14	3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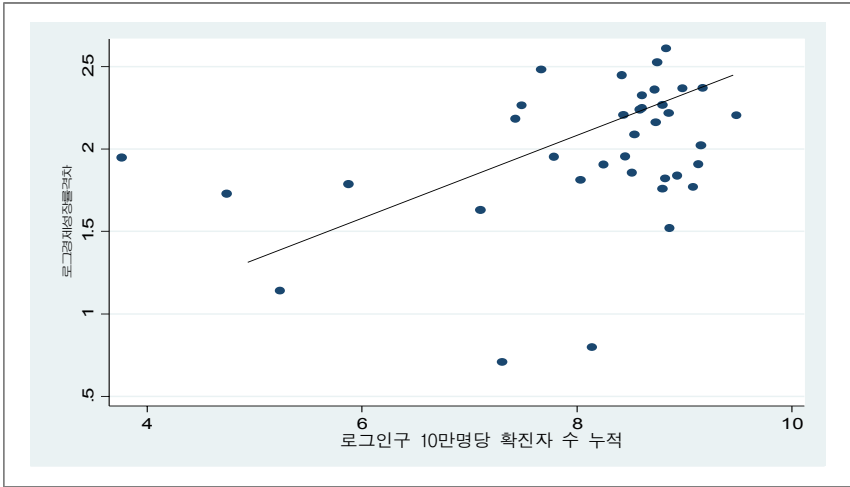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라. OECD 회원국의 코로나19 충격과 주요 변수와의 관계

### 1) 확진자 및 사망자 수와 경제충격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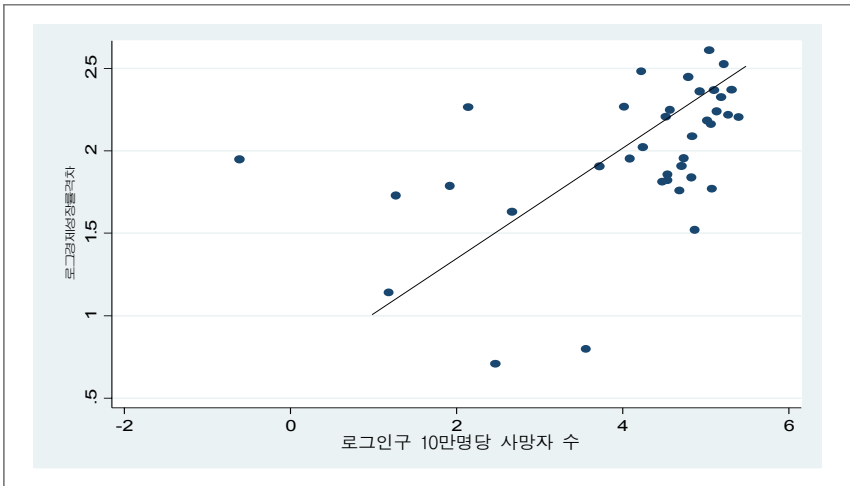
각국의 확진자 및 사망자 수 규모와 경제성장률 격차와의 관계는 양(+)  
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확진자 수(0.34)보다는 사망자 수(0.46)와의 상  
관관계 값이 다소 크게 나타났다.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수의 비율이 비교  
적 높은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방역조치와 경제활동 위축이 강화되어 경제성  
장률 하락이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V-4] OECD 회원국의 확진자 수 규모와 경제충격(0.34)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V-5] OECD 회원국의 사망자 수 규모와 경제충격(0.46)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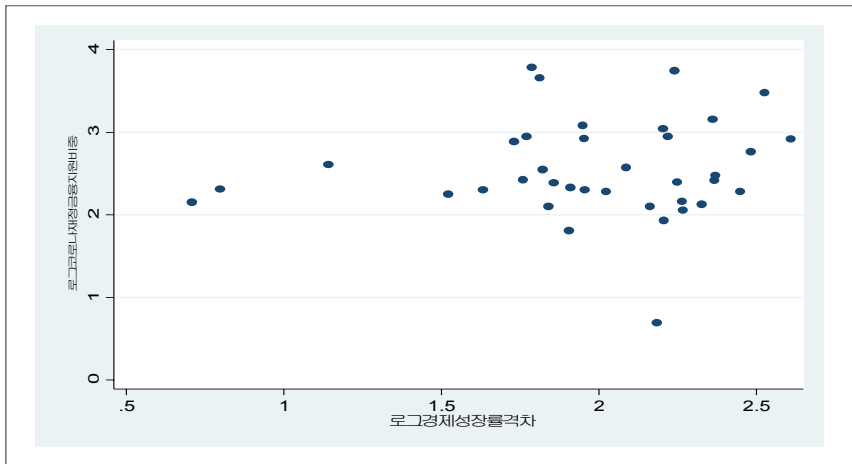
## 2) 경제충격과 재정금융지원 규모와의 관계

앞 장에서는 G7 회원국들의 2019년 대비 2020년 경제성장률 격차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코로나19 재정금융지원 규모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라는 충격의 양상과 이를 대응하는 국가의 재정금융지원 규모가 모두 상이하여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함을 확인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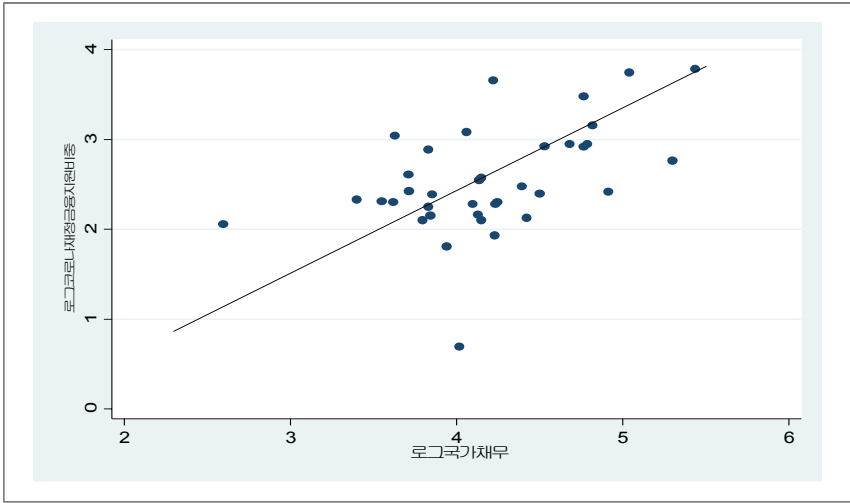
경제성장 충격과 코로나19 지원 규모와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게 나타나, 경제충격만큼 각국의 지원이 가능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단순 분석으로 볼 때, 각국의 코로나19 재정금융지원 규모는 해당 국가의 '국가채무수준', '정부지출 비중'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19 위기와 같이 대규모 단기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에 경제충격만큼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했고, 다만 해당 국가의 2019년 기준 채무 수준이 높은 나라들의 경우에 재정금융지원 규모가 컸던 것은 알 수 있었다. 이들 국가는 대개 이미 선진국들에 해당하며 기존 국채발행 플랫폼을 활용하여 2020년 이후의 국가채무도 확대했을 가능성이 높다. OECD 회원국들의 코로나19 대응 재정금융지원 규모와 재정수지, 정부지출 비중과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당시의 재정여력보다는 국채발행에 의존한 재정투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6] 경제충격과 국가 지원 규모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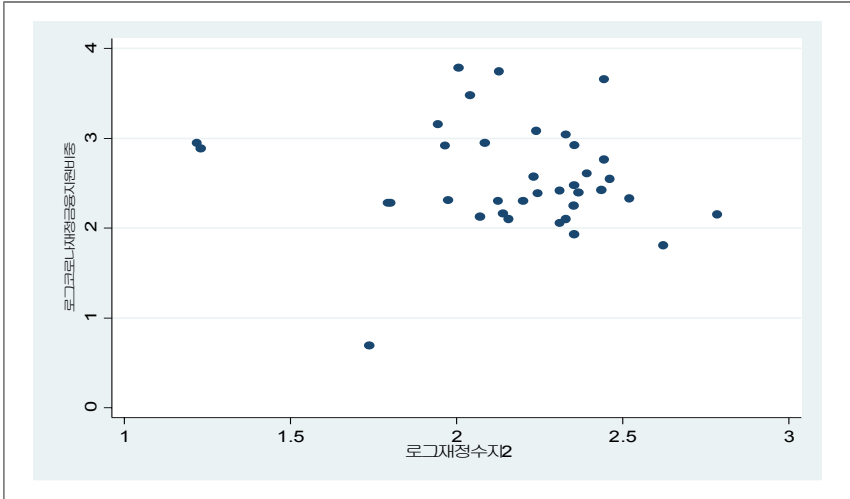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V-7] OECD 코로나19 지원 규모와 2019년 국가채무와의 관계(0.5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V-8] OECD 코로나19 지원 규모와 재정수지와의 관계(-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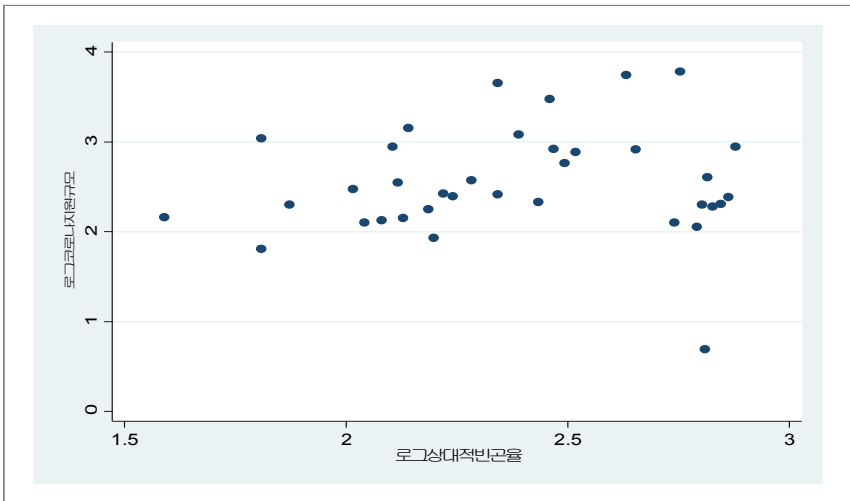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3) 소득재분배 변수

소득재분배 관련 변수들 그 자체로는 코로나19 대응과 직접적인 관계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양극화를 주목한 선행연구에서도 두 변수를 직접 비교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주요 요인을 통제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상관관계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코로나19 감염 및 해당 국가의 주요 인프라에 해당하는 제도 변수들을 고려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고자 하며, 국제비교에서 활용가능한 양극화 지표들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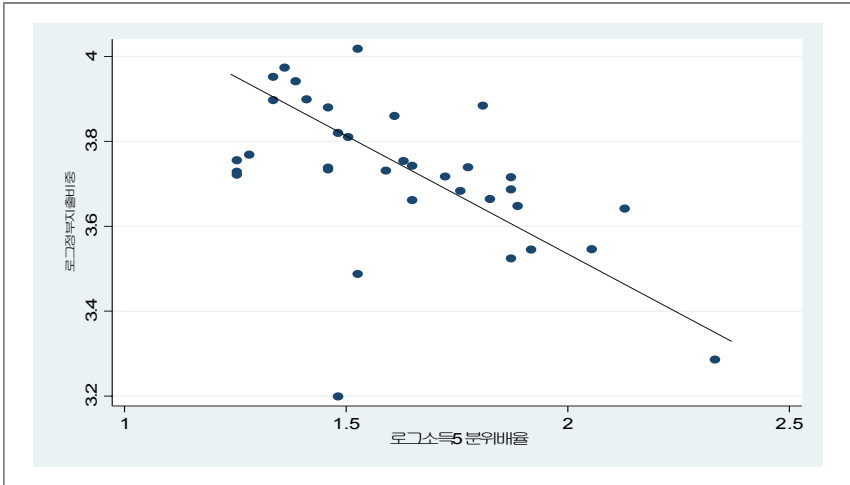
본 분석에서 사용한 세 가지 소득재분배 변수들과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및 사망자 규모와의 단순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정의에 의하여 소득재분배 결과는 재원을 조달하여(조세부담률) 이전지출(정부지출 비중)을 활용한 정부의 정책결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정책변수들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소득재분배 변수를 감염병 위기 대응력을 의미하는 대리변수로 가정하고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림 IV-9] 코로나19 사망자 수와 상대적 빈곤율(2018년)과의 관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V-10] 정부지출 비중과 소득5분위 배율(2018)(-0.52)



자료: 저자 작성

### 3. 실증분석 결과

#### 가. OECD 회원국들의 코로나19 감염 충격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전체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충격을 ‘확진자’와 ‘사망자’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본 분석에서 주목하고 있는 양극화 및 재정정책 변수의 영향력의 경우 확진자 대상 분석에서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한편 종속변수를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사망자 수’로 한 경우에는 양극화 및 재정정책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될 가능성과 이후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위는 개개인의 경제활동 여부, 주산업 종사 내용, 해당 국가의 집중 의료관리 체계 수준, 노인인구 비중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총체적인 해당 국가의 감염병 관리역량 수준이 확진자보다는 사망자 수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본다면 본 분석의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확진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우선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들, 즉 경제활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 충격도 컸던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확진자 비율이 높았

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요 재정변수인 국가채무, 재정지수, 정부지출 비중 등의 제도변수들과 양극화 변수인 지니계수 등이 확진자 규모에 미친 통계적인 영향도는 확인할 수 없었다.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수’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선 2019년도 기준 1인당 GDP 수준이 높았던 국가들, 즉 경제활동이 활발했던 국가들일수록 사망자 수 증가도 이에 비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그변수를 취한 계수값을 근거로 볼 때, 1인당 GDP가 1% 증가할 때 사망자 수 증가도 1% 내외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요 분석대상인 지니계수, 소득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로 살펴본 해당 국가의 양극화 정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및 사망 규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8년 기준 해당 국가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소득양극화가 컸던 나라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볼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소득재분배 변수인 지니계수, 소득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이 약 1% 증가할 때 사망자 수가 각각 2.7%, 1.5%, 1.1%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적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Wildman(2021)은 지니계수 1% 증가 시 사망자 수가 5% 증가한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Gordon and Reber(2020)는 연방정부의 재원투입 근거는 양극화 개선에 있으며, 침체가 끝날 때까지 연방재원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교육지출 증가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sup>80)</sup>

또한 2019년 기준 국가채무 수준이 높은 나라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같은 의미로 본 분석에서는 재정수지가 증가한 국가들의 경우에도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수지가 양호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사망자 비율이 낮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국가채무 수준을 양호하게 관리하고 재정수지를 잘 관리하는 나라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감염병 관리도 잘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 둘

80) “The federal government is uniquely positioned to reduce inequality in school spending between states, whereas it is more difficult to influence progressivity within states”(Gordon and Reber, 2020, p. 27)

의 관계를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보기에는 단계별 논의의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이들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기타 설명변수의 경우, 해당 국가의 '기대수명' 수준이 코로나19의 확진자 및 사망자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국가의 기대수명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의료 수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전체적인 관리 수준에 해당하며, 따라서 기대수명이 높은 나라들의 경우 확진자와 사망자 비율을 모두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결정적 기여 정도를 본 분석에서도 확인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기대수명이 1% 증가하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규모를 무려 각각 14%, 20%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각 국가가 평소에 기대수명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면 감염병 위기관리도 상대적으로 우수할 것임을 의미한다. 코로나19 감염병 국면에서 '기대수명'의 사회경제적 의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다.

본 분석에서의 흥미로운 변수는 '유럽 국가 터미'이다. 37개 OECD 회원국 중 유럽 국가는 26개국에 해당한다. 이들 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 결과만으로 유럽 국가들의 감염병 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비유럽 국가들(한국, 미국, 칠레, 호주 등)에 비하여 낮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유럽 국가라 할지라도 '그리스'의 경우 확진자 및 사망자 비율이 비교적 높지 않았는데, 이는 유럽 대륙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는 방역추적 시스템과 공공의료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유럽 대륙과 물리적인 거리로 인하여 감염병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견해이다.<sup>81)</sup> 그러나 그리스의 양호한 결과가 유럽 대륙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인지, 관광산업 등 대면서비스 산업 위주의 산업 기반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것인지는 구분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유럽터미'에 대한 해석은 추가적인 분석을 통하여 분해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 국가들의

---

81) Fernandez-Villaverde and Jones, 2020, p. 14.

높았던 감염병 확산 추이 원인 중 물리적인 특성으로 인한 것과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전반에 대한 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표 IV-3〉 OECD 회원국들의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수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구분	(1)	(2)	(3)
1인당 GDP	1.445** (2.57)	1.518** (2.69)	1.441** (2.55)
국가채무	0.131 (0.50)	0.169 (0.65)	0.129 (0.49)
기대수명	-13.94* (-2.05)	-15.86** (-2.34)	-14.07* (-2.06)
Gini	1.419 (1.16)	- (-)	- (-)
ICT산업 비중	-0.490 (-0.97)	-0.589 (-1.20)	-0.523 (-1.04)
고등교육 이수율	-0.456 (-1.59)	-0.396 (-1.41)	-0.429 (-1.51)
유럽 비유럽 여부	1.142** (2.24)	1.181** (2.30)	1.164** (2.17)
상대적 빈곤율	- (-)	0.645 (1.26)	- (-)
소득5분위 배율	- (-)	- (-)	0.770 (1.05)
_cons	56.30** (2.11)	60.54** (2.29)	53.94* (1.99)
N	30	30	30

주: 1. P value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2. 더미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로그변수임

자료: 저자 계산 및 작성

〈표 IV-4〉 OECD 회원국들의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수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1)

구분	(1)	(2)	(3)
1인당 GDP	1.310* (1.97)	1.440** (2.15)	1.303* (1.94)
국가채무	0.656** (2.11)	0.728** (2.36)	0.651** (2.07)

〈표 IV-4〉의 계속

구분	(1)	(2)	(3)
기대수명	-21.00** (-2.61)	-24.65** (-3.07)	-21.22** (-2.61)
Gini	2.774* (1.91)	- (-)	- (-)
ICT산업 비중	-0.223 (-0.37)	-0.418 (-0.72)	-0.284 (-0.47)
고등교육 이수율	-0.574 (-1.70)	-0.458 (-1.38)	-0.522 (-1.54)
유럽 비유럽 여부	1.367** (2.27)	1.407** (2.32)	1.423** (2.23)
상대적 빈곤율	- (-)	1.193* (1.96)	- (-)
소득5분위 배율	- (-)	- (-)	1.535* (1.77)
_cons	83.98** (2.67)	92.11** (2.94)	79.16** (2.46)
N	30	30	30

주: 1. P value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2. 더미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로그변수임

자료: 저자 계산 및 작성

〈표 IV-5〉 OECD 회원국들의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수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2)

구분	(1)	(2)	(3)
1인당 GDP	0.863 (1.34)	0.933 (1.46)	0.857 (1.32)
재정수지	-1.312* (-1.83)	-1.466** (-2.21)	-1.332* (-1.81)
기대수명	-10.2 (-1.38)	-11.77 (-1.60)	-10.39 (-1.40)
Gini	1.854 (1.16)	- (-)	- (-)
ICT산업 비중	-0.609 (-1.01)	-0.761 (-1.32)	-0.661 (-1.09)
고등교육 이수율	-0.513 (-1.47)	-0.431 (-1.28)	-0.475 (-1.37)

〈표 IV-5〉의 계속

구분	(1)	(2)	(3)
유럽 비유럽 여부	1.523** (2.45)	1.635** (2.59)	1.530** (2.34)
상대적 빈곤율	- (-)	0.873 (1.40)	- (-)
소득5분위 배율	- (-)	- (-)	0.940 (0.97)
_cons	46.20 (1.54)	48.31 (1.63)	43.41 (1.43)
N	30	30	30

주: 1. P value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2. 더미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로그변수임

자료: 저자 계산 및 작성

#### 나. 미국 51개 주의 코로나19 진행과 주요 변수와의 관계

본 분석에서는 미국의 51개 주를 대상으로 하여 각 주별 감염병 대응 수준과 사망자 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각 주는 인구 규모, 산업기반, 소득수준, 인구밀도, 주별 정치적 성향이 이질적이고, 특히 주별로 감염병 대응조치가 달랐다. 따라서 이에 따른 정부 대응조치 및 재정지출 규모도 매우 달랐다. 미국 51개 주의 정책 대응은 외부충격에 따른 국가별 대응 차이와 다르지 않다고 보아 유사한 분석에 포함시켰다.

〈표 IV-6〉 미국 51개 주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	기준일(연도)	단위	관측수	평균	최솟값	최댓값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	2021. 4. 6. 현재	명(per 1000000 population)	51	1555.92	330.00	2775.00
학사 이상 학위취득자 비율	2019년	%	51	32.71	21.05	59.67
2019년도 경제성장률(실질)	2019년	%(전년 대비)	51	1.86	0.30	5.20
Gini	2019년		51	0.46	0.43	0.51
상대적 빈곤율	2019년	%	51	12.17	7.30	19.60
소득5분위 배율	2019년	배	51	15.13	11.28	26.28

〈표 IV-6〉의 계속

변수	기준일(연도)	단위	관측수	평균	최솟값	최댓값
지방정부 채무 비중	2019년	%(as a percentage of GDP)	51	13.63	5.35	23.30
GDP 대비 주정부 지출 비중	2019년	%(as a percentage of GDP)	51	18.66	13.18	27.68
출산률	2019년	명(가임여성 1명당)	51	1.73	1.31	2.08
기대수명	2018년	세	51	78.25	74.40	81.00
트럼프 지지율	2020년	%	51	49.20	5.4	69.9
노인인구 비중	2019년	%(as a percentage of total population)	51	16.89	11.39	2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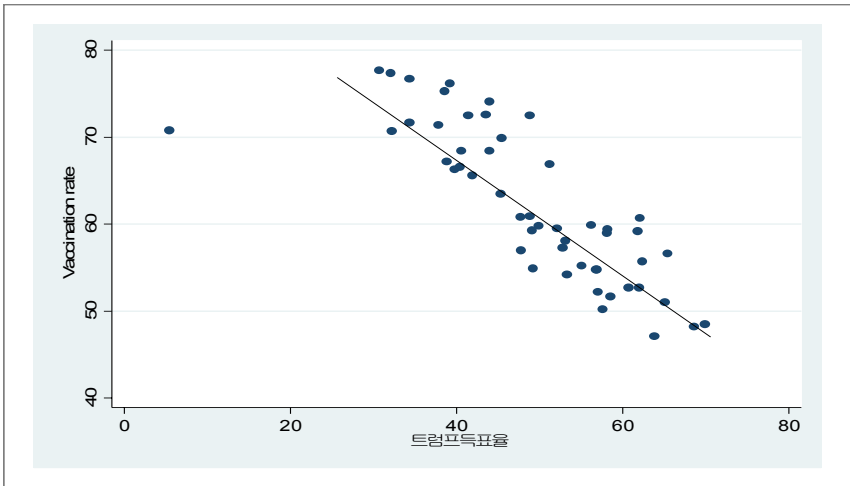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미국의 51개 주를 기준으로 한 코로나19 사망자에 영향을 미친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상대적으로 주정부 및 지방정부 지출 비중이 높은 주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사망자 비율이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2020년도 연방정부 지출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의 2019년 기준 ‘GDP 대비 주정부와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규모’가 비교적 높았던 주들의 경우, 이번 코로나19 감염대응에서도 사망자 비율을 낮추는 결과를 보여준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해당 주 전체 GDP에서 주정부 지출 비중이 1% 증가할 경우,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1% 내외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해당 주정부의 지출 규모가 클 경우에 비례적으로 방역관리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어서 감염병 관리에 적극적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해당 주정부의 ‘보건지출 비중’의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던 반면, ‘주정부와 기초지방정부 지출 비중’ 전체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이번 감염병 위기는 병리학적 관리뿐만 아니라 국경 봉쇄조치와 같은 경제충격 조절, 출입국 관리, 지방정부 자체적 판단에 의한 지원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역할이 컸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본 분석 결과는 ‘주정부 및 기초지방정부 재정 규모’가 이러한 ‘감염병 관리시스템의 대리변수’로서의 역할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득재분배 관련 변수인 지니계수, 빈곤율, 소득5분위 배율 변수 모두 높은 경우, 즉 양극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주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감염병 사망자 비율이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에서는 지니계수가 1% 증가하면 사망자 수 규모가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 5분위 배율은 약 2% 내외, 빈곤율은 약 1.8%로 나타났다. 본 분석에서는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 American Community Survey)에서 제공하는 2019년 기준 ‘빈곤율(Individuals below poverty level by State)’과 ‘소득5분위 배율(Mean household income of quintiles)’ 변수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의 대상이 미국이라는 점에서는 예상 가능한 결과이며, 전체적으로 양극화가 심각한 주의 경우,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관리 시스템 또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림 IV-11] 2020년 트럼프 득표율과 백신 접종률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지난 2020년 미국 대선 당시의 트럼프 지지율을 변수로 활용한 결과가 흥미롭다. 전체적인 트럼프 후보의 득표율은 49%에 달하여 전국민 투표율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51대 49로 승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별

트럼프 후보 지지율을 살펴보면, 워싱턴 D. C.가 5.4%로 가장 낮았고, 와이오밍주가 약 69.9%로 가장 높았다. 트럼프 지지율이 높은 주들의 경우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계수값은 0.56~1 내외로 변동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소득재분배 변수, 고학력자 비중 변수 여부에 따라 트럼프 득표율의 계수값이 변동이 크다는 것은 이들 변수와의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이다. 이를 직관적으로 해석해 보면 트럼프 지지율이 높은 주의 경우, 소득재분배 정도가 낮고 고학력자 비율이 비교적 낮은 추세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지지율이 높은 주의 경우 사망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직접적인 원인은 백신 접종률이 낮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성향뿐만 아니라 해당 주의 소득재분배 정도, 교육 수준 정도, 경제 활동 참가율, 낮은 인구밀도 등 다양한 특성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들 변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실증분석 결과에서는 해당 주의 중요한 제도적 특성을 의미하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감염병 대응 체계 관리 시스템도 달라질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표 IV-7〉 미국 51개 주 코로나19 사망자 수와 주요 변수와의 관계

구분	(1)	(2)	(3)	(4)	(5)
경제성장률 (2019)	-0.0337 (-0.37)	-0.043 (-0.45)	-0.109 (-1.06)	-0.0498 (-0.56)	-0.00946 (-0.10)
인구밀도	0.0507 (0.85)	0.0769 (1.26)	0.151** (2.79)	0.0652 (1.13)	0.107* (1.97)
노인인구 비중	0.404 (0.72)	0.268 (0.46)	-0.164 (-0.28)		0.184 (0.32)
주정부 지출 비중	-0.882** (-2.12)	-0.636 (-1.50)	-0.621 (-1.44)	-0.856** (-2.07)	
소득5분위 배율	2.396*** (4.68)			2.374*** (4.62)	2.295*** (4.30)
학사학위 이상	0.0624 (0.12)	0.0189 (0.03)	1.659* (2.01)	-0.272 (-0.40)	0.367 (0.71)
트럼프 득표율	0.805** (2.66)	0.562* (1.85)	1.063** (3.00)	0.876** (3.05)	0.864** (2.73)
출산률	0.752 (0.77)	0.757 (0.74)	0.0454 (0.04)	0.339 (0.41)	1.012 (1.01)

〈표 IV-7〉의 계속

구분	(1)	(2)	(3)	(4)	(5)
Gini		7.033*** (4.05)			
빈곤율			1,824*** (3.82)		
기대수명				2,307 (0.55)	
주지방 정부채무					-0.249 (-1.21)
_cons	-1.739 (-0.41)	10.78** (2.96)	-5.526 (-1.03)	-9.628 (-0.55)	-4.468 (-1.08)
N	51	51	51	51	51

주: 1. P value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2. 더미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로그변수임

자료: 저자 계산 및 작성

#### 다. 소결: 양극화 개선과 재정제도 개편의 필요성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득재분배와 감염병 관리 변수의 유의성을 살펴본 선행연구는 있으나, 정부의 재정 관련 변수들과의 관계를 조명한 것은 본 분석이 거의 처음이라고 알고 있다. 역시 미국 주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주정부 재정과 관련한 변수의 특성을 살펴본 것도 본 분석과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에 해당한다.

본 실증분석에서는 OECD 회원국들의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에 영향을 미친 주요 변수들의 추세를 살펴보았다. 주요 거시변수와 사회경제 변수들을 토대로 한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을 비교한 결과, 해당 국가의 양극화 완화 노력 정도, 즉 소득재분배 정책은 코로나19라는 국가 위기 대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의 주정부 지출 자료에서도 소득재분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주의 경우에 코로나19 사망자 수 관리가 수월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트럼프 지지율에 따른 사망자 수 증가 경향에서 해당 주의 제도적 특성을 결정하는 정치적 성향 또한 감염병 대응 및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음도 짐작할 수 있었다.

해당 국가의 재정역할 강화가 코로나19를 관리하는 정부 정책역량 강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분석에서는 ‘재정수지’ 관리가 비교적 우수한 경우, 코로나19 사망자 수 증가폭도 낮은 추세를 발견하였다. 평상시 재정수지 관리를 통한 재정여력 확보는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부분에 유연하게 대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OECD 회원국들의 국가채무와 코로나19 사망자 수에 대한 관계는 일률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만 유럽 국가를 별도로 통제할 경우, 국가채무 수준 관리와 총체적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추정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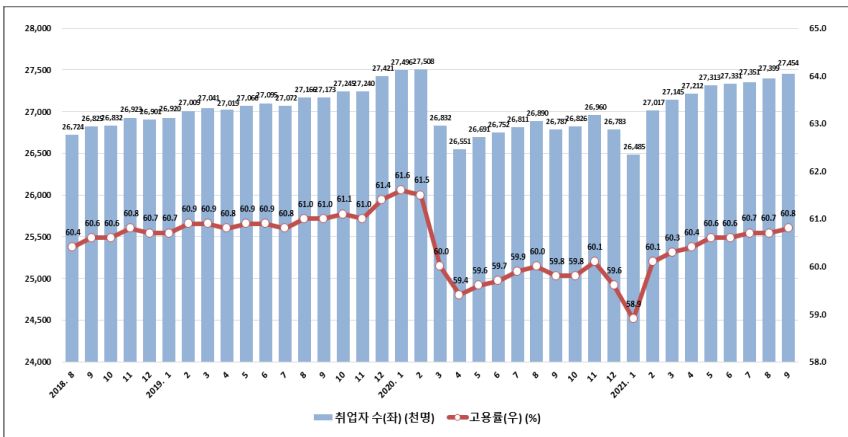
또한 OECD 회원국별 분석에서는 ‘기대수명’이 해당 국가의 감염병 대응역량 대리변수이며, 미국 자료에서는 지방정부(municipality)의 재정지출 규모가 총체적 관리 수준을 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설명력을 높이는 통제변수로 고등교육 수준, ICT 산업 비중 등을 포함시켰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강건하게 유지되지는 않았다. 특히 유럽 국가 여부는 국가별 총체적 위기관리 수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V. 코로나19가 국내 고용에 미친 영향

제 V장에서는 코로나19가 국내 고용에 미친 현황을 통계청 「고용동향」을 통해 개관하고 코로나19가 고용시장에 미친 국내외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정리한다. 또한 「지역별 고용조사」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로는 파악할 수 없는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실증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끝으로 코로나19 위기 이후 정부의 고용안정 정책을 정리하여 이를 실증분석 결과와 연결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 1.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현황

[그림 V-1] 계절조정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추이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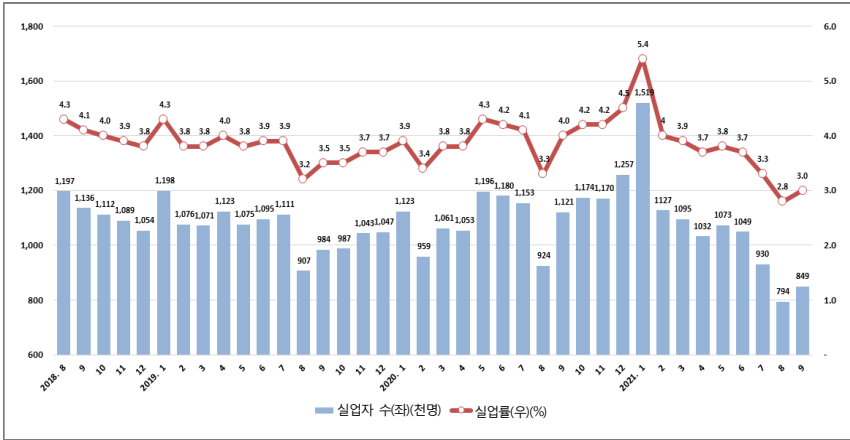
[그림 V-1]은 통계청 「고용동향」의 계절조정 취업자 수와 고용률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고용동향」에 따르면 2020년 3, 4월 취업자 수가 급격하

게 감소하였으며,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완화에 따라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나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에 다시 급격하게 취업자 수가 감소하여 2020년 4월(26,441천명)보다 낮은 취업자 수 수치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2021년 2월에 취업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2021년 2월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2021년 6월 기준으로는 코로나19 이전(2020년 2월 취업자 수 27,508천명) 수준을 거의 회복(27,331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절조정 고용률 동향을 살펴보면 2020년 3, 4월 고용률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완화에 따라 완만하게 고용률이 증가하였으나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에 다시 급격하게 감소하여 2021년 4월 고용률(58.9%)은 2020년 3월(59.4%)보다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취업자 수와 마찬가지로 2021년 2월에 고용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2021년 2월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1년 9월 기준 코로나19 이전(2020년 2월 고용률 61.5%) 수준과는 약 0.7%p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을 기준으로 고용시장이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이전 고용률 상승 추세를 고려하는 경우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일시적 충격이 아닌 영구적 충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V-2]는 통계청 「고용동향」의 계절조정 실업자 수 및 실업률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3, 4월 실업률이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 오히려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2021년 1월 실업률은 5.4%를 기록하였다. 2021년 2월 취업자 수 급증과 고용률 상승에 따라 실업률이 급격하게 하락(5.4 → 4.0%)하였으며, 이후 실업률은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2021년 8월 이후에는 코로나19 이전 실업률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2] 계절조정 실업자 수 및 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음으로 <표 V-1>은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주요 산업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를 정리한 것이다. 전체 취업자 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2020년 3월~2021년 1월까지 음(-)을 기록하였으며 2021년 1월 가장 큰 폭의 음(-)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특히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 수 감소폭이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음식·숙박업 취업자 수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 2021년 2월 -10.15%에서 2021년 3월 -1.31%로 급격하게 반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1>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전년 동월 대비, %)

연월	전체	농림 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 매업	운수 및 창고	음식 숙박	공행 및 국방	교육 서비스	보건 사회 복지
2019. 1.	0.07	10.85	-3.69	-0.96	-1.80	-0.63	-1.75	-1.92	0.60	9.75
2.	1.01	11.74	-3.31	-0.15	-1.60	0.14	0.04	1.71	0.82	12.91
3.	0.94	6.66	-2.37	0.05	-0.73	-0.35	1.13	0.64	1.85	8.57
4.	0.63	0.86	-1.16	-1.48	-2.06	1.06	1.82	-0.89	3.00	6.16
5.	0.95	1.08	-1.62	0.29	0.03	1.43	2.66	-3.45	2.00	5.97
6.	1.04	1.54	-1.47	1.08	-1.07	3.40	2.91	-6.51	4.01	5.96

〈표 V-1〉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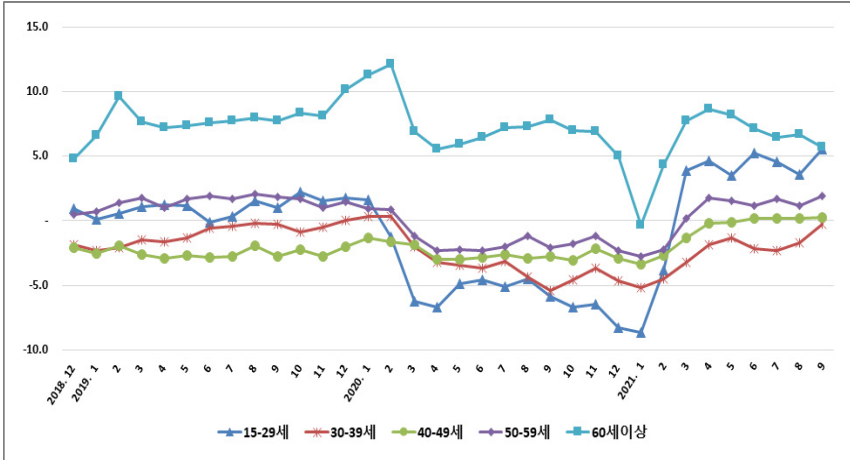
(단위: 전년 동월 대비, %)

연월	전체	농림 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 매업	운수 및 창고	음식 숙박	공행 및 국방	교육 서비스	보건 사회 복지
2019. 7.	1.11	3.75	-2.10	0.59	-2.30	2.16	4.44	-5.50	3.39	6.93
8.	1.68	3.71	-0.54	1.25	-1.44	1.43	4.67	-4.60	1.24	8.29
9.	1.29	4.23	-2.44	-1.94	-1.72	1.78	3.62	-5.53	3.28	8.06
10.	1.55	3.88	-1.79	-2.44	-1.81	1.98	5.12	-4.28	0.27	7.03
11.	1.22	1.53	-0.58	-3.35	-2.34	4.01	3.69	-3.03	1.83	6.22
12.	1.94	4.11	-0.33	-1.30	-2.53	4.85	4.46	-1.69	1.24	8.65
2020. 1.	2.17	7.23	0.18	0.25	-2.54	6.49	3.83	-0.93	0.38	9.48
2.	1.87	7.18	0.77	-0.51	-2.88	7.04	0.57	2.37	-0.49	9.74
3.	-0.73	10.59	-0.52	-1.01	-4.57	5.04	-4.90	-5.43	-5.35	3.72
4.	-1.76	5.19	-1.00	-2.96	-3.34	2.32	-9.22	-3.58	-6.88	3.52
5.	-1.43	3.61	-1.29	-3.04	-5.10	3.53	-7.89	-2.59	-3.72	5.95
6.	-1.29	3.42	-1.47	-2.97	-4.78	3.43	-7.97	0.37	-4.64	7.38
7.	-1.01	2.36	-1.21	-1.12	-3.47	4.02	-9.47	1.02	-4.64	7.19
8.	-1.00	-0.19	-1.13	-0.30	-4.85	3.95	-7.25	5.10	-4.78	7.13
9.	-1.43	-0.26	-1.54	2.77	-5.66	1.61	-9.82	9.84	-7.87	5.92
10.	-1.53	1.48	-2.21	1.77	-5.15	1.94	-9.82	11.21	-5.49	4.57
11.	-1.00	1.30	-2.53	3.76	-4.60	1.62	-7.03	13.48	-5.66	4.98
12.	-2.31	4.85	-2.46	1.07	-5.45	1.94	-13.38	8.72	-5.28	1.97
2021. 1.	-3.66	-1.19	-1.03	-0.96	-6.04	1.99	-15.74	2.08	-4.07	-3.37
2.	-1.76	2.68	-0.61	1.44	-5.43	1.66	-10.15	3.66	-4.49	3.96
3.	1.18	-1.86	-0.25	4.69	-4.73	4.86	-1.31	9.00	1.81	7.57
4.	2.45	-0.20	0.21	7.29	-5.18	7.34	2.94	7.43	3.75	9.93
5.	2.30	-0.19	0.46	6.67	-3.84	6.14	0.19	7.62	2.37	10.33
6.	2.15	1.02	-0.23	6.97	-4.68	6.09	0.56	7.94	1.15	8.67
7.	2.00	0.77	0.14	4.53	-5.24	8.20	-0.56	8.33	1.47	9.88
8.	1.91	2.41	-1.74	6.12	-3.30	7.26	-1.76	4.14	2.90	10.04
9.	2.48	1.48	-0.83	2.75	-3.54	11.23	1.84	-0.08	5.60	11.60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V-3] 연령대별 취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변화

(단위: 전년 동월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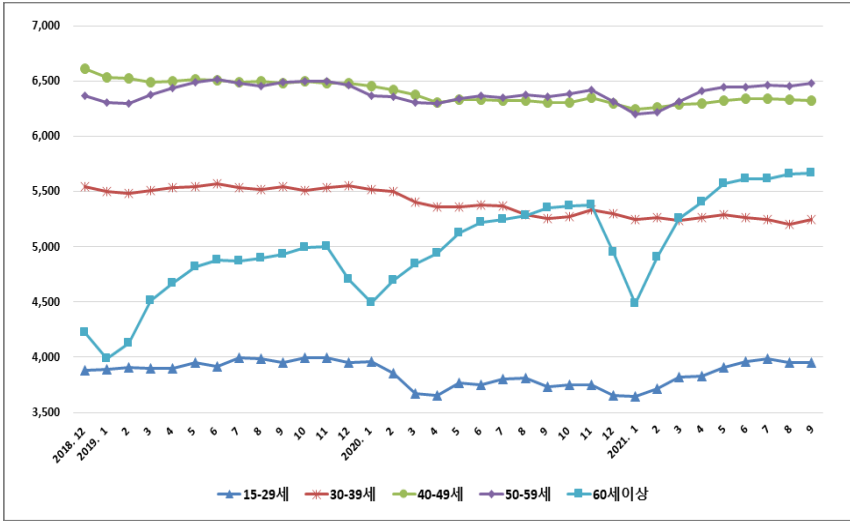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V-3]은 「고용동향」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연령대별 취업자 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을, [그림 V-4]는 연령대별 취업자 수의 변화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60세 이상의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5~10% 높은 증가율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시계열 추세를 고려할 경우 60세 이상, 15~29세의 취업자 수가 2020년 3, 4월 2020년 12월, 2021년 1월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30~59세의 취업자 수 감소폭은 완만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40대의 경우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취업자 수 변화 추이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은 특징적이다. 반면 30대와 50대의 경우 코로나19로 이후 취업자 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 2021년 1월까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2월부터는 전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취업자 수 감소폭이 컸던 '15~29세', '50세 이상'에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다. 다만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2021년 2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4] 연령대별 취업자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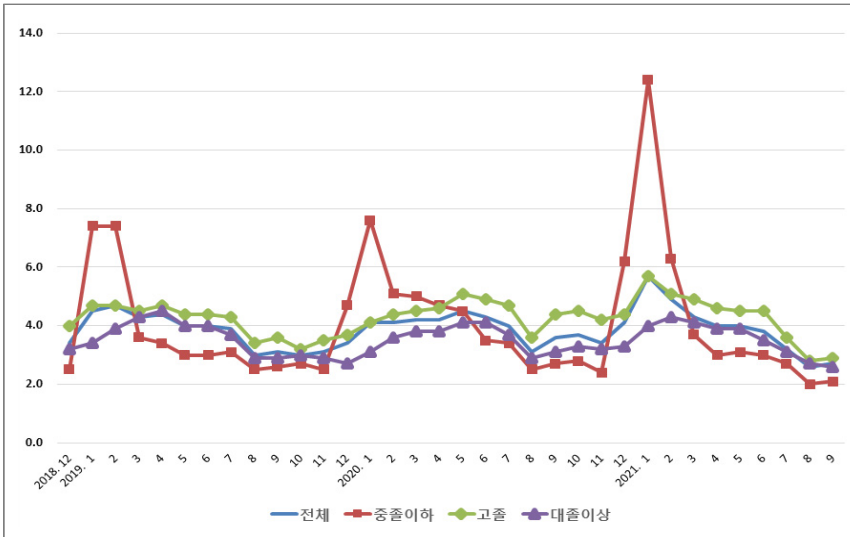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V-5] 교육수준별 실업률 변화

(단위: %)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V-5]는 교육 수준별 실업률 변화 추세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중졸 이하 저학력자의 실업률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중졸 이하 학력자의 2021년 1월 실업률이 기존의 계절성을 고려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대졸 이상의 경우, 계절 요인을 고려하는 경우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실업률에 구조적인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2021년 1월 이후 모든 학력별 실업률은 하락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 사업체 규모별 취업자 수 추이

(단위: 천명, %)

연월	취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감			
	계	1~4인	5~299인	300인 이상	계	1~4인	5~299인	300인 이상
2019. 1.	26,232	9,419	14,344	2,469	0.07	0.42	-0.12	-0.12
2.	26,346	9,483	14,403	2,459	1.01	1.57	0.90	-0.57
3.	26,805	9,789	14,488	2,528	0.94	2.69	-0.21	1.00
4.	27,038	10,026	14,456	2,556	0.63	2.46	-0.82	1.95
5.	27,322	10,165	14,577	2,581	0.95	2.81	-0.29	0.94
6.	27,408	10,246	14,549	2,612	1.04	3.70	-0.91	1.83
7.	27,383	10,156	14,596	2,631	1.11	2.55	-0.30	3.58
8.	27,358	10,140	14,558	2,661	1.68	3.06	0.17	5.01
9.	27,404	10,099	14,651	2,654	1.29	2.26	0.23	3.55
10.	27,509	10,112	14,728	2,669	1.55	2.69	0.16	5.12
11.	27,515	10,043	14,809	2,664	1.22	1.88	0.14	5.01
12.	27,154	9,801	14,705	2,648	1.94	2.59	0.78	6.17
2020. 1.	26,800	9,707	14,479	2,614	2.17	3.06	0.94	5.87
2.	26,838	9,697	14,530	2,610	1.87	2.26	0.88	6.14
3.	26,609	9,698	14,298	2,613	-0.73	-0.93	-1.31	3.36
4.	26,562	9,737	14,207	2,619	-1.76	-2.88	-1.72	2.46
5.	26,930	9,851	14,428	2,651	-1.43	-3.09	-1.02	2.71
6.	27,055	9,891	14,501	2,664	-1.29	-3.46	-0.33	1.99
7.	27,106	9,934	14,485	2,687	-1.01	-2.19	-0.76	2.13
8.	27,085	9,900	14,485	2,700	-1.00	-2.37	-0.50	1.47
9.	27,012	9,873	14,441	2,698	-1.43	-2.24	-1.43	1.66

〈표 V-2〉의 계속

(단위: 천명, %)

연월	취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감			
	계	1~4인	5~299인	300인 이상	계	1~4인	5~299인	300인 이상
10.	27,088	9,909	14,452	2,728	-1.53	-2.01	-1.87	2.21
11.	27,241	9,871	14,638	2,733	-1.00	-1.71	-1.15	2.59
12.	26,526	9,526	14,244	2,755	-2.31	-2.81	-3.13	4.04
2021. 1.	25,818	9,211	13,871	2,737	-3.66	-5.11	-4.20	4.71
2.	26,365	9,455	14,124	2,785	-1.76	-2.50	-2.79	6.70
3.	26,923	9,781	14,350	2,792	1.18	0.86	0.36	6.85
4.	27,214	9,933	14,475	2,806	2.45	2.01	1.89	7.14
5.	27,550	10,065	14,659	2,826	2.30	2.17	1.60	6.60
6.	27,637	10,107	14,723	2,808	2.15	2.18	1.53	5.41
7.	27,648	10,104	14,732	2,812	2.00	1.71	1.71	4.65
8.	27,603	10,047	14,770	2,786	1.91	1.48	1.97	3.19
9.	27,683	10,037	14,845	2,800	2.48	1.66	2.80	3.78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V-2〉는 사업체 규모별 취업자 수와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을 정리한 표이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전체 취업자 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음(-)을 기록하였으며, 전반적으로 1~4인의 소규모 사업체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폭이 5~299인의 사업체보다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기존의 성장 추세와 비교하여서는 취업자 수 증가율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발생한 2020년 2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취업자 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 양(+ )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사업체 규모별 취업자 수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한 취업자 수 감소의 충격이 소규모 사업체에 집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표 V-4〉는 종사상 지위별·월별 취업자 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을 보여주는 표이다. 코로나19 이후 2020년 3월~2021년 1월까지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와 임금근로자(상용, 임시, 일용직 근로자) 간의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감에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 무급가족종사자, 임시일용직근로자의 취업자 수 감소폭이 크고, 일용직근로자의 취업자 수 감소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2~4%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0~3%로 양(+)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2021년 2월 이후 비임금근로자의 취업자 수 회복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더딘 것으로 나타나며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의 경우 2021년 3월부터 취업자 수가 회복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용직 근로자의 취업자 수가 2021년 3월 이후 증가하였으나 6월 이후 다시 전년 동월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종사상 지위별로 취업자 수의 증감 추이를 살펴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의 타격이 종사상 지위별로 매우 상이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상용직보다는 임시직, 임시직보다는 일용직근로자의 타격이 컸으며 이후 고용시장 회복에 따른 추이도 일용직근로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단위: 천명)

연월	계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	임시	일용		
2019. 1.	26,232	6,425	5,472	953	19,807	13,923	4,455	1,429
2.	26,346	6,450	5,480	970	19,896	13,979	4,520	1,397
3.	26,805	6,615	5,607	1,008	20,190	14,102	4,704	1,384
4.	27,038	6,737	5,655	1,083	20,301	14,001	4,876	1,425
5.	27,322	6,818	5,683	1,135	20,504	14,070	4,954	1,480
6.	27,408	6,853	5,706	1,147	20,555	14,161	4,913	1,481
7.	27,383	6,821	5,676	1,146	20,562	14,181	4,918	1,463
8.	27,358	6,799	5,662	1,138	20,559	14,288	4,857	1,415
9.	27,404	6,779	5,632	1,147	20,625	14,390	4,856	1,379
10.	27,509	6,762	5,628	1,135	20,747	14,434	4,885	1,428
11.	27,515	6,668	5,582	1,086	20,847	14,490	4,900	1,457
12.	27,154	6,464	5,485	979	20,690	14,575	4,706	1,409

〈표 V-3〉의 계속

(단위: 명)

연월	계	비임금 근로자	임금 근로자		상용	임시	일용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2020. 1.	26,800	6,423	5,462	962	20,376	14,586	4,423	1,367
2.	26,838	6,445	5,484	962	20,393	14,596	4,507	1,290
3.	26,609	6,553	5,537	1,016	20,056	14,561	4,284	1,211
4.	26,562	6,644	5,582	1,061	19,919	14,401	4,288	1,230
5.	26,930	6,686	5,601	1,085	20,244	14,463	4,453	1,328
6.	27,055	6,645	5,551	1,094	20,410	14,510	4,506	1,395
7.	27,106	6,637	5,548	1,089	20,469	14,528	4,523	1,419
8.	27,085	6,639	5,555	1,083	20,446	14,570	4,539	1,337
9.	27,012	6,636	5,554	1,082	20,376	14,486	4,553	1,337
10.	27,088	6,648	5,550	1,098	20,441	14,448	4,624	1,369
11.	27,241	6,563	5,523	1,040	20,678	14,528	4,738	1,412
12.	26,526	6,352	5,422	930	20,174	14,580	4,355	1,239
2021. 1.	25,818	6,201	5,335	866	19,617	14,622	3,860	1,135
2.	26,365	6,287	5,372	915	20,078	14,678	4,190	1,210
3.	26,923	6,412	5,456	956	20,511	14,769	4,490	1,252
4.	27,214	6,567	5,545	1,023	20,647	14,712	4,667	1,268
5.	27,550	6,663	5,587	1,075	20,887	14,819	4,760	1,309
6.	27,637	6,660	5,580	1,080	20,978	14,830	4,866	1,281
7.	27,648	6,636	5,564	1,073	21,012	14,888	4,875	1,249
8.	27,603	6,610	5,550	1,060	20,992	14,893	4,851	1,248
9.	27,683	6,573	5,528	1,045	21,110	15,001	4,893	1,216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V-4〉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감

(단위: %)

연월	계	비임금 근로자	임금 근로자		상용	임시	일용	
			자영업	무급가족 종사				
2019. 1.	0.07	-1.12	-1.10	-1.24	0.47	2.05	-4.54	1.78
2.	1.01	-0.51	-0.83	1.36	1.51	2.19	-0.94	3.02
3.	0.94	-0.44	-0.20	-1.75	1.41	3.09	-2.39	-2.05
4.	0.63	-1.29	-0.72	-4.07	1.29	2.37	-0.89	-1.45

〈표 V-4〉의 계속

(단위: %)

연월	계	비임금 근로자	임금 근로자		상용	임시	일용	
			자영업	무급가족 종사				
5.	0.95	-0.84	-0.72	-1.48	1.57	2.39	-0.60	1.16
6.	1.04	-0.39	0.09	-2.80	1.53	2.82	-1.72	0.41
7.	1.11	-0.73	-0.44	-1.97	1.73	3.19	-1.72	-0.20
8.	1.68	-0.92	-0.33	-3.64	2.56	3.57	-0.04	1.73
9.	1.29	-1.02	-0.83	-2.05	2.07	3.91	-0.18	-7.57
10.	1.55	-0.81	-0.72	-1.13	2.34	4.15	-0.43	-5.37
11.	1.22	-1.43	-0.85	-4.23	2.10	4.27	-1.11	-7.08
12.	1.94	-0.45	-0.20	-1.81	2.70	4.60	0.73	-8.51
2020. 1.	2.17	-0.03	-0.18	0.94	2.87	4.76	-0.72	-4.34
2.	1.87	-0.08	0.07	-0.82	2.50	4.41	-0.29	-7.66
3.	-0.73	-0.94	-1.25	0.79	-0.66	3.25	-8.93	-12.50
4.	-1.76	-1.38	-1.29	-2.03	-1.88	2.86	-12.06	-13.68
5.	-1.43	-1.94	-1.44	-4.41	-1.27	2.79	-10.11	-10.27
6.	-1.29	-3.04	-2.72	-4.62	-0.71	2.46	-8.28	-5.81
7.	-1.01	-2.70	-2.26	-4.97	-0.45	2.45	-8.03	-3.01
8.	-1.00	-2.35	-1.89	-4.83	-0.55	1.97	-6.55	-5.51
9.	-1.43	-2.11	-1.38	-5.67	-1.21	0.67	-6.24	-3.05
10.	-1.53	-1.69	-1.39	-3.26	-1.47	0.10	-5.34	-4.13
11.	-1.00	-1.57	-1.06	-4.24	-0.81	0.26	-3.31	-3.09
12.	-2.31	-1.73	-1.15	-5.01	-2.49	0.03	-7.46	-12.07
2021. 1.	-3.66	-3.46	-2.33	-9.98	-3.72	0.25	-12.73	-16.97
2.	-1.76	-2.45	-2.04	-4.89	-1.54	0.56	-7.03	-6.20
3.	1.18	-2.15	-1.46	-5.91	2.27	1.43	4.81	3.39
4.	2.45	-1.16	-0.66	-3.58	3.65	2.16	8.84	3.09
5.	2.30	-0.34	-0.25	-0.92	3.18	2.46	6.89	-1.43
6.	2.15	0.23	0.52	-1.28	2.78	2.21	7.99	-8.17
7.	2.00	-0.02	0.29	-1.47	2.65	2.48	7.78	-11.98
8.	1.91	-0.44	-0.09	-2.12	2.67	2.22	6.87	-6.66
9.	2.48	-0.95	-0.47	-3.42	3.60	3.56	7.47	-9.05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 선행연구 검토

다음으로 코로나19가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가. 국내 연구

#### 1) 황선웅(2020)

황선웅(2020)의 연구는 코로나19가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세부 유형 간에 얼마나 상이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2020년 4월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직장인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항종속 변수 선형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각 노동자의 고용형태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상실, 무급휴업 강요, 소득감소 확률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추가적으로 일자리 상실 여부, 무급휴업 강요 여부, 소득 감소 여부, 성별, 결혼 상태, 연령대, 학력, 지역, 직업 등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두 배가량 높은 확률로 일자리 상실, 무급휴업, 소득 감소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시휴직 및 해고 등 경제활동상태 자체를 취업자에서 실업자로 변화시키는 외연적 조정 및 업무량 축소, 노동시간 단축 등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이들에 대한 내연적 조정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가 비정규직(취약계층)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비정규직(임시직, 시간제, 비정형) 내에서는 비정형 노동자가 제일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상실 또는 무급휴업을 겪지 않은 일자리 유지자 내에서도 비정규직의 소득 감소 확률이 정규직보다 높았으며, 프리랜서, 특수고용 등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특별 업종 근무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업무량 감소로 인해 소득 감소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2) 이용관(2021)

이용관(2021)의 연구는 코로나19가 임금근로자의 노동시간과 임금에 미친

영향을 고용형태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7~2020)」를 활용하여 정규직을 비교집단으로 각 비정규직 형태의 노동시간과 임금의 변화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영향 전후인 2019년 이전과 2020년으로 나눠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였으며,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비기간제/기간제, 파견, 용역, 특수형태, 일일, 가정 내), 여성, 연령, 학력, 혼인상태, 근속연수, 부업 여부, 노동조합, 주당 노동시간, 시간당 평균임금, 주52시간 근무제 등 정보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시간의 격차가 확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비정규직의 노동공급 기회가 축소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고용형태별로 보았을 때, 코로나19 시기 대부분의 비정규직 형태의 노동시간은 정규직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노동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 특수형태, 일일근로자 등은 상대적으로 노동시간도 짧을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성도 낮아 코로나19로 소득 창출의 기회가 낮아졌음을 보였다. 또한 신규인력의 경우 정규직보다 비기간제, 시간제, 일일근로자만 노동시간이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단기간 고용된 신규인력들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은 노동시간이 짧은 시간제 근로자와 일일 및 가정 내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시간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 일일근로자는 월평균 임금 또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이종관(2020)

이종관(2020)의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실제 취업자 수 감소 효과를 추정하였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서비스 일자리의 충격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합성대조방법을 취업자 수 증감 추이에 적용하였으며, 2020년 2월 이후 실제 취업자 수 증감과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취업자 수 증감의 차이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석하였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사라진 일자리 수는 2020년 4월과 9월 각각 108만개, 83만개로 추정되며, 사라진 일자리의 대부분은 '지역서비스 일자리'로 나타났다. 4월 이후 '지역서비스 일자리'의 회복세가 나타나지만, 9월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일자리의 증가 추세가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교역이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교역산업'에서도 고용 충격이 점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제조업에서 2020년 9월까지 약 16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식산업에서는 약 7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하였다. 교역산업에서의 일자리 감소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더라도 장기적으로 고용승수 경로를 통해 지역서비스 일자리가 감소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 4) 함선유 외(2021)

함선유 외(2021)의 연구는 코로나19에 따른 청년층의 고용률 감소가 실직에서 기인하는지, 신규 채용의 감소에서 기인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분석하고자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34세 이하 청년층의 노동시장 경험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코로나19의 청년 노동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 청년층과 노년층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은 1차 유행기 당시 고용률이 2.6%p 감소하여 제일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청년층은 2.3%p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청년층 내 세부 집단별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자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축소의 영향을 받았지만, 재학생들은 단기적인 고용률 하락만 나타났다. 남성 졸업자는 고용률 감소 영향이 1차 유행 이후 장기적으로 지속되었지만, 여성 졸업자의 경우는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받은 차이가 나타났다.

#### 5) 황수빈 · 박상순(2021)

황수빈 · 박상순(2021)의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상황

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별 자료를 통해 노동시장 미스매치 지수를 시산하고 코로나19 이후 미스매치 상황 및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였다. Sahin et al.(2014)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산업별 매칭효율성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한 산업 미스매치 지수를 계산하고, 지수 추정치를 통해 산업별 인적자원 배분의 효율적인 수준을 계산하여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계산하였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실업 자료와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의 빈일자리 자료를 이용하여 미스매칭 지수를 산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스매치 지수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하락하였으나 2020년 큰 폭으로 상승(2018~2019년 6.4 → 20년 4/4분기 11.1)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지수 상승은 코로나19의 경기충격이 대면서비스업 등 일부 산업에 집중되면서 산업 간 구인·구직 격차가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유희노동력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매칭효율성이 크게 하락하였고 이는 구직단념자가 증가한 데서 주로 기인하였음을 보였다. 또한 중숙련 일자리가 줄고 저숙련 일자리가 늘면서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미스매치 실업률은 2020년 4/4분기 0.6으로 나타났으며, 산업 간 비효율적인 인력고용이 재조정될 경우 노동생산성을 최대 1.9%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건설, 과학기술, 사업서비스 등은 매칭 효율성이 높았으나 운수, 금융보험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높고 건설업 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6) 박창현·유민정(2020)

박창현·유민정(2020)의 연구는 노동시장의 충격을 기간별·산업별로 수요 충격과 공급충격으로 분해하여 측정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2011년 1월~2020년 4월 중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산업별 종사자 수, 평균 근로시간 및 1인당 임금 통계를 활용하여 임금 및 총노동시간을 변수로 포함하는 노동수요함수와 노동공급함수로 구성된 베이지안 VAR(BVAR) 모형을 설정 및 추정하여 노동수요충격 및 노동공급충격을 식별하였다. 주요 연

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부정적 노동수요·공급충격이 발생하여 노동시장이 교란되었으며, 총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노동수요충격의 기여도는 2020년 2~4월 중  $-0.53\%p$ 로 2015~2019년  $-0.1\%p$ 에 비해 상승하였다. 공급충격 또한  $-1.22\%p$ 로  $-0.56\%p$ 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음식, 예술·스포츠·교육 등 대면 접촉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를 수요·공급하는 업종에서 노동수요·공급충격이 크게 발생하였으며, ICT, 제조업 등에서는 부정적인 충격이 약하게 나타났다. 각 충격에 대한 총근로시간의 반응 경로를 분석하였을 때, 노동수요충격의 부정적 영향은 오래 지속되는 반면, 노동공급충격의 영향은 단기에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특기할 만하다. 코로나19가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화된 것은 산업별 제품·서비스 수요 형태, 노동공급 유형 등이 차이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재택근무가 어렵고 대면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업종은 노동수요·공급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며, 구직활동이 줄어 노동공급충격도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해외 연구

### 1) Beland et al.(2020)

Beland et al.(2020)의 연구는 코로나19에 따른 미국의 단기적 현황 및 재택명령에 따른 실업률과 임금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Integrated Public Use Micro Samples(IPUMS)의 인구조사 자료와 COVID-19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감염 노출 등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 Occupational Information Network(O\*NET)를 활용하여 설문조사 자료로 이용하였다. 재택명령(Stay-At-Home)에 따른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이중차분법을 실시하였으며, 강건성 분석을 위해 합성대조방법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재택명령으로 노동 참여율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명령으로 실업률은  $3.8\%p$ 가 증가한 반면 노동 참여율은  $2.5\%p$  감소하였으며, 시급과 근무시간

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재택명령으로 인해 나타난 실업률은 인구학적인 요인에 따라 이질적으로 여성, 청년, 미혼, 히스패닉, 저학력일수록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격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할 수 있는 경우보다 높은 실업률을 보였다.

### 2) Adams-Prassl et al.(2020)

Adams-Prassl et al.(2020)의 연구는 미국, 영국, 독일의 노동시장이 코로나19로 받은 영향을 분석하였다. 미국, 영국, 독일의 개인 단위 표본을 얻기 위해 각 나라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나라마다 3월과 4월, 두 번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자들의 직업적 현황, 월급, 시간 활용, 미래에 대한 기대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으며, 실증분석을 통해 어떠한 요인이 실업 등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력, 성별, 정규직·비정규직 등 개인별 특징 및 직업적 특징이 실업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직업을 잃지 않을 확률이 높으며, 중요한 업무(Secure work)를 담당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직업을 잃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국에서는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실업 확률이 17%p 낮았으며, 미국과 독일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미국과 영국의 여성은 유의미하게 더 실직한 반면, 대학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은 직업을 잃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미국과 영국의 경우 재택을 할 수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남성이 비해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Lee et al.(2021)

Lee et al.(2021)의 연구는 코로나19가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을 월별 인구조사자료(Current Population Survey, CP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세부터 65세까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업률, 무직실업률, 리콜 실업률 등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성, 인종, 나이, 학력, 산업, 거주지역 등에 대한 개인적 특성 및 산업에 따른 효과를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자들의

직업적 현황, 월급, 시간 활용, 미래에 대한 기대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으며 실증분석을 통해 어떠한 요소가 실업 등에 영향을 주는지 제시하였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은 여성일수록, 히스패닉이나 아시아인일수록(백인, 흑인에 비해),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어린 근로자일수록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레저·호텔 등 서비스 산업이 가장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지역별 고용조사 미시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고용조사」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고용 동향을 통한 집계데이터로는 분석하기 어려운 코로나19가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을 보다 심층적이며 다각도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1년 상반기~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시기로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가 ① 여성 ② 연령별 ③ 교육 수준별-연령별 취업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이고자 하는 요인 이외의 기타 요인들은 모두 통제하여 특정 요인으로 인한 효과를 식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코로나19가 여성의 취업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취업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학력 수준, 연령별 요인, 지역별 요인, 산업별 요인, 시계열 추세 등)들은 모두 통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타 요인에 대한 통제는 「고용 동향」상의 집계 데이터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에 대한 엄밀한 통제를 통한 분석이 본 연구의 기여라고 할 수 있다.

#### 가. 코로나19가 여성의 취업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친 영향

코로나19가 여성의 취업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타 요인들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타 요인으로 교육 수준, 연령별 효과, 지역별, 산업별, 시점별 요인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 수준은 8개의 분류(무학/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대학교/대학원(석사)/대학원(박사))로 구분하였으며, 연령대는 7개의 분류(19세 이하/20~24세/25~29세/30대/40대/50대/60대)를 활용하여 구분하였다. 전체 인원 중 취업자 수(고용률)는 다음의 식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취업자 수/경제활동 인구의 비율과 경제활동참여율(경제활동 인구/전체 인원)로 분해가 가능하다.

$$\frac{\text{취업자 수}}{\text{전체}} = \frac{\text{취업자 수}}{\text{경제활동 인구}} \times \frac{\text{경제활동 인구}}{\text{전체}} \quad \text{식 (V-1)}$$

〈표 V-5〉 코로나19가 여성의 취업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친 영향

구분	취업 여부 (0 or 1)			경활 참여 여부 (0 or 1)
	(1)	(2)	(3)	(4)
Post_COVID*여성D	-.1019*** (.0072)	.0169*** (.0033)	.0147*** (.0204)	-.1195*** (.0068)
Fixed Effects				
연도*상하반기*광역시도	Y	Y		Y
연도*상하반기*광역시도 *산업대분류			Y	
연령*교육 수준	Y	Y	Y	Y
경제활동인구	전체	비경활제외	비경활제외	전체
연령	전체	전체	전체	전체
Obs.	5,772,505	3,875,547	3,793,515	5,772,505
Adj. R-squared	.2459	.0023	.0160	.2570

주: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표 V-5〉는 코로나19가 여성의 취업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표이다. (1)열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여성의 취업확률이 동일한 지역(광역시도), 동일 시점(연도별-상하반기별), 동일한 연령대, 동일한 교육 수준의 남성과 비교하여 10%p 더 크게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경제활동 참여 인구에 제한하여 분석한 결과, ((2), (3)열) 오히려 코로나19 발생 이후 여성의 취업확률은 1.7%p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별(대분류) 요인을 추가로 통제한 결과((3)열) 여성의 취업확률에 대한 추정 계수값이 작아지지만(0.15%p)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으로 추정되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변화를 보여주는 (4)열의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코로나19 이후 모든 조건(연령, 교육 수준, 지역, 시점)이 동일한 남성과 비교하여 약 12%p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열과 (4)열의 비교를 통해, 코로나19 시기 여성의 취업확률 감소는 대부분 여성이 자발적 또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경제활동 참여를 포기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및 취업률 하락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이 발생하여 육아 및 양육 부담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한 요인일 가능성이 높아, 이를 연령대별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한다.

〈표 V-6〉 코로나19가 여성의 취업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친 영향: 30대

구분	취업 여부 (0 or 1)			경활 참여 여부 (0 or 1)
	(1)	(2)	(3)	(4)
Post_COVID*여성D	-.2753*** (.0177)	.0121 (.0033)	.0013*** (.0004)	-.2939*** (.0169)
Fixed Effects				
연도*상하반기*광역시도	Y	Y		Y
연도*상하반기*광역시도 *산업대분류			Y	
교육 수준	Y	Y	Y	Y
경제활동인구	전체	비경활제외	비경활제외	전체
연령	30대	30대	30대	30대
Obs.	1,022,049	757,073	740,208	1,022,049
Adj. R-squared	.1596	.0054	.0180	.1766

주: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표 V-6〉은 동일한 분석을 30대 여성에 한정된 결과를 보여준다.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 30대 여성의 취업확률이 모든 조건이 동일한(연령, 교육 수준, 지역, 시점) 남성과 비교하여 약 27.5%p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2)열의 결과에 따르면 이를 경제활동 참여 인구에 제한하여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여성의 취업확률은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별 요인을 추가로 통제한 결과(3)열)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확률이 0.13%p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활동 참여 여부와 여성의 취업 가능성 간의 상관관계로 인한 자기 선택 편향(selection bias)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예를 들어 취업확률이 높은 여성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1)열과 (4)열의 비교를 통해, 코로나19 시기 30대 여성의 취업률 대폭 감소는 대부분 여성이 자발적 또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경제활동 참여를 포기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4)열의 추정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여러 요인을 통제한 후 동일 조건 남성과 비교하여 약 2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30대 여성의 취업확률 감소 27.5%p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 코로나19가 여성의 취업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친 영향: 40대

구분	취업 여부 (0 or 1)			경활 참여 여부 (0 or 1)
	(1)	(2)	(3)	(4)
Post_COVID*여성D	-.1586*** (.0129)	.0175*** (.0044)	-.0008** (.0004)	-.1773*** (.0126)
Fixed Effects				
연도*상하반기*광역시도	Y	Y		Y
연도*상하반기*광역시도 *산업대분류			Y	
교육 수준	Y	Y	Y	Y
경제활동인구	전체	비경제활동외	비경제활동외	전체

〈표 V-7〉의 계속

구분	취업 여부 (0 or 1)			경찰 참여 여부 (0 or 1)
	(1)	(2)	(3)	(4)
연령	40대	40대	40대	40대
Obs.	1,338,896	1,070,636	1,055,100	1,338,86
Adj. R-squared	.1149	.0049	.0140	.1222

주: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표 V-7〉은 동일한 분석을 40대 여성에 한정하여 결과를 보여준다.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 40대 여성의 취업확률이 모든 조건이 동일한(연령, 교육 수준, 지역, 시점) 남성과 비교하여 약 15.9%p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2)열의 결과에 따르면 이를 경제활동 참여 인구에 제한하여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여성의 취업확률은 1.75%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업별 요인을 추가로 통제한 결과(3)열)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확률이 오히려 0.08%p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열과 (3)열의 차이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동일 산업으로 비교 대상을 한정하는 경우 (3)열과 같이 결과가 바뀔 수 있다. (1)열과 (4)열의 비교를 통해, 코로나19 시기 40대 여성의 취업률 대폭 감소는 대부분 여성이 자발적 또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경제활동 참여를 포기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4)열의 추정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4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여러 요인을 통제한 후 동일 조건 남성과 비교하여 약 17.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40대 여성의 취업확률 감소 15.9%p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8〉 코로나19가 여성의 취업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친 영향: 50대

구분	취업 여부 (0 or 1)			경찰 참여 여부 (0 or 1)
	(1)	(2)	(3)	(4)
Post_COVID*여성D	-.0708*** (.0137)	.0123** (.0055)	.0002 (.0003)	-.0815*** (.0133)

〈표 V-8〉의 계속

구분	취업 여부 (0 or 1)			경찰 참여 여부 (0 or 1)
	(1)	(2)	(3)	(4)
Fixed Effects				
연도*상하반기*광역 시도	Y	Y		Y
연도*상하반기*광역 시도 *산업대분류			Y	
교육 수준	Y	Y	Y	Y
경제활동인구	전체	비경제활동 제외	비경제활동 제외	전체
연령	50대	50대	50대	50대
Obs.	1,459,970	1,118,655	1,105,332	1,459,970
Adj. R-squared	.0917	.0067	.0170	.0960

주: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표 V-8〉은 50대 여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 50대 여성의 취업확률이 모든 조건이 동일한(연령, 교육 수준, 지역, 시점) 남성과 비교하여 약 7.08%p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2)열의 결과에 따르면 이를 경제활동 참여 인구에 제한하여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여성의 취업확률은 1.23%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업별 요인을 추가로 통제한 결과(3)열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열과 (4)열의 비교를 통해, 코로나19 시기 50대 여성의 취업률 대폭 감소는 대부분 여성이 자발적 또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경제활동 참여를 포기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4)열의 추정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5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여러 요인을 통제한 후 동일 조건 남성과 비교하여 약 8.1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50대 여성의 취업률을 감소 7.08%p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9〉 코로나19가 여성의 취업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친 영향: 20대

구분	취업 여부 (0 or 1)			경활 참여 여부 (0 or 1)
	(1)	(2)	(3)	(4)
Post_COVID*여성D	.0006 (.0226)	.0327** (.0166)	-.0004 (.0009)	-.0167 (.0221)
Fixed Effects				
연도*상하반기*광역시도	Y	Y		Y
연도*상하반기*광역시도 *산업대분류			Y	
교육 수준	Y	Y	Y	Y
경제활동인구	전체	비경활제외	비경활제외	전체
연령	20대	20대	20대	20대
Obs.	710,901	410,017	382,016	710,901
Adj. R-squared	.1233	.0118	.0370	.1416

주: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표 V-9〉는 20대 여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 20대 여성의 취업확률이 모든 조건이 동일한(연령, 교육 수준, 지역, 시점) 남성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열의 결과에 따르면 이를 경제활동 참여 인구에 제한하여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여성의 취업확률은 동일 조건 남성과 비교하여 3.27%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업별 요인을 추가로 통제할 결과((3)열)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4)열의 결과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참여율의 변화도 남성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여성의 취업확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여성의 취업확률은 동일 조건(지역, 학력, 연령) 남성에 비해 약 10%p 정도 감소하였으며 경제활동참여율은 12%p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대별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 30대 여성 취업확률 -27.5%, 경제활동참여율 -29%, 40대 여성 취업확률 -15.8%, 경제활동참여율 -17.7%, 50대 여성 취업확률 -7%, 경제활동참여율 -8.1%로 각각 나타났으며, 20대 여성의 경우는 남성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여성의 취업률 및 경제활동참여율 하락은 대부분 30~40대 여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및 육아 부담의 증가와 관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 나. 코로나19가 연령별 취업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친 영향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수준 및 성별의 차이, 지역적 요인 및 각 연령대별 기존의 시계열 추세 등을 모두 통제한 후 코로나19가 연령별 취업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도별-상하반기별-광역시도별 고정효과, 연도별-상하반기별-광역시도별-산업대분류별 고정효과를 통제하였으며, 교육 수준-성별로 인한 차이도 통제하였다. 또한 기존의 추세를 통제하기 위해 연령별-광역시도별 2차식의 시계열 추세를 고려하였다.

〈표 V-10〉은 20대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취업확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변화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0대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취업확률이 4.3%p 정도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와 같은 취업확률의 감소는 대부분 경제활동참가율 감소(-4.6%p)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여자 중 취업자 비율 또한 산업별 요인을 추가로 고려한 (3)열의 결과에 따르면 0.8%p 정도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V-10〉 취업확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정: 20대

구분	취업 여부 (0 or 1)			경활 참여 여부 (0 or 1)
	(1)	(2)	(3)	(4)
Post_COVID	-.0429*** (.0029)	.0062 (.0166)	-.0080*** (.0004)	-.0461*** (.0029)
Fixed Effects				
상하반기*광역시도	Y	Y		Y
상하반기*광역시도*산업			Y	
여성*교육 수준	Y	Y	Y	Y
Time Trend				
광역시도별(2차식)	Y	Y	Y	Y
경제활동인구	전체	비경활제외	비경활제외	전체
연령	20대	20대	20대	20대
Obs.	710,901	410,017	382,016	710,901
Adj. R-squared	.0401	.0094	.0215	.0459

주: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표 V-11〉 취업확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정: 30대

구분	취업 여부 (0 or 1)			경활 참여 여부 (0 or 1)
	(1)	(2)	(3)	(4)
Post_COVID	-.0159*** (.0023)	-.0012 (.0011)	-.0039*** (.0002)	-.0157*** (.0022)
Fixed Effects				
상하반기*광역시도	Y	Y		Y
상하반기*광역시도*산업			Y	
여성*교육 수준	Y	Y	Y	Y
Time Trend				
광역시도별(2차식)	Y	Y	Y	Y
경제활동인구	전체	비경활제외	비경활제외	전체
연령	30대	30대	30대	30대
Obs.	1,022,049	757,073	740,208	1,022,049
Adj. R-squared	.1620	.0049	.0107	.1793

주: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표 V-11〉은 30대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30대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취업확률이 1.6%p 정도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와 같은 취업확률의 감소는 대부분 경제활동참가율 감소(-1.57%p)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여자 중 취업자 비율 또한 산업별 요인을 추가로 고려한 (3)열의 결과에 따르면 0.4%p 정도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V-12〉 취업확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정: 40대

구분	취업 여부 (0 or 1)			경향 참여 여부 (0 or 1)
	(1)	(2)	(3)	(4)
Post_COVID	-.0112*** (.0017)	-.0024*** (.0007)	-.0024*** (.0002)	-.0096*** (.0017)
Fixed Effects				
상하반기*광역시도	Y	Y		Y
상하반기*광역시도*산업			Y	
여성*교육 수준	Y	Y	Y	Y
Time Trend				
광역시도별(2차식)	Y	Y	Y	Y
경제활동인구	전체	비경향제외	비경향제외	전체
Obs.	1,338,896	1,070,636	1,055,100	1,338,896
Adj. R-squared	.1184	.0046	.0079	.1256

주: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표 V-12〉는 40대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40대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취업확률이 1.12%p 정도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와 같은 취업확률의 감소는 대부분 경제활동참가율 감소(-0.96%p)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여자 중 취업자 비율 또한 산업별 요인을 추가로 고려한 (3)열의 결과에 따르면 0.24%p 정도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V-13〉 취업확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정: 50대

구분	취업 여부 (0 or 1)			경험 참여 여부 (0 or 1)
	(1)	(2)	(3)	(4)
Post_COVID	-.0046*** (.0017)	-.0014** (.0006)	-.0016*** (.0001)	-.0037** (.0016)
Fixed Effects				
상반기*광역시도	Y	Y		Y
상반기*광역시도*산업			Y	
여성*교육 수준	Y	Y	Y	Y
Time Trend				
광역시도별(2차식)	Y	Y	Y	Y
경제활동인구	전체	비경험제외	비경험제외	전체
Obs.	1,459,970	1,118,655	1,105,332	1,459,970
Adj. R-squared	.1184	.0064	.0091	.1004

주: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표 V-13〉은 50대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취업확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변화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50대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취업확률이 0.46%p 정도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와 같은 취업확률의 감소는 대부분 경제활동참가율 감소(-0.37%p)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여자 중 취업자 비율 또한 산업별 요인을 추가로 고려한 (3)열의 결과에 따르면 0.16%p 정도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끝으로 〈표 V-14〉는 60대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60대의 경우 전체 연령 중에 유일하게 코로나19 이후 취업확률이 0.87%p 정도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경제활동참가율도 증가(0.69%p)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활동참여자 중 취업자 비율은 0.1%p 정도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V-14〉 취업확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정: 60대

구분	취업 여부 (0 or 1)			경활 참여 여부 (0 or 1)
	(1)	(2)	(3)	(4)
Post_COVID	.0087*** (.0025)	.0025*** (.0009)	-.0010*** (.0002)	.0069*** (.0024)
Fixed Effects				
상하반기*광역시도	Y	Y		Y
상하반기*광역시도*산업			Y	
여성*교육 수준	Y	Y	Y	Y
Time Trend				
광역시도별(2차식)	Y	Y	Y	Y
경제활동인구	전체	비경활제외	비경활제외	전체
Obs.	768,315	492,963	486,551	768,315
Adj. R-squared	.1184	.0124	.0145	.1032

주: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령대별 시계열 추세, 시점별(상하반기)-지역별 고정요인, 성별-교육 수준별 요인을 통제한 후 연령대별 코로나19로 인한 취업 확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각 연령대별 취업확률의 변화를 정리하면 20대 -4.3%p, 30대 -1.6%p, 40대 -1.1%p, 50대 -0.5%p, 60대 +0.9%p로 각각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는 연령대별로 20대 -4.61%p, 30대 -1.57%p, 40대 -0.96%p, 50대 -0.37%p, 60대 +0.69%p로 각각 나타났다. 즉 20대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컸던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30대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60대의 경우는 기존의 상승 추세를 제거한 이후에도 코로나19 이후 취업확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 다. 코로나19가 교육수준별-연령별 취업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친 영향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가 교육수준별-연령별 취업 및 경제활동

참가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외 기타 요인을 시점별(상하반기)-지역별 고정효과를 통제하였으며, 학력 수준별 시계열 추세를 2차 식으로 통제하였으며, 성별 차이로 인한 효과도 추가로 통제하였다.

〈표 V-15〉 교육 수준별 취업 및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20대

구분	취업 여부 (0 or 1)		경찰 참여 여부 (0 or 1)
	(1)	(2)	(2)
Post_COVID			
고졸 이하	-.0399*** (.00653)	-.00998** (.00467)	-.0376*** (.00633)
전문학사	-.0379*** (.00592)	.000589 (.00435)	-.0427*** (.00570)
대학 이상	-.0343*** (.00373)	-.00133 (.00338)	-.0382*** (.00371)
Fixed Effects			
상하반기*광역시도	Y	Y	Y
여성	Y	Y	Y
Time Trend			
광역시도*교육 수준별(2차식)	Y	Y	Y
표본	전체	경찰	전체
연령	20대	20대	20대
Obs.	710,901	410,017	710,901
Adj. R-squared	.112	.011	.126

주: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표 V-15〉는 20대의 경우 교육 수준별로 취업 및 경제활동참가율 변화를 추정한 결과 값을 보여준다. (1)열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이고, (2)열은 경제활동참가자만을 대상으로 취업확률을 분석한 결과, (3)열은 경제활동 참여 여부를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대의 경우 고졸 이하 학력소지자의 취업확률이 코로나19 이후 약 4%p, 전문학사 소지자 3.8%p, 대졸 이상 3.4%p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졸 이하 학력소지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력계층에서는 취업확률 감소보다 더 큰 폭의 경제활동참가율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경제활동참여자 중에 취업확률은 고졸 이하 학력소지자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대 중에서 고졸 이하 학력소지자의 경우는 경제활동참여율도 하락하였으며 경제활동참가자들의 취업확률도 하락하여 전체적인 취업확률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6〉 교육 수준별 취업 및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30대

구분	취업 여부 (0 or 1)		경활 참여 여부 (0 or 1)
	(1)	(2)	(2)
Post_COVID			
고졸 이하	-.026*** (.00452)	-.004* (.0025)	-.0243*** (.0043)
전문학사	-.016*** (.00466)	-.0033 (.0024)	-.0143*** (.0044)
대학 이상	-.009*** (.0031)	.0015 (.0015)	-.0113*** (.0029)
Fixed Effects			
상하반기*광역 시도	Y	Y	Y
여성	Y	Y	Y
Time Trend			
광역 시도*교육 수준별(2차식)	Y	Y	Y
표본	전체	경활	전체
연령	30대	30대	30대
Obs.	1,022,049	757,073	1,022,049
Adj. R-squared	.157	.005	.173

주: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표 V-16〉은 30대의 경우 교육 수준별로 취업 및 경제활동참가율 변화를 추정한 결과 값을 보여준다. 30대의 경우 고졸 이하 학력소지자의 취업확률이 코로나19 이후 약 2.6%p, 전문학사 소지자 1.6%p, 대졸 이상 0.9%p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의 모든 학력계층에서 취업확률

감소 폭과 유사한 경제활동참가율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취업확률의 감소가 대부분 경제활동참가율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여자 중 취업확률은 30대의 경우 20대와 마찬가지로 고졸 이하 학력소지자의 경우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하락하였으며, 나머지 학력그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관측되지 않았다.

〈표 V-17〉 교육 수준별 취업 및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40대

구분	취업 여부 (0 or 1)		경찰 참여 여부 (0 or 1)
	(1)	(2)	(2)
Post_COVID			
고졸 이하	-.0158*** (.00273)	-.0029** (.00123)	-.0141*** (.00264)
전문학사	-.0110** (.00428)	-.0053*** (.00188)	-.0069* (.00411)
대학 이상	-.00681** (.00279)	-.0008 (.00110)	-.00619** (.00269)
Fixed Effects			
상하반기*광역 시도	Y	Y	Y
여성	Y	Y	Y
Time Trend			
광역 시도*교육 수준별(2차식)	Y	Y	Y
표본	전체	경찰	전체
연령	40대	40대	40대
Obs.	1,338,896	1,070,636	1,338,896
Adj. R-squared	.110	.005	.117

주: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표 V-17〉은 40대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40대의 경우 고졸 이하 학력소지자의 취업확률이 코로나19 이후 약 1.6%p, 전문학사 소지자 1.1%p, 대졸 이상 0.7%p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학력계층에서 취업확률 감소폭과 유사한 경제활동참가율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경제활동참여자 중 취업확률은 고졸 이하 및 전문학사

학력소지자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하락하였으며 대졸 이상 학력 그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관측되지 않았다.

〈표 V-18〉 교육 수준별 취업 및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50대

구분	취업 여부 (0 or 1)		경찰 참여 여부 (0 or 1)
	(1)	(2)	(2)
Post_COVID			
고졸 이하	-.0058*** (.00211)	-.0022*** (.000795)	-.00445** (.00207)
전문학사	-.00620 (.00582)	-.000840 (.00233)	-.00566 (.00562)
대학 이상	-.00407 (.00339)	.000329 (.00132)	-.00448 (.00328)
Fixed Effects			
상하반기*광역시도	Y	Y	Y
여성	Y	Y	Y
Time Trend			
광역시도*교육 수준별(2차식)	Y	Y	Y
표본	전체	경찰	전체
연령	50대	50대	50대
Obs.	1,459,970	1,118,655	1,459,970
Adj. R-squared	.088	.006	.093

주: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표 V-18〉은 50대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50대의 경우 고졸 이하 학력소지자의 취업확률이 코로나19 이후 약 0.58%p 감소하였으며, 전문학사 소지자 및 대학 이상 학위 소지자의 경우는 추정 결과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든 학력계층에서 취업확률 감소폭과 유사한 경제활동참가율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고졸 이하 학력소지자의 경제활동 참가율 감소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여자 중 취업확률 역시 고졸 이하 학력소지자 그룹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관측되었다.

〈표 V-19〉 교육 수준별 취업 및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60대

구분	취업 여부 (0 or 1)		경찰 참여 여부 (0 or 1)
	(1)	(2)	(2)
Post_COVID			
고졸 이하	.00975*** (.00269)	.00228** (.000963)	.00812*** (.00267)
전문학사	-.00315 (.0139)	.0129** (.00606)	-.0121 (.0137)
대학 이상	.0108 (.00754)	-.000976 (.00327)	.0114 (.00746)
Fixed Effects			
상하반기*광역 시도	Y	Y	Y
여성	Y	Y	Y
Time Trend			
광역 시도*교육 수준별(2차식)	Y	Y	Y
표본	전체	경찰	전체
연령	60대	60대	60대
Obs.	768,315	492,963	768,315
Adj. R-squared	.096	.013	.098

주: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끝으로 〈표 V-19〉는 60대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60대의 경우는 앞선 연령대별 분석에서 모든 연령층 중에 유일하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취업확률과 경제활동참여자가 증가한 연령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9〉는 60대의 이와 같은 취업률 및 경제활동참여율 증가를 학력 수준 별로 분해하여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추정 결과 값에 따르면 60대의 경우 60대의 경우 고졸 이하 학력소지자의 취업확률이 코로나19 이후 약 0.97%p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나머지 전문학사 소지자 0.3%p 감소, 대졸 이상 1%p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이 추정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경제활동참여율의 경우 고졸 이하의 경제활동참여율이 0.8%p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나머지 학력 계층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취업확률 및 경제활동참여율 증가가 나타난 60대에서의 증가 요인은 고졸 이하 저학력 소지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는 정책적으로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연령대별-학력 수준별 코로나19 이후 취업확률 변화를 정리하자면 20대 고졸 이하 -4%p, 전문학사 -3.8%p, 대졸 이상 -3.4%p, 30대 고졸 이하 -2.6%p, 전문학사 -1.6%p, 대졸 이상 -0.9%p, 40대 고졸 이하 -1.6%p, 전문학사 -1.1%p, 대졸 이상 -0.7%p, 50대 고졸 이하 -0.58%, 60대 고졸 이하 +0.97%인 것으로 각각 나타나, 저연령층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컸으며 저학력일수록 이와 같은 취업확률 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모든 연령-학력별 그룹 중에서 60대 고졸 이하 그룹에서만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취업확률 증가가 관측되었다.

#### 라. 실증분석 결과 정리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가 ① 여성 ② 연령별 ③ 연령별 교육 수준별 취업확률 및 경제활동참여율에 미친 영향을 다양한 기타 요인을 통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가 여성의 취업확률 및 경제활동참여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여성의 취업확률은 동일 조건(지역, 학력, 연령) 남성에 비해 약 10%p 정도 감소하였으며 경제활동참여율은 12%p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대별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 30대 여성 취업확률 -27.5%, 경제활동참여율 -29%, 40대 여성 취업확률 -15.8%, 경제활동참여율 -17.7%, 50대 여성 취업확률 -7%, 경제활동참여율 -8.1%로 각각 나타났으며, 20대 여성의 경우는 남성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여성의 취업률 및 경제활동참여율 하락은 대부분 30~40대 여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및 육아부담의 증가와 관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두 번째로 기존의 연령대별 시계열 추세, 시점별(상반기)-지역별 고정요

인, 성별-교육 수준별 요인을 통제한 후 연령대별 코로나19로 인한 취업확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추정한 결과 취업확률의 경우 20대 -4.3%p, 30대 -1.6%p, 40대 -1.1%p, 50대 -0.5%p, 60대 +0.9%p로 각각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는 연령대별로 20대 -4.61%p, 30대 -1.57%p, 40대 -0.96%p, 50대 -0.37%p, 60대 +0.69%p로 각각 나타났다. 즉 20대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컸던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30대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60대의 경우는 기존의 상승 추세를 제거한 이후에도 코로나 19 이후 취업확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령대별-학력 수준별 코로나19 이후 취업확률 변화를 정리하자면 20대 고졸 이하 -4%p, 전문학사 -3.8%p, 대졸 이상 -3.4%p, 30대 고졸 이하 -2.6%p, 전문학사 -1.6%p, 대졸 이상 -0.9%p, 40대 고졸 이하 -1.6%p, 전문학사 -1.1%p, 대졸 이상 -0.7%p, 50대 고졸 이하 -0.58%, 60대 고졸 이하 +0.97%인 것으로 각각 나타나,<sup>82)</sup> 모든 연령-학력별 그룹 중에서 60대 고졸이하 그룹에서만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취업확률 증가가 관측되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60대의 일자리 증가가 양질의 일자리 증가에 의해서 주도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 4. 코로나19 위기 이후 정부의 고용안정 정책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정부의 다양한 고용안정 정책을 정리하고 이상의 실증분석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보다 더 컸던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청년에 대한 고용보호 및 고용지원 정책을 정리하여 이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가. 고용안정 정책

코로나19 위기 발발로 추경편성 이전 2020년 2월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82) 50~60대 전문학사, 대졸 이상은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포함하여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였다. 1차 및 2차 조치를 통해 고용충격을 방지하고 기업의 고용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청년고용장려금, 직업훈련 등 관련 지원을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피해업체 대응 고용유지지원금을 제공하고 2020년 3월부터 휴업(휴직) 수당과 우선지원대상기업을 확대해(2.1만 → 7.0만명) 사업주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청년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하여 지원하였으며, 휴업에 따른 임금손실 등의 피해를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생활 안정자금을 확대 지급(0.1만명, 49억원)하였다.

2020년 4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고용안정 특별대책 및 기업안정화 지원 방안을 발표하여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자 지원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총 10.1조원의 고용안정패키지를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고용유지 자금 융자산업 신설 등 고용유지지원금 완화 및 저변을 확대하였으며(52만명, 0.9조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취약계층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 생활안정 긴급지원(113만명, 1.9조원),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등 저소득층·청년 등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지원(55만명, 3.6조원), 구직급여·직업훈련 등 실업자 지원 확대(66만명, 3.7조원)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일자리 보전을 위해 75조원+ $\alpha$ 를 투자하여 피해기업 지원체계를 보강하였다.

또한 2020년 5월 고용보험 밖의 취업자 중 소득이 낮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하여 특고·프리랜서, 영세사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소득을 지원하고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한 경우에 한해 월 50만원씩 3개월분의 소득을 지원하며, 희망자에게 고용센터 연계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자 2020년 7월 90%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 특례기간을 9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발표하여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에 대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지원 수준 9/10를 당초 4~6월에서 2020년 9월까지 연장하였다.

제3차 추경에서는 고용안정 특별대책 후속조치로 재직자 고용유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업 지원의 4대 분야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재직자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0.9조원)의 지원 수준을 상향하였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0.6조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및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가 포함되었다.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변화를 반영하여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청년·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업 지원에서는 구직급여 규모와 실업자 직업훈련을 확대하였다.

2020년 9월 발표한 제4차 추경 ‘긴급피해지원패키지’에는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사업이 포함되어 발표되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및 미수혜자 특고·프리랜서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일시 지급하였으며, 채용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취업여건을 감안해 총 20만명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2021년 3월 제1차 추경을 통해서 긴급 고용대책(2.8조원)을 마련, 기정예산 등을 활용하여 피해지원패키지의 고용지원(1.8조원)을 추진하였다. 긴급 고용대책은 크게 고용유지 지원, 청년·중장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근로가구 돌봄 및 생활안정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다(81만명).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집합제한 금지업종 90% 특례지원(24.2만명, 2,033억원)을 3개월 연장하고, 휴업·휴직수당 용자(금리 1.0%)사업은 6개월 연장(417억원)하였으며, 청년·중장년·여성 3대 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수요가 큰 5대 분야(디지털, 문화, 방역·안전, 그린·환경, 돌봄·교육)에 총 27.5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지원되었다. 기업수요 맞춤형 신기술 훈련 및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훈련 배우처 지원, 지원대상을 4만명 확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제공, 구직단념 청년 적극 발굴 및 기존 고용프로그램 연계, 고졸청년·경력단절 여성 특화 지자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신설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이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축근로, 유연근무 등 활성화 인센티브 확대, 가족돌봄휴가 장려 및 돌봄비용 지원, 저소득 근로자·특고의 생활자금 저리융자 확대와 생계비 용자 규모가 확대되었다.

2021년 7월에 확정된 제2차 추경에서 고용 및 인생안정 지원에는 기정예산과 고용·청년 대책 중복을 제외하고 총 2.5조원을 새로 투입하였다. 고용 및 인생안정 지원은 크게 고용조기회복지원,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문화·예술·관광업계 활력 제고,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으로 이뤄졌다. 고용조기회복지원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1.5만명), SW인력양성(1만명),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기간 3개월 연장(8만명) 등이 포함되었으며(0.8조원),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에는 직업계고·전문대생 자격증 취득비용 50만~70만원 지원, 청년 전세임대주택 5천호 추가 공급 등(1.7조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여행·공연·체육 일자리(1.1만명), 프로스포츠·영화·체육·통합문화이용권 등 소비쿠폰·배우처 4종 발행을 실시하였으며(0.3조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소상공인 긴급자금 6조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법인택시·버스기사 80만원 한시 지원(0.7조원) 등을 추진하였다.

#### 나. 청년고용 지원정책

다음으로 정부의 고용지원 정책 중에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정리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악화로 정부는 2020년 5월 20일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10만명), 취약계층 공공일자리(30만명), 청년 디지털 일자리(5만명), 청년 일경험 지원(5만명), 중소·중견 기업 채용보조금(5만명) 등 약 55만개 일자리를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

할 계획으로 총 3조 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지원사업은 청년·여성, 실직자 등 고용 취약계층 대상 주 15~40시간 최대 6개월 이내 근무와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며,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은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 등을 우선 선발하여 따릉이 방역단, 골목상권 회복지원 등 사업에 주 15~30시간 근로조건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서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나 단체에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사업을 통해 이직한 구직자를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채용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외에 정부는 구직활동지원금, 해외취업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청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코로나19 대응 내용을 발표하였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은 지원 인원을 기존 5만명에서 10만명으로 확대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사업주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된 청년 공제 재가입 취업 기간과 휴업으로 인한 납입 중지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였고, 재택근무 및 20시간 미만 근로시간 단축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였다.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2020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기존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으로, 2020년 기준 179개 과제 16조 9천억원에서 2021년에는 270개 과제 22조여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서는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이라는 목표 아래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을 3대 원칙으로 삼고,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에 정책을 마련하였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2021년도 55.5만 구직자 지원 및 청년창업에 대한 전 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고, 주거 분야에서는 2025년까지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69만호 등 27만 3천호를 공급(대학생 기숙사 3만호 포함)하여 이를 통해 청년이 거주하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를 1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2022년부터 저소득층 청년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 추진 및 혁신공유대학 48개교 지정을 통해 미래사회 선도인재 10만명을 양성하고자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희망저축계좌 신설로 2025년까지 청년 10만 명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의 권리 보장과 정책 참여를 위해 정부위원회에 청년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통합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1년 3월 고용노동부 장관은 맞춤형 고용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 5조 9천억원, 104만명 규모의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2020년 수립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이 포함된 기존 정책에 1조 5천억원, 24만 6천명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2021년 계획을 이행할 예정이다. 당초는 4.4조원, 79.4만명 규모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일자리 급감과 체감실업률이 급증하고 고용여건 변화로 청년 구직애로가 가중됨에 추경을 통해 투자액과 대상을 확대하였다. 청년들에게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버팀목을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더 많은 일자리, 능력 개발, 맞춤형 고용지원,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총 네 가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 다. 여성고용 지원정책

코로나19 발발 이후 2020년 3월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긴급조치의 일환으로 자녀 긴급돌봄을 위한 지원정책을 발표하였다. 자녀 긴급돌봄 지원 정책에는 긴급보육,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무제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과 휴원·휴교, 등교·등원 중지 조치 장기화로 동년 11월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연장하였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중소기업(1인당 15일 이내) 및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1인당 10일 이내)에게 1일 5만원씩 지원하는

정책이다. 당초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2021년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추경에 420억원을 반영하여 지속하여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여성고용의 취약성이 지속되어 일자리 창출 등 고용위기 긴급대응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보를 위해 2021년 3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발 여성 고용위기 극복 및 포용적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코로나19 위기 여성일자리 회복과 고용 유지, 미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와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라는 두 목표를 두고 5개의 추진 전략과 14개의 핵심 과제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공공·민간 여성 일자리 확대 ②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취·창업 지원 강화 ③ 돌봄 및 고용유지 지원 ④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⑤ 여성 고용서비스체계 내실화 및 거버넌스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여성고용의 회복을 위해 돌봄, 디지털, 안전, 환경 등 향후 서비스 수요가 확대될 분야에서 5만 7천여 개 일자리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2만개를 생산을 계획하였으며 2021년 7월 제1차 중앙-지방 여성고용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점검하고 지역별 여성고용 현황 및 시도별 여성고용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후 2021년 3월 11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경력단절여성 범부처 통합취업지원 서비스’를 시행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특허청, 고용노동부 등 8개 중앙부처가 올해 총 1,600명의 경력단절여성에게 부처별 특성에 맞는 전문훈련과 이후 인턴 채용 및 취업 연계까지 사후관리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 5. 소결

본 연구에서는 우선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를 이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하였다. 「고용동향」 수치에 의하면 고용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의 성장률 추세를 고려하는 경우 코로나19가 고용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충격이 일시적

충격이 아닌 영구적 충격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실업률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별로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등 대면서비스업의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 취업자 수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취업자 수 감소의 충격이 소규모 사업체에 집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을 살펴본 결과 임금근로자의 경우 상용직보다는 임시직, 임시직보다는 일용직근로자의 타격이 컸으며 이후 고용시장 회복에 따른 추이도 일용직근로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다수의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황선웅, 2020; 이용관, 2021), 시간제 및 일일근로자(이용관, 2021)가 정규직근로자보다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면서비스업(이종관, 2020; 황수빈 외, 2021; 박창현·유민정, 2020; Lee et al., 2021)의 타격이 타 업종보다 큰 결과도 다수 제시되었다. 연령대별로 고용시장의 충격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고용이 타 연령층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함선유 외, 2021). 또한 재택근무의 가능 여부에 따라서 고용에 미친 충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택근무가 가능한 종사자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Beland et al., 2020; Adams-Prassl et al., 2020).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가 ① 여성 ② 연령별 ③ 연령별 교육 수준별 취업확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친 영향을 다양한 기타 요인을 통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가 여성의 취업확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여성의 취업확률은 동일 조건(지역, 학력, 연령) 남성에 비해 약 10%p 정도 감소하였으며 경제활동 참여율은 12%p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대별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 여성의 취업률 및 경제활동참여율 하락은 대부분 30~40대 여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및 육아부담의 증가와 관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두 번째로 기존의 연령대별 코로나19로 인한 취업확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추정한 결과,

20대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가장 컸던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30대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60대의 경우는 기존의 상승 추세를 제거한 이후에도 코로나19 이후 취업확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령대별-학력 수준별 코로나19 이후 취업확률 변화를 모든 연령-교육 수준별 그룹 중에서 60대-고졸 이하 그룹에서만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취업확률 증가가 관측되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60대의 일자리 증가가 양질의 일자리 증가에 의해서 주도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키고자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청년 및 여성의 고용보호 및 지원을 위해 보다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정부의 예산 편성 및 향후 정책 방향에 있어서 모든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60대만 코로나19의 고용시장 충격에서도 취업확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며, 60대 중에서도 고졸 이하 저학력 근로자의 고용지표만이 개선된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통한 고용지원이 노년층, 그리고 이들 중에서도 저숙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 타 계층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았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청년과 여성에 대한 지원으로 일부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 VI. 위기대응 및 지속가능한 조세재정정책 방향

---

### 1. 2021년 위기대응 진단과 2022년 이후 구조적 재정위험 평가

#### 가. 최근 재정국면 및 전망

IMF(WEO, 2021. 10b.)의 경제 전망에서는 2021년 들어 처음으로 세계 경제 전망을 소폭 하향(7월 대비 0.1%p 하락한 5.9%) 조정하여 발표하였다.<sup>83)</sup> 주요국들은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경제회복 노력 이후 2021년 2사분기에 정점을 이룬 바 있다. 이어 3사분기 이후 경제 반등을 보이면서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는 보이나, 델타변이의 급속한 확산과 팬데믹 지속이 이어질 것으로 나타나 선진국들의 전망치는 지난 7월 전망치보다 하향 조정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2021년은 4.3% 증가세가 그대로 유지된 수치로, 2022년치는 0.1% 낮춘 3.3%로 전망하였다.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 확대, 수출 호조 등으로 3사분기에도 전체적인 경제회복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2020년 겨울 전망 당시보다 2020년 4사분기 결과치가 좋았기 때문이며, 이후 백신 공급, 대외무역 규모 증가세 등을 반영한 것이다. IMF가 지난 7월 발표한 수정경제전망(WEO update)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4.3%로 0.7%p, 2022년 3.4%로 전망하며 기존보다 0.6%p 상향 조정한 바 있다. 2021년 9월 기준 OECD 가을 경제 전망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2022년 경제성장 전망을 2.9% (기존 2.8%)로 보았고, 2021년 경제성장 결과를 약 4.0%(기존 3.8% 전망)로 0.1%p 내외 상향 조정하여 발표하였다. 참고로 세계경제 전체의 경제성장률을 IMF(WEO, 2021. 10b.)는 2021년 5.9%, 2022년 4.9%로 OECD(2021. 9.)는

---

83) IMF(WEO, 2021. 10b.), "World Economic Outlook(October 2021)," 2021. 10.; 『연합뉴스』, 「중시, 환율, 채권 트리플 약세 멈출까.. 불안 요인 해소가 관건」, 2021. 10. 10., 보도자료.

2021년 5.7%, 2022년 4.5%로 전망하였다.<sup>84)</sup>

OECD(2021. 9.)는 선진국들의 경제성장 추이에서 2021년 2사분기를 기점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310조원 규모 금융 및 재정지원으로 인하여 2021년 1사분기에 위기 직전 GDP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sup>85)</sup>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산업별 고용격차가 여전히 심각하고,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 회복이 더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각국의 재정책대 기조를 2021년까지는 유지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sup>86)</sup> 특히 산업별 고용격차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저성장과 디지털 전환 등으로 약화가 예견되었는데, 위기로 인하여 대면 대 비대면 격차 확대가 더욱 고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앞으로 금융 및 재정정책이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이러한 고용격차 완화, 고용전환 대응 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기회복세 유지로 세입확대 요인도 존재하나 재정지출 증가요인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에, 추가적인 정부 개입이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둘 경우 선진국들의 적자재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이후 선진국들의 평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sup>87)</sup> 120% 수준까지 증가하였고 이 수준이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채무 증가속도는 현재 수준 자체는 높지 않지만, 인구구조와 재정제도 경직성으로 인하여 증가 추이는 가장 빠른 국가이다. OECD 전망(2021. 9.)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를 예상하였다. 유로지역의 평균 공공부채 규모는 2026년 GDP의 92% 수준으로 감

---

84) 이들 중 G20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기존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된 나라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으로 기존 경제 하락폭이 컸던 유럽 국가들로 유로 전체 평균이 기존 전망치보다 약 1%p 증가할 것으로 수정되었다. 미국과 영국은 기존 전망치보다 0.5~0.9%p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Keeping the recovery on track”; OECD,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2021. 9., p. 4, Table 1. 「세계경제전망치 결과」; IMF(WEO 2021. 10b.), “World Economic Outlook,” 2021. 10, 결과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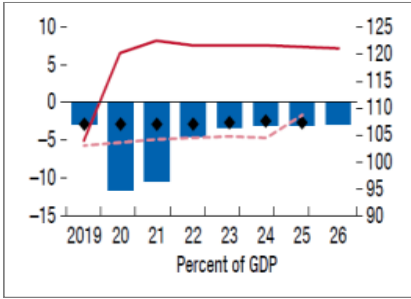
85) 관계부처 합동,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보도자료, 2021. 6., p. 1.

86) IMF, *Fiscal Monitor*, 2021. 4.

87) “Average government gross debt to GDP rat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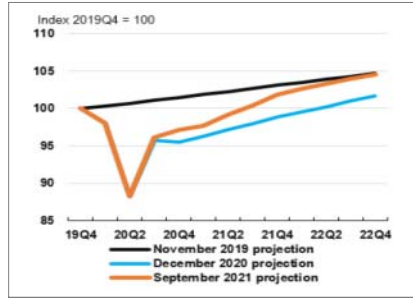
소할 것이지만, 한국과 미국은 중기적으로 부채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sup>88)</sup>

[그림 VI-1] IMF 선진국들의 GDP 대비 국가부채 및 수지 전망



자료: IMF, *Fiscal Monitor*, 2021. 4. p. 2.

[그림 VI-2] G20 경제회복 결과 및 전망치



자료: OECD,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2021. 9., Figure 10., p. 13.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이 직면한 재정과제는 ‘채무증가 리스크’와 ‘재정지원 축소로 불균등 리스크’ 간의 균형을 맞추는 단기 및 중기 재정프레임워크 설정이다. 재정투입의 단기적인 목적은 불평등 소득 및 불균등 산업 간의 경제지원에 있으며, 중장기적 방향은 경기회복 가속화를 통한 재정적자 폭 감소, 즉 구조적인 선순환 구조 건설에 있다. IMF(2021. 4.)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막대한 재정투입은 심각한 경제 위축, 일자리 감소, 사회적 비용 절감 등 경제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한편 2021년 8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경기정상화 시그널을 보인 바 있으며, 10월 ‘금리 동결’ 결정 이후 향후 경제상황에 따른 통화정책 조정 여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sup>89)</sup> 통화당국의 이러한 결정은 경기회복세의

88) IMF, *Fiscal Monitor*, 2021. 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제기구 주요보고서 요약」, No. 3, 2021, p. 6.

89) 한국은행,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0.75% 동결」, 10. 12.;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 한국은행,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10.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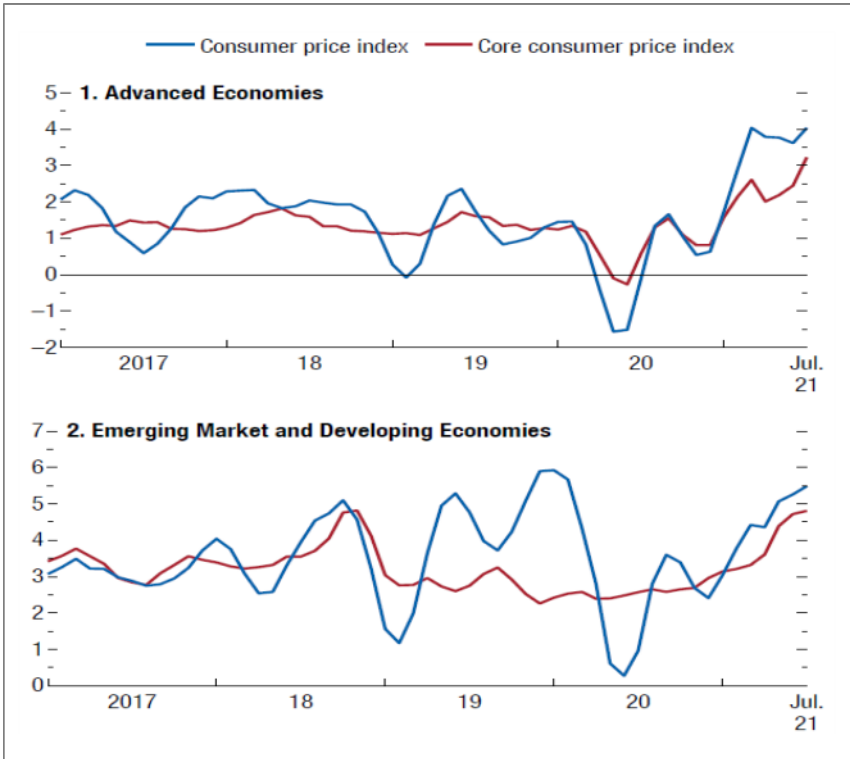
빠른 둔화로 인한 고용불안 및 불평등 심화 요인이 여전히 상존하는바,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조절 여부에 대해서는 경제상황 추이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재정당국은 이에 대해 2022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2년까지 확장 기조를 유지하고, 2023년 이후 경제회복 추이에 맞추어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재정총량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통화당국은 빠르면 2021년 11월, 재정당국은 2023년 이후의 재정긴축 의사를 밝힌 것인데, 2021년 10월 기준으로는 부채리스크 속도 조절은 22년 상반기 경기회복 정도에 따라 재정기조 전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sup>90)</sup>

2022년이 중요한 정책판단의 시기일 것으로 본 이유는 팬데믹 상황이 아직 종식되지 않고 있으며, 2021년 3분기 이후 에너지가격 급등, 인플레이션 압박, 환율 인상, 고용불안 등의 경제불안 요소가 202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불확실성 요소 중 현재로서는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증가세가 언제까지 이어지며, 경제회복에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저물가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었던바, 이번에 맞이한 인플레이션 위험은 선진국 경제들의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테이퍼링 여부 및 속도, 중국 리스크,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공급망 회복 속도가 늦어지고 있어서 경제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up>91)</sup> 백신 공급과 위드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세계경제 회복이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성장 경로와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긴급한 금융 및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90) 기획재정부, 「2022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p.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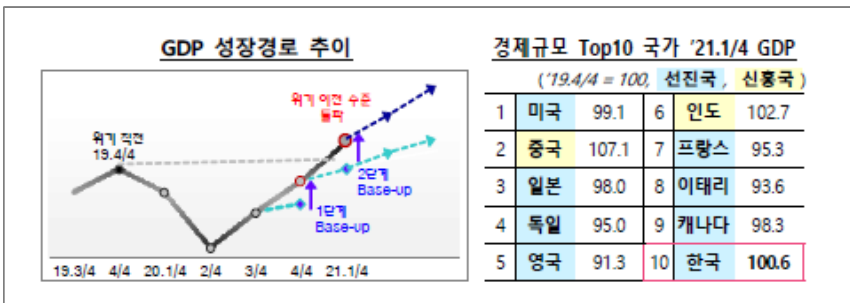
91) “The downward revision for 2021 reflects a downgrade for advanced economies-in part due to supply disruptions- and for low-income developing countries, largely due to worsening pandemic dynamics. ...Rapid spread of Delta and the threat of new variants have increased uncertainty about how quickly the pandemic can be overcome, Policy choices have become more difficult, with limited room to maneuver.”(IMF, WEO, 2021. 10b., p. 15; World Economic Outlook, 2021. 10.(imf.org))

[그림 VI-3] 선진국과 신흥국의 인플레이션 추이 변화



자료: IMF, WEO, 2021. 10b., p. 9 Figure 1. 9.

[그림 VI-4] 우리나라 GDP 성장 추이 및 2021년 1사분기 경제회복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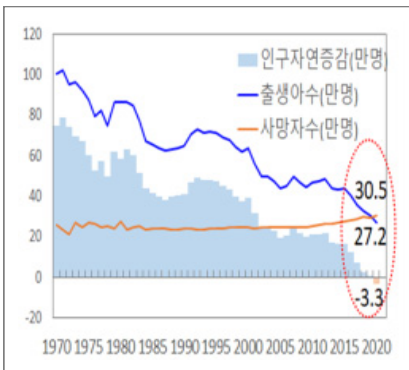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주요 내용」, 보도자료, 2021. 6., p. 1.

## 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위험 상존

우리나라 재정이 처한 보다 엄중한 현실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재정잠식과 이로 인한 저성장 고착화와 중장기적 재정위험 증가이다. 국제비교에 서로 본 우리나라 재정은 비교적 건전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반면, 고령화 증가속도와 노동경직성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 등은 중장기 재정의 위험 요소로 지목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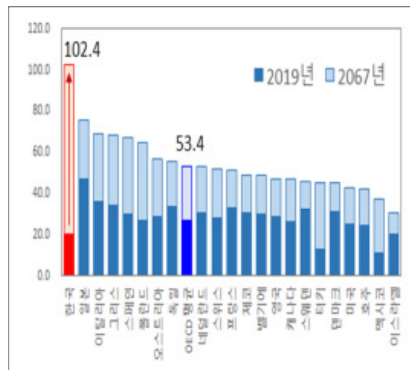
2021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영향과 대응방향」 보고서에서는 2020년을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압박의 3대 인구리스크가 정점화된 시기로 분석하였다.<sup>92)</sup> 특히 2020년은 출생아 감소세가 사망자 증가세를 월등히 넘어서면서 인구수 자체가 감소하는 이른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였다. 이런 추이가 계속될 경우 2019년 이후 50년 만인 2067년경 1,20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2020년 0.84명) 미만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3년 연속 하락 추세인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이후 일자리 불안, 혼인 지연 등 출산율 회복 유인은 더욱 요원한 상태이다.

[그림 VI-5] 인구 자연증감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 7.), p. 1 그림 인용  
원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그림 VI-6] 주요국 노년부양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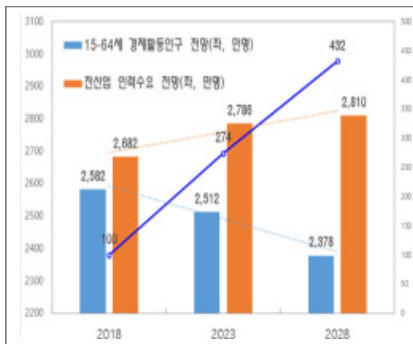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 7.), p. 4 그림 인용  
원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92) 관계부처 합동, 「인구구조 변화영향과 대응방향: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2021. 7.

급격한 노령화 추세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우리 경제의 생산성 저하와 재정지출 증가 부담으로 우려된 바 있다. 인구 자연감소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출산율 반등 가능성도 높지 않아서 재정지출 부담 증가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주요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의 경우, 2019년 대비 2067년 약 81.9% 상승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재정지출 면에서는 사회보험 지출의 급속한 증가로 나타나고, 경제 전체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주요 경제활동인구 감소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는 총요소생산성이 하락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이 다각적으로 모색되는 가운데,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다소 모호한 주장보다는 재정활용 규모, 분야, 속도, 효과분석 등 광범위하고 정교한 재정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 분야 전망치를 대략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재정전망은 수지적자 및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는 추세(수지적자 시점 3차 2044년, 4차 2042년; 기금소진 시점 3차 2060년, 4차 2057년)이다. 건강보험 지출도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에도 연금수령 인원의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확대가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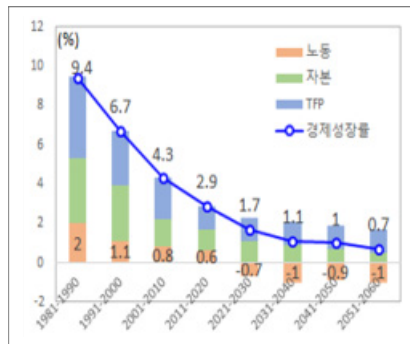
[그림 VI-7] 인력에 대한 초과수요 전망



자료: 관계부처합동, 2021. 7., p. 5 그림 인용

원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고용부 '18~'28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활용」,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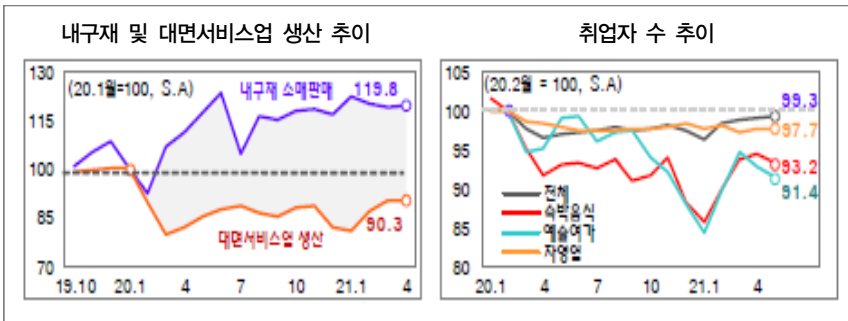
[그림 VI-8] 잠재성장률 전망



## 다. 분야별 비대칭적인 성장 고착화

우리나라 경제는 전체 경제성장률 면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경제 위기를 1년 내외의 기간 내에 극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및 사망자 수가 비교적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투입을 통한 경제회복 조치가 있었기에 경제충격이 다른 선진국들보다는 비교적 양호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VI-9] 우리나라 내구재 및 대면서비스업 회복 속도와 부문별 취업자 수 추이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주요 내용」, 보도자료, 2021. 6., p. 3.

그러나 분야별 충격 양상을 살펴보면, 정부의 이러한 재정투입 수혜를 모든 산업과 계층에서 골고루 흡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들에서도 산업별 회복 속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고용 부분은 회복속도가 다른 분야에 비하여 더딘 상황이다.<sup>93)</sup> 선진국들의 경우에서도 대부분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인 저임금노동자들의 경제적 충격은 비대면이 가능한 고임금 노동자들보다 컸고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의 경우 코로나19 이전부터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격차의 원인인 여성들의 높은 가사 및 육아부담 비중, 대면서비스 경제활동 비중 등은 비대면 활

93)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21," Infographic 1. Key facts and Figures, p. 17.

성화로 인하여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우리나라의 생산 및 서비스업 판매나 취업자 수 추이에서도 대부분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의 충격 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재정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이러한 원인, 즉 특정 분야의 경기회복이 더딘 점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방역을 위한 경제조치로 인한 충격을 치유할 만큼의 충분한 재원이 지원되지 않은 경우와, 둘째,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지원되지 못하여 재정투입 효과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다. 긴급 재정투입의 목적은 대면 서비스 부분 충격 지원인데, 이 부분의 재정지원은 충분하지 못한 반면 오히려 비대면사업 수요 확대로 매칭되어 재정지원으로 인하여 불균등한 성장이 고착화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2020년 이후 각국의 막대한 재정투입 이후의 회복 양상에서 알 수 있듯이, 재정확장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재정투입의 효과성 확보가 선결되는 것이 보다 더 긴요한 조치임을 알 수 있다. 적극적 재정역할 결과로 산업 간 불균등 격차 완화, 기존의 양극화 기조 완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의 배분이 적확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제 마련이 필요하다.

## 2. 단계별 세입 확보 방향

### 가. 조세정책 과제별 추진 방안

코로나19 이후 조세정책 당국자에 부여된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수지 회복 또는 크게 확장된 사회지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확보 정책의 시기와 방법에 관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빠르게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 악화와 국가부채 증가를 유발하였다. 재정수지 악화의 문제에 대한 대응은 일시적인 지출정책의 축소와 함께 영구적으로 늘어난 지출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확보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 추가적인 재원확보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서의 회복 과정에서 그 시기와 방법 결정이 중

요하다.

두 번째는 경제위기의 충격과 이의 극복 과정에서 악화된 경제적 격차에 대한 대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의 영향은 주로 대면활동 중심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와 여행 관련 업종에 집중되었다.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자영업 종사자 비중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급격한 자영업 부문의 축소를 야기할 수 있다. 자영업자들이 대면활동에 기반한 음식, 숙박업, 소매업 등에 많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이동 제한은 여행 관련 업종의 극심한 침체를 유발하였다. 그러나 이들 업종의 경우에는 백신 등을 통해 코로나19의 통제가 가능한 시점부터 급속히 회복될 것이므로 일시적인 침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충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의 자영업자, 대면산업에 종사하던 임시직, 단기직근로자들에게 큰 소득충격을 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부문의 회복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양태 등의 변화로 인해 어렵거나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요구될 것이다. 경제적 충격은 필연적으로 소득격차의 확대를 유발하였고, 최근에는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자산격차도 확대되었다. 사회 내 소득 및 자산격차 확대에 대응한 조세정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세정책과 소득 및 자산격차 확대에 대응한 정책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조세정책 운용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 1) 재원확보 정책의 시기와 방법

재원확보 정책의 시기는 국내 경기회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경제회복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세정책을 추진할 경우 경제회복세를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세정책의 방법 또한 시기와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 있다. 경제주체들의 회복 정도에 따라 증세정책의 대상과 방법을 설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증세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미국, 영국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회복 추세를 감안하여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2021~2022 회계연도부터 법인세율과 장기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인세율 인상은 ‘The America Jobs Plan’이라 명명된 2.3조달러 규모 재정지출패키지의 재원조달 방안으로 제시되었다.<sup>94)</sup> 구체적으로 기존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또한 총규모 1.8조달러의 ‘The American Families Plan’ 재정지출패키지의 재원조달을 위해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의 인상(37 → 39.6%), 장기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의 인상(20 → 39.6%)<sup>95)</sup>을 제안하고 있다.<sup>96)</sup>

미국의 이러한 빠른 증세정책으로의 전환은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빠른 경제회복 추세와 대규모 추가 재정지출 정책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OECD (2021. 5.)<sup>97)</sup>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영향 전인 2019년 4분기 실질 GDP 대비 2021년 4분기 실질 GDP 수준은 4% 이상 높은 수준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경제 총량 관점에서 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주고, 증세정책의 추진 기반이 되고 있다.

반면 영국의 경우 *Budget 2021*<sup>98)</sup>을 통해 2023년 4월부터 재원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기존의 19%에서 25만파운드 이상 소득분에 대해 25%로 인상할 예정이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 이전인 2023년 3월 말까지는 설비투자에 대해 첫째 130% 즉시상각을 허용하여 투자 1파운드당 0.25파운드의 세부담을 줄여 주고 있다. 즉 법인세율 인상 이전까지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경기회복을 앞당기려는 노력을 동시에 하고 있다.

94)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Fact Sheet: The American Jobs Plan,” 2021. 3. 31.,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3/31/fact-sheet-the-american-jobs-plan/>, 검색일자: 2021. 4. 28.

95) 2020년 기준 44만 1,451달러 이상자에게 20% 세율을 적용 중인데, 이를 100만달러 이상자에게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인 39.6%를 적용하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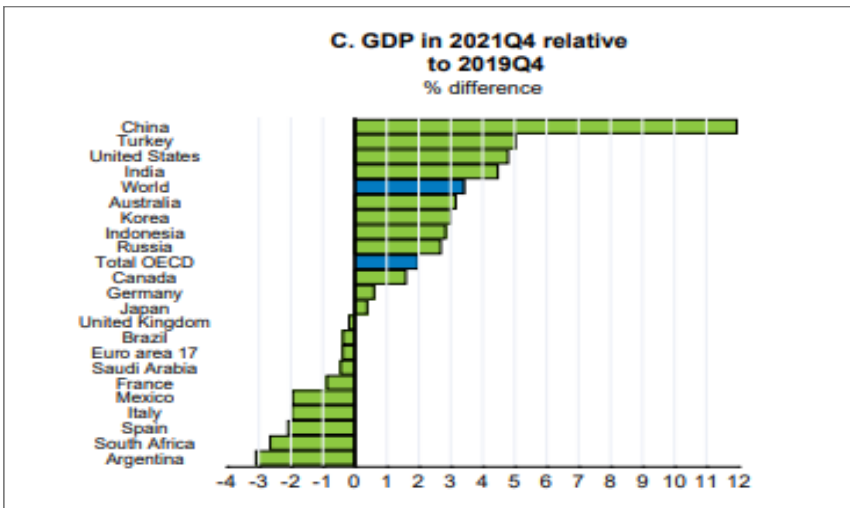
96)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Fact Sheet: The American Families Plan,” 2021. 4. 28.,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4/28/fact-sheet-the-american-families-plan/>, 검색일자: 2021. 6. 2.

97)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1. 5., p. 26.

98) HM Treasury, *Budget 2021*, “Protecting the Jobs and Livelihoods of the British People,” 2021, p. 52.; p. 57.

영국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세정책으로 전환할 계획인데, 이는 약한 경기회복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 4분기 실질 GDP가 위기 이전인 2019년 4분기 실질 GDP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기간 빠른 경기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충분한 경기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통한 재원 조달에 나서는 것이다.

[그림 VI-10] 2019년 4분기 GDP 대비 2021년 4분기 GDP 증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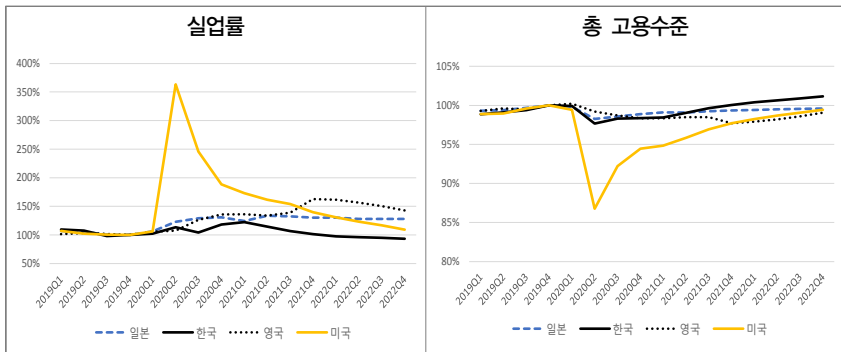


자료: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1. 5., p. 26.

그러나 전반적인 가계의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고용시장의 회복 정도는 총량지표인 GDP에 비해 부진하다. 미국의 실업률은 2022년 4분기에서도 여전히 2019년 4분기의 117%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총고용 수준은 99%, 즉 2019년 4분기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대적으로 더딘 고용시장 회복은 대다수 가계를 대상으로 한 증세 추진을 어렵게 할 것이다. 동시에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지출 프로그램은 고용시장의 빠른 회복과 장기성장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의 경우 미국에 비해 실업률, 총고용 수준의 충격이 위기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지만, 회복속도 역시 매우 느리다. 시장의 충격이 즉각적으로 고용시장 충격으로 나타나는 미국의 고용행태와 즉각적 해고보다 기업 부문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유럽 국가들 간의 정책방식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영국의 고용시장 회복은 2022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느린 개선 속도로 인해 2023년 4분기까지 미국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느린 고용시장 회복은 가계를 대상으로 한 증세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림 VI-11] 2019년 4분기 대비 노동시장의 회복 전망



주: 2019년 4분기를 기준(100%)으로 환산(2021년 5월 전망 기준)  
 자료: Oecd.stat, "OECD Economic Outlook," <https://stats.oecd.org/>, 검색일자: 2021. 6.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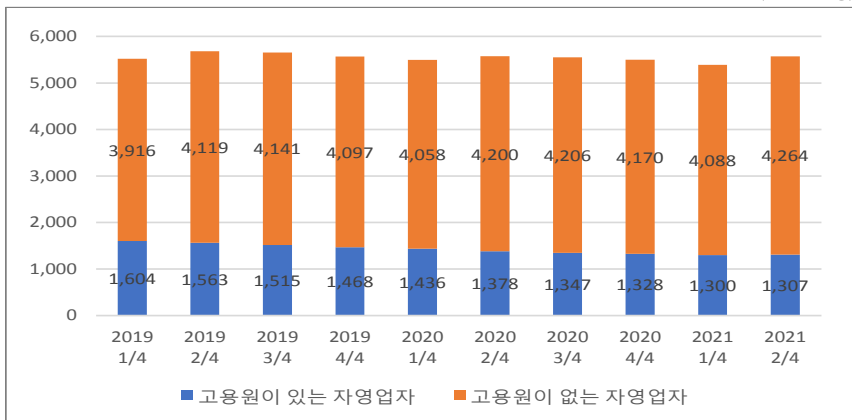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증세정책도 총량적 관점과 고용시장 관점의 회복 시기를 바탕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실질 GDP라는 총량적 관점의 경제회복 시기, 즉 2019년 4분기 실질 GDP를 초과하는 시기는 2021년 2분기로 전망된다. 이런 관점에서 부분적인 증세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증세정책은 여전히 이전 상태로 회복되지 못한 대다수 가계의 부담을 늘리지 않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가계경제에의 충격을 반영하는 실업률과 총고용 수준의 회복은 GDP 회복보다 늦은 2022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인 증세는 2022년부터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코로나19 경제위기로 큰 충격을 받은 대면서비스업 등 자영업 사업 부문의 구조조정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자영업 종사자들의 경우, 경제적 충격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영세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규모가 줄어들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규모가 소폭 늘어나고 있다. 영세화된 자영업자의 증가는 향후 소득지원 요구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소득세 부문의 증세 역시 이러한 중하위 소득층의 소득지원 요구 증대를 동시에 감안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확장 중인 근로장려세제 등의 지원 규모 확대가 증세 노력과 함께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림 VI-12] 2019년 이후 자영업 종사자 규모 변화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kosis.kr/index/index.do>, 검색일자: 2021. 9. 26.

증세 수단의 선택은 총량이 회복된 2021년 하반기 이후부터 가능할 것이며 초기에는 파급 범위와 효과가 제한적인 세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경기회복의 영향이 모든 가계부문으로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기 선택 가능한 수단은 경기회복을 위해 실시한 자동차 등 개별소비세<sup>99)</sup> 감면 등의 폐지, 경제적 외부성이 존재하는 주류, 담배 등에 대한 세율 조정, 개별소비세

99)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한도 100만원)은 2021년 말까지 시행 예정이다.

인상, 자본소득 과세 강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기존 비과세부문의 과세전환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2023년부터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의 경우, 5천만원으로 높게 설정된 공제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등 실효세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노동소득, 이자·배당소득과의 과세형평을 꾀할 필요가 있다.

경제회복 이후에는 소득과세의 실효세율 제고, 소비세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소득세의 역할 강화와 함께 세대 간 연대와 자원 확보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소비세 강화도 필요하다. 소비세는 최근 소득지원제도 대상이 넓어짐에 따라 늘어난 재원조달 부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소득세원 기반 축소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다. 고령화로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근로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계층으로 확대함으로써 세대 간 연대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최근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국제적 탄소배출 저감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탄소세 등 소비세 기반의 저감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빈곤계층에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되, 그들의 소비상품 선택에는 동일한 비용 개념이 적용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법인세율의 인상 여부는 미국, 영국 등과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최대 법인세율 수준이 미국, 영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25.0%는 미국, 영국의 법인세 인상 후 세율 28%, 25%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특정 상황을 가정하여 도출된 평균 실효세율 관점에서도 우리나라 수준은 비슷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23.8%로, 일본·독일·프랑스의 26% 이상 수준보다는 낮지만 20% 이하인 스웨덴·미국·영국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특히 미국·영국·EU 등은 자국시장 규모가 크고 세계금융시장의 중심지로서 우리나라에 비해 기업의 이탈유인이 높지 않다. 법인세율의 경우, 주요 선진국들의 변화 동향을 바탕으로 결정하되 경제 규모, 금융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선진국들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제조업) 법인들의 경우,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더욱 경쟁력 있는 세계

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는 OECD를 중심으로 한 매출이 발생한 소비자 과세권 배분(Pillar 1),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많은 국가들의 동의를 얻고 있다. Pillar 1에 따른 소비자 과세권 배분은 연간 매출액 200억 유로 초과, 10% 이상 이익률의 법인에 10% 이익률 초과분의 25%에 대해 각 시장 소재국에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Pillar 2는 연매출 7.5억유로 이상의 기업에 대해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 15%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 절세 기법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 과세를 피하고 있는 대규모 고수익 법인에 대한 세부담 증가(Pillar 1)와 저세율 국가 소재 기업의 세부담 증가(Pillar 2)가 예상된다. 이러한 국제적 논의는 기존의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도입 중인 디지털세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세가 기존의 법인세 과세 범위를 벗어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방안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글로벌 기업에 대한 원천지과세 원칙 강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국내 대기업의 해외활동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함께 자본의 국내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경영참여소득 과세면제(participation exemption)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제도가 도입되면 해외사업에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재투자, 조세회피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해외에 보유한 자본의 국내환류를 기대할 수 있다.

〈표 VI-1〉 OECD 회원국들의 법인세 최고세율 순위

(단위: %)

순위	국세분				지방세분 포함			
	2011년		2020년		2011년		2020년	
	국가	세율	국가	세율	국가	세율	국가	세율
1	미국	35.00	프랑스	31.00	일본	39.54	프랑스	32.02
2	프랑스	33.30	호주	30.00	미국	39.19	포르투갈	31.50
3	벨기에	33.00	멕시코	30.00	프랑스	36.10	호주	30.00
4	호주	30.00	뉴질랜드	28.00	벨기에	33.99	멕시코	30.00
5	일본	30.00	오스트리아	25.00	이탈리아	31.40	독일	29.90
6	멕시코	30.00	벨기에	25.00	호주	30.00	일본	29.74

〈표 VI-1〉의 계속

(단위: %)

순위	국세분				지방세분 포함			
	2011년		2020년		2011년		2020년	
	국가	세울	국가	세울	국가	세울	국가	세울
7	스페인	30.00	칠레	25.00	멕시코	30.00	뉴질랜드	28.00
8	뉴질랜드	28.00	한국	25.00	스페인	30.00	이탈리아	27.81
9	노르웨이	28.00	네덜란드	25.00	독일	29.55	한국	27.50
10	이탈리아	27.50	스페인	25.00	룩셈부르크	28.80	캐나다	26.47
11	스웨덴	26.30	그리스	24.00	포르투갈	28.50	미국	25.77
12	핀란드	26.00	이탈리아	24.00	뉴질랜드	28.00	오스트리아	25.00
13	영국	26.00	일본	23.20	노르웨이	28.00	벨기에	25.00
14	오스트리아	25.00	이스라엘	23.00	캐나다	27.70	칠레	25.00
15	덴마크	25.00	덴마크	22.00	스웨덴	26.30	네덜란드	25.00
16	네덜란드	25.00	노르웨이	22.00	핀란드	26.00	스페인	25.00
17	포르투갈	25.00	터키	22.00	영국	26.00	룩셈부르크	24.94
18	이스라엘	24.00	스웨덴	21.40	오스트리아	25.00	그리스	24.00
19	한국	22.00	포르투갈	21.00	덴마크	25.00	이스라엘	23.00
20	에스토니아	21.00	슬로바키아	21.00	네덜란드	25.00	덴마크	22.00
21	룩셈부르크	21.00	미국	21.00	한국	24.20	노르웨이	22.00
22	칠레	20.00	에스토니아	20.00	이스라엘	24.00	터키	22.00
23	그리스	20.00	핀란드	20.00	스위스	21.17	스웨덴	21.40
24	아이슬랜드	20.00	아이슬랜드	20.00	에스토니아	21.00	스위스	21.15
25	슬로베니아	20.00	라트비아	20.00	칠레	20.00	슬로바키아	21.00
26	터키	20.00	체코	19.00	그리스	20.00	에스토니아	20.00
27	체코	19.00	폴란드	19.00	아이슬랜드	20.00	핀란드	20.00
28	헝가리	19.00	슬로베니아	19.00	슬로베니아	20.00	아이슬랜드	20.00
29	폴란드	19.00	영국	19.00	터키	20.00	라트비아	20.00
30	슬로바키아	19.00	룩셈부르크	17.00	체코	19.00	체코	19.00
31	캐나다	16.50	캐나다	15.00	헝가리	19.00	폴란드	19.00
32	독일	15.00	독일	15.00	폴란드	19.00	슬로베니아	19.00
33	라트비아	15.00	리투아니아	15.00	슬로바키아	19.00	영국	19.00
34	리투아니아	15.00	아일랜드	12.50	라트비아	15.00	리투아니아	15.00
35	아일랜드	12.50	헝가리	9.00	리투아니아	15.00	아일랜드	12.50
36	스위스	8.50	스위스	8.50	아일랜드	12.50	헝가리	9.00
	OECD 평균	23.04	OECD 평균	21.16	OECD 평균	25.08	OECD 평균	23.27

주: Surtax가 부과되는 일부 국가의 국세분 세율은 surtax를 제외하고 계산함

자료: 전병목 외(2020), p. 196, 〈표 III-5〉

〈표 VI-2〉 OECD 회원국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순위	2017년		2020년	
	국가	세율	국가	세율
1	프랑스	38.4	칠레	35.6
2	칠레	33.0	멕시코	28.7
3	미국	32.6	일본	28.0
4	콜롬비아	32.6	프랑스	27.5
5	일본	28.6	콜롬비아	26.9
6	멕시코	28.4	독일	26.9
7	독일	27.8	뉴질랜드	26.1
8	벨기에	27.0	호주	26.0
9	호주	26.5	한국	23.8
10	뉴질랜드	26.1	네덜란드	23.2
11	룩셈부르크	25.0	오스트리아	23.0
12	오스트리아	24.0	룩셈부르크	21.9
13	그리스	23.7	캐나다	21.4
14	캐나다	23.1	스페인	20.9
15	네덜란드	22.3	이탈리아	20.7
16	스페인	22.1	스웨덴	19.5
17	한국	21.8	미국	19.4
18	노르웨이	21.3	노르웨이	19.2
19	스웨덴	20.8	슬로바키아	19.2
20	이탈리아	20.3	그리스	19.1
21	이스라엘	20.0	벨기에	19.1
22	핀란드	19.4	덴마크	18.9
23	덴마크	19.1	핀란드	18.9
24	스위스	19.0	체코	18.9
25	슬로바키아	18.2	이스라엘	18.8
26	체코	18.1	스위스	18.4
27	포르투갈	17.7	아이슬란드	18.1
28	아이슬란드	17.7	포르투갈	18.0
29	폴란드	17.0	슬로베니아	15.8
30	에스토니아	16.8	폴란드	15.5
31	영국	16.6	영국	15.4
32	슬로베니아	16.0	라트비아	14.6
33	리투아니아	14.1	에스토니아	13.2
34	아일랜드	11.6	리투아니아	13.1
35	헝가리	9.1	아일랜드	11.4
36	라트비아	0.0	헝가리	9.8
	OECD 평균	22.0	OECD 평균	20.9

주: 금융방식, 자산형태를 감안한 가중평균방식으로 도출된 평균실효세율(composite effective average tax rate)로서 country specific interest and inflation rates 시나리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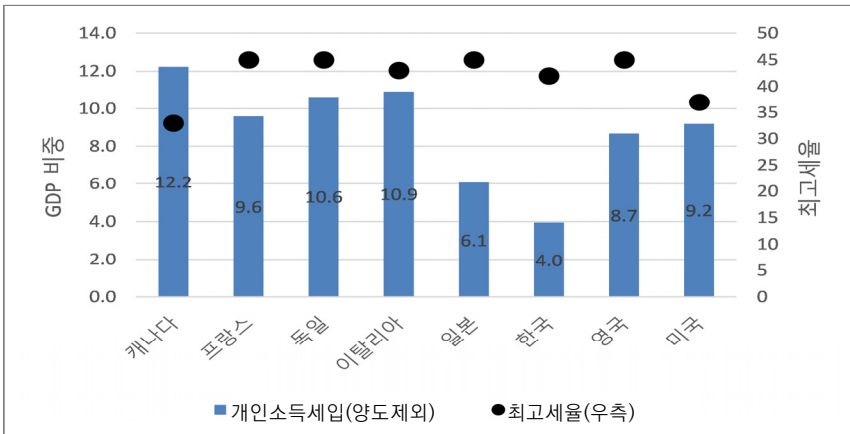
자료: OECD.stat, "Corporate Tax Statistics," <https://stats.oecd.org/#>, 검색일자: 2021. 11. 9.

본격적인 증세는 2022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상황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가계부문의 추가적 담세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고용상황이 위기 이전으로 회복되고 정상적인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면 노동소득과 소비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노동소득에 대한 개인소득과세의 경우, 높은 누진구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비해 세수 비중이 낮은 편이다. 이는 최고세율의 격차보다는 낮은 실효세율에 따른 것이다. 즉 주요 선진국들의 개인소득세 (중앙정부 최고세율은 35~45%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소득세 세입(양도소득분 제외) 수준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기준 개인소득세세입은 GDP 대비 4.0%에 불과하지만, 캐나다의 경우 12.2%에 달한다. 그렇지만 캐나다의 개인소득세 중앙정부 최고세율은 33%에 불과하다. 지방소득세를 감안하더라도 캐나다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46.2%(지방소득세 최고세율 13.2% 적용) 수준이며, 우리나라 46.2%(지방소득세 4.2%)와 동일하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2021년부터 45%로 인상되었다. 그렇지만 과세표준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적용되므로 실질적인 세입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VI-13] 주요 선진국의 소득세 최고세율과 소득세입(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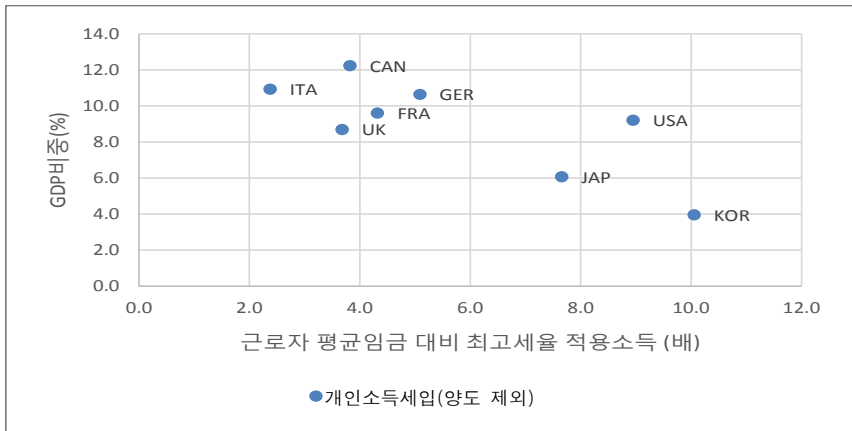
(단위: %)



자료: OECD.stat, "Revenue stat., Tax Database, Taxing Wages," <https://stats.oecd.org/>, 검색일자: 2021. 4. 2.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개인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것과 세입의 상관관계는 G7 회원국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개인소득세입(양도소득분 제외) 수준과 최고세율 적용소득 간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개인소득세입이 높은 국가의 경우, 최고세율 적용구간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이는 보다 많은 소득자들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를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최고세율 수준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면 많은 세입을 거두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나라는 G7 회원국의 상관관계 속에서 오른쪽 끝에 위치하여 최고세율의 적용대상이 상대적으로 작음을 알 수 있다.

[그림 VI-14] 주요 선진국의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과 소득세입(2019년)



자료: OECD.stat, "Revenue stat., Tax Database, Taxing Wages," <https://stats.oecd.org/>, 검색일자:2021. 4. 2.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개인소득세수의 증대를 위해서는 최고세율의 인상보다 중위소득 이상자에 대한 실효세율 인상이 중요하다. 실효세율 인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수 있지만 근로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제도의 축소가 바람직하다. 근로소득공제의 목적이 소득 획득비용에 대한 일괄공제의 성격과 함께 자영소득과의 과세형평성 제고목적이 있는바, 이를 감안하여 적절히 축소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먼저 근로소득 획득비용에 대한 일괄공제 성격은 사업소득의 비용률 개념 등을 참조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자영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성 제고 목적은 거래투명화의 진전으로 많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근로소득공제 등을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소비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세수 확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인구구조 변화에도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 참여 인원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소득세 부담 주체가 더욱 줄어들게 된다. 상대적으로 편중된 재원에서 많은 세입을 조달하는 것은 제도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지양할 필요가 있다.

한편 소비 수준에 비례한 세부담은 연간 단위 누진적 소득세가 가질 수 있는 생애주기 관점의 과세왜곡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효율적 세제이다. 소득세의 경우 생애주기 동안 동일 소득에도 불구하고 소득금액의 분포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누진적 세율구조로 인해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일생소득을 획득하는 소득자의 세부담이 그렇지 않은 소득자의 세부담보다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왜곡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비금액에 비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지나친 소득과세 의존을 축소함으로써 누진적 소득과세가 일생주기 관점에서 야기하는 비효율성을 줄이는 것이다.

고용률, 임금증가율 등으로 평가한 가계경제가 회복된 시점부터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소비세의 세입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세원 규모 등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대안은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이다. 제도 도입 이후 10%로 고정되었던 세율을 인상하여 복지지출 등에 충당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와 같은 비례세는 소득 역진성의 문제가 제도 수용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이러한 수용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지출을 위한 목적세로 인상분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주로 취약계층을 포함한 중하위 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출 재원으로 부가가치세 인상분을 활용할 경우에는 역진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세부담 측면에서는 역진적일 수 있지만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사회복지장 혜택을 감안한 순편익은 누진적으로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과세형평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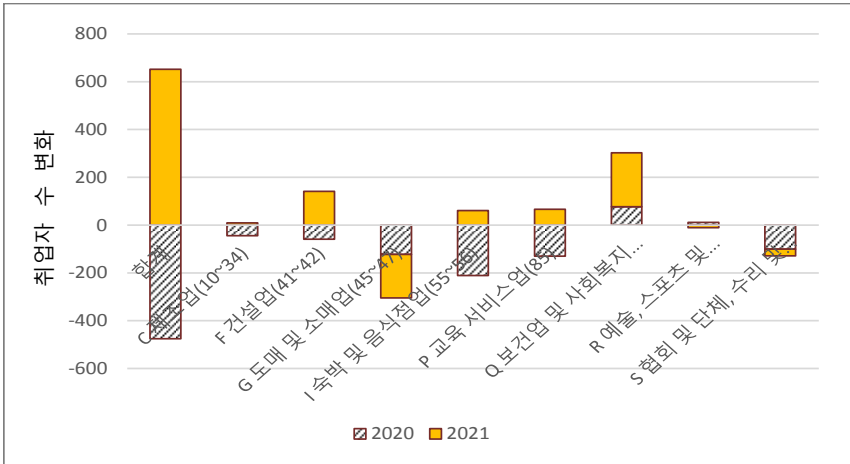
코로나19 경제위기는 소득 및 자산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이 대면서비스산업, 여행업 등에 크게 나타났다. 취업자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경제위기 발생 이전인 2019년 4월 대비 2020년 4월, 2020년 4월 대비 2021년 4월의 취업자 수 변화는 소득격차 확대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2020년 47.6만명의 취업자 수 감소를 겪었다가 2021년 65.2만명의 취업자 수 증가로 반전되었다. 그러나 산업별 변화 동향을 살펴보면 대면산업인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 및 숙박점업, 교육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충격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취업자 수 감소는 2021년 4월까지 일부 회복되기도 하였지만 도매 및 소매업, 음식 및 숙박점업, 교육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은 아직 충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업종 종사자들의 소득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제조업의 취업자 충격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는데, 이는 관광, 식당, 숙박 등 대면서비스업의 큰 충격에도 불구하고 내구재 등 제조업 수출시장의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코로나19 방지 및 치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과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직접일자리 확대정책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규모는 증가하였다. 정부의 본격적 재정대응이 이루어진 2020년 4월~2021년 4월 기간 취업자 증가 규모가 전 기간 7.7만명 증가의 3배에 가까운 22.5만명에 달하였다.

전반적으로 특정 산업 중심의 취업자 수 감소 충격은 사회의 소득격차를 확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VI-15]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단위: 천명)



주: 2019년 4월 대비 2020년 4월, 2020년 4월 대비 2021년 4월 취업자 변화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kosis.kr/index/index.do>, 검색일자: 2021. 6. 3.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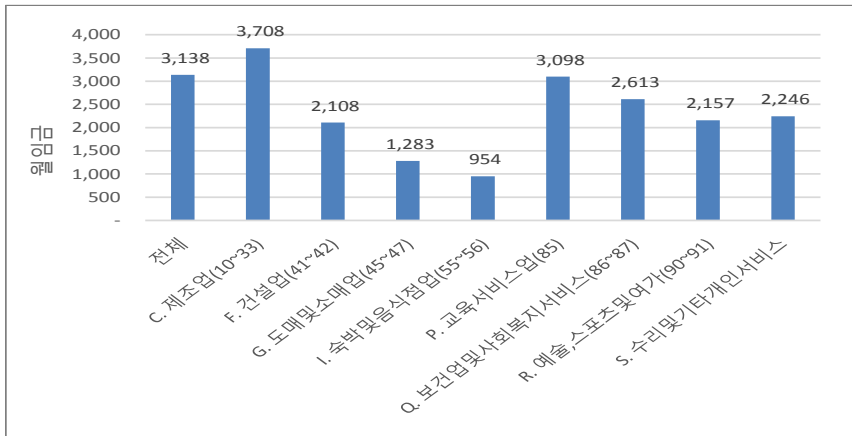
2021년 4월까지 이전 수준의 취업자 규모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도매 및 소매업, 음식 및 숙박점업, 교육서비스업의 총임금은 전체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2019년 월 임금 총액은 각각 128.3만원, 95.4만원으로 나타나 코로나19 경제위기가 저소득 취업자에게 큰 소득충격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보이는 교육서비스업의 월평균 임금도 309.8만원으로, 전체 평균 313.8만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저소득근로자 중심의 업종에 고용충격을 가함으로써 소득격차를 확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에 나타난 취업자 수 회복을 이끈 업종은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으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산업이다. 건설업의 2019년 임금총액은 210.8만원에 불과하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261.3만원이다. 특히 정부의 직접일자리 정책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일자리는 단기일자리 중심이라 그 지속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낮은 임금 일자리 수의 감소는 사회 저소득계층의 소득을 더욱 낮추어 전반적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일자리의 회복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일자리, 단기적 일자리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자리 수 회복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경제주체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었고 회복도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VI-16] 산업별 월평균 임금 총액(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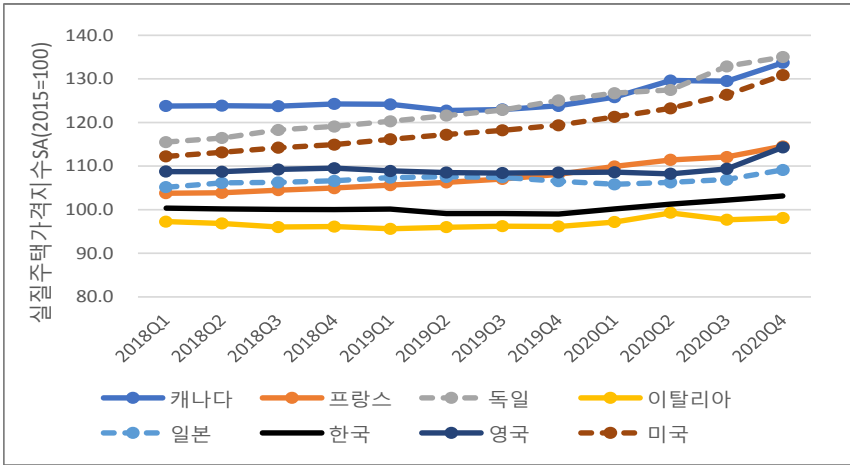
(단위: 천원)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https://kosis.kr/index/index.do>, 검색일자: 2021. 6. 4.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한 확장적 경제정책으로 실물자산의 가격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급격하게 증가된 유동성으로 인한 자산가격 상승의 소득보다 편중된 분포를 보여주는 자산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중요한 가구자산인 주택의 실질가격지수(2015=100.0)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4분기 99.0에서 2020년 4분기 103.2로 4.2% 상승하였다. 이는 동 기간 일본의 2.4%보다 높은 수준이나, 미국·독일 등의 9.6%, 8.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소득충격을 받은 시기에 자산가격의 빠른 상승은 사회구성원 간 경제적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

[그림 VI-17] 주요 국가별 실질주택가격 변화



자료: OECD.stat, "House prices and related indicators," <https://stats.oecd.org/>, 검색일자: 2021. 6. 3.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자산 격차의 확대는 코로나19 이후 조세 및 재정정책 운용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조세정책적 고려는 정책수단의 특성상 고소득, 고자산 계층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조세정책 자체가 개인의 소득 또는 자산에 기반하여 세부담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환급형 근로장려금 제도만 보조금 정책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소득 및 자산 격차의 확대에 대응하는 조세정책적 방향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라 할 수 있다. 현재 노동소득 과세에 대한 누진적 구조는 꾸준히 실행되어 온 반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2017년(30 → 40%), 2018년(40 → 42%), 2021년(42 → 45%) 인상되어,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을 꾸준히 높여 왔다. 그러나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비과세 등으로 인해 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동성이 높은 자본의 특성을 감안하되 노동소득과의 과세형평성을 감안하여 넓은 과세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2023년부터 과세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주식 양도소득 등)

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연간 5천만원으로 설정된 기본공제액을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른 금융소득(즉 이자, 배당소득)과 노동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세부담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부담 격차는 투자자의 자금흐름을 왜곡할 수밖에 없다. 금융투자소득이 갖는 장기성 등을 고려하되, 다른 금융소득과의 세부담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율도 과세표준을 3억원을 기준으로 20%·25%를 적용하고 있으나 분리과세에 따라 소득자의 소득 상황을 감안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소득격차 완화라는 관점에서 종합소득세 적용 한계세율에 따라 세율격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대부분의 투자자에게는 현재와 같이 단일세율을 적용하되,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이 일정 수준(예: 40%, 즉 과세표준 3억원 초과자) 이상일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느슨하게 개인의 소득 수준과 연계하여 수직적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한편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보유과세는 가구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자산의 경우, 이익 실현 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보유 시 부담은 그 자산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지방세인 재산세가 담당할 주된 역할이다.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 대한 추가과세로 납세자의 소득 상황과의 연계성이 낮아 조세저항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세 규모가 크고 그 증가 속도 역시 빠르기 때문이다. 세부담과 부담능력, 즉 소득의 괴리 역시 납세자 불순응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납세자의 부담능력 내에서 제도가 운용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자산 구입 이후 발생한 가격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는 납세자가 예상하지 못한 부담이므로 신중히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주택가격보다 큰 세율 격차를 보이는 보유주택 수에 따른 과세 기준도 납세자 수용성 측면에서 완화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나. 장단기 세입 확보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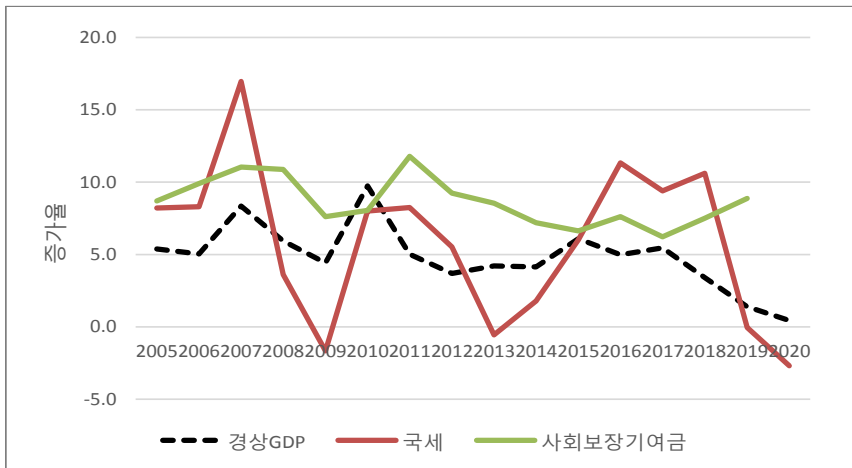
2005년 이후 우리나라 세입증가율은 경제성장률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바탕

으로 증가해 왔다. 국세수입은 (경상)경제성장률을 중심으로 호황기에는 이를 초과하고 불황기에는 이를 하회함으로써 자동안정화 장치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세수입증가율은 2005~2020년 기간 동안 평균 5.5%로, 동 기간 경상 GDP성장률 4.8%를 상회하여 세부담을 높이고 있다.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국세부담률 증가는 누진적 과세체계와 적극적인 세입 확보 노력 등에 따른 결과이다.

국민부담을 결정하는 또 다른 부담인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은 2005년 이후 경제성장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여 왔다. 2005~2019년 기간 동안 사회보장기여금의 증가율은 연평균 8.6%에 달하여 국민 부담 증가에 큰 역할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급여와 연동된 기여금 증가로 국민들의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그림 VI-18] 경제성장과 조세수입 증가율 추이

(단위: %)



자료: OECD.stat, "Revenue Statistics," <https://stats.oecd.org/>, 검색일자: 2021. 6. 3.;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민계정」, <https://ecos.bok.or.kr/>, 검색일자: 2021. 8. 9.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이 회복되어 감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입 확보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경제 규모가 위기 이전 상황으로 회복된 2022년부터 점진적인 세입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고용상황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보편적인 증세보다 부분적인 세입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은 자본소득에 대한 증세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3년 적용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의 경우 시기를 조정하기 어렵다면 공제한도(5천만원)를 축소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다른 유형의 소득과 과세형평 차원에서도 시급하기 때문이다. 소비세 관점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 등 탄소배출 관련 활동에 대한 과세 수준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경제성장 방향과 일치성을 확보하고 민간의 탄소배출 저감 유인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기존의 외부성 교정 차원의 담배세, 주세 등의 강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세재정정책을 강화하여 빈곤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에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되, 그들의 상품 및 서비스 소비에 있어서는 가격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는 경제활동 및 일자리구조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과세 정비노력도 중요하다. 플랫폼 기반 경제활동을 수행하지만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디지털서비스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플랫폼사업자의 거래정보 제공 등 납세협력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 경제활동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고 관련 종사자들의 사회보장체계 편입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고용상황이 회복되는 시기에는 본격적인 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 가장 시급한 방안은 소득세 과세의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최고세율의 인상보다 세입 확보 규모가 큰 중위소득 이상자에 대한 실효세율 인상이 중요하다. 정부의 각종 재정정책 대상이 기존의 빈곤층에서 중산층까지 넓어짐에 따라 재원에 대한 부담계층도 중산층까지 넓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실효세율 인상방안으로는 비교적 관대하게 설정된 근로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제도의 축소가 바람직하다. 근로소득공제의 목적 중 자영소득과의 과세형평성 제고 목적이 개선된 과세환경으로 인해 점차 줄어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다. 소비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세수확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늘어난 복지 수요를 조달하면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도 강건한

세입 확보 방안이기 때문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은 상대적으로 납세자 순응성이 높은 세목으로, 개별 제도 별로 빠른 세입 확보 노력을 펼치고 있다. 사회보험의 확대에 따른 재원 확보는 단기적으로 사회보장기여금 요율 인상 등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Tax Wedge<sup>100)</sup>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다양한 제도 간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위해 개별 사회보험의 지출관리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일부 사회보험의 급속한 확장은 다른 사회보험 또는 정부 일반재정의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균형 있는 사회보장제도 구축을 위해 개별 사회보험제도들의 지출 성장 속도를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지출 재원조달을 위해 비노동소득에 대한 과세노력이 필요하며, 동시에 제도 간 균형을 위한 통합적 재정운용 방안도 필요하다.

### 3. 위기대응과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역량 강화 방안

코로나19 이후 정책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전 분야의 양극화 심화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개인별로는 임금소득 양극화, 교육격차 확대, 자산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인구소멸 지역 확대와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 확대가 고착화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불균등 추세의 지속으로 불균등 경제양상이 고착화될 우려가 심각하며, 궁극적으로 이를 통한 저성장 고착화 및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위험요소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이에 따른 재정정책 방향으로 첫째, 소득재분배(Redistribution) 강화, 둘째, 불균등 산업지형 내에서의 자원재배분(Reallocation)을 통한 균형회복 지원, 셋째로는 구조적 재정잠식 최소화 및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 제도적 개편 등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중장기 재정역량 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100) 기업 고용비용 중 근로자 가치분소득으로 귀속되지 않는 부분의 비중으로 정의되며, 이는 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부담 등에 따라 변화한다. 즉 (기업고용비용-근로자 가치분소득)/기업고용비용.

## 가. 법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잠식 최소화 방안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을 살펴보면, 의무지출 중 복지분야 법정지출과 지방이전재원지출 성장률은 전년 대비 각각 6.6%, 7.4%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이전지출의 증가세 7.4%는 재량지출의 4.5%, 총수입 4.7%, 총지출 5.5% 등 세입 및 세출 총량지표의 성장률보다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2021~2022 의무지출 증가 규모 35조원 중 22조원이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분으로 전체 의무지출의 64%임을 보여주었다. 재정지출 규모로 살펴보면 2022년 예산안 기준 복지분야 법정지출은 140조원이며, 지방이전지출은 약 131조원에 달한다. 복지지출은 법으로 ‘대상확대’와 ‘단가인상’으로 재정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지방이전지출은 재정분권 수요증가와 함께 법정 교부세율이 증가하여 왔다. 복지지출의 경우, 소득 수준의 증가와 노령화가 지속되는 점 등으로 볼 때, 향후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진국들의 복지지출과 비교해 볼 때 중부담 중복지 기반 확대를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증가세가 나타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지방이전지출은 세입 및 세출의 재정분권 수준 등의 국제비교, 그간의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성과로 볼 때 지금과 같은 방식의 지방이전이 지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전면적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

구조적으로 지방이전지출은 법정지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나 경제상황 여부와 상관없이 내국세의 19.24%는 지방자치단체로, 20.79%는 지방교육청으로 이전된다. 그런 가운데 국세 지방세 이양을 통한 재정분권 요구로 인하여 국세 지방세 이양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2018년 당시 새 정부는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부가가치세의 31%까지 인상 요구, 자치분권위원회 자료)이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2021년 7월 말 행안부는 추가 4.3%p 인상한 25.3%까지 인상안의 당정합의안을 발표하였다.<sup>101)</sup> 지방분권은 매 정부마다 중요한 국정 아젠다<sup>102)</sup>로서 진행되어 왔지만,

101) 행정안전부,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 확정」, 보도자료, 2021. 7. 28.

102) 노무현 정부(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 이명박 정부(지방소비세 도입, 부가가치에 일정

지속적인 중앙 재정잠식을 통한 재정분권은 당초의 과세자주권 확대나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이 학계와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지방이전지출의 원인은 당초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와 교육기회 균등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지원 방식을 ‘법정지출’로 강제함으로써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와 다양화된 지방교육 재정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직적인 재정항목으로 변모한 상황이다. 각 재정항목의 경직적인 지출구조를 우려하는 이유는 거시적으로 탄력적인 자원재배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낙후지역의 노령화와 저성장 추세가 이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정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가 지난 20여 년간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간의 칸막이 제거는 여전히 소원한 상태이다. 양 교부금 간의 칸막이뿐만 아니라, 교육재정 내에서 초중등교육 재정과 고등교육 간의 재정 규모 변화조차도 이슈 제기 여부에 비하여 정책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이다.

#### 1) 법정 지방이전지출을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검토방식으로 개편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정이전지출의 재구조화를 통하여 재정잠식 요인을 개편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내국세의 40% 내외의 지방이전 구조는 추가적인 세수 확보 필요성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수효과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정부는 추가적인 재원 확보방식으로 세수보다는 기금이나 목적세 방식으로 재원을 관리할 유인이 커지게 된다. 세수가 아닌 기타 재원이 비대해지는 것은 세수의 투명성, 공평성 확보를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배제될 우려도 있으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같은 규모의 재원이 지방으로 이전된다 하더라도 재정수요를 고려하여 중앙과 지방이 협의하여 이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

부분을 지방으로 이전, 2010년 5%에서 2020년 21%까지 인상), 박근혜 정부(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문재인 정부(지방소비세율 부가가치세의 31%까지 인상) 등 중앙 지방 간 재정이전 규모 확대 및 제도 변화는 매 정부 출범마다 중요 아젠다로서 수행되어 왔다.

지방이전의 법정지출 구조를 연도별 경제성장과 지역별 재정수요와 연계하여 매년 혹은 3~5년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낙후지역의 인구 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일반재원을 의미하는 지방교부세의 절대적인 재원 규모의 조정은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나 논란의 소지가 있다. 최소한 균형발전 성과가 국민적 체감으로 드러날 때까지는 지금의 지방이전재원의 절대적 규모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전 방식을 현재와 같은 법정으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낙후지역 재정수요와 수도권 지역의 재정수혜 정도를 파악하여 재검토해야 한다.

## 2) 교육재정 내 자원 재배분을 통한 재정효율성 및 효과성 향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편에 대한 요구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2020년 초중등 학생 수 약 450만명이 2030년 약 332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출산율 0.84를 감안해 볼 때 향후 학생 수는 더욱 급격히 감소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교육부는 현재 초중등교육재정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아이 하나하나의 성장과 성인의 지속적 재교육을 통한 개인의 역량 개발이 가능하도록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에 주력할 것을 밝힌 바 있다.<sup>10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 교육재정 전체의 약 77.2%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22년 기준 64.3조원, 전체 교육예산 83.2조원)에 해당하여,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수요와의 비대칭적인 규모는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 등 교육수요 다양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신생아 수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로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육수요 등이 증가하고 있다. 초중등교육재정 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은 생애주기별 교육로드맵과 함께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이후 원격교육 격차 완화, 재교육 강화 등 노동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고등교육 지원 확대가 주요 정책 아젠다에 해당한다.

103)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개편 운용 관련 검토」, 2020. 9. 21.(내부자료)

민선교육감 이후 교육청 예산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도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초·중·등 지원 위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위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그대로 두고 유특회계 도입과 같이 사업을 엮는 방식 등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교육재정 전체 틀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초·중·등교육으로만 연계하는 것을 개편하여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 미래 지향적인 교육수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미래 교육수요가 연계되도록 설계하는 대안을 결정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끄는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 3) 사회보험 분야 재정개혁을 통한 재정위험 대비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변화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sup>104)</sup> 국민부담률은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포함)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사회보험분야의 재정기여 부분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위하여 관련 지출 증가 속도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사회보험 분야의 수지 부분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8대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부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이유이다.

노령화 추이와 산업구조 변화, 저성장, 경제위기 여파 지속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의 사회보장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특히 공적연금제도 성숙 이후에는 노후소득보장 등 인구고령화와 관련된 지출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향으로 사각지대 개선을 포함한 대상의 포괄성, 전달체계 효율성과 지출의 효과성 등이 제시되어 왔다.<sup>105)</sup> 이러한 개선방안은 사회보험 자체의

104) 2019년 회계연도 기준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7.7%이며, OECD 평균 33.8%이다(김완희 외, 2021, p. 8).

제도 개선에 해당하며 제도성숙기 이전에 사회보험 제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는 의의가 있으나,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충분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와 국민 소득수준 향상,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재정의 사회보험 기여 증가는 국민부담 완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현실이다.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하여 ‘사회보장세’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등 사회보장에 대한 재정부담 논의는 보다 더 큰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일차적인 재정부담자로서의 정부는 궁극적으로는 증세를 통한 해결방안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최종 부담자인 국민과 국회는 추가적인 납세 부담에 누가, 어느 정도,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 가능할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과 실행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 나. 재정규율을 통한 지속가능성 및 재정신뢰성 확보

현재 선진국들이 당면한 재정과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 이후의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리에 있다. 시장에서 평가하는 해당 국가의 재정신뢰성은 단기적으로는 국제신용등급으로 표출 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펀더멘탈 회복으로 나타난다. 해당 국가의 재정출구 전략에 대한 시장의 신뢰성이 확보될 경우, 유리한 조건으로 국제 시장에서의 재원조달이 가능하며 그만큼 재정여력은 확보 가능하다. 코로나19 이후 선진국들에 비하여 추가 채무 규모가 크지 않았던 우리나라는 이에 조금 덜 민감할 수는 있으나, 세입 확대가 불투명한 가운데 재정지출만 증가하는 지금과 같은 재정여건하에서는 채무상환 이자 부담과 추가 재원조달을 염두에 둔 재정신뢰성 확보 노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향후 5년간 급증한 국가채무의 중기 출구전략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해당 국가의 재정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

105) 국회예산정책처, 『사회보장정책 분석 I (총괄)』, 2020. 6., p. 3.

## 1) 중기 재정계획의 시장신뢰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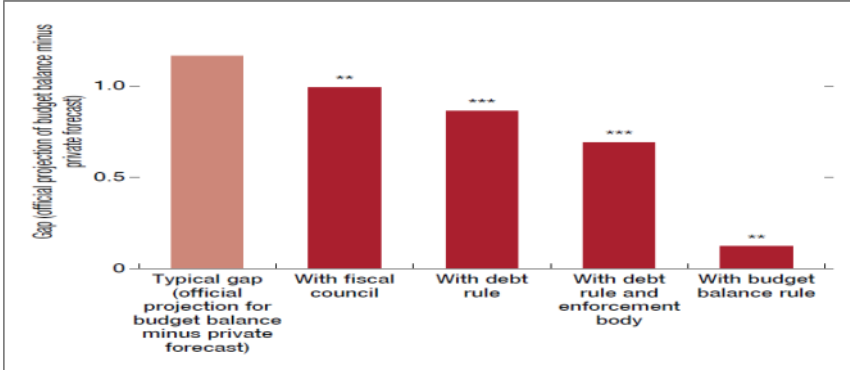
위기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중기재정계획이 중요해진 이유는 재정정상화를 위한 출구전략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향후 5년간의 중기계획은 경제성장 전망치, 세입 확보 여력, 재정지출 증가 추이, 채무 수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각 국가의 경제회복 이후 재정정상화를 위한 출구전략이 제시되고 있는 공식 국가전망에 해당한다. 중기계획상에서는 해당 국가의 지속가능한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인구구조 전망과 경제전망치에 따른 세입 확보 시기와 방법 및 순차적 재정지출 내용이 포함된다.

최근의 IMF(2021. 10.) 분석에서는 재정규율을 포함한 중기재정계획 여부가 해당 국가의 공식 전망치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민간 기관의 경제전망치와 재정수지 전망치는 정부가 발표하는 전망치보다는 비관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해당 국가의 중기계획에 대한 신뢰성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이 주요 논지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중기 재정계획상의 재정수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경우 민간기관 전망치 값이 정부 수치에 수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VI-19]에서는 재정수지 규칙이 작동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양 전망치의 차이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IMF 분석은 시장에서 정부의 공식 전망치 수치를 신뢰하는가 여부를 결정짓는 것으로 재정위원회 존재 여부, 채무규칙, 재정수지 규칙 등을 예로 들었다.

정부 전망치에 대한 신뢰성(predict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는 경제전망치, 세입추계, 장래 인구전망 등을 포함한 재정지출 계획 등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매년 세수추계 전망치에 대한 논란이 있고, 정부가 발표한 장기 재정전망치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전망치 간의 설득력 있는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시장에서의 정부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는 결국 국가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쳐, 추가 자원조달 비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21년 기준 주요 선진국들의 국가채무 수준이 GDP 대비 100% 수준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부 전망치의 공신력만큼 유리한 조건에서의 국채 발행이 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위기로 채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러한 이유로 중기재정계획에서 구체적인 세입 및 재정지출 계획, 채무상환 부담계획 등을 명시하는 추세이다.

[그림 VI-19] 재정규율 및 중기재정계획이 재정수지 공식전망치 신뢰도에 미치는 효과



자료: IMF, *Fiscal Monitor*, 2021. 10a., p. 32., Figure 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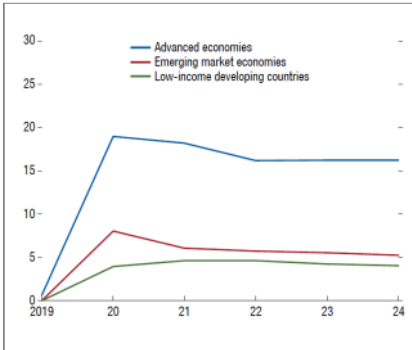
## 2) 재정준칙에 대한 실증적 논의

전통적인 주제인 재정준칙의 효과성 여부에 대한 실증분석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IMF(*Fiscal Monitor*, 2021. 10a.) 분석에서는 David et al.(2018)을 인용하여 1970년부터 2018년까지의 55개 국가들의 패널분석 결과, 재정당국들이 채무규칙(debt rule) 혹은 재정수지 규칙(deficit rule) 등의 조치를 활용하여 채무 수준을 규제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채무충격이 발생한 이후 재정수지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GDP 대비 채무비율을 낮추고자 하는 재정당국의 노력들이 있어 왔음을 실증적으로 밝힌 사례이다. Bergman et al.(2016) 등에서는 재정준칙이 존재하는 경우 낮은 재정적자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Debrun et al.(2018)은 재정준칙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수지와 상관성이 높은 것을 보여주었다. 반대로 Caselli et al.(2020)은 재정준칙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높은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준칙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연구도 다수 존재하고 있어서 재정준칙 제도에 대한 성과가 실증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주목

하는 관점에서는 양쪽 주장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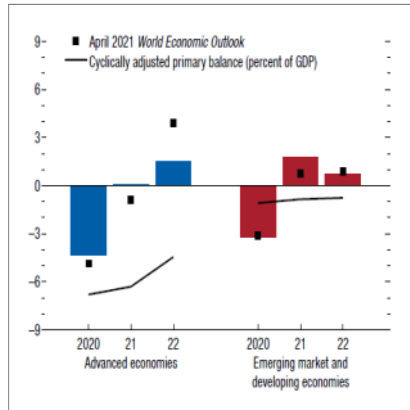
[그림 VI-20] 코로나19 이후  
일반정부 채무 변화

(단위: 팬데믹 이후 경제전망 추정치 기준  
GDP 대비 변화율)



자료: IMF, *Fiscal Monitor*, 2021. 10a., p. 3., Figure 1. 3.

[그림 VI-21] 2020~2022년  
재정기조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1. 10b., p. 3., Figure 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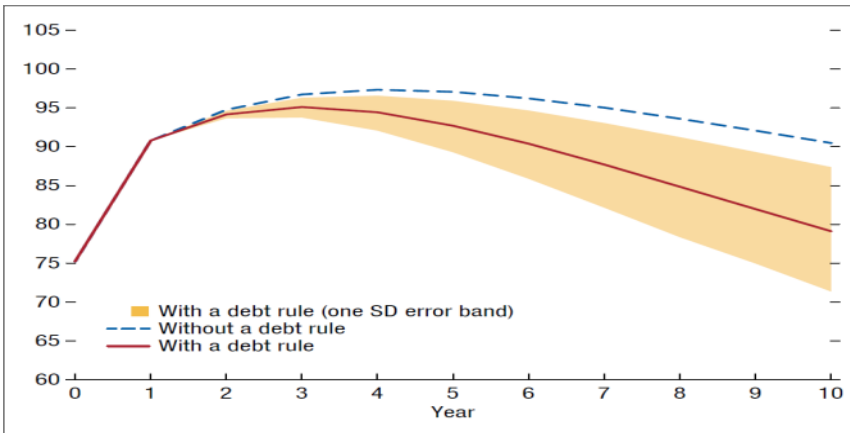
경제위기 이후 가장 논의가 활발한 재정준칙 항목은 채무준칙(debt rule)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팬데믹 이후 증가한 선진국들의 채무부담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성장이 견인되지 못할 경우, 이자상환 부담으로 인하여 견조한 재정여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실증분석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채무 수준은 해당 국가의 재정관리 거버넌스의 견고함을 설명하는 지표에 해당한다. 해당 국가의 신용도가 좋을수록 채무여력도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국가채무 수준이 높다고 하여 재정건전성이 낮다고 평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채무수준이 이미 높은 경우 추가적인 채무 발행에 한계로 긴급 재정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번 코로나19 위기와 같이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바 있다.<sup>106)</sup> IMF (2021. 10.)는 ‘debt rule’과 같은 재정준칙이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증가한 채무가 다시 정상화되는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106) Jurzyk et al., “COVID-19 and inequality in Asia: breaking the vicious cycle,” IMF working paper WP/20/217, 2020, p. 16, Figure 24.

있다고 보았다. [그림 VI-21]은 IMF가 추정한 것으로 선진국들과 신흥국들의 재정건전화 조치를 반영한 재정기조 변화가 제시되어 있다. 2021년 10월 기준 국제기구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팬데믹 이후 막대한 규모의 재원투입 이후의 긴축을 포함한 후속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유동성 변화와 시장가격 불안정성이 예측되는 가운데, 각국의 재정당국은 불안정한 거시경제 여건하에서 국가채무 상환계획이 포함된 중기재정프레임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프랑스 안정화 프로그램(2021. 4.)<sup>107)</sup>과 2011년 도입된 독일의 부채제동장치 등은 이러한 중기재정프레임하에서 제안된 재정건전화 적용사례에 해당한다.

[그림 VI-22] 채무 증가 이후 재정건전성 추이 변화

(단위: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



자료: IMF, *Fiscal Monitor*, 2021. 10a, p. 29., Figure 2. 9.

### 3) 우리나라 재정준칙 도입의 현주소

2020년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은 채무증가 속도 조절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하에서의 지출과 수지 수준을 의미하는 재정규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회복이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중장기 고품위와 복지수요

107) 프랑스 안정화 프로그램, <https://www.tresor.economie.gouv.fr/Articles/2021/04/14/presentation-du-programme-de-stabilite-2021-2027>, 검색일자: 2021. 10. 2.

증가로 지출증가 압박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Top down’과 ‘Bottom up’ 방식에서의 재정규율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른바 위로부터의 재정규율을 재정준칙이라고 한다면, 아래로부터의 재정규율은 그간의 세입과 세출, 전반적인 재정제도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아래로부터의 재정규율은 실제 국가채무를 유발하는 재정지출 항목 내에서의 지출 제한이 작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의무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국회 내 전문역량 강화 ② 중앙·지방 간 연성예산적인 재정구조 개편 ③ 유사중복적인 사업 구조조정 시스템 개편 등이 해당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정준칙을 포함한 재정규율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재정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고, 재정준칙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단’에 해당한다.

먼저 우리나라 재정준칙 논의과정과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0년 10월 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 GDP 통합재정수지 -3% 이내로 관리하며, 채무 수준 60% 룰은 시행령에 담은 방식의 ‘한국형 재정준칙’을 마련한 바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로 보면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과 근거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법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과 ‘한국형 재정준칙’ 방식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 모두 회의적인 입장이다. 2020년 10월 ‘한국형 재정준칙’ 입법예고 과정에서 여당에서는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유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였고, 야당에서는 재정준칙의 효과성 면에서 느슨한 규정, 산식의 근거를 이유로 반대한 상황이다.<sup>108)</sup> 재정준칙 도입은 국회 정책결정 권한자들의 의사결정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있다.<sup>109)</sup> 정부는 이에 대해 재정준칙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현재 국제 신용평가에서의 우리나라 재정건전화 정도는 비교적 높은 등급

108) 『매일경제』, 「재정준칙 법안 급주 입법예고, 예외적용할 ‘위기정도가 쟁점」, 2020. 10. 26.,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0/1094047/>, 검색일자: 2021. 10. 21.

109) 권오성, 「재정준칙 도입의 쟁점과 시사점」, 한국행정연구원 ISSUE Paper, 제98호, 2020, p. 15.

을 유지하고 있으나, 한국의 고령화 추세(7월 22일 피치), 공기업 부채 증가 속도(4월 28일, S&P) 등이 국가채무 증가 속도와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sup>110)</sup> 재정준칙 제정을 통한 체계적인 재정관리에 대한 외형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재정준칙은 신용평가사들의 중장기 우려를 상쇄할 수 있는 방패막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우리나라 제도개편사 관점에서 볼 때, 재정준칙은 시기의 문제이지 단계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재정준칙 도입 가능성이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고 실현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낮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지만, 재정준칙 도입을 전제로 끊임없이 논의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재정준칙 산식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전망치의 신뢰성, 장래 인구통계 및 복지대상인구 증가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전망치 탄력성 등의 성격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가 단계적으로 검증될 것이기 때문이다.

#### 다. 비전통적 재정 및 금융정책의 효과성 확보

코로나19 경제위기 이후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이른바 ‘비전통적 재정 및 금융정책’이 활발히 이루어진 것이다. 재정정책 중 대표적인 비전통적 방식은 ‘현금지원’ 방식과 ‘직접일자리’ 고용과 같은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전통적 재정정책은 세입에서의 소득재분배, 예산배분을 통한 자원재배분,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 조절 등이 해당한다. 방역대책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지원, 고용안전망 지원 등은 현금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 대상이었고,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현금지원이 이루어진 바 있다. 법에 의한 수급자를 선정하여 급여성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제외하고 정부가 직접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 지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의

110) 『서울신문』, 「그림자 빛 많다... 방치된 한국형 재정준칙 입법 서둘러라」, 2021. 7. 10.,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11004001>, 검색일자: 2021. 10. 21.

경우에도 주거비 지원, 연료비 지원 등 개인과 가구 단위로 현금이 지원된 바 있다.

금융정책의 경우에도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양적 완화’ 방식, 즉 통화당국이 이자율 조정을 통한 시장가격 변동이 아닌 직접 채권매입 조절을 통한 통화량을 조정하는 방식이 도입된 바 있다. 이는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아니며 미국이 위기극복을 위한 직접 개입방식으로 채택한 방식이었는데, 이후 ECM 등도 활용하여 일반적인 통화량 조정 방식이 되었고 코로나19 위기에서는 전면적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일부 또는 특정 금융시장의 기능상실 및 경색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특정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의 ‘신용정책’ 또한 경제위기 때마다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sup>111)</sup> 이러한 비전통적인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은 다양한 재정수요와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각국 정부는 긴급정책의 효과 분석을 기반으로 향후 위기 대응 매뉴얼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전통적·비전통적이라는 구분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방역조치의 강제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긴급지원 방식이었으므로 비전통적인 재정 및 금융조치는 부득이한 정책이었다. 그간의 전통적인 지원방식은 정책분석의 영역에 속해 있으나, 긴급하게 도입되었거나 외부 여건에 의하여 시장에서 수용해야 했던 비전통적 정책의 경우에는 인식 부족과 자료 부족 등으로 정책분석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재정지출에 대한 재정승수 논의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데, 이른바 비전통적 정책지원을 포함한 분석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향후 위기 대응 매뉴얼에는 이러한 비전통적 재정 및 금융정책의 효과분석 DB가 구축되어 긴급 재정투자의 우선순위 등이 분석적으로 논의될 것을 제안한다.

---

111)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회사채시장 안정 등 정책목표를 명시하고 이를 위해 금융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중앙은행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금융시장을 이끄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범주에는 금리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마이너스 금리정책과 사전적 방향 제시(Forward Guidance, 이하 FG), 금융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한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이하 QE), 신용완화(Credit Easing) 등이 있다”(장민, 2020, p. 13).

## 4. 결론

2022년은 경제회복 국면과 경기불안 요소가 상존하는 가운데 새 정부가 출범하는 해이다. 유례 없는 경제위기 이후 대규모 유동성이 시장에 존재하는 가운데 여전히 다양한 변이로 인한 추가적인 감염병발 경제불안은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경제지표로는 팬데믹 이전으로의 회복이 되었으나, 신흥국과 개도국들의 회복 속도가 불투명하고, 추가 변이 확산 여부에 따른 회복이 어느 정도 견고하게 유지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IMF Fiscal Monitor(2021. 10a.)는 중기재정계획의 설계는 첫째, 지속가능성 확보, 둘째, 경기순응적인 재정조치 이후의 경기안정화, 셋째, 단순하고 적용 가능한 재정준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2022년 이후 회복을 위한 중기재정계획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순차적인 분야별 재정투자, 성장모멘텀 확보를 위한 잠재성장률 확충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하였다.<sup>112)</sup>

본 연구는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기는 그간의 경제위기와는 성격이나 규모 면에서 다를 뿐더러, 재정역할의 범위가 과거보다 훨씬 넓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감염병 확산이라는 외부충격 발생 이후 각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감염병 확산 양상과 국가 대응 방식에 주목하였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선진국들과 미국의 51개 주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추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진국들과 미국의 주별 자료 기준으로 볼 때, 해당 국가의 기대수명이 비교적 긴 경우, 국가채무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소득계층 간 분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19 사망자 비율이 대체로 낮은 추세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사례에서는 코로나19로 가장 충격이 컸던 민생분야인 고용분야 충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상대적으로 저학력자, 여성, 20대의 취업확률이 비교계층에 비하여 낮았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라는 외부충격이 비대칭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 20대의 취업

112) IMF, *Fiscal Monitor*(2021. 10a.), pp. 4-6; p. 27.

확률, 경제활동 참가율 감소충격이 비교군에 비하여 크게 나타난 반면, 60대 - 고졸 이하 그룹에서는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취업확률 증가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통한 고용지원이 노년층, 그리고 이들 중에서도 저숙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 타 계층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았는지 검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청년과 여성에 대한 지원으로 일부 전환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경제위기 대응은 재정 및 금융지원 규모와 방법, 중기계획 수립, 국가경쟁력 강화 투자 등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대응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초기 대응에서는 방역과 의료 부분의 투자가 집중되었고, 이후에는 고용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대응이 주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노동유연성이 높은 미국의 경우 엄청난 규모의 실업급여와 현금급여로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는 점은 주요국들과 다른 모습이다. 그 외에도 양극화 완화를 위한 사회보장부담금의 납부 연기·면제, 아동수당 등과 같은 자녀지원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취약가구 생계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다양한 조치들은 피해 규모가 큰 기업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정책대상이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국들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사회구조적 취약점을 파악하는 계기로 보았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을 중기계획에 담고자 하였다. 특히 미래세대를 위해 직업훈련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많은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도로·철도, 통신망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기후·환경 친화적인 경제구조로의 전환과 디지털 개혁·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투자계획들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경제위기와 성장모멘텀 확보를 위한 재정역할 강화가 불가피하고 이를 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건전성 틀 구축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단기적인 재정책장 기조에 대해서는 2022년 이후 경제회복 여부 이후에 판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입과 세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인구구조 변화 속도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 속도, 국가채무 증가가 위협적인 수준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입 확대에 대한 시기와 방법, 세목별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증세 여부는 경제회복 정도에 따라 대상과 방법을 설정할 수 있으며, 경제회복 이후에도 고용시장의 회복 여부가 증세의 내용과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소득 기반 축소와 재정지원으로 인한 소비계층 대상 확대에 따른 소비세 강화 방안도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기극복과 구조적 개편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으로 개인별 지역별 양극화 개선, 순차적 재정투자를 통한 불균등한 자원 재배분 조정 역할 강화, 성장모멘텀과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개인 및 가구를 중심으로 한 소득양극화 개선을 위한 정책은 정부의 주요 소득재분배 아젠다이며 주요국 등의 사례에서도 참고할 내용이 있는 반면, 선진국 중 드물게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양극화는 중장기적인 균형발전 의제로만 다루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지방(교육포함) 재정관계는 이른바 '연성예산' 구조이며, 최종 재정책임은 중앙정부의 채무로 이전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지역소멸이 계속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는 지역별 격차 완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나라 전체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재정역할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세입 대안으로 단계별 세입 확보 방안을 제안하였다. 경기회복과 관련한 재원 확보 정책의 시기를 조율하고, 증세수단의 선택 또한 초기에는 파급범위와 효과가 제한적인 세목들을 제안하였다. 경제회복 이후 고용상황의 개선과 담세여력 확보가 나타난 이후, 소득과세의 실효세율 제고, 소비세의 역할 강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국제적 여건 변화와 같이 고려해야 하는 탄소세, 법인세율에 대해서도 단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함도 강조하였다. 종합부동산세의 부유세로의 전환, 사회보장기여금 요율인상 등 소득재분배 개선 대안도

제안하고 있다.

재정지출과 관련해서는 첫째, 법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잠식 최소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이전지출 방식을 현재와 같은 법정지출이 아닌 재정여건 변화를 감안한 방식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초중등교육에만 집중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으로 재배분하여 재정수요를 반영하고 노령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재정효과성 확보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사회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사회보험 부담율을 증가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부는 증세 논의를 본격화하고 최종 부담자인 국민과 국회가 추가적인 부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장기 의제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사회보험 개혁은 국민부담 차원에서는 조세만큼이나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과제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국민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수급대상 연령 조정, 보험료율 조정, 의사결정 거버넌스 개편 등 중장기 재정부담 의제를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재정정상화를 위한 출구전략이 중요해진 지금, 중기계획의 의미가 과거와 달라졌음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재정준칙과 같은 재정규율이 뒷받침된 구체화된 중기계획이 국가의 신용도와 신뢰성 확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이후 급증한 채무부담에 대한 이행은 해당 국가의 신용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신용도는 그 국가의 재정계획에 담긴 출구전략 등의 경제전망치와 재정준칙 등이 얼마나 강건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본 연구는 재정준칙 법적 실효성, 강제성 여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지만, 그 논의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증세의 중요성 등이 분석될 것이므로 재정준칙을 포함한 재정규율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긴급 재정지원 단계에서 이루어진, 이른바 비전통적 금융정책 및 재정정책의 유효성 검증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재정지출의 긴급성, 재정수요의 정치적 수요 등 외부 여건에 의하여 시장에서 수용해야 했던 비전

통적 정책의 경우에는 인식 부족, 자료 부족, 역량 부족 등으로 정책분석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미래에도 사용될 정책수단 인바,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전체적인 규모 파악과 효과성 검증작업의 중요성을 제안한다.

---

## 참고문헌

---

### 제I장, 제IV장, 제VI장의 1, 3, 4, 5절

#### <국내 문헌>

- 강두용·민성환, 「코로나 팬데믹의 국내 지역경제 영향」, 『I-KIET 산업경제 이슈』, 제114호, 산업연구원, 2021. 6. 29.
- 강두용·민성환·박성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 1년의 한국경제: 경제적 영향의 중간평가」, 『i-KIET 산업경제이슈』, 제109호, 산업연구원, 2020. 5.
- 국회예산정책처, 『사회보장정책분석 I (총괄)』, 2020. 6.
- 권오성, 「재정준칙 도입의 쟁점과 시사점」, 한국행정연구원 ISSUE Paper 제98호, 2020.
- 김지연, 「코로나 19 고용충격의 성별격차와 시사점」, 『KDI 경제전망』, 제38권 제1호, 한국개발연구원, 2021. 5. 12., pp. 61~68.
- 김완희·박윤진·최금주,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국가회계 재정통계 Brief』 vol. 2021-0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4.
- 대한민국 정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1.
- \_\_\_\_\_, 「2022년도 예산안」, 2021.
- 대한민국 정부(관계부처 합동),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주요 내용」, 보도자료, 2021. 6.
- \_\_\_\_\_, 「인구구조 변화영향과 대응방향: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2021. 7.
- \_\_\_\_\_,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비대면 경제활성화 방안」, 2020. 11. 19.
- 박성욱, 「경제 양극화 심화에 따른 취약계층 대응」, 『2021년 주요 금융이슈』, 금융연구원, 2021. 1.

- 박창현·김대용·김형진, 「코로나 19 위기 이후의 성장불균형 평가: 국가간 국가내 부문간 차별화된 충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BOK 이슈노트』, 제2020-15호, 한국은행, 2020. 12. 21.
- 윤성주·김정은·서동규, 「국제기구 주요보고서 요약(IMF Fiscal Monitor April 2021)」, 2021 No.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2021.4.
- 윤성주·장준희·배경진, 「국제기구 주요보고서 요약(IMF Fiscal Monitor October 2021)」, 2021 No. 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2021. 11.
- 이재윤,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봉쇄조치 실시현황 및 시사점」, 『이슈와논점』, 제1702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 4. 24.
-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2018. 9.
- 장민, 「우리나라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현황과 과제」, 『KIF VIP 리포트』, 2020-18, 한국금융연구원, 2020.
- 한국금융연구원, 「코로나 19 사태와 K자형 양극화 회복경로」, 『금융브리프』, 제29권 제20호, 2020.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보도자료(통화정책방향)」, 2021. 10. 12.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10. 12.
- 행정안전부,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 확정」, 보도자료, 2021. 7. 28.
- 황수빈·박상순, 「코로나 19 이후 노동시장 미스매치 상황평가」, 한국은행 조사국 논고, 2021. 2.

## 〈해외 문헌〉

- Abay, Kibrom A., Kibrom Tafere, and Andinet Woldemichael, “Winners and Losers from COVID-19 :Global Evidence from Google Search,” WB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WPS 9268(World Bank Group), 2020.
- Acemoglu, Daron, Simon Johnson, and James R. Robinson, “Institutions as a fundamental cause of long-run growth,” *Handbook of Economic Growth*, 1, 2005, pp. 385~472.; Edited by Philippe Aghion and

- Steven N. Durlauf, Elsevier, B.V. 2005.
- Adams-Prassl, A., Boneva, T., Golin, M., and Rauh, C. “Inequality in the impact of the coronavirus shock: Evidence from real time survey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89, 2020.
- Allcott, H., Boxell, L., Conway, J. C., Gentzkow, M., Thaler, M., and Yang, D. Y., “Polarization and Public Health: Partisan Differences in Social Distancing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Working Paper No. 26946; Working Paper Seri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20.
- Alon, T. M., Doepke, M., Olmstead-Rumsey, J., and Tertilt, M., “The Impact of COVID-19 on Gender Equality (Working Paper No. 26947; Working Paper Seri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20.
- Angelov, Nikolay and Daniel Waldenström, “Covid-19 and income inequality: Evidence from monthly population registers,” CESifo Working paper, 9178 2021, 2021. 7.
- Aspachs, O. and R. Durante, J. García Montalvo, A. Graziano, J. Mestres, and M. Reynal-Querol, “Real-Time Inequality and the Welfare State in Motion: Evidence from COVID-19 in Spain,” CEPR Discussion Paper 15118,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Washington, DC., 2020.
- Azevedo, Joao Pedro Wagner De, Amer Hasan, Diana Goldemberg, Syedah Aroob Iqbal, and Koen Martijn Geven, “Simulating the Potential Impacts of COVID-19 School Closures on Schooling and Learning Outcomes: A Set of Global Estimates (English),”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9284(World Bank Group), 2020.
- Baccini, L. and Brodeur, A. “Explaining Governors’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in the United States”(SSRN Scholarly Paper ID 3579229),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2020.

- Baker, Scott R., Nicholas Bloom, Steven J. Davis and Stephen J. Terry, "COVID-Induced Economic Uncertainty," NBER Working Papers 26983,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 2020.
- Baqae, D and E. Farhi, *Supply and Demand in Disaggregated Keynesian Economies with an Application to the Covid-19 Crisis*, London,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2020.
- Barrero, J. M., Bloom, N., and Davis, S. J., "COVID-19 Is Also a Reallocation Shock"(Working Paper No. 27137; Working Paper Seri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20.
- Bartos, V., Bauer, M., Cahlíková, J., and Chytilová, J., "Covid-19 crisis fuels hostility against foreigners," Available at SSRN 3593411, 2020.
- Béland, L.-P., Brodeur, A., and Wright, T., "The Short-Term Economic Consequences of Covid-19: Exposure to Disease, Remote Work and Government Response"(SSRN Scholarly Paper ID 3584922),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2020.
- Bergman, U. M., M. M. Hutchison, and S. E. Hougaard Jensen., Promoting Sustainable Public Finances in the European Union: The Role of Fiscal Rules and Government.
- Bianchi, F., Faccini, R., and Melosi, L.,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in Times of Large Debt: Unity is Strength"(Working Paper No. 27112; Working Paper Seri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20.
- Bigio, S., Zhang, M., and Zilberman, E., "Transfers vs Credit Policy: Macroeconomic Policy Trade-offs during Covid-19"(Working Paper No. 27118; Working Paper Seri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20.
- Bonadio, B., Huo, Z., Levchenko, A. A., and Pandalai-Nayar, N., "Global supply chains in the pandemic," No. w27224,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20.

- Brodeur, Abel, David M. Gray, Anik Islam and Suraiya Bhuiyan, “A Literature Review of the Economics of Covid-19,” IZA Discussion Paper No. 13411, 2020.
- Brynjolfsson, E., Horton, J., & Ozimek, A., COVID-19 and Remote Work: An Early Look at US Data. 16., 2020.
- Caselli, F., D. Stoehlker, and P. Wingender., “Individual Treatment Effects of Budget Balance Rules,” IMF Working Paper 20/274, 2020.
- Céspedes, L. F., Chang, R., and Velasco, A, The macroeconomics of a pandemic: a minimalist model (No. w27228).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20.
- Chen, Sophia, Deniz Igan, Nicola Pierri and Andrea Presbitero, “Tracking the Economic Impact of COVID-19 and Mitigation Policie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IMF Working Papers, 2020.
- Chiou L and Tucker C, “Social distancing, Internet access and inequality,” NBER Working Papers 2698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 2020.
- Deaton, Angus, “Congressional Testimony to the House Budget Committee,” 2020. 6.
- Deaton, Angus, “COVID-19 and Global Income Inequality,” NBER Working paper 28392, February 2021.
- Debrun, X., and L. Jonung, “Under Threat: Rules-Based Fiscal Policy and How to Preserve It,” Working Paper 2018: 29, Department of Economics, Lund University, Lund, Sweden, 2018.
- Dingel, J. I., and Neiman, B., “How Many Jobs Can be Done at Home?” (Working Paper No. 26948; Working Paper Seri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20.
- Domenico Montanaro, “There is a stark Red-Blue divide when it comes to States’ vaccine rates,” NPR(June 9, 2021), <https://www.npr.org/2021/>

- 06/09/1004430257/theres-a-stark-red-blue-divide-when-it-comes-to-states-vaccination-rates, 검색일자: 2021. 10. 1.
- FDA, “South Korea’s responses to COIVID-19,” FDA 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CDRH), 2021. 5.
- Fernandez-Villaverde, Jesus and Charles Jones, “Macroeconomic Outcomes and COVID-19: A Progress Report,” NBER Working Papers, No 28004,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 2020.
- Forsythe, E., “Labor Market Flows and The Covid-19 Economy,” 2020.
- Fuceri, Davide, Prakash Loungani, Jonathan D. Ostry and Pitero Pizzuto, “Will Covid-19 affect inequality?: Evidence from past pandemics,” *Covid Economics*, 12(1), CEPR Press, 2020, pp. 138~157.
- Gordon, Nora and Sarah J. Reber, “Federal Aid to School Districts During the COVID-19 Recession,” No 27550, NBER Working Paper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 2020.
- Gupta, Sumedha, Laura Montenegro, Thuy Dieu Nguyen, Felipe Lozano-Rojas, Ian M. Schmutte, Kosali Ilayperuma Simon, Bruce A. Weinberg, and Coady Wing, “Effects of Social Distancing Policy on Labor Market Outcomes (May 2020),” NBER Working Paper No. w27280, 2020.
- Hacioglu-Hoke, Sinem, Diego R. Känzig and Paolo Surico, “The Distributional Impact of the Pandemic (July 2020),” CEPR Discussion Paper No. DP15101, 2020.
- IMF, *Fiscal monitor, April 2021: A Fair Shot*, 2021. 4.
- \_\_\_\_\_, *Fiscal monitor, October 2021: Strengthening the Credibility of Public Finances*, 2021. 10.
- \_\_\_\_\_, *World Economic Outlook: Recovery during a Pandemic—Health Concerns, Supply Disruptions, Price Pressures*, 2021. 10.
- \_\_\_\_\_,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Policy Support and Vaccines Expected to Lift Activity,” 2021. 1.

- Jurzyk, Emilia M., Medha Madhu Nair, Nathalie Pouokam, Tahsin Saadi Sedik, Anthony Tan, and Irina Yakadina, "COVID-19 and Inequality in Asia: Breaking the Vicious Cycle," IMF Working Paper No. 2020/217, 2020.
- Kawachi, I. and Kennedy, B., "Income inequality and health: pathways and mechanisms," *Health Services Research* 34(1), pp. 215~277, 1999.
- Loayza, Norman V. and Steven Pennings, "Macroeconomic Policy in the Time of COVID-19: A Primer for Developing Countries", World Bank, Research and Policy Briefs, no. 28., 2020.
- Ludvigson, Sydney C., Sai Ma, and Serena Ng, "COVID-19 and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costly disasters," April 2020, Revised in September 2020, NBER.
- Maliszewska, Maryla, Aaditya Mattoo, and Dominique van der Mensbrugghe, "The Potential Impact of COVID-19 on GDP and Trade: A Preliminary Assessment (April 10, 2020),"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9211, 2020.
- McKibbin, Warwick and David Vines, "Global macroeconomic cooperation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A Roadmap for the G20 and the IMF,"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36(Issue Supplement\_1), 2020, pp. 297~337.
- McKibbin, Warwick J. and Fernando, Roshen, "Global Macroeconomic Scenarios of the COVID-19 Pandemic (June 25, 2020)," CAMA Working Paper No. 62, 2020.
- Mulligan, C. B., "Economic Activity and the Value of Medical Innovation during a Pandemic," Working Paper No. 27060,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20.
- OECD, "The territorial impact of Covid19: Managing the crisis across levels of government," 2020. 6.

\_\_\_\_\_, *OECD Employment Outlook 2021: Navigating the COVID-19 Crisis and Recovery*, OECD Publishing, Paris, 2021.

Schmitt-Grohé, S. K., Teoh, and M. Uribe, *Covid-19: Testing Inequality in New York City*, London,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2020.

Simonov, A., Sacher, S. K., Dubé, J.-P. H., and Biswas, S., “The Persuasive Effect of Fox News: Non-Compliance with Social Distanc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Working Paper No. 27237),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20.

Tsvetkova, A., S. Grabner, and W. Vermeulen, “Labour demand weaken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US cities: Stylised facts and factors related to regional resilience,” OECD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Papers, No. 2020/06, OECD Publishing, 2020.

Wen, Jean-François, “Temporary investment incentives,” IMF Fiscal affairs, Special series on covid-19, 2020.

Wildman, John, “Covid-19 and income inequality in OECD countries,” *The Europ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22, 2021, pp. 455~462.

Yasenov, V. I., “Who Can Work from Home?”(SSRN Scholarly Paper ID 3590895).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2020.

## 〈신문기사〉

『매일경제』, 「재정준칙 법안 금주 입법예고. 예외적용할 ‘위기’정위가 쟁점」, 2020. 10. 26.,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0/1094047/>, 검색일자: 2021. 10. 21.

『서울신문』, 「그림자 빛 많다... 방치된 한국형 재정준칙 입법 서둘러라」, 2021. 8. 10.,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11004001>.

『연합뉴스』, 「美 백신 접종률 따라 코로나 확산 달라져.... ‘2개의 미국’ 표 면화」, 2021. 7. 6.,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6008800091>,

검색일자: 2021. 10. 21.

『의학신문』, 「델타형 변이바이러스 급속확산... 지난 주 153명」, 2021. 7. 6.,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4214>, 검색일자:  
2021. 10. 19.

## 〈통계자료 및 누리집〉

IMF, IMF Fiscal Monitor, Database of Country Fiscal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Table 1,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FM-covid19.pdf>, 검색일자: 2021. 3. 8.

OECD, OECD Stat, Dataset(Family Indicators; Life Expectancy; Graduation and entry rates; Government at a Glance; Demographic References; National Account at a Glance; Revenue Statistics; Education at a Glance; 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Gross domestic product; Income distribution; Economic Outlook no. 108-December 2020), <https://stats.oecd.org/>, 검색일자: 2021. 3. 8.~9. 24.

\_\_\_\_\_,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17,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76284-en>, 2017, p. 117 Figure 3.2., 검색일자: 2021. 4. 6.

\_\_\_\_\_, Education at a glance 2020, <https://doi.org/10.1787/69096873-en>, 2020, p. 50, Table A1.1., 검색일자: 2021. 4. 7.

U.S. Census Bureau, Archived(educational attainment, Individuals Below Poverty Level by State, MEAN HOUSEHOLD INCOME OF QUINTILES, Historical Population Density, American Community Survey), <https://data.census.gov/cedsci/>, 검색일자: 2021. 3. 8.~9. 24.

U.S. CDC, COVID-19 Vaccinations in the United States, [https://covid.cdc.gov/covid-data-tracker/#vaccinations\\_vacc-people-onedose-percent-pop12](https://covid.cdc.gov/covid-data-tracker/#vaccinations_vacc-people-onedose-percent-pop12), 검색일자: 2021. 10. 1.

\_\_\_\_\_, Life Expectancy at Birth by State(2018), <https://www.cdc.gov/nchs/>

- pressroom/sosmap/life\_expectancy/life\_expectancy.htm, 검색일자: 2021. 5. 18.
- Worldmeters, Coronavirus Cases and Deaths in the United States,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country/us/>, 검색일자: 2021. 4. 6.
-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 Glossary(GDP by State), <https://www.bea.gov/data/gdp/gdp-state>, 검색일자: 2021. 4. 6.
- U.S. Federal Election Commission, “Official 2020 Presidential General Election Results,” <https://www.fec.gov/resources/cms-content/documents/2020presgeresults.pdf>, 검색일자: 2021. 9. 3.
- WHO, WHO Coronavirus (COVID-19) Dashboard, <https://covid19.who.int/table.>, 검색일자: 2021. 3. 8.~ 10. 20.
- United State Growth And Debt Rank/Welfare Spending(percent GDP by state), [usgovernmentspending.com](http://usgovernmentspending.com), 검색일자: 2021. 4. 16.
- National Vital Statistics System, “National Vital Statistics Report 70(2), Births: Final Data for 2019,” <https://www.cdc.gov/nchs/data/nvsr/nvsr70/nvsr70-02-508.pdf>, March 2021, 검색일자: 2021. 4. 20.

## 제II장

### 〈국내 문헌〉

-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뉴딜 2.0』, 2021. 7. 14.
- 기획재정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보도자료, 2020. 3. 4.
- \_\_\_\_\_,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원-포인트 추경예산안 편성」, 보도자료, 2020. 4. 16.
- \_\_\_\_\_,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보도자료, 2020. 6. 3.

- \_\_\_\_\_,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보도자료, 2020. 9. 10.
- \_\_\_\_\_,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보도자료, 2021. 7. 1.
- \_\_\_\_\_,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과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확정」, 보도자료, 2020. 3. 17.
- \_\_\_\_\_,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보도자료, 2020. 4. 30.
- \_\_\_\_\_,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보도자료, 2020. 7. 3.
- \_\_\_\_\_,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보도자료, 2020. 9. 22.
- \_\_\_\_\_,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보도자료, 2021. 3. 25.
- \_\_\_\_\_,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보도자료, 2021. 7. 24.
- 김정연, 「2020년 수정예산에 관한 2020년 4월 25일 법 제2020-473호(Loi n° 2020-473 du 25 avril 2020 de finances rectificatives pour 2020)」, 정부 재정위원회, 2020. 4. 27([https://nas.na.go.kr/nas/info/diplomacy\\_active02.do?mode=download&articleNo=663157&attachNo=453952](https://nas.na.go.kr/nas/info/diplomacy_active02.do?mode=download&articleNo=663157&attachNo=453952), 검색일자: 2021. 9. 23.).
- \_\_\_\_\_, 「2020년 7월 30일 3차 수정예산법(Loi n° 2020-935 du 30 juillet 2020 de finances rectificatives pour 2020)」, 2020. 8. 14([https://nas.na.go.kr/nas/info/diplomacy\\_active02.do?mode=download&articleNo=665072&attachNo=455446](https://nas.na.go.kr/nas/info/diplomacy_active02.do?mode=download&articleNo=665072&attachNo=455446), 검색일자: 2021. 9. 23.).
- \_\_\_\_\_, 「[2020년 제4차 수정예산법] 2020년 수정예산에 관한 2020년 11월 30일 법 제2020-1473호(LOI n° 2020-1473 du 30 novembre 2020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20)」, 정부 재정·일반경제·예산통제 위원회, 2020. 12. 7([https://nas.na.go.kr/nas/info/diplomacy\\_active02.do?mode=download&articleNo=666402&attachNo=457353](https://nas.na.go.kr/nas/info/diplomacy_active02.do?mode=download&articleNo=666402&attachNo=457353), 검색일자: 2021. 9. 23.).
- 김태근, 「미 연방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정책에 대한 고찰: 현금 지원 정책(Economic Impact Payment)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보장리뷰』, 제13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pp. 21~35.
- 김혜진·이은영·윤경수·정대형·이유나, 「코로나19 관련 주요국의 경제정

- 책대응 및 시사점」, 『산은조사월보』, 제773호, KDB 산업은행 미래전략 연구소, 2020. 4(<https://rd.kdb.co.kr/fileView?groupId=6573A495-AD99-A358-09B2-61CB45384BB0&fileId=8E7575E3-E8BC-0EBB-4590-6FAC39F3A3D5>, 검색일자: 2021. 9. 23.).
-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개」, 보도자료, 2021. 6. 20.
- 신정환, 「미국 고용주가 알아야 할 ‘가족 우선 COVID-19 대응 법안」, 『Kotra 해외시장뉴스』, 2020. 4. 2.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80936&searchNationCd=101001>), 검색일자: 2021. 9. 24.
- 윤성주·구윤모, 『미국 코로나19 대응정책 종합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2021. 7.
- 윤성주, 「바이든 정부의 조세재정정책 및 시사점」, 『정책토론회(바이드노믹스와 한국경제의 과제) 발표자료』, 한국개발연구원, 2021. 8. 25.
- \_\_\_\_\_, 「바이든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및 논의 현황」, 『재정포럼』, 제25권 제10호(통권 제304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10., pp. 34~55.
-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프랑스 1차 수정재정법안 주요 내용」, 2021. 6. 8([https://overseas.mofa.go.kr/fr-ko/brd/m\\_9457/view.do?seq=133223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btnPrint](https://overseas.mofa.go.kr/fr-ko/brd/m_9457/view.do?seq=133223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btnPrint), 검색일자: 2021. 9. 27.).
- \_\_\_\_\_, 「프랑스 정부 코로나19관련 기업지원 연대기금 설명자료」, 2020. 3. 25 ([https://overseas.mofa.go.kr/fr-ko/brd/m\\_9450/view.do?seq=134507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4](https://overseas.mofa.go.kr/fr-ko/brd/m_9450/view.do?seq=134507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4), 검색일자: 2021. 9. 27.).
- 중앙사고 수급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6월 28일)」, 보도자료, 2020. 6. 28.,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55170>, 검색일자: 2021. 9. 2.

- 최바울 · 권신정 · 이정은, 「통계로 본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현황」, 『통계플러스』, 2020년 여름호, 통계개발원, 2020. 6. 29.
- 탁상우, 「미국의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제사회보장리뷰』, 제13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pp. 5~20.
- 한국무역협회, 「일본 고용조정 지원금 특례, 조성률 인상, 비정규직도 대상, 해외시장 뉴스」, 2020. 4. 6(<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overseasMrktNews/overseasMrktNewsDetail.do?type=0&nIndex=1796559>, 검색일자: 2021. 9. 2.).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2020년 3월 2호 재정동향』, 2020. 3. \_\_\_\_\_, 『2020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20. 7. \_\_\_\_\_, 『2020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2020. 12. \_\_\_\_\_, 『2021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21. 7.

#### 〈해외 문헌〉

-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2019. 7. 31(<https://www5.cao.go.jp/keizai3/econome/r1chuuchouki7.pdf>, 검색일자: 2021. 10. 19.).
- \_\_\_\_\_,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2021. 1. 21(<https://www5.cao.go.jp/keizai3/econome/r3chuuchouki1.pdf>, 검색일자: 2021. 10. 19.).
- 프랑스 정부, “Déclaration de M. Édouard PHILIPPE, Premier ministre, sur le Covid-19,” 2020. 3. 14(<https://www.gouvernement.fr/partage/11444-declaration-de-m-edouard-philippe-premier-ministre-sur-le-covid-19>, 검색일자: 2021. 10. 13.).
- \_\_\_\_\_, “Discours de M. Jean CASTEX, Premier ministre, devant l’Assemblée nationale,” 2020. 10. 29(<https://www.gouvernement.fr/partage/11832-discours-de-m-jean-castex-premier-ministre-devant-l-assemblee-nationale>, 검색일자: 2021. 10. 13.).
- \_\_\_\_\_, “Discours de Jean Castex: conférence de presse sur les mesures contre la Covid-19,” 2021. 3. 19(<https://www.gouvernement.fr/partage/>

12187-discours-de-jean-castex-conference-de-presse-sur-les-mesures-contre-la-covid-19, 검색일자: 2021. 10. 31.).

Federal Ministry of Finance, “German stability programme 2019,” 2019. 4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EN/Standardartikel/Press\\_Room/Publications/Brochures/2019-04-17-german-stability-programme-2019.pdf?\\_\\_blob=publicationFile&v=8](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EN/Standardartikel/Press_Room/Publications/Brochures/2019-04-17-german-stability-programme-2019.pdf?__blob=publicationFile&v=8), 검색일자: 2021. 10. 18.).

\_\_\_\_\_, “German stability programme 2021,” 2021. 4([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EN/Standardartikel/Press\\_Room/Publications/Brochures/2021-04-23-german-stability-programme-2021.pdf?\\_\\_blob=publicationFile&v=14](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EN/Standardartikel/Press_Room/Publications/Brochures/2021-04-23-german-stability-programme-2021.pdf?__blob=publicationFile&v=14), 검색일자: 2021. 10. 18.).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21([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1/April/weo-report?c=132,542,&s=NGDP\\_RPCH,NGDP,LUR,LE,GGXCNL\\_NGDP,GGXWDN\\_NGDP,GGXWDG\\_NGDP,&sy=2015&ey=2026&ssm=0&scsm=1&sc=0&ssd=1&ssc=0&sic=0&sort=country&ds=.&br=1](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1/April/weo-report?c=132,542,&s=NGDP_RPCH,NGDP,LUR,LE,GGXCNL_NGDP,GGXWDN_NGDP,GGXWDG_NGDP,&sy=2015&ey=2026&ssm=0&scsm=1&sc=0&ssd=1&ssc=0&sic=0&sort=country&ds=.&br=1), 검색일자: 2021. 6. 11).

\_\_\_\_\_,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9([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19/October/weo-report?c=132,542,&s=NGDP\\_RPCH,NGDP,LUR,LE,GGXCNL\\_NGDP,GGXWDN\\_NGDP,GGXWDG\\_NGDP,&sy=2015&ey=2024&ssm=0&scsm=1&sc=0&ssd=1&ssc=0&sic=0&sort=country&ds=.&br=1](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19/October/weo-report?c=132,542,&s=NGDP_RPCH,NGDP,LUR,LE,GGXCNL_NGDP,GGXWDN_NGDP,GGXWDG_NGDP,&sy=2015&ey=2024&ssm=0&scsm=1&sc=0&ssd=1&ssc=0&sic=0&sort=country&ds=.&br=1), 검색일자: 2021. 6. 11.).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 Budget of the U.S. Government FY2021, 2020. 2(<https://www.govinfo.gov/content/pkg/BUDGET-2021-BUD/pdf/BUDGET-2021-BUD.pdf>).

\_\_\_\_\_, Budget of the U.S. Government FY2022, 2021. 5([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1/05/budget\\_fy22.pdf](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1/05/budget_fy22.pdf)).

## 〈웹사이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코로나19 경제대책, <https://www.korea.kr/special/policy>

CurationView.do?newsId=148872965, 검색일자: 2021. 9. 11.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 “Die aktuellen Fallzahlen in Deutschland und weltweit,”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themen/coronavirus/fallzahlen-coronavirus-1738210>, 검색일자: 2021. 6. 29.

일본 내각부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본부, <https://corona.go.jp/emergency>, 검색일자: 2021. 6. 29.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de-ko/index.do>, 검색일자: 2021. 6. 29.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 <https://www.knewdeal.go.kr/>, 검색일자: 2021. 8. 11.

Corona Live 홈페이지, <https://corona-live.com/world/>, 검색일자: 2021. 9. 30.

COVID-19 Data Repository by the Center for Systems Science and Engineering (CSSE) at Johns Hopkins University; <https://github.com/CSSEGISandData/COVID-19> → Code → Download ZIP → COVID-19-master 폴더 → csse\_covid\_19\_data 폴더 → csse\_covid\_19\_time\_series 폴더 → time\_series\_covid19\_confirmed\_global.csv, 검색일자: 2021. 10. 12.

IMF Fiscal Monitor(2021. 6. 5.): Database of Fiscal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https://www.imf.org/en/Topics/imf-and-covid19/~/\\_media/Files/Topics/COVID/FM-Database/july-2021-country-fiscal-measures-database-publication-v3.ashx](https://www.imf.org/en/Topics/imf-and-covid19/~/_media/Files/Topics/COVID/FM-Database/july-2021-country-fiscal-measures-database-publication-v3.ashx), 검색일자: 2021. 9. 2.

IMF Policy Tracker, <https://www.imf.org/en/Topics/imf-and-covid19/Policy-Responses-to-COVID-19#U>, 검색일자: 2021. 9. 13.

Investopedia, <https://www.investopedia.com/government-stimulus-and-relief-efforts-to-fight-the-covid-19-crisis-5113980#germany>, 검색일자: 2021. 9. 10.

Robert Koch Institut, <https://www.rki.de>, 검색일자: 2021. 9. 27.

## 〈신문기사〉

『BBC News 코리아』, 「코로나 백신: 한눈에 보는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각 국가 백신 접종 검색·확인, 2021. 2. 15., <https://www.bbc>.

### 제III장

관계부처 합동, 『2019년/2020년/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19. 7. 3./2020. 6. 1./2021. 6. 28.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 2018. 8.

국회예산정책처, 『2019~205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2018. 12.

\_\_\_\_\_,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 2020. 9.

기획재정부, 『2020년/2021년 경제전망』, 2019. 12. 19./2020. 12. 17.

\_\_\_\_\_,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2020. 9.

대한민국정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1. 9.

마은성·이우석,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정책 효과의 비대칭성」, 『응용경제』, 22(2), 한국응용경제학회, 2020, pp. 5~31.

손민규·이정욱, 「우리나라 재정정책 효과의 비대칭성 분석」, 『금융연구』, 28(2), 한국금융학회, 2014, pp. 45~74.

이태석, 『경기순환에 따른 재정정책의 시간변동효과 측정』, 정책연구시리즈 2017-18, 한국개발연구원, 2017.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2019. 3.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 2019. 5./2019. 11./2020. 5./2020. 9./2020. 11./2021. 5./2021. 11.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19. 1./2019. 4./2019. 7./2019. 11./2020. 2./2020. 5a./2020. 8./2020. 11./2021. 2./2021. 5./2021. 8a./2021. 11a.

\_\_\_\_\_, 「통화정책방향」, 보도자료, 2020. 5. 28./2021. 8. 26./2021. 11. 25.

Alloza, Mario, “Is fiscal policy more effective in uncertain times or during recessions?” Banco de España Working Paper 1730, 2017.

- Auerbach, Alan J. and Yuriy Gorodnichenko, "Measuring the Output Responses to Fiscal Policy,"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4(2), 2012, pp. 1~27.
- \_\_\_\_\_, "Fiscal Multipliers in Recession and Expansion," *Fiscal Policy after the Financial Crisis*, Edited by Alberto Alesina and Francesco Giavazzi, Chapter 2,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3, pp. 63~98.
- Batini, Nicoletta, Giovanni Callegari, and Giovanni Melina, "Successful Austerity in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Japan," IMF Working Paper 12/190,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2.
- Baum, Anja, Marcos Poplawski-Ribeiro, and Anke Weber, "Fiscal Multipliers and the State of the Economy," IMF Working Paper 12/286,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2.
- Blanchard, Olivier, "Public debt and low interest rates," *American Economic Review*, 109(4), 2019, pp. 1197~1229.
- Caggiano, Giovanni, Efram Castelnuovo, Valentina Colombo, and Gabriela Nodari, "Estimating fiscal multipliers: News from a non-linear world," *The Economic Journal*, 125(584), 2015, pp. 746~776.
- Christiano, Lawrence, Martin Eichenbaum, and Sergio Rebelo, "When is the government spending multiplier lar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9(1), 2011, pp. 78~121.
- Cloyne, James S., Òscar Jordà, and Alan M. Taylor, "Decomposing the Fiscal Multiplier," NBER Working Paper 26939,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21.
- Fazzari, Steven M., James Morley, and Irina Panovska, "State-dependent effects of fiscal policy," *Studies in Nonlinear Dynamics & Econometrics*, 19(3), 2015, pp. 285~315.
- IMF, *Fiscal Monitor*, 2021, 10a.
- \_\_\_\_\_, *Government Finance Statistical Manual 2001/2014*, 2001/2014.

\_\_\_\_\_, *World Economic Outlook*, 2019. 4./2019. 10./2020. 4./2020. 10./2021. 4./2021. 10b.

\_\_\_\_\_,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20. 6./2021. 1./2021. 7.

Lian, Weicheng, Andrea Presbitero, and Ursula Wiriadinata, “Public Debt and r-g at Risk,” IMF Working Paper 20/137,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0.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18. 11./2019. 5./2019. 11./2020. 6./2020. 12./2021. 5.

\_\_\_\_\_,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2021. 3./2021. 9.

\_\_\_\_\_, *OECD Economic Outlook, Preliminary Version*, 2021. 12.

\_\_\_\_\_, *OECD Interim Economic Assessment*, 2019. 3./2019. 9./2020. 3./2020. 9.

Owyang, Michael T., Valerie A. Ramey, and Sarah Zubairy, “Are government spending multipliers greater during periods of slack? Evidence from twentieth-century historical data,” *American Economic Review*, 103(3), 2013, pp. 129~134.

Ramey, Valerie A. and Sarah Zubairy, “Government spending multipliers in good times and in bad: evidence from US historical data,”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6(2), 2018, pp. 850~901.

### 〈신문 및 잡지 기사〉

심민관, 「데이비드 달러 “형다 파산해도 中 리스크 세계 경제 위기 촉발 못 한다”」, 『조선비즈』, 2021. 11. 24.,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1/11/24/J7EIW5QU7RERRKLF5RRCRCZLWRI/](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1/11/24/J7EIW5QU7RERRKLF5RRCRCZLWRI/), 검색일자: 2021. 12. 2.

Rappeport, Alan and Madeleine Ngo, “Janet Yellen says it’s time to stop calling inflation ‘transitory’,” *The New York Times*, 2021. 12. 2.,

<https://www.nytimes.com/2021/12/02/business/yellen-inflation-omicron.html>, 검색일자: 2021. 12. 7.

Shalal, Andrea, "Omicron variant likely to usher growth downgrades - IMF's Georgieva," *Reuters*, 2021. 12. 4., <https://www.reuters.com/business/omicron-variant-likely-usher-growth-downgrades-imfs-georgieva-2021-12-03/>, 검색일자: 2021. 12. 7.

The Economist, "China's economy looks especially vulnerable to the spread of Omicron," December 4th 2021 Edition, <https://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chinas-economy-looks-especially-vulnerable-to-the-spread-of-omicron/21806564>, 검색일자: 2021. 12. 5.

Timiraos, Nick, "High inflation, falling unemployment prompted Powell's Fed pivot," *Wall Street Journal*, 2021. 12. 6., [https://www.wsj.com/articles/high-inflation-falling-unemployment-prompted-powells-fed-pivot-11638786601?mod=hp\\_lead\\_pos3](https://www.wsj.com/articles/high-inflation-falling-unemployment-prompted-powells-fed-pivot-11638786601?mod=hp_lead_pos3), 검색일자: 2021. 12. 7.

## 〈통계자료 및 누리집〉

열린재정, 상세재정통계DB, 「국가채무(D1)」, <https://www.openfiscaldata.go.kr/fdata/3R4TT0I711W0648KKV104928971>, 검색일자: 2021. 9. 16.

\_\_\_\_\_, 상세재정통계DB,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https://www.openfiscaldata.go.kr/fdata/0XY022UGD797MPMB69616048266>, 검색일자: 2021. 9. 16.

\_\_\_\_\_, 상세재정통계DB, 「재정수지」, <https://www.openfiscaldata.go.kr/fdata/9DQF7E72M4Z89V8S128M4986190>, 검색일자: 2021. 9. 16.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기종합지수(10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C801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C8013&conn_path=I3), 검색일자: 2021. 12. 5.

\_\_\_\_\_,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향조사」,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출생, 사망, 혼인, 이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F&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F&conn_path=I3), 검색일자: 2021. 7. 12.

\_\_\_\_\_,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 주요 인구지표(성비, 인구성장률, 인구 구조, 부양비 등)/전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conn_path=I3), 검색일자: 2021. 7. 12.

\_\_\_\_\_,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 장래 합계출산율/전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1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101&conn_path=I3), 검색일자: 2021. 7. 1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6.4.1 통합재정수지」, <http://ecos.bok.or.kr/>, 검색일자: 2021. 3. 7.

\_\_\_\_\_, 경제통계시스템, 「7. 4. 1. 소비자물가지수(2015=100)(전국)」, <http://ecos.bok.or.kr/>, 검색일자: 2021. 12. 5.

\_\_\_\_\_, 「10. 2. 2.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http://ecos.bok.or.kr/>, 검색일자: 2021. 9. 16.

\_\_\_\_\_, 경제통계시스템, 「10.2.2.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원계열, 실질, 분기 및 연간)」, <http://ecos.bok.or.kr/>, 검색일자: 2021. 9. 16.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OMC Statement, Press Release,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211103a.htm>, 공표일: 2021. 11. 3., 검색일자: 2021. 11. 13.

\_\_\_\_\_, Testimony by Chair Powell on coronavirus and CARES Act,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testimony/powell20211130a.htm>, 공표일: 2021. 11. 30., 검색일자: 2021. 12. 5.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 October 2019 Edition,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19/October>, 검색일자: 2021. 10. 17.

\_\_\_\_\_,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 April 2021 Edition,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1/April>, 검색일자: 2021. 7. 12.

\_\_\_\_\_,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 October 2021 Edition, <https://>

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1/October, 검색  
일자: 2021. 10. 17.  
OECD, OECD Economic Outlook, Preliminary Version, December 2021,  
https://www.oecd.org/economic-outlook/, 검색일자: 2021. 12. 5.  
OECD.Stat, National Accounts, Gross domestic product(GDP), https://stats.  
oecd.org/, 검색일자: 2021. 7. 12.  
\_\_\_\_\_, Population projections, https://stats.oecd.org/, 검색일자: 2021. 6. 7.

## 제V장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  
생·경제 종합대책」, 2020. 2. 28.

\_\_\_\_\_,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보도자료, 2021. 12. 23.

박창현·유민정, 「코로나19의 노동시장 수요·공급 충격 측정 및 평가」, 『BOK  
이슈노트』, 재2020-11호, 한국은행, 2020. 8.

이용관, 「코로나19가 임금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미친 영향: 고용형태별 차이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제44권 제2호, 한국노동경제학회, 2021,  
pp. 71~90.

함선유·이원진·김지원, 『코로나19의 확산과 청년노동시장 변화』,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2021. 6.

황선웅, 「코로나 19 충격의 고용형태별 차별적 영향」, 『산업노동연구』, 제26권  
제3호, 한국산업노동학회, 2020, pp. 5~34.

황수빈·박상순, 「코로나 19 이후 노동시장 미스매치 상황 평가」, 『[BOK] 조사  
통계월보』, 2021. 2.

Adams-Prassl, Abi, et al. "Inequality in the impact of the coronavirus  
shock: Evidence from real time survey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89, 104245, 2020.

Lee, Jongkwan, “코로나 19 로 인한 고용충격의 양상과 정책적 시사점 (The COVID-19 Employment Shock and Policy Implications),” KDI Feature Article(2020.11. 11) Kor(2020).

Lee, Sang Yoon Tim, Minsung Park, and Yongseok Shin, “Hit harder, recover slower? Unequal employment effects of the Covid-19 shock,” No. w28354,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21.

Louis-Philippe Beland · Abel Brodeur · Taylor Wright, “Covid-19, Stay-At-Home Orders and Employment: Evidence From CPS Data,” 2020, IZA DP No.13282, 2020. 5.

Şahin, Ayşegül et al., “Mismatch unemploy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104(11), 2014, pp. 3529~3564.

### 〈통계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415020](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415020), 검색일자: 2021. 10. 2.

### 제시장 제2절

전병목 외,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사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HM Treasury, *Budget 2021 - Protecting the Jobs and Livelihoods of the British People*, 2021.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1. 5.

### 〈웹사이트〉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 최종 검색일자: 2021. 6. 2.

OECD.stat, <https://stats.oecd.org/>, 최종 검색일자: 2021. 11. 9.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index/index.do>, 최종 검색일자:  
2021. 9. 26.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최종 검색일자: 2021. 8. 9.

# 부록

## 1. 2020~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부표 1〉 2020~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단위: 조원)

연도	구분	대상	주요내용	소요예산
2020 1차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의료기관	음압 구급차 신규보급	0.08
			입원치료 음압병식 확충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보상	1.7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자금	0.5
		격리·확진자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제공	0.08
	사업주에 日 13만원 한도 유급휴가비 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회복 지원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	2.0
			저임금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금융지원	0.6
			코로나로 인한 휴·폐업 점포 재기비용 지원	
		중소기업	신·기보 특례보증 및 P-CBO 확대	2.3
			긴급경영자금 및 융자 확대	0.6
	민생·고용	저소득층 취약계층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	2.7
			아동수당 대상자에 소비쿠폰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생계유지 곤란 저소득층에 긴급생계비 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50% 감면	
	아동양육 가정	보육지원을 위한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확대		
일반국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일부 환급	0.3		
지역경제· 상권살리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원	0.13	
		고용안정사업 및 특수형태근로자 지원		
		지역특화사업 및 맞춤형 바우처 지원		
	지역상인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및 정부지원을 상향 조정	0.25	
초·중·고 지자체	지방재정 보강, 학교방역 소요 등을 위해 지방 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조기집행	0.3		

〈부표 1〉의 계속

(단위: 조원)

연도	구분	대상	주요내용	소요예산
2020 2차	긴급재난지 원금	전 국민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지역상품권 및 지역화폐 지급	7.6
2020 3차	산업·기업 금융 지원	주력산업 및 기업	채권 및 펀드 조성, 코로나 P-CBO 발행 등 지원	3.1
		소상공인	소상공인 자금공급 프로그램	1.9
		중소기업	중소·중견기업 정책자금 지원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재직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8.9
		실업자	구직급여 및 내일배움카드 지원	
		저소득층 취약계층	긴급복지 지원 확대	0.5
			청년·근로자 햇살론 추가 공급 다자녀가구·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추가 공급	
	기타 경기보강 정책	전국민·지역	8대 할인소비쿠폰 제공, 지역·온누리 상품권 확대	3.7
		유턴·해외기업	유턴·해외첨단 기업 투자 유치	
		-	한국판 뉴딜(디지털, 그린, 안전망) 시행	5.1
2020 4차	긴급 피해지원	소상공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3.3
		중소기업	신·기 보증자금 특례보증, 긴급경영자금 용자 공급	0.5
	고용안정	재직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1.0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	
		실업자	구직급여·코로나극복 일자리 제공	0.3
		청년	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0.1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규 20만명 확대) 지원	0.6	
	생계지원	저소득층	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0.4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	
	돌봄지원	아동양육 가정	아동 특별돌봄 지원	1.1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0.1
	기타	전국민	이동통신요금 지원	0.9
	2021 1차	긴급 피해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긴급금융 지원				2.5
전기요금 3개월 감면				0.2
저소득층 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0.6
			생계지원금 지원	0.6
			생계위기가구 긴급복지 및 감염병 예방치료 제공	0.2

〈부표 1〉의 계속

(단위: 조원)

연도	구분	대상	주요내용	소요예산
2021 1차	긴급 고용대책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0.3
		청년·중장년 ·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제공	2.1
		실업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0.2
	방역대책	-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2.7
		의료기관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보상	0.7
		격리·확진자	진단·격리·치료 방역대응	0.7
2021 2차	피해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및 희망회복자금 지원	3.9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지급	0.3
		전국민	상생소비 국민지원금 지급	1.1
	백신·방역 보강	-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진단검사 등 소요 보강	4.4
	고용 및 민생안정	근로자	직업훈련 및 고용안전망 강화	1.1
		청년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지원	1.8
		문화·예술 ·관광업	문화·예술·관광업 활력 제고	0.3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지방)	지역상권 및 농어가 지원	0.4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강	12.2
	취약계층 부담 완화	취약계층	청년·저소득층 주거부담 완화	0.9
			돌봄·생계·금융부담 완화	2.1
	긴급재난지 원금	전국민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지역상품권 및 지역화폐 지급	10.4

자료: 기획재정부, 「2020~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도자료, 토대로 작성

## 코로나19 이후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세재정정책 방향

---

김현아 · 전병목 · 윤성주 · 오종현 · 송경호

본 연구는 감염병 확산이라는 외부충격 발생 이후 각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감염병 확산 양상과 국가대응 방식에 주목하였다. 선진국들과 미국의 주별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해당 국가의 기대수명이 비교적 긴 경우, 국가채무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소득계층 간 분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19 사망자 비율이 대체로 낮은 추세를 확인하였다. 경제위기와 성장모멘텀 확보를 위한 재정역할 강화가 불가피하고 이를 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건전성 틀 구축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단기적인 재정확장 기조에 대해서는 2022년 이후 경제회복 여부 이후에 판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입과 세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증세 여부는 경제회복 정도에 따라 대상과 방법을 설정할 수 있으며, 경제회복 이후에도 고용시장의 회복 여부가 증세의 내용과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소득기반 축소와 재정지원으로 인한 소비계층 대상 확대에 따른 소비세 강화 방안도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으로 첫째, 재정여력 잠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정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잠식 최소화 방향을 강조하였다. 둘째, 재정규율을 통한 지속가능성 및 재정신뢰성 확보의 중요성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긴급 재정 및 금융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통한 정책러닝이 필요함도 강조하였다.

## Fiscal policy after COVID-19

---

Hyun-A Kim, Byung-Mok, Jeon, Sung-Joo Yoon,  
Jonghyeon Oh, and Kyung-ho Song

The paper contributes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institution and defense of COVID-19. Fiscal policy after COVID-19 has been emphasized to attenuate income polarization and expand social safety net. The empirical analysis by using the data of OECD countries confirms the economic conjectures. The results find that the higher Gini indices the more deaths of COVID-19. Also, the empirical results support that fiscal consolidation would be one of factors to strengthen national health management. Finally, the data provides that political preference and institution might affect the trend of confirmed cases in United States. Now, in the middle of COVID-19 tunnel, uncertainty by mutant virus might offset economic recover from fiscal investment. The paper elaborates the reform of taxation policy by using of tax equity and the timing of effective tax rates. Finally and more importantly, the paper stresses the methodology of the expansion of fiscal space. Rearrangement of legal allocation rates such as Mandatory expenditure to local governments and local education authorities should be on the table.

## ■ 저자약력

### 김현아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전병목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졸업  
미국 Ric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윤성주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Indiana University 경제학 석·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오종현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졸업  
미국 The Ohio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송경호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자료 수집 및 정리

권선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인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동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진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보고서 2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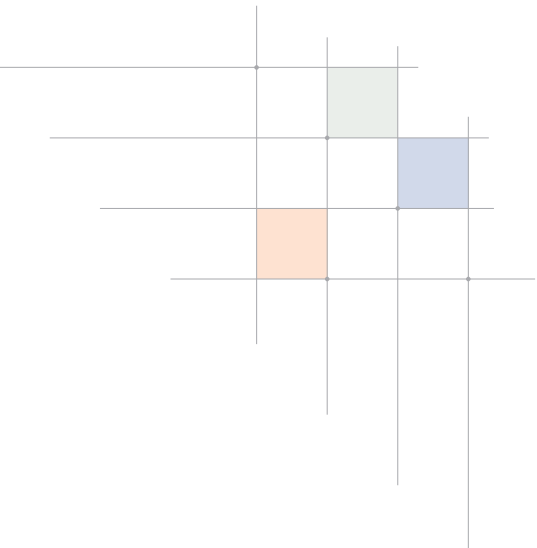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세재정정책 방향**

---

발행	행	2021년 12월 31일
저자	자	김현아 · 전병목 · 윤성주 · 오종현 · 송경호
발행인	인	김재진
발행처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소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화	(044)414-2114(代)
홈페이지	지	<a href="http://www.kipf.re.kr">www.kipf.re.kr</a>
등록	록	1993. 7. 15. 제2014-24호
정가	가	17,000원
조판 및 인쇄	쇄	일지사
I S B N	N	979-11-6655-094-2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9 791166 550942

ISBN 979-11-6655-094-2